서울의 image 겨울, 봄

Delivery Magazines
dm 월간지 직배서비스

필 POST

㊐ 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13호
TEL. 02)2236-4090
FAX. 02)716-7413 E-mail:pillpost@hanmail.net

월간지 · 주간지 · 사은품 · 판촉물 직배서비스
데이타베이스 구축
마라톤포장작업 · 대량택배포장작업 (보관)

기획II여성과 노동

여성노동개념의 재검토

0. 들어가며

생산과 재생산,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의 노동을 설명하는 개념들은 기존의 노동개념의 한계를 인식한 여성이론가들이 발견하고 정의해낸 개념들이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와 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과는 다른 맥락 하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종종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성의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호소하는데 그치곤 한다. 이러한 설명방식으로는 여성노동의 근본적인 의문점들에 대답할 수가 없다.

여성의 노동은 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는가? 여성의 노동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과 남성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일까? 여성은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번 기획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모호한 채로 사용해왔던 개념들이 어떤 맥락에 놓여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80년대의 논의 이후로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지 않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는 열악한 현실이지만 그나마라도 이 글을 통해 정리해보고 그 바탕위에서 여성노동과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관계를 살펴보자.1)

1) 우에노 치즈코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와 N.소콜로프의 『여성노동시장이론』을 정리하였다.

1. 여성의 일을 발견하다 ; 1970년대 영국의 가사노동 논쟁

197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었고 여성의 가사노동이 재생산과정이라는 생각도 미약했다. 그러나 1973년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가, "자본주의 아래의 여성의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에 불가결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라고 주장하면서부터 가사노동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논쟁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맑스주의를 빌려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반을 탐구하던 그들은, 자본주의와 가족의 접점에서 가사노동이라는 기교를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여성운동이 전반적으로 퇴조하면서 이 논쟁도 역시 차차 소멸하였다. 영국의 사회주의 진영이 대처정권 아래서의 위기감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주의 비판을 봉쇄하면서, 명목상으로만 여성문제에 일정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겉치레에만 몰두한 결과,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공멸이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논쟁이 퇴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업가사노동자가 격감하고 임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의 이중노동이 일반적이 되면서 논쟁도 역시 점차 사그라들었다. 베로니카 비치의 말을 빌리면 논쟁이 벌어졌던 10년사이에 벌어진 최대의 변화는 '여자가 직장에 나가게 된 것'이었다. 결국 "가사노동에 임금을!"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걸었던 실천적인 운동단체를 고립된 상태로 남겨둔 채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 자체를 떠나 여성의 이중노동, 노동의 성별분리, 임노동과 부불노동의 관계를 탐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가사노동 논쟁의 내용과 결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가사노동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성의 현실을 물성적인(sex-blind) 마르크스주의의 범주에 억지로 밀어넣었다고 비난했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 틀에 여성의 노동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세컴은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가? 아닌가? 그것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생산적인가? 등등 가사노동 자체보다 마르크스의 개념들의 정의를 둘러싸고 더 많은 잉크가 소비되었다고 비난했다. 또 해밀턴은 교조주의적인 맑스주의자들이 맑스주의의 신성불가침을 지키려는 시도로 논쟁을 끌고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사노동 논쟁은 "가사노동의 발견" 그 자체로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가사노동은 시장과 가족의 상호의존관계를 연결하는 기교(잃어버린 다리-missing link)였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아내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하는 사적인 헌신으로 간주될 뿐 노동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사노동 논쟁은 가사노동이 노동, 그중에서도 착취받고 있는 노동임을 밝힘으로써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가사노동을 위치시켰다. 이는 가족-사랑의 공동체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그 안의 불평등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였다.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노동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적영역에 맑스주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확대적용의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노동을 맑스주의의 틀에 끼워 넣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논쟁의 한계점이기도 했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공헌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맑스주의만으로 가사노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로써 맑스주의가 여성과 가족을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맑스의 계급분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이 맑스주의가 성적억압을 분석하는 데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는 맑스주의의 변경과 확장을 포함하여, 교조적 맑스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이론적 분석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길을 연 것이다.

2 가사노동과 가정에서의 계급재생산 ; 가정에서의 여성

가사노동 논쟁을 벌였던 영국의 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을 자본주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게 할당된, 비자본주의적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토지와 노동력을 상품화함으로써 시장을 성립시킨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노동을 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시장은 어떤 노동은 상품화하고 어떤 노동은 상품화하지 않았다. 가사노동은 "시장에 의해" 상품화되지 않은 노동의 하나였다. 세컴은 가사노동이 사적이기 때문에 시장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사노동에게 사적이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했다. 즉 사회적 노동과 사적 노동의 구별, 그리고 시장과 가족의 분리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립한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고유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 분리를 연결하는 요체에 가사노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장화되지 못하고 사적영역으로 남아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반으로 기능하는 형태의 가사노동은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가사노동이 산업화가 만들어낸 특정한 분류의 노동이라는 점은 가내제 생산양식의 개념을 정립한 크리스틴 델피도 역설한 바이다. 그는 가사노동이 집안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 무상의 노동을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여성이 하고 있는 부불 노동 중 가사노동은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델피는 가내노동의 개념을 빌려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근대이전에는 일반적인 노동양식이었던 가내노동, 즉 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하고, 불에 굽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서부터가 소비인지를 가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노동을 생산과 소비로 나눈 것은 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며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이 구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 그렇다면 가사노동이 가내노동으로부터 구분되어 불려진 것은 언제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일까? 그녀는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함께 도시 핵가족 가정의 표준이 농가로 적용되어 농촌과 도시에서 공통으로 여성이 하는 일, 즉 자본이 시장화하지 않은 부분만이 가사노동이라고 명명된 것이라고 한다. 시장이 가사노동을 축출하고 부불노동으로 밀어낸 이유는 가사노동의 어떠한 성격-비생산적이라거나, 교환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성격-때문이 아니다. 만약 가사노동이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말한다면 농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같은 노동 중에서도 시장을 거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일정량의 노동은 모두 비생산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에 시장화되지 않은 부불노동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노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 전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첫째로 여성은 자녀, 남편 등 가족성원의 육체적 보호와 일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 및 가정의 유지와 관리에 종사한다. 여성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과 자녀를 위한 가사노동을 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여성이 유지하고 있는 가정은 남성에게 물질적 심리적인 특권을 보장하고, 자본에게는 노동자의 불만족을 흡수하고 노동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이 된다. 둘째, 세대적 재생산, 즉 생물학적 재생산 또한 여성의 고유한 노동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여성을 가정으로 유폐시키는 구조는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사회의 일정한 책임을 무시하고 여성과 가정에 그 책임을 떠맡겨 왔다. 셋째로, 자녀와 남편을 위한 정서적, 인격적 배려 즉, 모성역할, 돌보기 등 감정노동이라 불리는 것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다. 가정을 통제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을 통해 가정을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이중노동을 부과하는 시작이며 (자본과 남성의 이득을 위해) 여성에게 가족이라는 제약과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넷째로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교육이 있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위와 같은 일들을 통해 계급적인 노동지와 성적인 노동지를 재생산함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한다. 가족 및 가족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결국 계급관계의 재생산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3. 여성의 모성과 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한편 여성들은 시장에서는 시간제 저임금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의 노동까지도 책임지는 이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본은 여성을 산업예비군으로 일하게 하면서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 풀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남성의 임금을 끌어내리는데 이를 이용한다. 또 남성에게는 여성이 저임금 노동으로 일하는 것이 심리적, 물질적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여성이 산업예비군 풀로 존재함으로써 남성은 최소한 여성보다는 나은 보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를 이용해 남성노동자에게 상대적 만족감을 주어 남성노동자를 지배한다.

여성이 산업예비군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여성에게 씌워진 육아와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이후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여성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여성이 전업주부/어머니/가사담당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20세기의 독특한 현상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남성기업주, 남성노동자 및 남성지배적 조합들은 보호입법, 이동 노동법, 노동력의 성차별 극대화, 가족임금제의 창출을 통해 시장노동은 남성의 일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쌓였다.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강조되고 천성적 모성본능이 강조되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위치는 가족에 대한 의무에 있다고 믿게 하기에 이르렀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일과 어머니의 역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임노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성들은 어머니로써 취급받고 어머니로써의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여성들은 가정 내의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과거 가정에서 생산되던 것은 시장에서 생산되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상품들을 사기위해 시장에서 생산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임노동자로서의 역할에는 모순이 가로놓여있고 이 때문에 여성은 저임의 권한이 없는 일을 담당하게 되며 이로써 성별 노동분업이 확장되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과거의, 현재의, 혹은 잠재적 어머니로 생각되어 취업에서 배제된다. 미혼의 여성은 언젠가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결근이나 이직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성에게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신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가족임금은 남성에게만 지불되며 여성은 2차적 노동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핵가족 내의 어머니라는 역할은 모든 여성의 전 생애주기를 통해 여성이 저임금을 받는 것을 합리화한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가족임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여성을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여성은 노동 중에도 끊임없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이 미혼이건, 기혼이건 간에 직장에서 그녀는 보호와 위안, 치료, 청소, 보조적인 일을 하게 된다. 이는 간병노동처럼 임금을 받는 일이지만 직종자체가 여성에게만 주어져있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직원에게 청소나 차심부름을 강요하는 사례처럼 남성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20세기 들어 여성들의 임노동 참여 증대는 사실상 가정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남성과 자본에게 이득이 되도록 조직된 노동시장에서도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취급받게 되는 것을 강화한다.

4. 나가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시장과 가족 모두에서 남성의 보다 나은 지위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자본의 잉여가치 창출과 남성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성의 일을 보이게 하고 여성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이 그동안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여온 힘이었음을 보이는 것이고, 여성에게 부당하게 떠맡겨져온 일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여성의 노동이 자본과 남성의 지배 하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Imagine

기획II 여성과 노동

모성보호와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part 1.

1. 들어가며 : 평등-보호 논쟁과 모성보호

페미니즘의 평등과 보호 논쟁은, 거칠게 정리해서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지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성들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가치폄하되어 온 여성의 특성을 인정하고 새롭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종별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수적인 성담론과 연결되어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을 가로막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차이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여성의 열등성을 인정하는 담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과 여성 고유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평등에 기반한 운동만으로는 여성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지금껏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던 '여성적 특질'들에 긍정적 가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사회문화적인 것이든 간에 보살핌과 배려 등의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후기구조주의의 비판을 받아들여, '평등'과 '차이에 기반한 보호'라는 이원적 분리 그 자체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어떠한 실천적 논의 속에서든 그 분리를 피할 도리는 없어 보인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평등(그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든)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 투쟁의 토대를 형성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특수한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여성들을 종속시켜왔던 '보호'라는 개념의 재생산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1].

그러나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차이라는 관념이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모종의 위계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여성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성과 다르다'는 선언은 '여성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성과 다르고, 따라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보수적 담론으로 수렴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평등과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페미니즘의 가장 오래된, 그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이자 현재까지도 유효한 쟁점이다.

이러한 평등과 보호 담론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바로 '모성보호'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 사회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떠안는 것이 바로 '모성보호'인데, 임신부에 대한 노동시간 제한이나, 출산 ? 육아 휴직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성보호는 완벽히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약하고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과의 평등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성보호가 역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모성보호비용의 기업부담으로 인해 여성고용이 후퇴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성보호'는 출산의 능력을 가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때, 그녀들의 노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성 즉 출산과 육아 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등'담론은 모성보호를 반대하고 '보호'담론은 모성보호를 찬성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출산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가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평등의 입장에서 모성보호가 필요할 것이고, 모성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모성보호가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책임을 강화한다거나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유약하거나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가피한 전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모성보호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보호담론의 차원에서는 모성수당을 아이를 가지는 여성들의 특수한 생물학적 능력과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할당된 모성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 즉 자녀를 낳아 양육함으로써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에 기초하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 평등담론의 차원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질병 때문에 잠시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성 수당을 질병 수당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상에서 봤듯이, '평등-보호'을 무조건적으로 '보호법 반대-보호법 찬성'과 연결짓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를 다룰 때는, '평등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고, 보호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최대한 지양하고, 모성보호가 제기하는 각각의 쟁점을 중심으로 중층적인 현실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논쟁은 2001년 근로기준법 개악과 2003년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성보호를 둘러싸고 여성운동계의 입장도 각양각색이며, 사회의 성보수적인 담론도 만만치 않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97년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많은 기업주들이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로 모성보호를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모성보호에 대한 담론이 대중적으로 부재하고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그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권의 온전한 쟁취를 고민할 때, 다시금 모성보호를 둘러싼 담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것이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지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1870년대부터 189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었던 영국의 여성노동보호법을 둘러싼 평등과 보호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주 먼 옛날이야기 같지만 이 시기 영국의 여성노동정책과 여성운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그 시기 촉발되었던 논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그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2001년 근로기준법 개악 이후 변화되어 온 모성보호법이 얼마나 여성노동자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양상은 어떤 모습이며 그것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 200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 관련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경향과 관련하여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제인 프리드먼, 「1장. 평등인가 차이인가-페미니즘의 영원한 문제」, 『페미니즘』, 이후, 2002, pp.35~36.

2) 앞의 글, pp.30~31.

모성보호와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part 2

2. 1870~1890년대

영국의 평등-보호 논쟁과 그 현재적 함의

(1) 경과

1870~1890년대 영국의 여성노동정책은 1870년대부터 1880년대, 여성들이 계급과 이념을 초월하여 성을 매개로 '자매애'로 단결하여 여성의 평등권 획득을 목적으로 여성노동보호법1)을 격렬하게 반대한 시기와, 1880년대부터 1890년대 말까지, 여성노동운동계가 여성노동보호법을 둘러싸고 '보호론'과 '평등론'으로 분열되어 대립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2].

1) 흔히 '모성보호'는 전반적인 여성노동 보호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임신, 출산과 같이 다음세대의 인류재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모성보호', 그 이외의 것 즉,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업, 위험, 유해한 업무에서의 규제 등을 '여성노동보호'(남한의 경우 '일반여성보호조항'이라 일컬어짐)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여성계, 노동계는 모성보호는 ILO 및 서구수준으로 강화하고, 여성노동보호는 우리나라의 특수하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하여 여성노동보호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모성보호는 강화하나 여성고용기회의 확대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노동보호는 완화,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강남식, 「영국 여성노동정책과 여성노동운동의 전략 -1890년대 여성노동보호법을 둘러싼 "평등"과 "보호" 논쟁을 중심으로-」, 성대사림 12 ? 13 합집-사학과 개설 50주년 기념논집, p.712) 영국에서 시작된 평등-보호 논쟁의 초기에는 공장법을 위시로 한 '여성노동보호법'이 주로 제기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여성노동보호법'을 주로 다룬다.

2) 강남식, 앞의 글, p.710.

그 대표적인 단체로 여성고용촉진협회(Society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of Women:이하 촉진협회)와 여성보호 및 공제동맹(Women's Protective and Provident League:이하 공제동맹)이 있는데,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는 결집하여 여성노동보호법에 반대하였으나, 1890년대 이후에는 계급적 이해에 따라 분열되어 각각 '평등론자'와 '보호론자'로서 대립하였다.

7,80년대 촉진협회와 공제동맹은 이동과 여성의 노동시간을 9시간으로 규제하는 여성노동보호법이 노동시장을 성을 매개로 자유계약자와 비자유계약자로 분리시키고, 여성을 비자유계약자로 규정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시기 여성노동보호법은 남성노조지도자들과 정부입법자들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노동을 평가절하시킨 희생의 산물이었다. 남성노조지도자들은 여성을 신체적 약자로 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남성노동자의 우위를 안착시키고, 여성노동시간의 제한을 통해 남성노동시간의 단축까지도 시도하려 하였다. 정부입법자들은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려 하였다. 이에, 촉진협회와 공제동맹은 남성노조지도자들이 여성노동자의 노조가입을 저지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더니, 이제는 국가권력을 통해 여성을 배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보호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또한, 성분리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였고, 여성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 설립을 위해 교육받고 여유 있는 중산층 여성들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여성들 간의 계급을 초월한 자매애를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자매애는 남성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노동자매'의 권리획득을 위해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여성평등권자들의 공동이념이 되었다[3].

그리고 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였던 자본가들과도 손을 잡았다.

3) 앞의 글, p.717.

그러나 이 시기 공제동맹 내에서는 여성노동보호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존재했고, 따라서 보호법에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9시간 노동시간 규제법이 여성고용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현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여성공장감독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9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확대되고 조직 내에 사회주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 고통받는 기층 여성노동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공제동맹은 정책적으로 보호론자로 급선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층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모두 가입가능한 혼성노조 설립에도 힘을 기울인다. 1891년 공제동맹은 새 정책의 실현으로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단체명도 여성노동조합동맹(Women's Trade Union League:이하 조합동맹)으로 개칭함으로써, 성을 매개로 계급을 초월한 여성운동가들간의 자매애는 깨어지고, 계급적 이해에 따라 분열되어 보호론자와 평등론자로 대립하게 되었다[4].

4) 앞의 글, pp.723~724.

90년대 조합동맹의 변화의 가장 큰 지지자는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실제로 이 때에 조합동맹에서 실시한 노동시간 규제법에 90% 이상의 여성노동자가 찬성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7,80년대 여성평등권자들이 '노동계급 자매'들을 위해 계급을 초월하여 공동이념으로 채택했던 자매애가, 더 이상 기층 여성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촉진협회를 위시한 평등권자들은 여전히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법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였다.

보호법을 둘러싼 조합동맹과 촉진협회의 갈등은 국가권력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조합동맹은 법이라는 국가권력을 통한 여성노동의 보호를 강하게 옹호했다. 특히 여성노조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도움없이 남녀의 동등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의 조직화가 저임금, 가사 노동 부담 등으로 어렵게 되자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었다[5].

반면, 촉진협회는 자유방임과 반국가통제주의를 페미니즘과 동일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호법령을 반대하였다.

5) 앞의 글, p.733.

(2) 현재적 함의

① 여성배제적 노조

1870~80년대 공제동맹 내에서 여성노동보호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촉진협회와 함께 보호법 제정 반대투쟁을 전개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성노조주의자들의 뿌리깊은 여성배제주의였다. 19세기 말부터 남성노동자들은 직종조직을 통해 일부직종의 여성고용을 배제하였고, 1840년대에는 노동시간 규제의 법제화를 통해 여성을 부차적인 노동자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을 매개로 노동시장을 분리시켰던 것이다.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들을 파업파괴자나 임금삭감의 요인으로만 인식하였지, 동일한 노동자 계급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직종조직을 통해 여성고용을 배제하더니, 이제는 법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금지시키려 한다고 인식하였고, 계급을 넘어서는 '자매애'로 단결했던 것이다. 이처럼 남성들이 촉발한 여성배제는 결국 남녀 노동자를 분열시켜 계급대립을 은폐하고, 성대립을 부각시켰다[6].

6) 앞의 글, pp.734~735.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기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는 거의 없다. 여성들이 노조 안에서 대표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노조에 '여성위원회' 류의 분과가 존재하고 있다. 기존에 남성중심었던 노조는 여성노동자를 인정하고 여성노동의 이슈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직도 노동자계급은 '남성'노동자 계급을 표상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에도 남성들은 고용평등에 저항하는데, '여성의 몫이 커지면 그만큼 남성의 몫이 작아진다', 즉 남녀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남녀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19러한 대립적 인식은 성별 분업 논리와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재생산된다.

또한 노조 안에서도 의사결정 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은데, 여성 간부의 수적 열세 때문에 여성대표의 의사가 노조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노조에 존재하는 여성부장이나 여성 부위원장은 언뜻 보이게는 여성노동자 집단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이는 남성중심 노조가 짐짓 여성을 배려하고 있다는 과시를 위한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여성 부위원장이나 여성부장이라는 직책은 여성조합원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을 특정 영역, 특정 부서 내로 게토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7].

당시, 영국에서 여성배제적인 남성노조 때문에, 여성들이 보호법 반대 투쟁으로 결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의 발전을 저해했고, 그로 인한 여성노동조건의 악화는 다시금 남성노동조건에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했을 때, 현재 우리사회의 노조의 가부장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7) 최성애, 「노동조합과 성의 정치학」,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pp.288~296.

② 모성보호는 현실요구 속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촉진협회와 공제동맹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호법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공제동맹은 1880년대, 여성의 고한노동[8]에 주목하게 되면서 보호법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으로 기존의 담론중심의 운동보다는 기층여성의 현실적 상황에 귀기울이게 되면서, 정작 법제정 효과의 당사자인 기층 여성노동자들이 보호법제정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론적 ? 담론상으로 보호론의 입장을 옹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노동조건의 현실을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이론상 또는 담론상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8) 고한노동은 영어로 'sweated labour'로 표기되며,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위생적인 노동조건으로 특징되는 육체노동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여성운동이 여성 삶의 구체적 지점의 변혁을 목표로 한다면, 정책이나 전략의 면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주체들은 각각의 정책과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이나 담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체적 효과를 낳으며, 얼마만큼 적합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기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촉발된 우리 사회의 모성보호 관련 논쟁도 탁상공론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흘려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요구까지 담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이와 함께, 영국에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공제동맹이 보호법을 찬성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흔히 '모성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남성과는 다른 여성적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그것을 급진주의적인 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공제동맹이 사회주의화되면서, 기층 여성의 실질적 조건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 보호법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모성보호담론을 성대립이 아니라 계급담론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③ 이데올로기적 단절이 필요하다.

1870~80년대 공제동맹과 촉진협회, 그리고 90년대 촉진협회는 보호법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주들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기업주를 자신들의 파트너라 생각했고, 그들이 '친구'의 관계로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법규제보다는 기업주와 노동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학적 차원의 문제를 기업주의 도덕성 차원으로 돌려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업주가 보호법제정을 반대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유연한 여성노동력을 좀 더 기혹하게 착취하기 위한 기회를 빅탈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순한 노동력이었으며, 사회적으로 가사전담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기업주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남성노동자의 고용을 상대적으로 위협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분할지배하려 하였다.

보호법제정을 반대하였던 평등론자들이 기업주들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운동을 중산층 엘리트 여성만을 위한 운동 혹은 부르주아 운동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보호법에 반대하였던 것은 기층 여성들의 고한노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즉, 그들은 여성세탁부들에 대한 노동시간규제가 "수공으로 하는 여성들의 작업을 남성들의 동력작업으로 교체시켜 여성직업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 여성을 훨씬 나쁜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생각했다[9].

9) 「Englishwoman's Review」 (이하 EWR), Oct.1893, pp.224~225 ; EWR, Jan.1894, p.6. ; EWR, July,1895, p.142(강남식, 앞의 글, pp.728~729.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은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일에 대하여 완벽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힘든 일, 심지어 위험한 일도 기이보다는 더 낫다."고 여겼으며, 여성 고한노동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 가내노동을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내노동시간 제한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생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법제정 반대론자들이 기업주와 손을 잡았던 이유는 첫째로, 반대론자들의 反국가개입주의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성노동 여건이 열악하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법적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율적 통제를 통해서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주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법적 권력이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여성해방운동에 모순적인 영향을 낳는다. 법적 권력은 여성해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의 사회유지적 성격 때문에 여성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법 제정을 통해 당장에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 존재를 생각해봤을 때, 무조건적인 反국가개입주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놓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차피 존재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것에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훨씬 유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전략에서의 효율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점은 운동의 효과 면에서 볼 때 놓치기 아까운 무기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하게 되었으며, 노조로 조직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파업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1888년 7월 브라이언트 앤드 메이(Bryant and May) 성냥공장 여성노동자들이 6주간의 파업을 진행했을 때, 보호법제정 반대론자들은 기업주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파업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10]

10) 강남식, 앞의 글, p.722.

이처럼 촉진협회를 중심으로 한 평등론자들이 자본기들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단절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본기를 여성고용을 위한 '친구들'로 인식하여, 여성노동보호 규정을 완화, 좌절, 폐지시켜, 결과적으로는 자본기의 여성노동착취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성노동정책의 발전을 지연,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은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운동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과오는 평등론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보호법 제정을 찬성했던 보호론자들도, 여성의 위치를 가정 안으로 한정시키려 했던 정부입법자들의 이데올로기와 확실히 단절하지 못했다. 1891년 영국정부는 공장과 작업장 합동법 제17조에서 "공장과 작업장 소유자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지 4주안에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11].

11) 앞의 글, p.727.

그러나 이 법안은 '보호론'으로 입장을 전환한 여성운동의 성과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서 보수당의 지지하에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 법은 1890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의의 산물이었다. 독일 황제는 "노동계급의 복지에 관한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의 도출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영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의 정부요인을 초대하였다. 이 토론에서 통과된 여성과 아동 노동과 관련된 여러 결의안들 중에서, "출산후 여성은 4주동안 일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않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1891년 공장과 작업장법에 모성보호조항을 포함시켰던 것이다[12].

12) B.L.Hutchins & A.Harrison, 「A History of Factory Legislation」, Westminster ? P.S.King & Son, 1907, pp.209~210. (강남식, 앞의 글, p.728에서 재인용.)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모성보호법 강화를 둘러싼 담론이 얼마나 여성주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효과와 영향력, 그리고 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를 상기했을 때, 대중적으로 모성보호의 정당성을, 가부장적 담론과는 단절하여 온전히 여성주의적인 담론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④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

190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이전의 논의를 통해 ILO 수준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여성노동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성노동정책이 진행되었고, 남녀 노조주의자들은 여성노동보호의 일부 규정을 남성에게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어 영국의 복지정책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성취한 모성보호도 수혜자부담의 원칙이 강화되는 등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와 이념적인 동질성을 상실하고 여성노동운동과 단절되어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루어내기는커녕 운동 자체의 약화와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13].

13) 강남식,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권, 창작과비평사, 1994, p.60.

이는 1870~90년대 모성보호의 원칙이 확립되고 정책적으로 그것이 발전되던 시기에, 여성운동세력과 여성노동운동세력이 연합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여성운동의 발전과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영향력이,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된 운동에서,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계급적 이해에 주목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여성운동 역시 여성노동자의 성장과 여성노동운동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미약하나마 국가의 긍정적인 개입을 통해 여성해방을 앞당기려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는 등 점점 모성보호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여성운동이 기층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그들과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성별분업의 해체로!

모성보호가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전제한다는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이들은 남성과의 가사노동 분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분담이 이루어지면 굳이 모성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만을 특별히 '우대'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선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지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노동시간은 2003년 5월 주당 45.6시간으로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 국가 중의 하나이다. 연간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2001년 2,447시간으로 OECD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14].

14) 문유경,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취업을 둘러싼 쟁점」,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 19차 여성개발포럼 자료집, 2004, p.12.

공식 통계수치를 넘어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노동시간의 양과 조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잔업, 야근으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체제는 설명이나 직종,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15].

15) 신경아, 「노동시간과 여성의 노동경험」, 『문화과학』 20호/1999년 겨울, 문화과학사, p.72.

이러한 노동체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회사를 위해 뛰는 남성 '기장'과 이 남성들을 위해 역시 하루종일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집단을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큰 규모로 양성하였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시간 조직은 개별 노동자의 일상적 ? 세대적 노동력 재생산을 전담해 주는 존재 즉 가사와 양육 ? 보살핌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힘들게 오랜시간 노동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성이 자신의 재생산까지 책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아내는 별로 없다. 이는 정규직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모델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맞벌이라 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조건에서, 사회적 강제로 인해 그 많은 재생산노동을 여성이 떠맡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강도가 훨씬 더 높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안쓰러워하며 손도 까딱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하자'는 선언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따라서 최근에 많이 논쟁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분담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그 첫 번째 대답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확대되어 있고 앞으로도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실업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수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조직 원리와 대안적인 노동 윤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구성원들간에 노동권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 뿐 아니라 임금 노동과 다른 영역의 삶 즉, 자녀양육, 가사노동, 친족의 보살핌, 여가, 교육, 공동체 활동 등 간의 관계를 재규정하고 성별분업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16) 신경아, 앞의 글, pp.85~86.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분업의 완화나 재생산 책임의 공유보다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과 재교육, 또는 소비지향적 여가를 위한 것으로 기대되는 경향이 있다[17].

노동시간 단축이 단지 개인적인 여가의 증대로만 해석된다면 그것은 상업화된 소비 문화를 살찌우고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노동시간단축만으로는 성별분업의 해체와 그로 인한 사회조직의 재구성이 불가능하다. 엄격한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일찍 가정으로 돌아온 남성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를 상상해 보라!

17) 정영애, 「평등한 노동권과 재생산책임의 공유-노동시간단축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9권, 창작과비평사, 1998. (신경아, 앞의 글, p.86.에서 재인용)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성별분업 구조의 해체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되어 온 '돈만 벌어오고 자식과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아버지'상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의 소외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여성주의의 요구는 여성문제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와 남성문제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출해 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18].

18) 신경아, 앞의 글, p.86.

또한 새로운 사회구성을 통해 남성들 또한 보살핌의 윤리를 습득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가족에서의 보살핌 경험이 생산 영역의 작업장으로 확산될 때, 자율성과 개인주의적 정의만이 아니라 협동, 관계지향성, 상호적 보살핌의 윤리가 작업장의 보편적인 가치가 될 때, 생산노동은 여성들에게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좀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남성노동자 위주로 작업장 안에만 머무는 작은 바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의 원리까지 건드리는 해방적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가족구성의 원리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가 여성의 재생산노동 전담자라는 이미지 강화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절실하며,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도 좀 더 큰 전망을 담보하는 투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 여성과 노동

모성보호와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part 3.

3. 남한의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그 의미

(1) 2001년,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

2001년 7월 18일,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대신에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 시간외근로 제한규정 등을 일정부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새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성이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기업과 정부는 여성들이 좀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큰 선심이라도 쓴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출산휴가 연장 및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강화 등 개정법안의 성과만을 내세우며 환영한 것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사실 커다란 '대가'가 존재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기존 노동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의 야간?휴일근로금지 및 연장근로제한 조항, 생리휴가조항의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다.

기업들은 임산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든 여성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주당 6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반여성보호조항의 경우에도 임산부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는 기업들의 여성 고용 기피 경향을 오히려 강화시키므로 여성평등을 위해서라도 폐지함이 옳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은 출산휴가와 같은 모성보호는 늘리되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여성을 '과보호'하는 조항들은 폐지하여 합리적인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기존 생리휴가제도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므로(주어진 휴가를 반납하면 대신에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실효성 없는 생리휴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적으로 생리휴가제도가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 인도네시아, 남한의 3개국밖에 없으며, 남녀평등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생리휴가와 같이 여성을 과보호하는 제도는 세계화 시대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1].

1)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선진국에서 생리휴가 제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보다 법정노동시간 자체가 더 짧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데서 그 맥락을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한국에서 '세계적 기준'을 들먹여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정부와 재계의 논리 중 현재 일반여성보호조항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일부 여성 단체들도 힘을 실어 주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2](이하 연대회의)는 당시 노동법 개정을 위해 제출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간?휴일근무금지조항 및 시간외근로 제한조항의 적용대상을 모든 여성노동자에서 임산부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으로 축소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들 조항이 현재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고용이나 임금지불에서 여성차별의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3], 일반여성보호는 줄이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평가하였다.

2) 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이 제의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가 참여하였고 이후 전국여성노조와 서울여성노조가 들어와 총 8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여성보호조항의 폐지 및 생리휴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갈리자

서울여성노조와 민주노총은 탈퇴하여 개악 근로기준법 통과 저지 운동을 펼치고, 연대회의는 기존대로 근로기준법 통과를 지지하였다.

3) '노동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여성직무의 변화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법정기준보다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시간외 근로 규제로 여성의 모집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음으로써 채용과 고용에서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합리적 차별의 이유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2001년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공식입장 中).'

이에 대해 '출산휴가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와 비용의 사회적 부담 확대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개정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만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70%인 비정규직들은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일반여성보호조항들을 축소/폐지해 버리면 법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일부에만 돌아갈 뿐 다수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다[4]'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노동시간규제는 일반여성보호를 통해 여성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노동시간규제에 있어 일반여성보호를 없애되,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향후 남녀노동자 모두의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연대회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이 연대회의 청원 요구안에는 못 미치지만 직접적인 모성보호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이루어내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즉각 통과를 투쟁기조로 유지하였다[5].

생리휴가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연대회의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연대회의는 '2001년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리휴가폐지 전면불가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달리 연대회의가 '유보적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은 생리휴가제도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기업과 정부에 의해 오히려 악용된 측면이 많았다. 생리휴가폐지 요구에 연대회의가 적극적으로 쐐기를 박지 않음으로 인해 2001년 7월 18일 국회를 최종통과한 법안에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향 논의시 생리휴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적극 촉구키로 한다'는 결의안이 포함되었다. 이 결의안은 이후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과정에서 생리휴가 폐지가 쉽게 쟁점화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며, 결국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는 데 한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4) 개정된 노동법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이미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참고로 2001년 당시 여성근로자의 39.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2001년 여성노동권 박탈 시나리오 자료집' 참고).

5)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2001년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입장'

한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조[6]의 단체에서는 여성보호조항 폐지와 출산휴가의 맞바꾸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우선, 대표적으로 쟁점이 되는 야간?휴일근무금지 및 연장근무제한 규정(제63조, 제68조)은 휴일과 늦은 밤에는 일하지 않고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이상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과보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기업과 정부는 이 규정이 여성들에게만 적용됨을 이유로 '과보호'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보호조항이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지 이미 있는 여성보호조항을 없애는 것은 여성?남성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제63조와 제68조가는 그나마 여성노동력의 완전한 유연화를 막는 보루가 되는데 이 두 조항을 폐지할 경우 여성노동력은 더욱 쉽게 유연화?비정규직화되며, 이것이 바로 기업이 법 개정으로 노리는 바다. 이는 곧 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 수는 소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새 법안에서 강화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2001년 당시 고용보험가입자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39.8%에 불과)와 가입6개월 미만자는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같은 이유로 새 법안에 따른 혜택은 자연히 정규직 등 다소 안정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보호규정 폐지로 인해 여성노동유연화가 기속화되면 법 적용이 되지 않는 번형근로형태와 비정규직같은 불안정노동 양산으로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여건은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일반여성보호조항이 폐지되면 여성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로 변형근로,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그 여성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현실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연대회의 측과 정부 간에 '출산휴가 연장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언론보도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부각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6) 이들 단체는 원래 연대회의에 참여하였다가, 연대회의의 입장이 여성보호조항 폐지를 용인하는 쪽으로 판명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자 뒤늦게 연대회의를 탈퇴하였다.

7) 자세한 법 조항은 뒤에 표를 참조할 것.

일반여성보호조항의 폐지로 인한 고용증대 여부

사회 전체가 경제위기 속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면서, 일반여성보호조항의 폐지는 여성고용증대에 미미한 영향조차 미치기 어려웠다. 심지어 노동부 장관조차 '여성 대졸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월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은 5.8%로 전체실업률보다 높고 대졸 이상 남성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여성 전체로 확산되는 경향도 보인다'[8]며,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8) 김대환 노동부 장관, 특별기고 '여성인력 활용 적극 관심을', 2004.03.31. 한국일보

(2)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그 이후[9]

9) 이후 개정된 법안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전체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통계자료를 주로 인용하였으나 그다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 일단은 정확한 수치보다도 일련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실태

200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개선된 출산휴가의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의 7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간한 Beijing+10 기념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실시율은 50.5%로, 2002년 36.2%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료집 내에도 있는 지적처럼, 출산휴가의 정착은 철저히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휴가 사용이 증가했다는 통계들은 등록된 전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출산휴가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게는 계약기간 동안만 휴가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기간 내에도 산전후 휴가를 줄 수 없다며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연대회의도 2002년 입장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실태를 평가하면서 '비정규직이 전체여성노동자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모성보호제도 정착의 관건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여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만 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실제로 전면금지하고 있는 병원은 조사사업장(154개병원)의 18.6%에 불과하였고 이중 62.7%가 대체인력을 받지 못해 동료들의 눈치와 업무가중으로 임산부의 밤근무 금지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3년 상반기 육아휴직 실시율은 10.3%로,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공방 때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경총에서 제시한 육아휴직자 23만 69명(연간 출산여성 13만 2,560명과 배우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500억원으로 추정)과 비교했을 때는 0.7%에 불과한 수치이다10). 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는 여성 6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816명으로, 같은 해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32만2133명의 21.2%에 그쳤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기준데 66.4%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더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10) 한국여성단체연합, 'Beijing+10 기념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또한 아예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전체 74만 8천명중 61.7%가 여성이다. 특수고용직은 그 전체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에 겨우 조사된데다, 실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약기간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생리휴가 무급화

2001년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 계속적인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예상대로 2001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결의안을 내세우며 주5일제 도입 대신 생리휴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결국 이후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유급생리휴가는 폐지, 무급으로 바뀌었다(2003년 8월). 이밖에도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월차휴가를 폐지11)하고 연장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삭감(50%->2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에 더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의 18%정도까지 삭감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11)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임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휴가를 쓰지 않고 대신 일해 수당으로 받아온 것이다. 그런 만큼 연·월차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는 임금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는 토요 휴무 자체가 혁명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무는 모자란 생계임금을 벌충하는 수단이었다.

(3) 2001년 노동법 개악이 주는 의미

'들어가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우에 따라 여성들을 좀더 실질적 평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도, 오히려 여성들을 더욱 억압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있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떠한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지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매 시기마다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 현실 상황과 널리 관련지어 살펴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2001년 여성관련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연대회의 등의 행동에는 오류가 있었다. 우선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법개정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미약하였다. 특히 생리휴가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은 반대한다'라는 유보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이후 생리휴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의안을 포함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긴장감 부족 및 이후 이어질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의 결과였다.

또한 개정노동법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에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였다. 연대회의 등은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남녀 모두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법이 통과된 후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예측,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투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은 미미하였다. 결국 노동법이 개정된 2001년 7월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애초에 선언했던 '강력한 투쟁'은 아직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2). 일반여성보호조항 폐지로 인해 여성의 고용이 늘어나고 차별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역시 '기대'일 뿐이었다. 그 '기대'는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몇 년째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늘어나는 실업률, 높은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차별 등으로 어지없이 무너졌다.

12) 그동안의 거의 유일한 성과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40만원으로 확대한 것인데, 이 역시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급여만을 인상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수 정규직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정부는 생색을 내며 또다시 엄청난 선전효과를 누렸다.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서의 여성보호조치는, 그것 없이도 실질적 평등이 거의 달성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폐지해야 할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따져 시행해야 한다. 보호조치는 여성을 보호하여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니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차별을 강화하는 등의 역효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기능으로 인한 손실이 보호조치가 목표로 하는 효과보다 클 때도 보호조치는 폐지됨이 옳다. 이러한 입장에는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2001년의 노동법 개정과 이후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금이 보호조치를 폐지해도 될 시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흐름-자본의 경향성과 전략 등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리트 여성들, 조직된 여성노동자들, 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미조직 여성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항상 일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모든 여성들의 입장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모성보호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실천은 이러한 노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세칼럼

이라크 포로학대를 둘러싼 쟁점들

전쟁의 광기, 광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에 관한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나와 같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리도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다.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실로 그 파장은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세계 각지의 언론은 일제히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한 소식을 내보내고, 오만방자하던 미국은 세계 각지의 빗발치는 비난을 얼버무리는 데 급급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7일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 미국의 기록 2003-2004>라는 긴 제목으로 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비난 때문인지 15일 발표 예정이었던 것을 이틀 연장하였다. 어차피 발표할 것을 이틀 연장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이라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고 하니 '역사나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쟁점 1. 린디 잉글랜드 일병을 바라보는 시선.

전 세계의 유명인, 린디 잉글랜드 일병.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 측의 여군인 린디 잉글랜드 일병이다. 알몸의 이라크 남성 포로 피라미드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고문으로 사망한 포로 머리맡에서 'V'자를 그리는 모습, 개줄에 남성 포로를 묶어 끌어 다니는 모습 등 사진 속 린디 일병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린디 일병은 마치 미국이 이라크에 자행한 모든 폭력을 상징하는 듯 하였고, 전 세계인들은 마음 속 깊숙이 쌓여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대상으로 린디 일병을 지목한 듯 했다. 끊임없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고, 이를 계기로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의 이라크 포로 학대의 실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글은 린디 잉글랜드 일병을 변호하려는게 아니다. 린디 잉글랜드 일병의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녀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린디 일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가 크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첫째, 린디 일병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성', '평화'와 같은 가치를 져버렸다는 점과 둘째, 그 동안 가해자-남성, 피해자-여성이라는 공식을 깨고 '여성'이 가해자로 등장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둘은 가부장적인 여성 관념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여성'이라는 기표가 또 다시 남성 중심적인 논리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대중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려 한다.

린디 일병, 여성성, 평화의 가치.

언론에서는 린디 잉글랜드 일병과 관련한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린디 일병이 '여성'이라는 이유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유'였다. 지금까지 전쟁 상황에서 여성은 철저히 고통 받는 모습으로만 비쳐질 뿐이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모습, 황폐해진 땅을 보며 넋을 잃은 모습, 다친 사람을 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같이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자'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모성의 주체인 여성은 적장에 나간 아들들의 어머니로, 조국의 순결한 땅으로 표상되었다. 여성들은 아들과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인식될 뿐이었다.

이라크 포로 학대의 주범으로 '여성'인 린디가 가장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은 건 이런 통념을 뒤집은 데에 있다. 언론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식의 기사를 큼지막하게 내보냈다.

"포로학대의 주역처럼 등장하는 여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돌봄과 보살핌과 살림의 여성적 가치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분노와 당혹감과 서글픔을 느낀다"1) 는 이 기사의 내용은 평화와 돌봄의 가치를 상징하는 '여성'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것이다. 여성적 가치, 여성성의 내용은 린디가 '여성'일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나온다. 린디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적 가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린디 일병은 한 순간 '악녀' '악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특별한 악인의 기질을 타고 났는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패러디할 가치도 없는 그녀'란 애칭을 얻은 린디 일병은 네이버 인기 검색어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고 한다(2) 한 기사에서는 성(sex)이 다른 이라크 남자병사의 목에 오랏줄을 묶어 질질 끌고 다니는, 또 그것을 즐기는 미 여군 린디 잉글랜드의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마녀'같다는 느낌이 들어버린다고 한다(3)

또한 린디가 임신 중 이었다는 사실은 한층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모성을 지닌 여성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모성성'을 당연히 여기고, 모성적 가치가 돌봄·평화의 가치를 당연히 담보한다는 사회 통념-가부장적 통념-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모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1) 안정애 '전쟁과 여군' ,한겨레 21. 2004.06.03.

2) "부시,포로랑 입장 바꿔 생각해봐" 스포츠 투데이, 2004.05.10

3) 누가 '린디 잉글랜드' 가슴에 '주홍글씨 A'를 달아줬나, 김준태 , 프레시안 2004.05.08

이라크 포로에게 자행된 학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이라크 인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미군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군들 가운데 린디가 가장 큰 죄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은, '여성'이라는 이유가 일차적이다. 위의 기사처럼 '여성이라면 응당 지녀야하는 가치'가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한 번 여성에게, '여성성', '평화의 가치' 등이 본질적 속성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원래부터 더 평화적이고, 돌봄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논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린디를 비난하는 이유로 '여성적 가치'를 끌어오게 되면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평화 운동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여성이 평화의 가치를 원래부터 지니고 있기에 전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전 운동은 여성의 본질적 속성을 보살핌, 돌봄, 모성, 평화의 가치로 규정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성의 본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순간, 가부장적 사회에서 만들어진 '여성'의 관념과 중첩되어 버린다. 그리고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다시 먹히들어가는 위험성이 있다. 여성들의 평화운동, 반전운동이 역설적으로 반여성적인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가해자'로 등극한 린디 일병, 가해자 = 여성?

지금까지 여성들은 희생자이고 보호의 대상인 것처럼 상징되었다. 보호해야 할 존재, 약한 존재로서 여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상과 등치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성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린디는 이를 가차 없이 뒤집고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가해자'로 등장했다. 그녀는 여리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적극적인 존재, 보호의 존재가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다.

린디 일병은 통념상의 여성과는 너무나 달랐다. 린디 일병이 '남성'인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모습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언제나 피해자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특히 더 혐오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남성 위에 군림하는 여성의 모습이라니...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더욱 확연해진다. 성별 카테고리 하에서 남자의 의무는 공격과 보호, 여자의 의무는 사회적 재생산과 사기 북돋우기 식으로 각자 수행해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남성적 가치는 중요시되고 여성적 가치는 주변화된다.4) 전쟁 상황에서 강한 남성다움은 우위적 가치로 자리 잡고 전쟁의 승리는 남성성의 승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린디 일병의 모습은 고착화된 성별 카테고리를 뒤집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전쟁 시에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고정화된 성별 카테고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 동안 벌로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린디 일병이 가차 없이 드러내었던 것이다.

4) 박희경, '독일 언론을 통해 본 아프간 여성과 전쟁' , 『여성과 사회』 14호, 창작과 비평사, p.40

특히 남성들은 린디 일병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남성을 학대하는 여성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마치 '마녀'와 같은 그녀는,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남성화된 네티즌'은 그녀의 행동을 엽기적 수준 이상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전쟁중독증 환자', '고엽제나 생물화학전에 노출된 환자' 등등 온갖 수식어를 붙이며 악녀 중의 악녀로 부상시켰다. 전쟁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던 네티즌들이 남성 스스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언제나 남성 위에 군림하는 여성은 비난의 표적이 된다. 가해자로서 린디 일병의 행동은 더더욱 그러하다. 남성들은 그들의 영역에 침입한 린디 일병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도 네티즌의 반응에 장단을 맞추며 린디에 대한 남성화된 시선을 유감없이 내보였다. 린디 일병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반응은 역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쟁점 2. 이라크 포로 학대

이라크 여성들의 성학대, 감각적인 보도로 그칠 뿐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문화적 관념이 전쟁 상황에서 성별화된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시에 여성들의 몸은 여성 개인의 몸이 아닌 사회적 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예외가 아니었다. 린디 잉글랜드 일병의 얘기가 온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한 순간의 충격 뿐 그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기사가 있었다. 바로 아부 그라이브 여성포로의 성학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언론에서는 "아부 그라이브 여성포로, 하루에 17차례나 강간당해" 와 같은 표제를 달고,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자행되고 있던 포로 성고문과 학대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서도 "강간당한 그녀의 동료는 48시간이나 의식을 잃었다",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라크 경찰에 의해 하루에 17차례나 강간당했다" 와 같은 선정적인 표제를 내걸었다.5) 하지만 '17차례'를 강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십 차례라는 '횟수'가 전쟁의 잔혹성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일까? 17번 강간당하는게 한 번 강간당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일까? 여성들의 몸은, 그 잔혹성의 정도가 심할수록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는 대개 눈살을 찌푸린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이 별로 없다. 그저 "고얀 놈들" 이라는 한 마디로 일축한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표제를 단 언론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스포츠 일면의 선정적인 기사와 마찬가지로 읽혀버린다. 이라크 여성들에 대한 성 학대의 기사는, 전쟁 시 여성들에 대한 성학대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루어지는지,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전쟁의 잔혹성이 '한 번 더' 드러나는 데에만 그쳐버린다.

5) '이라크 여성포로 하루에 17차례나 강간당해' 프레시안 2004.05.29.

전쟁시/평화시의 성별화 된 폭력

전쟁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에 대한 폭력, 강간은 이라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시의 폭력 문화는 그 지역에서의 평화시의 문화

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마리아 울루직(Maria B. Olujic)은 크로아티아와 보스티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을 조사하며 여성들의 성학대와 관련한 여러 측면들을 짚어주고 있다.6)

그녀는 성별화된 폭력이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교란도구로써 몸, 성, 명예에 대한 문화적 은유를 활용한다고 한다. 전쟁 폭력은 이미 존재했던 사회 문화적 역학의 절정이고, 전쟁 강간은 평화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명예·수치심·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없었다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테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한 이라크 여성은 결국 자살을 했다. 이 여성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 자매에게 자살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있었던 한 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이 미군들에게 끌려가면서 '우리를 죽일 방법을 제발 찾아 달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6) 마리아 울루직(Maria B. Olujic) , 「테러의 체현 : 크로아티아와 보스티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

이라크 사회에서 여성들의 순결은 중요하고, 이에 따라 명예/수치심이 작동한다. 여성들의 성은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고, 자신의 아내가 만약 순결하지 않다면 그 남편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회이다.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 한 것은 곧 이라크 남성, 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요, 적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이라크 남성은 그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철저히 고통을 받는다. 미군들은 성을 금기시하는 이라크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평화 시에도 남성들에게 성이 통제되지만, 전쟁 시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 학대가 자행된다.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곳이고, 이러한 여성의 몸을 강간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남성의 남성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스니아 전쟁 당시, 강간이 적의 종족 말살이라는 군사적 전략으로써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적이 보는 앞에서 적의 아내를 강간하고 다른 종족의 아기를 갖게 하는 고의적 강간은 동티모르 독립투쟁운동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 대한 집단강간은 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세르비아의 집단 강간 캠프, 아프간의 여성들에게 행해진 성폭력, 이는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성적 폭력, 고문의 무기, 이라크 남성

마리아 울루직은, 비록 강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성 죄수들에게 서로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강간이 모멸, 수치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고문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형제간, 부자간의 오랄 섹스와 같은 강요된 성적 폭력 행위에 관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 그라이브 사태가 비난받는 것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성학대' 와 관련된 것이다. 남성 죄수들을 알몸으로 벗겨놓고, 강제로 자위를 하게 하거나, 알몸인 여러 명의 죄수를 서로 부둥켜안게 하고, 강제로 동성간의 성행위를 연출시키도록 한 장면 등 이라크 사회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고문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성 학대 보도가 이라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은 이라크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남성들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준 사람이 '여성'(린디 일병)이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성적 학대 자체가 이라크 남성의 '남성성'을 거세하는 것이요, 이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여성'이기에 이들은 한층 더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성적 폭력의 극한,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바라며

이처럼, 전쟁 시 '몸'은 사회적 몸이 되고, 정치적 은유가 각인된다. 전쟁 시 성 학대는 고문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별화된 폭력'이 자행된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 시에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의 일상적인 문화가 응축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하고, 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고 따라서 여성의 순결이 남성의 명예가 되는 이라크 사회의 문화가 고문 방식에 적극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라크 성 학대를 보도하는 언론은 그 심각성을 좀더 면밀히 따져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을 내세우며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성 학대는 그 자체로 끔찍한 것이다. 소유물로서 여성의 몸이 적에 의해 침탈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 그 자체가 여성의 통제 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전쟁 상황에서 더 많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 이라크 여성들에 대한 성적 폭력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강간의 횟수를 보며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분노를 터뜨릴 것이 아니라 성적 폭력의 극한으로서 광기의 전장을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Imagine

|정세칼럼

진정한 웰빙의 시대?

2004, 올해 히트상품은 '웰빙' / 건강추구 '웰빙족' 겨냥상품 뜬다 /
'웰빙 금융상품' 쏟아진다
주택시장 '웰빙 아파트' 바람 / 웰빙 운동,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껌 과자 하나에도 건강이 먼저 '웰빙 스낵' / 술도 '웰빙'바람 / 웰빙 의상, 스포츠 캐주얼 시장 '순풍의 돛' 웰빙 투어, "주말을 잡아라" / 웰빙 건강법 반신욕, '목욕도 보약이다' / 웰빙 제품, "공기청정기는 필수"
웰빙 보험시대 / 웰빙 바람 TV를 비꼰다 / 명상 웰빙 타워 / 웰빙 아바타 인기 / 드라이빙도 웰빙 / .....

어느 일간지에서든지 간에 '웰빙'으로 기사검색을 하면 2000여개가 넘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표제 중 짤막한 것 몇 개씩을 적어보았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웰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웰빙의 시대'이다. 이 글은 왜 이러한 웰빙 열풍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출현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웰빙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와 웰빙

이제 Well-being은 하나의 유행을 지나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키게 되었다. 언제나 빠르게 생산해야만하고 경쟁의 연속인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꽤나 쓸데없는 일이고 낭비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행복과 안녕을 뜻하는 웰빙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태도까지를 총체적으로 가리키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건강 개념으로까지 발전했다.

이것은 최근의 요가, 명상, 대안적 건강법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하나의 유망한 시장으로까지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저축, 투자지향성 및 노동력에 근거했던 경쟁 자본주의가 쇠퇴한 반면, 노동 시간의 단축과 생산성의 급증으로 여가가 늘어나면서 자본주의는 이제 생산의 영역보다는 소비의 영역을 자신의 이윤창출의 활로로 삼게 된다. 소비영역의 확장을 통해 팽창하는 자본주의는 이제까지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아니었던 비물질적인 영역에까지도 확장되고, 요가와 명상 등 이전에는 상품의 영역이 아니었던 분야가 이제는 소위 '뜨는' 트렌드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유명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디오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의 요가나 명상과 어울리는 듯한-서구에서 보면 정말 '동양스러운'-곳에 가서 촬영되는가 하면, 편안함과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아파트 광고에서도 요가나 명상을 하는 장면들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요가, 명상법을 알려주는 책들과 이에 맞춰 나오는 뉴에이지 음악?명상 음악, 그에 알맞은 에스닉 패션과 트레이닝 차림, 갖가지 아로마 향초까지 모두 상품화되고 있다.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떠오른 웰빙은 이처럼 시대적 요구-소비 중심 자본주의의 요구-에 매우 잘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새 경제 파트너로서, 혹은 이윤창출구로서 웰빙이 선택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잘먹고 잘살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특별한 욕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왜일까.

끊임없이 개인적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 권력

근대 사회에서 몸은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면서 중요해졌다. 개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구성하고 지탱해 주었던 종교적 세계가 쇠퇴하면서 개인을 초월한 의미구조들로부터 명확한 세계관이나 자아 정체성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몸이 신뢰할 만한 자아감을 재구성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1) 따라서 자기관리 전략은 '몸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몸의 각 부분들을 발달시키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게 되며, 현재 이러한 전략들은 '피트니스 산업'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2) 더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중심의 문화 속에서 몸은 규칙적인 운동, 개인적인 건강 프로그램, 고섬유 식이요법,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을 통해 조율하고 보살피며 전시해야 할 일종의 기계, 상품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1) 크리스 쉴링,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 1999, p.21

2) ibid, p.271

웰빙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 등장한 몸에 대한 관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요즘 웰빙 운동 중 가장 인기 있다는 '요가'는 원래 수십 년간?노인을 위한 건강 체조?정도로 인식되어오다가 90년대 미국의 요가 열풍과 함께 국내에서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요가로 수십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원정혜씨의 강좌가 방송을 타면서[3],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겨냥해 제작된 탤런트들의 요가 비디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인기를 얻게 된 요가는 태권도와 가라데, 킥복싱의 기본동작을 응용해 만든 신종 스포츠인 보디킥(가라데와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응용했다고 해서 쿤도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발리 스포츠클럽에서 처음 시작됨), 태권도와 복싱을 혼합한 태보, 뱃살을 쉽게 빼준다는 인도 전통 춤 벨리댄싱, 할리우드 스타 카메론 디아즈, 리브 타일러 등에 힘입어 들어온 스트레칭의 한 방법인 필라테스 등 각종 신종 운동들이 생긴 맥락과도 일치한다.[4]

3) 안선희 기자, , 2003년 6월 20일자, 한겨레

4) 전영선 기자, <직장 여성, 다이어트 요가 열풍>, 2003년 2월 18일자, 문화일보

이처럼 기본적으로 웰빙 운동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개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겨냥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상적 신체와 외모의 기준이 확산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개개인의 일상에서 이상적 기준을 자신 스스로가 '실천'하도록 은밀한 강요의 각본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권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억압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선의 권력, 개인적인 자기 검열과 규범에 의한 '자기 교정'을 통해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몸에 대한 관리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웰빙 운동들은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정교한 권력의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용들은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허용된 가장 주요한 자원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나친 불안으로 인한 거식증 여성들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와 연구들은 사회에서 부여하는 여성의 외모에 관한 기준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를 반증하기도 하거니와 많은 여성들이 그에 스스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유명 연예인들의 요가 다이어트 비디오 출시, 헐리우드 스타들의 요가 열중에 대한 기사들, 웰빙 운동들에 대한 계속된 홍보[5] 등은 여성들에게 진정 자신의 건강을 위한 웰빙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 좀 하지 그래"라는 은근한 시선과 핀잔을 듣도록 만들고 있다.

5) 요즘은 티비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쉽게 요가동작을 접할 수 있다. 한 광고에서는 '머리가 작아지는 요가동작', '식욕을 억제하는 요가 동작'을 취하는 여성을 등장시켜 인터넷 검색순위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사치성 정신주의

요즘 인터넷에 보면 웰빙의 인기에 대해 저마다 '왜'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인기의 원인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많은 경우를 보면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것"[6], "바야흐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대는 지났고 현재 중요한 명제는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7]과 같은 식이 대다수이다. 웰빙의 본래 목적은 정신적인 만족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으며, 웰빙의 인기 또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가 인구가 1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로 요가 열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요가 협회의 충재의 말을 들어 보면 진정 웰빙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요가 열풍의 원인에 대해 김광백 한국요가협회 충재는 "과거 요가가 강조하던 명상이나 정신세계에서 탈피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요법으로 보급한 것이 적중했다"고 진단했다.[8] 즉 본래 명상을 주로 하는 인도의 요가를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으로 바꾼 것이 요가 인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꾸 웰빙을 통한 건강과 '세련됨'을 연결시키는 광고들은 보면 진짜 웰빙이 원하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웰빙과 세련됨은 특히 아파트 광고에서 많이 보여 지는데, 아파트 안의 넓고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요가를 하거나 푸른 야채를 먹는 여성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광고들은 가장 도시적인 아파트와 가장 자연적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의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원래 있었던 자연환경을 깎거나 빈민촌을 철거하고 난 위에 세워진 아파트는 광고에서 도시와 자연이라는 모순적인 이미지를 결합시키면서 안락함과 세련됨을 부각시킨다. 도시적 이미지와 자연적 이미지의 결합은 비단 아파트 광고 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의 주로 가정용품과 관련된 것에 많이 사용 된다. 이러한 광고들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삶보다는 오히려 광고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세련됨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웰빙의 의미를 삶의 만족과 정신적 풍요로움에서 찾고 있지만 실상은 정신적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 추구하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남들보다 세련된, 남들이 보기에 세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웰빙은 일종의 '사치성 정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에코페미니스트인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가 『에코페미니즘』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제까지 사회문화를 지탱해 온 기계문명과 물질만능에 대한 회의, 도구적 이성에 의한 전쟁의 공허감 속에서 탄생했다. 1세계가 선두지지 해왔던 물질문명에 대한 반감은 동양, 특히 중국과 인도 전통의 맥락에서 떼어낸 명상 ? 요가 ? 주술 ? 대안적 건강법 등으로 이어졌는데,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는 동양인들, 예컨대 인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취한 요가나 태극권 같은 단편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 정치적 맥락에 놓인 것인지도 거의 알지 못하며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구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문명의 몸과 정신의 분리,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분리는 뿌리 깊은 위기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명에서 파괴된 것을 찾으려는 욕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방식은 식민지에서 물질적 자원을 약탈한 다음 이제는 정신적 ? 문화적 자원마저도 세계시장의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며, 동양의 정신주의를 파편적이고 상품화된 방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9]

우리의 웰빙 문화도 이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요가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해서 인기를 얻었다는 요가협회 충재의 말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현재의 웰빙을 바라보면서 실재를 외면 한 채 '물질적 부의 축적을 넘어서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과 만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거나 '물질적 가치 대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는 식의 상투적인 분석은 웰빙 문화가 무엇을 은폐하는지 무엇을 조장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이제 웰빙은 자신을 치장하는 액세서리 중의 하나로, 사치성 정신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박민규 기자,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나 웰빙족>, 2003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7) 네이버 http://www.nanumclinic.co.kr/news/lecture_v.asp?smo=9128&page=1&gubun=&keyword

8) 전영선 기자, <직장 여성, 다이어트 요가 열풍>, 2003년 02월 18일자, 문화일보

9)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 이난아 역, p.32

현재의 웰빙 문화가 사치성 정신주의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향유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관련된 문제에 있기도 하다. 웰빙 트렌드가 소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웰빙 하는 데에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소비 산업 구조, 웰빙의 시장이 모두에게 열려진 시장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자유롭게 허용된 시장임을 뜻한다.

시트콤에서의 우스갯말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청년실업이 60만에 육박하는 시대'에, 또 청년 실업자 ? 신용불량자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신-빈곤층이 등장하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노동시간이 훨씬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현재의 웰빙 문화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오히려 과도하게 소비위주의, 돈 드는 웰빙 문화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일상으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양식, '일탈' 양식들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특정한 몸,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몸에 부여된 높은 상징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은근히 과시적인 소비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웰빙 문화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웰빙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웰빙의 비용이 전적으로 개인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쉬면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안전한 음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은 오늘날 사회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Not 웰빙한' 사건들, 즉 웰빙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사건들 이를테면 핵 폐기장 건설, 새집 증후군, 쓰레기 만두 등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야 누릴 수 있는 웰빙 아파트, 웰빙 푸트 등의 갖가지 웰빙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웰빙의 접근성에 대해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관리 되지 않는 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작업외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과 노동의 질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회인식을 반영한다.

어떤 이들은 소비적인 지금의 웰빙 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듯 말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웰빙은 의미를 갖지 못하며, 삶의 질은 내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높아집니다. 현재의 웰빙 유행이 하나의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직 일반 서민층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있지만, 웰빙 고유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누구나 웰빙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잘 먹고, 자신의 형편, 나이에 맞게 운동이나 여행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웰빙족이 될 것을 제안 합니다."[10]라고 말하면서(변명하면서) 웰빙족이 될 것을 제안하지만 현재의 노동조건을 고려해볼 때 '남들 다 하는 것 같으니 나도 해볼까'하는 웰빙을 시도하는 것은 외려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피곤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개인 부담으로 환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우리 사회에서 웰빙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0) 네이버검색 Http://www.nanumclinic.co.kr/news/lecture_v.asp?smo=9128&page=1&gubun=&keyword

여성의 일은 또 늘어나

웰빙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몇 년 전부터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패스트푸드'가 지목되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식사대용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찾고 있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식품에 맛이 길들여진 어린이들에게는 최고 인기 식품이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영양가 없이 지방과 칼로리만 높고 게다가 일회용 쓰레기까지 배출하는 대표적인 정크 푸드로, 건강하지 못한 식품으로 인식 된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에 반대하여 몇 년 전부터는 '슬로우 푸드' 운동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 광장 옆에 들어온 맥도널드에 반대하기 위하여 처음 시작된 슬로우푸드 운동은 전통방식으로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해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슬로우푸드 예찬론자들은 "슬로우푸드는 획일화된 맛이 아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 좋다"면서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또한 2000년, 김종덕 교수는 슬로우푸드 운동을 국내에 소개했는데 그가 제시한 슬로우 푸드의 10가지를 살펴보자.

1. 식사 만들어 먹기 2. 패스트푸드 삼가기 3. 자전거 타기나 걸어서 출근하기 4. 텃밭 이용해 채소 키우기 5. 식사시간 길게 끌기 6. 재래시장 가기 7. 사철음식이 아닌 제철음식 먹기 8. 유기농산물 먹기 9. 아이들에게 음식 교육하기 10. 미각 키우는 공부하기12)

11) <업기적 먹거리 이젠 대안이다! 슬로우푸드 운동 맛 획일화 반대, 전통음식 재발견>, 2004년 6월17일자, 여성신문

12) ibid.

직접 기르는 채소로 식사를 만들어 먹고, 아이들에게 음식 교육을 시키고,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 이런 생활양식을 통해서라면 영양가 없는 음식을 정신없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건강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을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가사와 관련된 내용의 슬로우푸드 운동은 실제로 여성의 일을 가중시키고 자칫 가족의 건강이 전적으로 어머니나 주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약 웰빙 문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별분업이나 환경(혹은 자연)과 어머니(혹은 주부나 여성)의 막연한 친근함-이것은 여성이 가사 일에 좀 더 적합하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에 대한 고찰 없이 제안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현재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가사 일을 더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진정한 웰빙, 진정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어라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현재의 웰빙은 소비지본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비물질적 영역까지 상품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몸에 대한 통제 권력으로 작용하며 심지어는 사회성 정신주의에다가 여성의 일까지 늘리는 쓸데없는 것?!', '우리 웰빙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혹독하게 살아가자?!' 인가? 물론 현재의 웰빙 문화가 왜곡된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철저하게 규격화되고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근대적인 삶이 대안은 아니다. 건강한 정신과 몸, 적당한 휴식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웰빙이 진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조건들에 맞는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한다. 웰빙이 오늘날 사회성 정신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현실적 조건과는 동떨어진 채 유행처럼 번지는 동조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작업장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민중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채 시행되고 있는 의료개방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초국적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등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수용이 진정한 웰빙을 확립하는 데에 중요하다. 각종 직업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웰빙? 당장 생존권 박탈에 임박해 있는 민중들에게 정신적 안정? 장기적으로 웰빙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웰빙 문화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 성의 노동을 활용하여, 혹은 한 성에게 가해지는 통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슬로우푸드의 사례나 요즘 웰빙 운동에서 발견되는 외모에 대한 규제에서도 살펴봤지만 웰빙이 혹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여성들의 몸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가나 명상 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을 앓고13)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I)과 방법(I)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 EBS '삼색토크 여자'에 나와 춤명상을 소개했던 박태이 씨의 사례를 짧게 소개할까 한다. 그녀는 20년간 수차례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중 우연히 인도에 가서 명상수련을 하게 되고, 그 후 춤 명상으로 몇 년간 자신을 치료하면서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명상을 했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가든 춤명상이든 혼자 벽을 보고 가부좌를 틀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이다.

건강한 정신과 몸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웰빙 문화, '진정한 웰빙 시대'가 될 수 있으려면 아직 갈 길은 먼 듯 하다. Imagine

13) 특히 여성들에게 잦다고 알려져 있는 히스테리와 정신병, 우울증-주부우울증, 산후우울증 등-은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침묵의 반항으로도 읽힐 수 있으나 결국 자기정체성과의 긍정적인 조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기획2| 에코 페미니즘

생태 여성 해방론의 이론적 개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유럽 중심적 발전 모델을 조장한 결과 세계 생태계는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어 갔다. 에코페미니즘은 이에 반기를 들고 자연 세계와의 밀접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하며 나타난 흐름이다.1) 이는 여성적 원리를 매개로 생태학과 페미니즘을 접목시킴으로써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1) 제인프리드먼, 이박혜경, 「페미니즘과 환경」, 『페미니즘』, 107P

생태여성해방론(Eco-feminism)은 1970년대 말 여성운동, 평화 운동, 환경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으로부터 성립하였다. 여러 갈래의 정치적 행위와 사고가 한데 결합된 것은 대학의 상아탑에서 고안된 의식적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 다양한 투쟁과 목표들이 내적으로 결합돼 있음의 표현이었다.2) 환경 파괴와 군비 강화에 대항하는 일련의 운동과 투쟁들이 서로 관련을 맺는 가운데 그 당시 평화 운동, 반핵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들은 여성과 자연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가부장제 및 군국주의와 자연 파괴 사이의 연관성, 여성 해방과 생태계의 치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면서 생태여성론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북반구에서 여성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1970년대 중반 여성운동의 흐름 안에서 주로 미국에서의 에코페미니즘의 출현과 더불어 전개되었음에 비해 남반구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 운동이 시작되었다.3) 그 양상은 다르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환경 운동은 여성과 환경 사이의 친화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이론은 가부장제에서의 남성의 여성 지배와 인간의 자연 지배가 닮아 있고, 자본주의에서 자연과 여성의 노동은 자본을 위해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는 페미니즘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때문에 생태여성론은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는데 본질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 개념의 형성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마리아 미스, 「전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3) 이렇게 여성과 환경을 접목시킨 운동은 각기 다른 지역에 근거하여 펼쳐지기 때문에 여성과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개발과 개발을 주도했던 세계 경제,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 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태여성론의 공통된 함의들

생태여성론은 자연과 여성의 이미지가 동일하고4) 자연이 인간에 의해 취급받는 방식과 여성이 남성에 의해 취급받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으로 가정 또는 재생산 영역에 주목한다. 즉, 여성과 자연의 본성이 동일하고 남성과 문화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동일성'과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대상으로서 여성과 자연의 위치가 같다는 '동치성'을 이론의 기반으로 삼아 지금까지 내재적 가치가 박탈당한 채 주체성이 상실된 타자의 위치에 불과했던 여성과 자연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모두가 해방된 대안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과 자연의 파괴를 야기하는 원인은 가부장제적 구조에 있다. 가부장제적 개념구조는 차별적이고 차등적이며 도구주의적인 이원론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 여성과 자연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보살핌과 돌봄, 부드러움, 감성 등의 속성은 남성, 문화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고, 여성의 출산, 양육, 가사노동과 같은 재생산활동과 자연이 수행하는 역할은 자본, 남성, 인간 중심적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영역의 논리에 의해 가치평가 대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생태여성론은 지금껏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서 평가절하당해 온 여성과 자연의 속성,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가부장제적 의미 구조에 대한 대항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가부장제적 구조에 대한 저항의 지점으로 재생산 영역과 이를 담당하는 여성을 설정하여 여성과 자연이 담당하는 역할로 인정되는 '보살핌과 양육의 특성을 남성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현재의 생산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모색한다.5) 대안 세계를 위해 모두가 여성성, 즉 영성 또는 여성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상보적, 상생적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지금의 발전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며 양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동안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운다.6) 생산 중심의 여성 해방론-생산영역의 우월성을 상정하는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의 논리는 결국 출산, 육아, 가사노동과 같은 재생산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미 자연에 대한 착취를 통해 지탱되어 온 생산영역에 대한 비판없이 생산영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환경 운동 역시 현재 상황 자체에 대한 분석과 고려를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현실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가 자연을 위해야 한다는 식의 환경 운동은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무비판적 평등개념을 따르는 여성 운동과 환경 운동은 대안 세계로의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한다.

4) 역사적으로 여성과 자연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여성과 자연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Daly, Griffin), 적어도 가사노동, 양육과 같은 자연과 깊은 관련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형태의 재생산노동을 여성이 수행함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과 더 친화적인 존재라는 점을 제시한다(Mies, Agawal, Mellor)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5)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6) 문순홍,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분화과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생태여성해방론의 흐름

생태여성해방론은 그 단어 그대로 생태학과 여성해방론의 문제의식을 결합시킨 이론으로 1970년대 초반 급진적, 문화적 여성해방론의 한 부류로부터 출발하였다. 지금 존재하는 다원화된 입장은 이후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자들이 참여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지배의 다원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자연과 여성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연과 여성이라는 양자 모두가 열등한 존재로 비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급진적 문화적 여성해방론이라는 두 가지 흐름7)이 생겨난다. 이 중 후자가 생태여성해방론의 초기 흐름인 본질주의적 생태여성해방론의 입장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던 생태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논의8)를 거쳐 생태여성해방론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탄생된 생태여성해방론은 왜 굳이 여성-환경이어야 하는가하는 논쟁의 발발로 여러 가지 흐름이 만들어진다. 여성적 원리나 여성성에 초점을 두는 주장과 본질주의적 성향의 존재 여부는 담론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상황은 후천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 인간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과 자연은 동일한 피해자이지만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서 여성은 능동적 주체로 설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모델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등한 대화는 필연적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큰 두가지 갈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여성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해체하려는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오히려 여성과 자연의 연결을 찬양하고 여성, 자연, 감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급진적 문화적 여성해방론이 등장한다.

8) 자연에 대한 억압과 인간에 대한 억압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사회주의의 문제의식과 계급지배와 여성에 대한 지배를 연결된 것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문제의식이 합쳐지면서 자연-여성-노동자계급 등에 대한 지배가 상호 연결된 것이며 공통의 해방전략을 추구해야한다는 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1) 급진 생태 여성론 (본질주의적 생태여성해방론)

급진적 여성론과 근본생태론의 결합이다.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능력과 이와 관련된 성적인 특징들로 인해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월경, 수유 등의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자연과의 합일을 경험케 하는 '능력'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특징이 자연의 상호연관성과 순환성에 독특하게 조응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여성이 실제로 출산을 경험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여성은 그들의 생물적 특징으로 인해 자연과 통합적인 존재로 서게 된다.이들이 이렇게 여성과 자연의 동일시를 행한 후 여성과 자연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이를 적 적극적인 정치적 지점으로 삼는다.

여성과 자연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는 생물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 경향성은 환경운동에 여성 참여를 끌어들이는 성과를 남긴다. 그러나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에 기반한 자연과의 동일시는 여성, 자연 대 남성, 문화라는 서구의 가부장적 이원론을 강화함과 함께 단지 여성, 자연에 대한 남성, 문화의 우월성을 거꾸로 할 뿐 그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설명틀 내에서는 남성이 자연과의 친화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보수주의가 지금까지 여성 억압에 사용한 여성적 본성론을 받아들여 역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 이론은 여성 역시 사회화의 형태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여성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닌다. 이 때문에 소수 특권 여성의 자연 파괴적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각 지역별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게 한다.

(2) 사회주의적 생태여성론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

이들은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능력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가사노동, 양육, 보살핌 노동과 같은 재생산노동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재생산 영역의 성격상[9] 재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여성은 그 경험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특별한 친화성을 얻고 있으며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과 자연은 동일한 지배구조 아래 같은 방식으로 억압을 경험한다.

여성이 담당하는 재생산노동은 '보살핌'과 '양육'노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재생산영역에서의 '보살핌'과 '양육' 노동의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환경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갖게 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특별한 태도, 지식을 획득하게 한다.[10] 또한 재생산 영역의 주담당자로서 여성은 자연의 파괴에 의해서 특수한 방식으로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연 환경의 오염은 특별히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영역은 자본, 남성, 인간 중심적 이해관계였기에 노동자들의 잉여가치, 생태적 변수들이 소비되는 과정, 여성 노동력을 비가시화시키고 무시해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시장생산체계가 자연, 재생산영역, 여성에 대한 초과착취에 기반하고 있기에 자연, 재생산영역, 여성에 대한 지배형태가 동일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비가시화된 영역을 다양한 사회 공간으로 확장할 경우 더욱 폭발적인 힘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보살핌의 윤리'를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해체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삼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이론이 제 3세계에 적용되면서 서구형 발전방향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데 초점이 놓이게 된다.[11]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이 여성과 자구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 이를 통해 생산을 재생산영역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속 가능한 생존[12]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성은 생계 시각, 생존적 관점을 획득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으로의 사회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재생산 영역의 주된 특징은 사회구성원의 생명유지, 일상 생활의 지속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감정적 '필요'를 공급하는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생산영역에서 배제된, 이윤으로 전환되지 않는 노동을 재생산영역이 담당한다.

10)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11) 문순홍,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분화과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12) 시장 이윤 축적이 아닌 '보살핌의 윤리'에 기초한 경제 체제를 대안적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저항의 지점으로서의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에 대한 고찰

본질주의적 생태여성해방론과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자들은 모두 여성과 재생산 활동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여성은 보살핌의 윤리라는 특수한 가치체계를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 생물학적 재생산과의 연관성의 결과이건 보살핌, 양육으로 구성되는 재생산영역에서의 노동의 결과로 체화된 것이건 간에 이들은 여성이 체화하고 있는 보살핌의 윤리를 새로운 인간성의 모델이자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저항과 대안의 지점으로 사고 한다.

그러나 본질주의적 생태여성해방론에 따르면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이론은 여성 육체와 자연을 연관성을 밝혀내고 이를 가부장제의 위계적 이원론의 해석적 틀에서 떼어내 해방을 위한 정치적 지점의 기능성을 탐색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남성과 여성을 넘어 '인간'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기존의 이원론적 사고를 공고히 하는데 그칠 뿐이다. 여성과 자연의 본질적 특성이 같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여성은 원래부터 재생산 영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성역할을 고수해야만 한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은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비판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경우 보살핌의 윤리가 어느 정도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로 체화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보살핌의 윤리는 남성, 여성 모두가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게 한다. 평가절하되고 있는 재생산 영역에 주목하고 이 영역에서 획득한 가치를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대안의 지점으로 삼음으로써 해방을 꿈꾼다. '보살핌의 윤리'는 더 이상 여성이 지녀야만 하는 여성의 영역 내부의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자본주의 해체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써 기능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자연-여성 연관성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살핌과 양육 노동으로 특징지워지는 재생산 노동에 대해 새로이 가치 평가하려는 시도는 자칫 어머니로 대변되는 여성의 역할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여성도 남성도 함께 재생산 노동에 참여하여 보살핌의 윤리를 새롭게 사고하자는 논의는 그렇다할 묘안이 없는 한 그닥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도 여성이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재생산 노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노동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여성의 몫으로 돌려지는 악순환은 지속된다. 자연과 친밀하고 지식을 더욱 생각하고 보살피는 '어머니'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여성들은 기존의 역할을 계속한다. 남성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현실 속에서 여성들에게 보살핌의 윤리가 체득되어 있고 자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기에 기존에 고수하던 성역할은 쉬이 변하지 않는다. 이미 그것들을 여성들이 체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 역시 본질적 생태여성해방론과 현실적으로 그닥 큰 차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환경 운동이 에코페미니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부 운동으로 귀결되는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생태여성해방론에서 문제 해결 주체도 여성이고 해결 방식 역시 여성적 사고이다. 가사 노동을 여성이 하고 있고 자연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여성이기에 이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해야만 한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의 가사노동도 생태운동도 늘 여성의 몫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생태여성해방론이 좀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나가고 새로운 정치적 전략으로서 기능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agine

개발 중심의 환경주의와 여성의 생존 part 1.

1. 여성의 빈곤과 세계화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지만,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를, 세계전체 소득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 실제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노동 4/5라는 비율에서 보여지듯 여성의 노동은 비가시적이고 저임금 영역에 집중돼 있으며, 재생산 노동은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1].

1)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진보평론』 제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권은 박탈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더욱 횡행하면서 전반적인 민중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떨어졌다. 이런 양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에게 보다 파괴적이다. 자유무역지대 등지에서 시달리는 저임금 고역 노동자(sweat-shop workers)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구조조정 및 사회 공공부문 축소로 인한 재생산 노동 부담을 암묵적으로 '가족'영역에서 흡수할 것으로 전제하고 재생산 노동의 전담자인 여성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단행하고 있는 자연착취가 여성에게 더욱 적대적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은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 vs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자 제3세계 여성」의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환경의 수호자 자본 vs 환경파괴의 주범 제3세계 여성」 또한 종종 성립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여성-환경단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제3세계 여성과 자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여성, 자연, 빈곤, 국제적 NGO 운동이 뒤엉킨 모순적인 모습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조망하고 여성-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희망하게나마 잡아보려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새로운 이윤의 토대를 찾아 제3세계의 개발과 착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글 또한 제3세계의 자연파괴와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려 한다.

2. 여성과 토지의 관계 및 토착 여성들의 대응

(1) 제3세계 여성들에게 자연이 갖는 의미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의 재생산과 자연의 재생산과의 연관성을 기본 전제로 한다. 자연에서 생명은 지역 생태계 속에서 종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통해 후세로 전달된다. 인간에게 재생산은 후손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생물학적이기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이기도 하다.[2]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음식, 물, 의복 등을 공급하고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해 빨래, 청소를 담당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자원'이란 측면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제3세계 또는 농업을 위주로 삼고 있는 나라의 여성들에게 있어 자연(토지)은 그야말로 중요하다. 이들 지역의 여성들은 생계농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필수품인 연료, 음식, 물, 사료, 약초 등을 숲으로부터 모아오는 책임을 맡아왔다. 즉, 많은 제3세계 공동체의 경제는 그들의 생존과 복지를 생물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있어 자연(토지, 숲)이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 3세계 농촌여성들에게 숲은 가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이며,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연은 착취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하는 '자원'이다.[3]

2) 캐롤린 머천트, 『래디컬 에콜로지』, 이후, 2001, p.286

3)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고대 석순』 15호 1998.

(2) 여성의 자연으로부터의 권리 박탈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성들의 재생산은 생태적 주기 유지를 통하여 자연을 보존하며 식량과 영양분, 식수라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인간 생명을 보존한다.[4] 그러나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이 유지해왔던 생태적 주기는 파괴되었다. 자본은 수익창출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한 토지의 사유화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토지 사용권을 파괴함으로써 여성들을 추방시켰다. 이러한 자연의 파괴, 혹은 착취는 여성들에게 가족을 위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 이외에 여성들이 담당해야 하는 노동시간이 더 길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비옥한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덜 비옥한 땅을 일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삼림벌채와 환경파괴로 인한 사막화, 물의 오염 등으로 인해 기본적 필요를 얻기 위해 더 멀리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5] 또한 환금 작물의 확산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남자들이 이주하거나 식민 세력에 의해 강제 노역에 징집되어가는 경우에 여성들은 빈약한 자원만으로 아이들과 노인, 병약자들을 먹이고 돌봐야 했다.[6]

여기서 생물 다양성 문제는 여성들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이 생산의 수단인 동시에 소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생존과 생계의 지속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생물적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사용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7] 그러나 자본이 들어온 이후 생물 다양성은 다수확품종으로 대체되었다. 반죽와 혼합 나무들이 상업적 가치를 갖는 소나무로 대체한 된 것이 히말리아 산맥의 점증해가는 생태학적 불안정성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었으며, 소나무가 반즈의 생태학적이고 경제적 기능을 전혀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르왈리 여성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박탈되었다.[8]

종자의 다양성과 영양의 균형은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나 다수확품종의 단일경작은 영양 결핍과 불균형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작물의 다양성은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일경작은 화학비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들은 토양 내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죽여 없앤다. 예컨대 인도에는 바투아라는 밀밭에서 자라는 매우 영양가 높은 녹색채소가 있다. 여성들은 밀밭의 김을 매면서 밀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식구들에게 풍부한 영양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강도 높게 사용하면서 바투아는 밀의 주요 경쟁식물이 되었고 제초제를 써서 제거해야 할 잡초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식량순환은 파괴되고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이들은 공짜 영양원을 잃었다.[10] 또한 생물 다양성은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자급적 농경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수확품종의 단일경작에서는 더 많은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종자 다국적 기업의 착취 메커니즘에서 농민들은 비싼 종자를 구입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버린 것

이다.

즉, 개발에 의한 토지의 사유화와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결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원, 수입, 고용에 대한 여성들의 상대적인 접근 통로를 줄였으며, 여성들이 감당하는 노동의 부담을 증가시켰고,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악화시켰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의 생존에 위협을 느낀 사례는 한국의 새만금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갯벌은 갯벌 근처에 사는 여성들의 생존과 관련 있다. 이 여성들은 갯벌에서 나는 생합은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자원'이다. 그러나 갯벌은 간척사업이란 미명하에 파괴되고 있다. 간척사업은 갯벌을 '쓸모없는 땅', '황무지', '저개발', '무가치', '생산성이 낮은', '낙후'된 것으로 여겨 이를 메워 더 높은 생산성과 상업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공장 부지나 농경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갯벌을 통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즉,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성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4)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 91-93

5)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고대 석순』 15호 1998.

6)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34

7) 마리아 미즈,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p.208

8) 반즈는 나무의 일종으로 가르왈 지역을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9)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 129

10) 마리아 미즈,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p.106-107

(3) 인도의 칩코 운동 사례 중심으로

인도에서 숲은 인도인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11) 특히 경제에 토대를 둔 숲과 농업에서 숲과 나무의 생산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다. 식량을 채집하고 사료를 모으는 일은 주로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양식을 모으는 여성들은 숲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재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의 공공 지역과 공유지는 여성에게 열려 있었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한 이후, 군사용으로 인도의 목재를 착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숲을 농사의 방해물로 보아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무절제하게 숲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착취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1865년 1차 인도 삼림법이다. 이 삼림법에서 정부는 숲과 황무지를 보존 숲으로 선언 했다. 하지만 이는 숲에 대한 소위 '과학적 경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주민들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침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12)

1878년과 1927년에 삼림법이 도입됨에 따라 대중이 숲에 갖는 접근권과 권리는 심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는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더욱 박탈한 것이다. 이 후 인도 전역에서는, 영국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타적인 착취를 위해 숲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와 함께 공동의 자원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에 대항한 것으로 숲의 사티야그라하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삼림벌채, 생태적으로 부적합한 상업용 목재용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인한 전례 없던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어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나무를 품에 안고 베지 못하도록 저항했고, 이러한 운동은 이후 나무 끌어안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칩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초기 이 운동은 여성들과 마을 남성들이 연합해서 펼쳐졌다. 그러나 이 운동은 영국 식민 지배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공통 목표였을 때에만 남녀가 같이 했다. 이후 지역의 노동 계약자들과 임업 협조자들을 통해 정부 대리 기관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남성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숲을 보호해야 한다면 남성은 숲의 생산물에 기초한 상업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그 근본적인 남성과 여성들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이러한 두 목적은 결국 분열을 낳았다.

칩코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통해 우리는 제 3세계를 근대화 시킨다고 들어온 자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을 파탄 나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칩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운동이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중앙 인도 지역에 사는 부족들에게 모화나무는 아주 중요한데 여성들은 이 나무에서 피는 꽃의 육질 많은 화관을 채집해서 식품으로 쓰며 나무 씨에서 짜낸 기름은 요리나 불을 지필 때 사용하고 마가린, 비누, 글리세린 제조용으로 내다 판다. 이처럼 모화나무는 인도 여성들에게 단순히 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1987년과 1900년에 기근을 견디도록 해 주었다.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112)

12) 삼림법 이전에 주민들을 자유롭게 숲을 그들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자원'은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 경영' 이후 숲의 다양한 종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 종자들만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숲의 생태계와 숲의 자원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파괴하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숲의 다양한 자원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 집단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게 된다.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120)

13) 칩코 운동의 초기에 숲의 자원은 지역 외부의 삼림 계약자들에 의해서 착취되었다. 이때 칩코의 기본 토대가 되었던 생존을 위한 삼림에 대한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은 일시적으로 현지의 협조자들이 세운 제재소와 합성수지 공장을 위한 천연 자원을 공급하려는 대부분 남성들의 관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계발』, 솔, 1998, p.130)

|기획2|에코 페미니즘

개발 중심의 환경주의와 여성의 생존 part 2

3. 여성-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NGO 활동의 의의와 한계

(1) 여성-환경 문제의식의 대두와 NGO 활동의 전개

1970년 경부터 기존 개발주의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온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여성을 개발에 참여시키자는 움직임이 국제여성회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위기와 남반구 개발에 따른 자연 파괴, 그로 인한 여성의 생계-생존의 위협, 이에 대항하는 토착민들의 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개발 계획가들은 목재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절약형 난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파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개발과정이 여성과 자연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보서랍의 논의1) 등이 터져나왔다. 1980년대 중반 대중매체들은 남쪽의 가난한 여성상, 황폐한 불모지를 배경으로 무거운 장작더미와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을 지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미지 전파를 통해 북쪽의 일반대중과 개발기구들은 환경악화가 야기시킨 남쪽 여성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그 태동에서부터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이 활로를 찾기 위해 남반구를 주목하는 흐름과 동시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적 여성-환경운동의 남반구의 환경파괴, 여성의 빈곤화 개선 움직임은 이후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 및 여성문제가 자본의 활동구조와 밀접한 관계 속에 억압받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그 방향성은 흔들리게 된다.

국제적 여성-환경 운동은 UN이 주최한 세계여성대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처음으로 지속 불가능한 발전 및 남/북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환경위기와 연계 지었던 72년 코펜하겐의 「유엔환경회의」가 그 첫 계기가 된다. 여기서 세계 빈곤과 문맹의 대부분을 여성과 어린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75년 멕시코 시티의 제 1차 「유엔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을 발전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이 제시되었다.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조직적 역량을 상당부분 확보한 국제적 여성-환경 운동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환경 의제를 주류화 시키는데 집중했다. 단순히 여성 개인에게 생산노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WID 접근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젠더 쟁점을 고려하고 제도화시키는 '젠더 주류화전략'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그 일환으로 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의 사전 모임으로 준비한 「세계 여성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여성행동의제21」을 채택했다. 이 강령에서는 토지 등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경제력에 포함시킬 것, 친환경적인 생산활동과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권한 행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리우 환경회의」에 반영되어 「의제21」의 24장에 「지속적이고 평등한 개발을 위한 여성의 지구적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었다. 이 장에서 각국 정부가 2000년까지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2].

가장 최근 채택되어 국제 여성-환경운동의 지침 및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은 95년의 「베이징 강령」이다. 이것은 95년 「북경 여성대회」 때 채택된 것으로, 각종 개발과정 및 환경 문제에서 여성과 원주민 여성의 의사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A장. 여성과 빈곤」과 「K장. 여성과 환경」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파괴가 여성을 생산 활동 및 안전한 환경에서 제외시키고, 가난과 환경악화가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 「베이징 강령」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문제가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적 차원의 정의를 위한 선행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이다」라는 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90년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여성적 의제의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적 주체로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려는 긍정적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조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빈곤,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적 원인을 은폐하고 여성에게 생계 및 환경 수호의 부담만을 더 떠안기게 되는 실제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3].

14) 로지 브라이도티,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WED) : 그 주제와 서로 다른 견해들의 출현」,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나라사랑, 1995

15) 박은경, 「세계여성환경운동의 방향」

16) WID접근이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만을 강조함으로써 80년대 구조조정에 무력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자체를 젠더적 관점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젠더 주류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기보다는 WID 접근과 틀거리는 바꾸지 않은 채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에 불과했기에 WID 접근과 시실상 동일한 실천 및 효과로 이어졌다.

(2) 한계1 : 여성의 공식/비공식 노동 부담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국제적 여성-환경 NGO운동이 주요하게 목표하는 한 축은 여성을 개발에 기여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빈곤으로부터 여성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기도 했다. 「베이징 행동강령」의 「A장. 여성과 빈곤」은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한다」, 「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역설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체택하며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이러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환경 NGO는 세계은행 및 초국적 자본과 함께 움직였다. 우선, 생산성이 없는 여성들을 계몽시켜-동시에 다산성은 억제시켜[5]- 경제발전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제3세계의 자유무역구역 등에서의 집단적인 여성노동력 활용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여성은 기업가로 불리기도 했다. 마이크로크레딧[6](소액대출)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는 대규모 국제 여성NGO에서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적 자본집단을 추동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여성에게 소규모 대출을 해줌으로써 소자본 사업가로서 여성의 자립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남반구 및 제3세계 여성들은, 기존의 재생산 노동 부담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에 더하여 자본에게 착취당하는 부담까지 더하게 되었다. 개발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온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단지 보이지 않는 부불노동, 혹은 저임금, 재생산노동의 형태로 존재해왔을 뿐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비가시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여성을 개발정책에 참여시키려는 이러한 기획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우 불분명한 창업 전망을 제시하며 대출자의 뚜렷한 신용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하였고, 자금을 제공받은 제 3세계 여성들은 제공받은 자금을 무능한 가부장적 남편과 생활고로 인해 모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여성들은 그 돈을 갚기 위해 기존의 재생산 생존 노동에 더해 자신의 딸들까지 혹사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중된 노동부담으로 인한 이익은 여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돈을 번 것은 제3세계 여성들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었으며 여성들은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여성-환경 NGO가 초국적 자본과 손잡고 진행한 여성의 개발과정에의 통합 노력은 제 3세계를 제 1세계의 더욱 값싼 노동 및 원료의 공급지로써 기능하게 하는 신국제주의적 분업의 도입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더 유순하고 성실한 값싼 노동력으로 제3세계 여성노동력이 필요했고[7], 그 공급은 여성의 이익이란 명목으로 여성-환경NGO들이 수행했다. 실제로 70년대 여성-환경-개발 논쟁(WED논쟁)이 촉발된 초기 남반구 빈민 여성들의 희생자 이미지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풍부한 자원과 힘의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국제적 여성-환경운동가들은 남반구 여성을 '빛을 잘 갚고 성실한 투자처'로 자본에게 광고했던 것이다.

실제로 제 3세계 여성들이 자연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으며, 자본이 침투했을 경우에도 공장, 집단 작업장 등지에서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면서 온갖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제3세계 여성들의 '지양'되어야 할 현실이지 자본의 안전한 투자처로써, '미덕'으로써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간파한 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 해결책인 '소규모 대출' '초착취지대 여성 취업' 등을 제3세계 여성 빈곤문제 해결책으로 가져왔던 국제적 여성-환경 NGO는 오히려 제3세계 여성들의 노동 강도를 심화시켰으며, 제3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제3세계

남성들에게 '제국주의자'라는 비판이나 받게 하였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9].

이와 같은 해결책들은 구조적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원인을 빈곤의 당사자인 제 3세계 여성에게 돌리고 여성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다. 이는 제 3세계 빈곤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제 1세계의 착취를 은폐한 채, 제 3세계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신식민주의적 관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빈곤을 정의하는 1세계적 관점, 즉 서구적 생활을 하지 않는 제 3세계 자연 생활을 빈곤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빈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1세계의 개입이 자본의 침투로 오히려 제 3세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깨뜨리고 이전에 없던 절대적 빈곤에 빠뜨렸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10].

물론 세계 여성-환경 운동이 전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여성 자신에게 돌리고 여성의 계몽과 경제 참여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다. 항상 관련된 국제 회담에서는 개발 주체로서 여성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간 개발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는 국제적 여성-환경 운동 내부에서도 WID접근의 한계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왜 여성들이 그러한 빈곤에 처하게 되었는지, 재생산 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기에 그 한계가 위와 같이 드러난 것이다.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전략으로 누구나 찬양하는 베이징 강령의 「A장. 여성과 빈곤」 강령만 살펴보아도, 「여성에게 저축, 신용기제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11)등등 실질적인 통찰력에 기반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동등한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사례가 NGO들의 한번 실수가 아니라 제 1세계 페미니스트들로 구성된 NGO여성운동가들이 자본과 결탁하여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동등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17) 박은경, 「세계여성환경운동의 방향」

18) 출산억제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정책과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 속에 나타난다.

19) J. Bremner, 「Transnational Feminism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New Politics』 Winter 2003.

20) 권현정,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 '사회적 재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21) 로지 브라이도티,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WED) : 그 주제와 서로 다른 견해들의 출현」,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나라사랑, 1995

22) J. Bremner, 「Transnational Feminism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New Politics』 Winter 2003.

23) 이런 의미에서 『가난: 민중의 재산』이란 책에서 한 아프리카 필자는 문화적으로 파악된 가난과 박탈로서의 가난을 구별한다.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박탈로서의 가난과 달리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가난은 실제적인 물질적 빈곤은 아니며, 자급자족을 통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면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발 이데올로기는 제 3세계가 자급자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난 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 참여하여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난하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돌입한다. (반다나 시바, 「환경의 빈곤화」, 『에코 페미니즘』)

24)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평가 자료집」

(3) 한계2 : 자연파괴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된다.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의제21」에 여성-환경적 관점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군의 무리들은 「PLANETA FEMEA」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생태 관련 여러 행사를 기획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행사에서 제3세계 여성들은 전 세계적 환경재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종종 환경파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묘사되었다.[12] 여성들의 무절제한 다산성 때문에 세계가 인구과잉이 되었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선 농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든가, 제 3세계에서 계획성 없이 심림을 벌채한 것이 -제1세계의 수탈과정은 생략한 채- 제3세계가 환경보호 의식이 부족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든가, 혹은 제1세계는 친환경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3세계는 아직도 목재나 석탄을 사용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든가. 실제로 제 3세계 여성을 '야생적' 이미지와 함께 '자연 친화적'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개한' 이미지와 함께 '자연 파괴자'로 기억하는 것이 보편적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제3세계의 빈곤 및 환경문제는 1세계 국제기구들과 자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기아 문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말리아의 예를 살펴보자.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말리아는 유목, 정착목축과 농업을 병행하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였다. 소말리아 기근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가뭄, 사막화, 내전'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아의 진짜 원인은 70년대 이후 자본의 도입으로 인한 상업화된 목축과 80년대 초 시작된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에서 찾을 수 있다. 70년대 소말리아는 방목구역을 민영화("정착경제화")하고 대부분의 좋은 토지를 수출용 환금작물 재배에 할당했다. 이는 수많은 유목민을 빈곤화시키는 반면 일부 수출업자들만을 부농으로 만들었다. 유목과 정착 목축의 교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던 토지는 상업적 목축을 통해 황폐화되었고, 수출용 환금작물 재배로 인해 농지 역시 황폐화되었다. 외국산 싼 농산물의 수입은 황폐화된 농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더욱 괴롭혔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기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13]. 서남아프리카, 광대한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3세계의 무절제한 인구폭발이나 비합리적인 자연이용에서 찾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제3세계로 미룸으로써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의 칩코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 3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벌목과 그로 인한 자연 파괴는 가장 먼저 제 1세계의 군사력을 동반한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국주의적 자본침투로 인해 자급경제가 깨어진 후, 제 3세계는 이전과 달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시장에 내다팔아야만 했다. 제 3세계인들의 손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업적 농업, 벌목 등의 자연 착취는 1세계의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거나, 1세계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1세계에 관광 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1세계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한 제 1세계가 환경NGO의 이름으로 환경부문 관세를 매기는 등의 활동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효과로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 3세계 여성들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엘러(Mellor)는 "오염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설계된 환경세 역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동반하는 가격 폭등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시장에 의한 해결책은, 회사, 실험실, 그리고 정부에서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주로 남성인) 사람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소비자(이들은 주로 여성이다)와 가난한 사람들(이들 역시 주로 여성이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라며 그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다.

제 3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계터전인 토지에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아주 일부의 제 3세계 엘리트 여성들은 '제 3세계 여성을 대표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환경전문가'로서 추앙받고 있다. 여성-환경-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이 낳은 또 하나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견 여성이 환경 문제의 적극적 해결주체로 나서는 긍정적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 반사적 효과로서 대다수 여성들을 환경 파괴자로 의미화 하고 이와 관련된 흐름을 정당화시킨다는 면에서 결코 옹호될 수 없다.

25) 마리아 미스, 「전 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여성과 사회』 7호

26) 미셸 초스도프스키, 「소말리아 기근의 진정한 원인」, 『빈곤의 세계화』, 1998, 당대.

27) Mellor, Mary, "Women, Na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conomic Man'" (Ellie Perkins,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지역 경제의 성장」, delta feminists 초역, 『국제페미니스트경제학협회 1996년 여름 학술대회』에서 재인용)

개발 중심의 환경주의와 여성의 생존 part 3.

4. 부채-자연 스왑과 여성-환경

스왑이란 '맞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으로 금융스왑은 두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 이자지급 등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의 금융스왑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의 이해를 서로 충족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부채-자연스왑과 같이 특정 목적에 기금이 쓰일 것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왑이 자본과 NGO의 공모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채-자연 스왑이란, 변형 스왑의 일종으로 제 3세계의 빈곤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 등의 국제적 환경기금을 이용해 제3세계의 부채를 구매해주고 그 채권을 제3세계 환경단체에게 맡겨 그것을 환경보호를 위해 쓰도록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제3세계의 부채부담 경감과 자연보호에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며, 그 원인은 부채-자연스왑의 출현배경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 출현배경1 - 자본의 채권회수 방안

남미의 외채 회수는 계속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계에 부딪쳤다. 외채 상환의 원천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분과 공공서비스 삭감분이었고, 계속되는 생활고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어떤 한계선에서 민중들은 봉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외채가 회수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외채의 제한적 탕감과 특별원조프로그램 같은 인센티브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됐다. 1990년 부시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EAI(미주대륙의 주도권을 위한 기획)는 그 일환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부채를 스왑 하는데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최초로 포함했다. 미주 대륙의 '주도권'이란 명목으로 미국 세금으로 초국적 자본이 안고 있는 '악성부채'-제3세계에서 갚을 능력도 없고 더 이상 갚으라고 짜낼 방안도 벌로 없는-를 상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EAI는 「부채-자연 스왑」 관련 특수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미국의 환경 NGO들이 로비를 통해 성공시킨(!) 것이지만, 자본 측에서는 그간의 환경규제 부담을 덜어보고자 자본에 유리하도록 정비한 일종의 환경정책이기도 하다. 환경에 적당한 관심을 표시하고 규제를 피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국제자본의 관심, 자본주의적 축적을 회복시키고자하는 자구책으로써 모색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부채-자연 스왑」은 구조조정 프로젝트 속에서 '자연보존'이란 목표를 재정의한다.

(2) 출현 배경2 - 1세계 환경운동의 자본과의 공모

애초에 미국의 환경운동은 기술관료, 고임금 중산층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개발론적 입장에서 산업과 레져의 조화를 꾀하는 보호론자와 완전한 야생의 보존을 꾀하는 야생론자의 대립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 남성 엘리트계급의 정신적 사치로서의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 점에서 젠더적 계급적 이익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대규모 산업적 채취를 반대하며 개인적 용도로 자연을 추구했던 환경보호론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대한 엘리트적인 항수에 심취했다. 중산층 남성으로써 주말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먼 지역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호론자는, 사실상 상품으로 구매할수 없거나 여성의 그림자노동에 의존할 수 없는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기 위해 '보호되는 자연'을 찾았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자연으로 쉬러 돌아가면 되는 이들에게 자본의 개발주의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다.

개발을 반대했던 야생론자 또한 자연에 대한 태도가 사치성 정신주의라는 혐의는 벗기 힘들다. 이는 이들 야생론자들이 도시환경운동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은 점에 의해서도 알수 있다. 도시 환경운동은 산업 공해 줄이기, 쓰레기 처리서비스 등 도심에서 생산조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었다. 야생지역의 구출에는 필사적이었던 야생 보전론자들은 인간과 밀접한 토지 개발 위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도시의 발전이 영혼에 가한 유해한 효과를 애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도시 거주자들의 삶에 가한 손상에 도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1]

1880년대 북아메리카의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던 도심 공터 개발 저지투쟁[2]에서 이러한 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산층이었던 엘리트 환경보호론자들은 노동력 재생산 시공간(여가 시간과 임금노동 시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여성 임노동의 증가는 여성의 기존 무급노동 부담에 더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강화시켰다. 이때 중요한 부분인 양육 노동에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 공간은 젠더적,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최초의 놀이터 운동은 여성에 의해 조직되었고 이는 엘리트들의 야생지역 보전 운동보다는 남성들의 공장 단체협상과 더 비슷했다. 중산층 계급의 여성들조차도 양육의 부담은 있지만, 당시 미국의 중산층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양육의 다른 시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양육의 시공간 모두가 확보되지 않는 낮은 계급의 여성들의 이해와 공터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졌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엘리트 환경주의자들이 추구한 -사실상 그들의 도시적 필요성에 봉사할- '야생적 자연'은 그 토지로부터 원주민을 강제로 쫓아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추방 그 자체, 그로부터 얻은 이익은 자본 하에서 권력과 특권의 위계적 조직화를 잘 보여준다. 추방을 통해 일부 지역은 개발하고, 일부는 이국적인 야생공원 등으로 보존하면서 자본은 자연을 착취하고 엘리트 환경주의자는 야생자연을 즐겼다. 기존 자연에 조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고 그 공간을 근대적으로 구획짓고 사유화하고 그 일

부를 보호하는 이러한 환경접근을 '북아메리카식 엔클로저식 접근'이라 부른다[3].

2차대전 후 환경 운동 조직이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공적 개입도 확대되었지만, 아는 단지 그전의 '남성 엘리트 환경주의자'로 포섭될 수 있는 계급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여전히 레저를 위해 자연을 추구했고, 그로 인해 토지에서 내쫓기게 되는 유색인 공동체의 이익을 계속 무시되었다. 환경관련의제에서도 '도시환경과 생존을 위한 토지이용권'과 같은 야생 이외 지역의 쟁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1981년 미국 주요 환경단체(전국자원보호위원회NRDC, 전국야생생물연합NWF, 야생지역협회WS, 환경정책연구소EPI 등등)들이 모여서 환경연맹을 제안했다. 이들은 협상과 타협기술을 중심으로 기금조성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는 「부채-자연 스왑」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 이니셔티브로 이어졌다[4]. 생태 관광, 환경친화적 소비재 승인 등 환경친화적 코드를 포인트로 상품화하며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80년 이후 환경과 자본의 공모관계는 '공공연하게' 되었다.

「부채-자연 스왑」은 '보존이란 이름으로 '개발'을 일삼고 실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들을 쫓아내는 방식의 전형적인 1세계 환경 운동적 특징을 금융상품과 결합시켰다. 「부채-자연 스왑」 조치에 대해 애초에 남미 환경운동단체들이 '새로운 식민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은 「부채-자연 스왑」의 파괴적 효과는 잘못된 운용의 우연한 효과가 아니며 기나긴 환경 운동-자본의 공모관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28) 테리사 터너, 크레이그 벤저민, 「외채-자연 위기에 대한 법인자본적 해법: 남성적 협상과 젠더화된 계급투쟁」,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2001, 공감.

29) 같은 책.

30) 같은 책.

31) 같은 책.

(3) 「부채-자연 스왑」의 생태적 영향 : 엔클로저식 접근의 관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부채-자연 스왑」을 통해 1987년부터 91년 사이 6100만 달러 이상의 제3세계 부채가 구매되었다. 조성된 환경기금의 95%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마다가스타르, 필리핀 등이 차지하였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관리? 확대하는데 사용되었다[5].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자연 스왑」은 다른 여타의 외채 관련 자본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외채 상환유예에 대한 요구를 무마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먼저, 생색에 비해 구매한 액수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다. 6100만 달러는 그 절대적 액수로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만 전체 외채 1조 3000억 달러에 비하자면 문제 해결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 역시 다른 상환전략과 마찬가지로 최초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지불액으로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의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자금이 1세계로 상환되는데 대한 기존의 반발은 잠재우는 효과를 내었다. 1976-86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주요 국가들의 반 이상이 긴축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고 외채 상환에 문제를 겪고 있었음[6]을 생각할 때, 이러한 효과는 상당한 것이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재원조차 실질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었다. 기금은 약속하고 양도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환경기금이 전용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채무국의 환경정책에 1세계의 자본이 지배하는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북아메리카식 '엔클로저' 접근이 우세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설정은 기업의 자원 채취 및 토지를 사유화 하는 길은 열어주는 동시에 현지인(농민, 원주민)은 근거지에서 내쫓고 그것을 '약속이행'명목으로 정당화하였다.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은 졸지에 무절제하게 환경을 이용하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설사 보호구역설정을 통해 원주민을 추방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는 지원관리에 대한 지역적 통제와 현지인의 토지 소유 및 영토구획을 어렵게 했다.

에콰도르의 경우, 미국 환경 단체들은 87년과 89년 두 차례의 「부채-자연 스왑」을 통해 1000만 달러를 현지 비정부기구인 「자연재단」에 맡겼다. 이 기금은 국립공원 유지, 경계표시, 관리, 환경교육 실행에 쓰기로 약속되었다. 이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었지만, 광범위한 국립공원 조성은 더욱 환경을 악화시켰다. 국립공원을 조성하느라 살던 토지에서 내쫓긴 원주민들은 주거지가 필요했기에 또 다른 곳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거주자'가 되어 안데스산맥의 국립공원에 침입한 원주민이 발견한 것은 우습게도 초국적 자본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경영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이었다. 안데스 산맥에는 이미존강 유역의 석유를 채굴하여 수송하기 위해 석유회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도 뚫렸다. 군대와 석유노동자들이 수송로를 이용하면서 결국 야생생물보호구역에는 도시민들이 생활하는 아백여가구가 들어섰다. '토지가 상품 생산을 위해 개간되고 있음'을 정부에 입증해야 토지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온 자본은 회복할 수 없는 수위로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다[7].

「부채-자연 스왑」 제공 조건은 이 지역 생태계 연구결과에 대한 제 1세계 일부 연구기관의 독점권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생태 지식의 사유화'의 일환으로서 연구 격차를 확대하여 새로운 착취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연구하는 대상은 전혀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원주민들, 특히 자연의 순환을 이용하여 생계를 책임지던 여성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생태 지식을 다시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토착 여성들은 직접 농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었지만 자본에 의해 농업이 대규모로 상업화되면서 이제 초국적 자본의 종자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고 이것이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빈곤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8]. 생태 지식의 사유화 과정은 자본이 노골적으로 그러한 생태적 지식을 이윤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민중들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민중들의 주도권 하에 지켜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32) 같은 책.

33) 같은 책.

34) 같은 책.

35) 지나은 p.77 참조. (오프라인 발간 각주인 관계로...)

(4) 「부채-자연 스왑」의 특수한 자연적 영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상황은 개발과 극심한 자연착취를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원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설사 보상을 한다 해도 이런 식의 개발은 '남성적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된다. 여성들이 재생산 노동의 토대로서 사용가능하던 영역의 토지가 '사유화'로 구획되면서 그 토지는 졸지에 가부장 남성의 것이 되었다. 멜러(M. Mello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토지권이야말로 환경 정의에 있어 치명적이다. 이것의 극악무도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때 소유권을 개인적

원칙과 집단적 원칙 둘 중 어느 것에 근거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결정적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평균적인 권리에 기반한다. 만약 그 사회에 개인적 소유가 확립되어 있다면, 토지에 대한 접근성은 대개 남성 가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토지에 대한 여성들의 독립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는 또한 부채의 위험과 더 부유한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빼앗길 위험을 동반한다.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토착 지주나 외부의 지주들로부터의 토지 몰수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에 대한 집단적 모델들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이다[9]."

개척과 집약적 자원채취는 환경을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원주민에게 토지를 빼앗아 투기꾼의 수중에 집중시켰다. 「부채-자연 스왑」은 보호구역을 환경파괴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더 좁은 토지에 집약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다. 이는 원주민의 생존토대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 보다 치명적이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원주민 여성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토지도 잃고, '불법침입자'로 환경파괴자 취급을 받으며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만 토질을 잘 모르는 땅과 개발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환경에서 생계는 그리 녹록치 않다.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 및 소외에 대한 대안추구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흔히 자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가정, 즉 사적인 영역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가정한 것이다. 이는 거꾸로 뒤집으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재생산 할 수 있음이 때때로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보루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점차 자본이 구획하고 개발함으로써 최소한의 저항의 토대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곧 토착여성들은 상업화된 농업을 하거나 초착취 지대에 나가서 공장노동을 하거나, 혹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6) Mellor, Mary, "Building a New Vision: Feminist, Green Socialism," in Richard Hofrichter, Toxic Struggl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Justice (Philadelphia/Gabrid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3), (Ellie Perkins,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지역 경제의 성장」, delta feminists 초역, 『국제페미니스트경제학협회 1996년 여름 학술대회』에서 재인용)

4. 개발 중심의 환경론을 넘어서, 생존의 지속에 주목하자.

여성의 빈곤 문제,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의 연관성은 30여 년 전부터 지적되었고 그 해결하려는 운동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빈곤 문제 해결과 환경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1세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적 여성-환경운동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결별하지 못하는 한, 자본의 개발전략은 더욱 유연하게 제3세계로 유입되어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글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것은 가난과 환경에 대한 지극히 1세계적 관념으로 제 3세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종속 관계를 강화시켰다.

물론, 실제로 남은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제3세계를 경제적 면에서나 여성의 권리 면에서나 '1세계처럼' 근대화시키려는 신식민주의적 관점은 분명 제 3세계 민중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치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3세계의 문제는 모두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대주의가 옹호될 수는 없다.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 판단을 정지시키고 이것 또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맞물리기도 하기 때문이다[10]. 오리엔탈리즘을 코드로 이용한 국제적 규모의 제 3세계 여성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라. 또한 이미 1세계의 책임으로 제 3세계의 빈곤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상대주의는 1세계의 책임을 방기하는 방패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제 3세계에 대해 1세계가 개입을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중점에 두고 환경과 여성을 사고하느냐에 있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 글에서는 개발 중심의 환경론이 아닌 생존을 중심에 두는 환경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북경 여성대회까지 국제적 여성-환경운동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토착 여성 환경 운동가 반다나 시바와 그녀의 친구 마리아 미즈는 이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존'(Sustainable Subsistence)에 주목하고 있다[11]. 이에 대해 시바와 미즈는 '자연의 제약 안에서' 행복을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말로 대답한다. 필요의 영역 내에서의 자유는 모든 이에게 보편화될 수 있지만 필요로부터의 자유는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포기하지 못했던 '발전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가능'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로운 생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지역적이고 다양한 생활 양식으로 구체화하여 개발해가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할 것이다. Imagine

37) 마리아 미즈, 반다나 시바, 「서론: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쓴 이유」, 『에코 페미니즘』

38) 같은 책.

[기획2] 에코 페미니즘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등장 배경 및 방향

전세계적으로 생태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환경 운동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크고 작은 환경운동단체나 모임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 수준과 참여 열기 또한 높다. 여성을 환경위기의 피해자로, 수동적 존재로 위치지었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 해결자로 평가하며 그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흐름도 생겨나고 있다.

여성환경운동은 여성 운동과 환경 운동 모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여성운동의 경우 80년대 후반 이후 환경 의제를 수용하면서 환경 문제 역시 여성 운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환경운동단체 여성활동가들이 환경운동 내부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나오면서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환경 운동에 참여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후반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으로 부상한 환경운동에서 여성들은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기존 환경 운동에서 여성들은 기여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 물론 여성이 환경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좀 더 인정받는 것만으로 여성환경운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환경운동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기여도 평가와 대안 운동으로서 여성환경운동의 가능성 논의는 다르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강수영, 김선미, 안지영씨가 쓴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여성환경운동의 그 한계와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성격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주로 재생산 영역에서 제기되는 생활 과제를 중심으로, 주부 중심의, 지역 중심의, 자발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가사노동과 모성성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것과 일상적 실천에서 시작하여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1) 여성이 주체로 등장한 환경 운동

한국 환경운동 전개에 있어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이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정부 주도적 캠페인에 참여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 사회 단체와 연동하는 움직임과 자발적 환경운동 모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환경 운동에 참여한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다.

70년대에는 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소비자운동, 자원절약운동 등에 여성이 참여하는 형태로 환경 운동이 진행되었다. 주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소비양식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기존 관변 단체의 운동에 주부 중심의 여성단체들이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정부 시책을 주부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소비억제와 관련해 생각하였다. 일회용품안쓰기, 장바구니운동, 쓰레기분리수거 등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부들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지우고 개인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회개혁운동과 여성문제를 함께 다루는 운동이 있었다. YWCA가 대표적인 예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경 문제의 책임을 묻고 물자아껴쓰기, 폐용품활용, 분리수거 등의 개인적 실천 뿐만아니라 환경보호의 법제화, 제도화를 위한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그러나 이 활동들은 특별히 여성환경운동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운동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중심이 된 환경 활동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환경운동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위치는 가사영역, 주부'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문제를 낳았다.

위와는 달리 작은 지역 내의 환경문제에서 출발하여 자발적 환경운동모임을 꾸려가는 사례가 있다. 환경문제를 단지 생활반경 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근본적 문제로 접근해가는 발전을 이루었다. 도시, 농촌 간의 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활동 단체로 농촌 일손 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과 재활용을 주요 과제로 환경 문제를 실천하는 '푸르게 사는 모임' 등이 그 예로 이들은 일정과제 중심으로 전문화를 시도한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생활주변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환경운동을 벌이는 모임들이 있었다. 신도림 우성 아파트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알뜰 시장, 재활용 같은 생활 과제 중심의 활동을 벌이다 이후 공장에 환풍기 설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간 '더불어숲', 구로공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각된 주부들이 모여 시작한 것으로 소공동체 협동운동으로 발전하려는 전망을 가진 '녹원생협', 반상회에서 시작해 세미나 참석, 지역신문 기고 등의 활동을 하는 과천의 '환경사랑실천모임'이 그 예이다.

이들은 지역 여성 운동 조직이나 환경 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일과적 차원의 환경 운동을 조금 넘어서긴 했으나 역시나 여성으로서가 아닌 주부로서의 생활관련 활동을 전개하여 은연중에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 주부로 규정지었다는 한계를 지녔다.

(2) 주부운동으로서 환경여성운동

80년대 여성 운동계는 지금까지의 여성해방운동의 한계를 반성하고[1]) 새로운 길의 한 경향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여성해방운동에 동참시키는 '대중적' 여성운동을 만들고자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노조간부출신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환경을 살리는 어머니모임', 한국민우회의 '생활협동사업부', 구로여성복지회관에서 연유한 '새날여성회' 등이 이를 표방하고 활동해온 단체들이다.

이때 대중은 '주부'였다. 그간 가사노동과 모성을 여성의 억압조건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했던 것에서 벗어나 그 정당한 가치와 기능을 재평가하는 전략을 택하고자 했다. 여기서 주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여 여성해방운동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환경'이 선택되었다. 이는 가정 밖 활동을 낯설어하는 주부들을 거부감 없이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직거래 장터 등을 주관함으로써 지역운동체의 '세포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가졌다[2])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주부운동이었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성 가사 노동이라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어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문제를 낳았고 전업주부로서 조직적 활동 진행이 어려워 여전히 생활영역에 한정되는 양상을 띠었다.

여성환경운동은 이러한 모순과 한계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애초에 여성운동으로 출발해 환경 과제를 수용했던 위의 단체들은 점차 환경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대안적 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이 여성해방운동과 동치적 관계임을 깨닫고 생태여성해방운동으로 발전해간다.

이는 주부운동 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환경이란 쟁점은 단순히 중산층 여성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 주부운동에 '살림'과 '생활'을 결합함으로써 생태적 전망까지를 내포한 새로운 주부운동으로의 변화를 이끄는데까지 나아간다. '환경주부모임'의 경우 행정당국을 감시하는 의정참여단을 발족하고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문제에 참여하기도 했고, '민우회'의 생협운동은 새로운 문화 운동, 공동체 운동이라는 종합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가정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주부들 역시 이러한 운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게 된다.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부가 운동의 경험을 통해 운동가로 성장하고 그 결과 지역 여성들의 연대에 힘입어 시의원에 당선된 사례라든가 핵폐기장이 뭔지도 몰랐다가 투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부안의 한 주부, 유기농업을 하면서 살다가 부안 사태가 터지자 열심히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한울공동체[3]) 농민 아주머니들의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환경운동의 한계

(1) 가족중심주의

주부운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부 중심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가족중심주의와의 연관성 문제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기에 가족중심주의와 맥락이 닿기 쉬웠고 그 때문에 통합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힘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먹을 물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공기과 경관을 위한 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킨다는 정도에서만 그칠 경우 다른 아이들을 위한, 다른 지역을 위한 환경 '운동'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 연대를 통한 조직적 여성환경운동이 펼쳐지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본적 문제 제기는 뒤로 한 채 친목성 모임으로만 그치기 쉽다. 주부들끼리 모여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품앗이를 하는 것은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고 서로가 친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여성에게 전가되는 재생산 영역 부담의 고리를 끊는데까지 나아가기엔 부족하다. 이는 주부운동이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함께해야함을 보여준다.

환경 전반에 대한 고민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주부 운동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단순한 차원에 머물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유기농법 생산물 직거래에 집중하는 등 중산층의 이기적인 운동 경향성을 띠기 쉽다. 이는 다양한 여성 주체와 대중을 포괄하지 못하기에 여성환경운동 전체가 먹고 살만한 여자들이 자기 권익 요구만 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2) 가부장성

80년대 이후 환경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고 환경파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환경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여성의 특수한 경험에서 나오는 독특한 운동방식으로 새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신도림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초흥화학 유독가스 누출에 반대하며 헌기저귀천을 모아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했고, 우장산 살리기 운동에서는 나무에 이불호청을 찢어 감아두고 산에서 생활하며 산을 지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들에게 공적인 장에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능력을 발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대개 지역의 환경문제들이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문화의 비민주성이라는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 문제에 대한 폭넓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했다. 주부들 스스로가 지역환경운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에까지 비판적 인식을 넓혀가기란 쉽지 않았던 탓이었다. 환경운동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계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와 맞물려 문제를 발생시키곤 했다. 단적인 예로 신도림동 비대위에서 실제적 활동은 주부들이 했음에도 공적 협상에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주요 간부는 남성들이 도맡아 하였다. 이는 모두가 합의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투쟁 진행과정에서 남성간부가 주부의 동의없이 공장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한계를 노출시켰던 것이다. 남성 간부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도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는 대중적 모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한국의 환경 단체들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실무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주요정책결정자로서 권한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 내 여성활동가들의 복지 및 지속적 활동보장을 위한 여성친화적 제도 부족하여 여성들이 맘놓고 일하기에 난점이 되고 있다[4])

한국 여성환경운동과 연구 과제

지금까지 한국 여성환경운동은 환경운동에 주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다수이다. 이들 모두 참여하는 주체가 여성이었지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성'환경운동이 될 수는 없다. 여성의 생활 영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이 가사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환경 운동은 여성 해방과 환경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의 부담만 늘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족의 먹거리와 입을 거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환경을 위해 폐식용유 비누를 만들고 폐지를 모으는 등의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것까지 모두 여성의 몫으로 돌려지면서 감정 노동, 가사 노동 강도만 높아지게 되고 이들에게 변혁적 관점에서의 환경 문제 인식은 요원할 뿐이다.

여성환경운동에서 여성은 저항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족을 위한 환경보호에 머무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없기에 지양되어야 하며 여성과 환경 관련된 의제 모두가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져서도 안 된다. 가족 중심적인 주부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만족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그리고 여성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환경운동은 모두를 위해 전개되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성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여성이 수적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자연 친화적 전망 속에서 여성 해방을 찾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 요즈음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여성환경운동과 관련된 투쟁도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Imagine

1)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여성 해방운동은 기존의 선도적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과 현실을 담아내기 힘들었으며 대중적 여성운동으로 나아가는데도 걸림돌이 되었다.

2) 이성미, 「생협 운동과 여성 활동」, 『제1차 여성환경포럼 자료집』

3) 열린 전북 참소리 통합 사이트 참고

4) 「여성과 환경」, 『베이징+10 심포지움 한국 여성정책 평가 자료집』

>>커리제안 :

에코페미니즘, 이런 방향으로 하자!

요즈음 입을 거리,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신과 몸의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바람은 이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여성주의 역시 예외가 아닌데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망기쁘려온 남성중심 이성중심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문제제기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있어 에코페미니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생산 중심 발전주의 사회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왔던 생명의 가치, 자연생태계에 주목하고 자연과 인간 모두를 아우르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함께 모여 사는 삶을 모두 되살리자는 이 이론은 먹을 것을 가려 먹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심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해방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에코 페미니즘 사상의 근간이다.

에코페미니즘이 생태 운동과 여성 운동 모두에 큰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대지모 사상이라든 영적 원리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영성에 기댄 에코페미니즘은 미국 중심의 1세계 페미니즘에서 나타나는 흐름일 뿐이다. 에코페미니즘이 제 3세계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 이는 현실 분석에 기반하여 생존의 차원에서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커리 제안에서는 지칫 본질론으로 빠지기 쉬운 에코페미니즘을 변혁적 관점에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커리는 에코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개괄하고 그 이론적 분화 과정을 보는 개괄텀과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심화텀,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을 보고 나아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텀, 이렇게 총 세 텀으로 짜여져 있다. 쉬운 커리부터 어려운 커리까지 모두 들어있으니 에코페미니즘 사상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전개되어온 역사, 그리고 그 의의과 한계에 대해 찬찬히 살핌으로서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심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1텀 : 에코페미니즘 처음 만나기

-마리아 미스, 「전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여성과 사회 7호』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 「1장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쓴 이유」, 『에코페미니즘』

-김기선미, 「에코페미니즘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고대석순 15호』, 1998

이 텀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 형성되어온 배경과 그 이론적 갈래,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들 가지기 쉬운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은 잠시 접어두고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물질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귀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첫 번째 글은 에코페미니즘으로 유명한 독일 출신 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스의 글이다. 생태여성론이 어떤 배경을 토대로 성립되었고 이후 사회 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는지 서술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있어 처음 관점을 잡아나가기에 좋은 글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미스와 시바가 함께 저술한 책으로 에코페미니즘의 가장 유명한 기본서라 할 수 있다. 그 중 1장은 에코페미니즘의 개념 설명을 통해 왜 에코페미니즘에 주목해야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미스와 시바는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제3세계 여성들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부르주아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구 페미니즘에 일침을 가한다. 특히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탈각한 영성페미니즘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볼만하다.

김기선미 씨의 글은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생태여성해방론의 이론적 배경과 갈래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생태여성해방론의 문제 의식과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저항의 지점으로 에코페미니즘을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히 본질적으로 여성과 자연이 동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에코페미니즘을 해야한다기 아니라 노동의 결과 여성과 자연이 친화성을 가지게 된다는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을 살핌으로써 어떻게 정치적 지향점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살핀다.

>> 2텀 : 현실에서의 에코 페미니즘

-반다나 시바, 「4장 숲의 여성들」, 『살아남기』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 「4장 따라잡기식 개발의 신화 / 5장 환경의 빈곤화 : 여성과 어린이는 마지막으로」, 『에코페미니즘』

-테리사 터너와 레이그 벤저민, 「외채-자연 위기에 대한 법인자본적 해법 ; 남성적 협상과 젠더화된 계급투쟁」,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2텀에서는 에코 페미니즘적 시각을 토대로 현재적 상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실에 기반하여 에코페미니즘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유물론적 관점으로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글도 있지만 꼼꼼히 살핀다면 꽤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숲의 여성들'은 인도 출신 환경 운동가 반다나 시바가 쓴 글로 인도에서 일어났던 숲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조금 긴 글이지만 어떻게 운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써여져서 읽기에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 인도 문명에서 숲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숲과 여성의 노동, 생계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생태-여성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해준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칩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커리는 에코페미니즘의 4장과 5장이다. 4장에서는 서구식 개발 모델을 비판하며 따라잡기식 개발의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고, 5장에서는 환경파괴를 여성과 아이들의 빈곤과 연결지어 서술한다. 제 3세계에 복지와 풍요를 가져다준다던 개발이 오히려 대다수 주민,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환경파괴와 빈곤을 가져다 준 과정을 살피고 있어 개발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 글은 제3세계 외채 위기의 문제를 생태론 및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본 축적의 위기에 부닥친 국제 자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제 3세계의 외채를 이용하고 있는지 자연 및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를 파헤친다. 금융 세계에서나 쓰이던 스왑이 국제 자본에게 이용되면서 어떻게 환경과 결부되어 자연과 여성을 착취해가는지 그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내보인다. 또한 이 글은 그러한 착취에 대한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젠더화된 계급 투쟁으로 나아가는 대중적 반란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정치 전략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의 맹아도 발견할 수 있다.

>> 3텀 : 현실에서의 에코 페미니즘

-엘리 퍼킨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지역 경제의 성장」, 『국제 페미니스트경제학협회 1998년 여름 학술대회』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 「20장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 : 자급적 관점」, 『에코페미니즘』

-강수영, 김선미, 안지영,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여성과 사회 7호』

마지막 텀은 에코페미니즘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짜여진 텀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다 운동 과정에서 보완되고 보충되어 온 현재진행형의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은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이번 텀은 그 대안들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한국 여성환경운동을 살펴본 후 더 나은 대안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지역 경제의 성장'에서 필자는 시장에 속박된 환경파괴적 경제의 대안으로써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자본의 힘 앞에서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어보려는 여러 사람들의 운동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미리아 미스는 자급경제를 매우 강조한다. 에코페미니즘 20장에서 이는 매우 잘 드러난다. 환경 위기의 원인을 가져온 현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지역 사회의 생산 능력과 지역적 다양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자급적 관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많고 쉬운 편이므로 재밌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글은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을 개괄하고 있는 글이다. 96년도 글이라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데다 아직 한국에서는 여성환경운동이라고 부를만한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지 큰 움직임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면서 읽어보자. 이 글과 함께 요즈음 자주 등장하는 생태운동 기사들을 찾아 함께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문화비평]

화장실 좀 같이 씁시다!

scene#1

'오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생각하며 바지를 올린다. 막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남자 소변기를 향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냥 당당하게 문 열고 나갈까, 아니면 저 남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기다리기로 한다. 혹시나 나가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한데. 화장실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 큰 소리도 못 내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다. 혹시나 모르니 화장실 문 손잡이를 꼭 잡고서. 아니 이 사람, 전화까지 받네. 빨리 나가란 말이닷 전화통화는 밖에서 하란 말이얏!

scene#2

아휴, 급해.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에그머니나! 어떤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남자도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획 돌린다. 민망해하며 화장실 문을 닫는다. 그렇게 당황해 할 거였으면, 문은 왜 안 잠그나?

scene#3

나는 화장실 안에 있을 때 밖에 남자애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불편해서, 아예 문을 잠근다. 아니 근데, 오늘 밖에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잠겨있으면 사람이 있나보다 하지, 왜 저렇게 문을 쾅쾅 발로 차는 거야? 나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열어주나. 지난번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얘기해서 화장실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온 놈도 있었다. 안에서 내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냥 문이 잠겨있으면, 안에 사람이 잠겼나 보다 해주면 안되나?

1.

여학우로서 술을 먹다 보면 별의 별 일을 다 겪는데, 대부분이 불쾌한 것들이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여학생이 밤늦게까지 술 먹는다고 욕을 한다거나, 술 취한 여학우를 이상야릇한 시선으로 쳐다본다거나, 남학생들끼리 술잔을 집어던져가며 큰소리로 싸운다거나, 사람 많은 대로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달려와 덥석 끌어안는다거나.

이 글에서는 이 모든 경험들 중에서 특히 술집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우선 이 글은 철저히 여학우의 정체성에서 남학우를 대상으로 썼음을 밝힌다. 이 글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구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2

대학에 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이 사회는 남성중심적 공간'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술자리, 과방, MT, 새터 등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문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담론이 생성되었다. 각 단대에 여학우 휴게실이 생긴다거나 MT나 새터에서 여학우 방을 마련하게 된 것이 그 성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독립된 여성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남성화된 사회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결국은 여성공간의 원리가 기존의 남성화된 전 사회에 침투하여 새로운 공간구성의 원리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새터에서 남학우방과 여학우방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남학우방에서 남학우들끼리 음담패설을 함부로 한다거나, 녹두 오락실 앞에 놓여 있었던 축구게임을 한다고 남학우들이 그 큰길에서 웃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는다거나, 어두워만 지면 남성들이 여기저기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여성들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공간의 남성화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길거리 구석에서 노상방뇨하던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여성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른지를 상상해 보라! 그 남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도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남성이 자신의 몸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남성을 성폭력의 가해자로, 그리고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성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 온 역사적 ? 사회적 경험이, 여성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3.

술집 화장실도 공간의 남성화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녹두 대부분의 술집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안은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간이 부족해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없는 여건인 술집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대안이다. 화장실 두 개 만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술집만 장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물론 이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화장실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고 내부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낯선 남성과 같이 볼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실제적 폭력의 위협의 폭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큰 부담과 불쾌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성이 여성화장실 안에 있는데, 남성이 밖의 남성소변기로 들어오면, 그 여성은 자신이 처음보는 남성과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 남성이 모르게 하고 싶고, 따라서 여자화장실 밖에 남성이 있을 때 숨죽이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남성이 화장실 안에 있을 때, 밖에서 화장실 문을 연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불편함 때문에 여성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문에다 발길질을 해대는 놈에 의해 강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남학우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서도 볼 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학우가 문을 열어 제쳤을 때에도,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학우가 문을 열기 전에 왜 노크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노크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남학우가 노크로 답을 하거나 밖에까지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답을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의도적으로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남성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위협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남학우들이 화장실 문이 잠겨서 그것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은 그 안에서 있는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상방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부디 개방되어 있는 길거리가 자기방의 화장실이라 생각하지 말자. 어쩌면 그것은 여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바바리 맨'이 여성에게 주는 불쾌감과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여학우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는 줄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몰랐던 것은 아닌가. 여성의 일상적 불편함을 고민하지 못했던, 신경쓰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무딘 감수성을 반성하고, 남녀공용화장실은 같이 써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화장실 문은 꼭 잠그자, 쭘
문이 잠겨 있으면 두드리지 말고 기다리자, 쭘
어디서나 함부로 옷을 벗지 말자, 쭘
화장실 좀 같이 씁시다, 쭘

::인터뷰::

>>김기선미씨를 만난 Imagine>>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현재 휴직중),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자기소개

Imagine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과 관련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김기선미 : 97년도에 논문 쓸 때 그 때가 학교 안에 에코페미니즘이 들어온 초기였거든요. 참고문헌이 없어서 외국까지 갔었어요. 석사논문을 에코페미니즘을 썼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현장연구가 들어갔으니까 혹시나 현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찾아보면 좀 있을꺼예요. (참고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재생산의 정치학의 가능성 : 생태여성해방론(Ecofeminism)을 중심으로」 입니다.)

Imagine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김기선미 :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97년도 6월부터 여성단체연합에서 일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에코페미니즘을 전공한 이유는 '여성운동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뭐냐, 단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냐. 그건 아니다.'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추구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구체적인 대안사회는 뭐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현실사회주의는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사회주의가 아닌 대안사회를 거칠더라도 나 스스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운동을 하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여성연합이랑 공동으로 학술제를 하게 됐는데, 주제가 에코페미니즘이었어요. 주로 여성환경운동을 민우회에서 주로 해왔는데, 여성연합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절실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할 목적으로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여성성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에코페미니즘을 접하다 보니까, 여성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참 다가왔어요. 여성운동이나 다른 사회주의운동이나 환경운동 등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여성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된다면 여성에게 얽매임이 되는데, 역사적인 것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여성이 새로운 대안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여성연합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환경분야를 맡았어요.

환경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여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또는 환경문제에 발로 뛰는 해결자라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구조의 문제인데 여성이 그 구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오염자로 얘기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생활쓰레기보다 산업쓰레기 문제가 더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 했던 게 생산-소비 체계를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그 때 패스트푸드점을 타겟으로 삼았죠. 패스트푸드점을 다 조사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법안개정도 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패스트푸드점의 문제를 왜 시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영역으로 문제제기하는가. 법개정을 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서 생산체계를 바꾸는 것, 즉 소비자인 여성이 생산영역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지금보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재활용품 다 수거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엉성했어요. 법적으로 매장 주변 몇 평방미터 내에서는 재활용품을 쓸 수 없다는 규정도 만들었구요. 아직 부족하긴 한데 그 때 단초를 마련했었죠.

Imagine : 현재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김기선미 : 환경문제를 보면 노동문제와도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동이슈를 했고, 지금도 노동이슈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 휴직이거든요. 지금 학교 들

어오기 전에 노동이랑 정책 이슈를 맡았었어요. 노동과 정책과 환경은 다 연결된 거거든요. 각각이 내가 꿈꾸고 있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여성단체연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거친 대안사회 아이디어를 아무르고자 하는게 제 목표죠. 제가 지금 KDI 경제과정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경제적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 같은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국가정책의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저의 여기에서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는 기술을 경제학에서 좀 차용하고 싶은거죠. 여기 와서 경제학자들이랑 논쟁을 많이 하는데, 경제학의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데, 그 한계를 제가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싶어요.

다시 여연에 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정책적 대안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왜 합리적 선택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모성보호 관련 정책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맨날 경총이랑 싸웠어요. 그 때 한계가 지금 여성에게 보호장치를 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같은 맥락이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쓰면 이윤이 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이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고 투자라는 개념도 약하니까, 경제라는 개념을 좀 더 넓혀주고 인력을 착취구조가 아니라 투자구조로 생각하도록 바꾸는 등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년까지 여기에서 과정 마치고 논문 쓰고 내년에 아마 여연에 복귀할 거예요.

Imagine : 노동과 환경이 연결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선미 : 우리 사회에서 가치있는 노동은 생산노동이잖아요.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은 재생산노동이구요. 서로가 이분화돼 있죠. 생산노동은 visible해서 돈으로 환산이 되는데, 재생산노동은 돈으로 환산이 안되죠. 이 둘은 시간개념도 다른데요, 생산노동의 시간개념은 굉장히 빨리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에 사람이 맞추는 거죠. 이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막 돌다가 떨어져나가면 재생산 영역으로 가는거죠. 밤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쉼의 시간이죠. 그런데 재생산의 시간은 아이를 길러야 하는 시간, 장을 봐야하는 시간, 아이의 느린 속도에 맞춰 같이 걷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이쪽은 어떻게 보살필까를 고민하는, 가치체계가 다른 시간이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의 생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재생산의 시간과 노동이죠.

이 재생산에는 여성과 아이와 노인, 자연이 포함돼요. 생산에서 떨어져나간, 생산에 포함되지 못한 노인이나 아이나 병자들을 재생산에서 보살펴서, 다시 생산으로 올리는 역할을 재생산이 하죠. 그리고 재생산은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 중노동에 시달리고, 자연은 계속적으로 착취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핵심이 이윤창출에 놓이는 상황을 뒤집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노동의 영역이 들어가게 돼요.

생산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노동도 똑같이 가치가 절하돼요. 많이 보살피는 것일수록 월급이 낮아요. 교수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낮고, 육아를 담당하는 유치원 보모들의 월급이 더 낮구요. 의사보다 간호사가 월급이 낮죠. 그러나 그 일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추상적인 노동일수록 훨씬 귀하다는 것이 자본주의 가치체계인 거죠. 그것의 가치체계가 굉장히 생산중심적, 문화중심적, 남성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주 종합적인 혁명이 있어야만 이것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보살핌 노동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아이를 기르는 노동자, 즉 보모 월급을 올려야 해요. 노동가치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가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대안세계 얘기 나올 때 하도록 하죠.

Imagine : 다시 좀 돌아가서 어떻게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기선미 : 학내에서 여성운동이라 그러면 지엽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여성운동은 전체모순을 보지 못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있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성추행을 당한 친구가 있었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이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성문제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에 내가 없다는 허탈감을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는 지켜갈 나보다는 만들어갈 나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때 '또하나의 문화'에서 '새로쓰는 OO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걸 많이 읽으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탐구도 많이 하고, 어머니랑 아버지 등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구요. 그때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저를 찾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여성사회학으로 정했죠. 원래는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우연찮게 여성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1,2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죠.^^

Imagine : 어떻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자신의 운동으로 생각하게 되었나요?

김기선미 : 왜냐하면 제 바탕이 원래 사회주의였으니까요. 굉장히 당위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별게 아니라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이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모순을 계급문제라 봤었고, 여성모순이 계급과 중층적으로 결정되는데 어떻게 여성해방만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건데, 여성의 관점에 서게 되면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면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급진적 페미니즘이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고, 그런 계열이 묶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난 살다보면 어떤 때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이고, 어떤 때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거든요. 인간의 삶은 다양하고, 인간의 모습은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에 대해

Imagine :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은 여성이 어떠한 노동과정을 통해서 자연과 친화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본질론을 넘어서 노동과정을 통해서라고 설명하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살핌의 활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건설인데요,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분석은 유물론적으로 진행했으나, 그 대안은 본질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김기선미 : 실천적인 전략이 굉장히 달라지죠. 본질론적 여성해방론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성은 보살핌의 윤리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연대와 파급력 있는 운동이 되기보다는, 여성들 간의 연대, 지배에, 그리고 여성들 간의 문화를 중시하죠. 그것은 여성들 간에 힘을 주는 데에는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움하죠. 그러나 그것이 생산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또는 남성의 동의하에 연대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공통성을 획득할 수 없는 남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같은 여성이라 해도 너무 다르잖아요. 몇 년 전에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유괴한 적이 있었는데, 본질주의에서 보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예요.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계급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보살핌 노동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의 기반이 본질주의에 있는 한, 그것이 확산될 수 없고, 여성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유물론적 생태여성해방론으로 가면, 보살핌의 윤리가 여성에게 귀속되는 윤리가 아니라, 보살핌이라는 노동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어떤 계급적, 문화적 차이에 기반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것이 여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대안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죠.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획득 가능한 윤리이기 때문에 보살핌의 윤리가 교육가능한 것이고 체계화가능한 것이죠. 요즘 어린이들 전자오락 폭력적인 거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서운 데,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다른 심성으로 자연과 교감하게 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보살핌의 의무를 주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문화적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게 생산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면 생산체계도 달라지겠죠. 결국 사회적인 보살핌 노동에 기반을 둔다면,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획득하게 하고, 조직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Imagine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장 뭘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가사노동을 남성과 분담한다거나 엄마가 아들에게 가사일을 좀 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김기선미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사회학을 해서 맨날 구조구조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구조를 탓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의 경험과 행동이 중요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해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필수적이라고 돼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 남성이 아이를 기르다보면, 기르는 심성, 보살피는 심성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사람이 회사에 갔을 때,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심성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화됐을 때만이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운동에서도 마찬가진데, 계속해서 법을 바꿔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법이 무용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법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해요.

Imagine : 여성이 가사노동과정을 통해서 자연친화성을 갖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에코페미니즘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하기에' 여성과 자연은 친화성을 가진다든가, 여성이 생태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든가, 보살핌의 윤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요.

김기선미 : 설명방식이 다른 거죠. '여성'이 재생산노동을 통해 보살핌윤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이 보살핌윤리를 찾게 하는데, 현재 여성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보살핌의 윤리를 얻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핵심은 재생산노동을 통해 보살핌 윤리를 획득한다는 거죠. 만약 남성이 재생산노동에 참여한다면 그도 보살핌 윤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보살핌 윤리를 획득하고 새로운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담지자이지만, 재생산노동 좋으니 여성들이 하라는 식으로 이것을 여성에게만 한정시켰을 경우에는 역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현재 재생산노동은 억압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인거죠.

근데, 억압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우위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집단이나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갖고 있었던 해방적 가치가 있고, 성경에서도 히브리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해방적 가치가 있어요. 그 해방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돼요. 그것이 비록 억압된 속성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치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죠. 아이는 가져야 되고 물은 버려야 되는 거죠. 만약 여성이 갖고 있는 보살핌 노동까지 다 버릴 경우에 여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이 대안사회를 위해서 뭔가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대학원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성이 꿈꾸는 대안사회는 뭐가 다른가, 운동의 원리가 뭐가 다른가를 발견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삶의 조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억압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에코페미니즘을 비판할 때 억압된 것 속에서 해방을 찾는다고 비판을 하는데, 모든 것은 변증법적인 거잖아요. 그 속에서 변화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힘이죠. 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방적 힘을 뽑아내서, 여성에게 한정시키지 말고 여성에게 해방시키자, 즉 남성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맨 처음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독가스 때문에 아이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천기저귀에다가 플랜카드 써서 나오는 등 독특한 운동방식이 나왔죠. 또 하나 우장산 싸움을 보면, 우장산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잖아요. 구에서 보기에는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부지였지만요. 오후 5시까지는 내내 할머니랑 애들이랑 산에서 밥해먹고 산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5시가 되면 집에 내려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냄비를 두드려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항의의 표시가 되는 건데, 이처럼 여성의 가산노동 경험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운동방식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대표를 뽑을 때, 성역할 분담이 그대로 적용돼서 남성이 대표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여성들이 대표를 맡고 공권력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국의 환경문제를 보게 되었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주민조직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마포도 속리산 지키기 운동하다가 생협이 생겨나고 생산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카센터 같은 것을 동네 남자들이 공동으로 하고, 무공해 반찬가게 같은 게 생기고, 육아조직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것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의 경험이 확장이 되는 건데요, 교육문제까지 확장되어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시키기도 했죠. 교육문제, 환경문제, 육아문제, 새로운 공동체 건설 문제, 정부와의 갈등적 관계 등이 보살핌 노동의 가치가 여성에게만 매물되지 않고 공적영역과 생산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꿈꾸는 것은 여성모인이 수다공동체를 거쳐 생협으로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 가면서 생활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산영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남편들에게 가사노동의 분담을 이야기하면서 생산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살핌의 가치를 담지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의 생태여성해방운동에 대해

Imagine :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여성해방운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요. 자료가 너무 없다보니.^^;

김기선미 : 솔직히 여태까지의 운동은 꺼리가 있을 때 터져나올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사실 운동꺼리는 많죠. 운동인자가 아파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건 많을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은 이슈가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발전이 되면 그 안에 교육과 환경과 여성문제와 생산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 추상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생산이 바탕이 좀 더 넓고 생산이 그 안에 좁게 있는 모델이예요. 그래서 생산이 재생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시스템 내에서 자본주의 생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모델을 생각해 보면요, 공간의 측면에서 중간에 학교랑 유치원이 있고, 그 주변에 집과 회사가 있으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거주지에서 회사가 멀지 않고 아이들 놀이터와 노인정이 멀지 않은,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지역복지 시스템에서 보살핌과 돌봄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최소화해서 생산을 줄여야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는 경제에서는 생산이 줄어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린화폐 운동이 있어요. (이 때 가지고 계시던 그린화폐를 보여주시기도 했답니다^^ 사이트 www.greensarang.net을 참고하세요) 사실 우리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팔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노동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받고 싶은 노동 있잖아요, 이이 돌보기나 요리

하기 같은 거 말이예요. 그것을 맞바꾸는 건데, 일종의 물물교환이죠. 사실 모든 경제를 물물교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환이 가능한 형태의 노동을 비율을 늘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공부를 해야했는데, 그러면 30만원을 밖에서 벌어와야 되지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다른 노동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 노동은 생산노동과 성격이 달리요. 이웃간의 네트워크가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꺼라 봐요. 저는 대안은 커뮤니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노동의 부피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생산방식을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로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겠죠. 즉, 복지와 물물교환의 비중을 높이면서, 회폐형태의 시스템을 줄이고 그것을 커뮤니티에서 채워나가는 등의 활동의 주체가 여성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지금의 여성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연합에서는 이제는 법개정운동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 건설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런 대안경제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노조에서는 아이문제, 집안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시간방을 만들어서 일상의 문제를 남녀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틀을 생산시스템 안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조가 공식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문제까지 아우를 때만이, 커뮤니티, 가정에서의 요구와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욕망의 변화도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어렵죠^^; 예를 들어, 저는 아름다운 게 좋아요. 굳이 미술작품 같은 것만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돈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 돈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찾아야 해요. 몇 년 전에 문화연대에서 서울지역 탐사 투어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했는데, 그 전에는 돈을 내고 박물관을 가든지 놀이공원을 가든지 해야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4개월동안 서울의 골목길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없었으면 저는 그 골목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꺼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Culture Club을 만들어서 외국학생들이랑 그때 갔던 그 골목길들을 같이 다니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것을 향유할 수 없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해소될 수 있는 욕망의 충족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고민이예요.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돈 안드는 방식으로 얼마나 대체될 수 있는가가 문젠데, 연습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 오르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탁월해요. 교육을 주민이 담당하는데, 학교가 있고 중앙에 영성센터가 있어서 함께 영성훈련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매점 앞에 써 붙여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명상을 가르쳐준다거나 울타리를 고쳐준다거나 하는 거요. 그리고 유기농 농사를 같이 짓고 공동부엌에서 같이 밥을 먹고, 태양에너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쓰는 등 굉장히 완벽하게 이상적이죠.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성미산 운동에서와 같이 단초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고립되어 살아왔지만 공동체를 꿈꾸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가 많은 걸 대체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동체 단위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회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적이고 생산중심적이어서 자연과 여성이 무시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중심은 아이와 자연과 여성이 되구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Feminist Green Socialism'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많이 거칠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Imagine : 저희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운동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성미산 경우를 보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기선미 : 여성운동이 여태까지 법개정이 급해서 지역운동이나 커뮤니티 운동에는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달라질꺼라 생각해요.

Imagine : 저희가 부족하나마 한국의 생태여성해방운동 실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로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폐식용유 비누를 만든다거나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태문제를 주부의 영역으로 한정시킨다든지 주부의 가사노동을 강화한다든지, '내 가족, 내 자식이 먹을 물인데..' 수준에 머물러서 지역을 넘어서는 연대가 힘들다든지 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되는데요.

김기선미 :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예요. 사실 모든 봉사는 여성이 다 하는데, 봉사로 시작해서 그냥 봉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운동'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운동으로 전환될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그거 팔아 참기름 나눠먹는 정도로밖에 안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은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Imagine : 너무 안타까웠어요. 외국 사례 글을 읽으면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례는 너무 주부운동으로 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기선미 : 근데 외국사례도 비슷해요. 침묘운동을 인도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별 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우장산 같은 경우를 문건으로 써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일이예요.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야 굉장히 크겠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Imagine : 환경운동 또는 생태운동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과 생태여성해방론은 뭔가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기선미 : 나는 그것이 '잠재력'이라고 봐요. 여성이 생태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잠재력이예요. 공적 영역에 나와서 싸워보고 하면서, 의식을 획득해 가는 건데, 잠재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성의식은 싹트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례를 봐도 거기에서 교육문제, 환경문제 다 나오는데, 여성문제는 안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묶을 수 있는 해석의 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운동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은 자생적인 것이지만, 그만큼이나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여성문제가 나올만한 고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과 같이 일을 꾸렸을 때, 왜 남자들은 일은 별로 안하는데, 대표권만 갖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안 남성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는 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운동인자가 안에 들어가 있든지, 여성단체와 연결되어 운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환경운동조직에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 그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게 무지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려고 하죠. 그들이 뭔가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에코페미니즘은 그 안의 모순구조 속에서 여성문제까지도 함께 보고,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몇 가지^^

Imagine : 세계화와 생태운동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을 사유화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환경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세계화가 자연착취의 세계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선미 : 2002년도 사회포럼에서 그 문제가 논쟁이 됐었어요. 그때 한전의 민영화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한전이 공동의 적이니까 차라리 공용의 한전보다는 민영화된 한전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고, 만약 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이 올라갈 거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전기값이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죠. 사람들이 덜 쓰니까.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랑 노조가 굉장히 싸웠어요.

그때 저는 환경단체가 왜 생존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느냐, 대안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에서 고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까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문제제기

했죠. 인간도 환경인데, 인간생존의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때 환경단체에서 풍력발전을 하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의 전제하에, 노조에서도 대안적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동의를 하고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대안에너지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적 틀을 유지한다는 데에 합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몇몇 환경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도 상부에서만 합의했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동의가 안됐죠.

저는 환경운동이 인간의 문제까지 아울러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를 아우르듯이 말이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민영화되고 전기세가 올라가는 게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 자본의 논리라는 것은 착취의 논리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성의 개념을 값싼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문제를 아우르고 고용문제를 아우르는 공공성 개념을 질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죠. 그 전략은 반세계화 운동, 반자본 운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Imagine : 요새 웰빙이 유행인데, 지금 트렌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리 긍정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가선미 : 요새 웰빙은 돈드는 웰빙이죠. 돈을 쓰게 하는 웰빙인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웰빙하고 돈 없는 사람은 웰빙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웰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공공주택을 더 늘리는 거, 복지시스템 만드는 거, 그래서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 보육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사실 웰빙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해 갖고 돈벌이가 되는 시스템이예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배기가스 줄이는 장치 나오고, 그러면 그거 만드는 회사의 노동자가 먹고 살고, 또 공기청정기 만들고 하는 과정이 모두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속불가능할 지라도, 일단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환경오염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낳는 이윤창출만 보는 거죠.

Imagine : 혹시 에코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 있어요?

김가선미 : 번역되는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꼭 책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지 않아도 자신의 독창성을 살려서, 자기가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여성해방론을 가지는 거죠. 급진론이든 사회주의든 각각이 한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론을 갖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Imagine :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김가선미 : 요즘 여학생들이 스스로가 여성인 걸 써먹으면서, 필요없을 땐 다른 걸 취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사람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자기한테 좋았던 것들을 버려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좋은 것만 흡수하려고 하는 게 여성운동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여성운동이지. 여성주의자가 되는 건 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지, 살기 편한 여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있는 자기탐구와 여성학에 대한 고민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magine

[번역]

「국제적 페미니즘과 지구적 정의를 향한 투쟁」

Transnational Feminism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Johanna Bremner

『New Politics』, Winter 2003

(이 글은 『New Politics』, Winter 2003에 실린 Johanna Bremner교수의 글 「Transnational Feminism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을 Imagine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핵심 및 주변부에서 남성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지반(possibilities)과 여성의 삶에 심대한 '모순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남성 지배의 형태는 파괴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삶의 조건은 수 많은 측면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주 주변부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제"-재산의 소유, 집안일의 통솔에 있어 남성의 권력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지속되는 체계-를 지탱해오던 기존 경제체제를 무너뜨렸다.1) 제3세계 일부 지역에서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의 "황금시대(golden ages)"때 잠깐 출현했던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정주부'의 "포드주의 젠더 체계"또한 주변부 도시들에서 붕괴하고 있다. 남성의 임금이 내려가고 월급쟁이(남성 생계부양자- 역자설명)가 더 이상 "가족임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의 임금노동 증가, 교육에의 접근성 증가 등에 기반하여 페미니즘은 조직된 정치적 세력으로 출현하기도 했다. 남반구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국가 내에서 투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UN, EU와 같은 국제 기구의 정책에 관여하는 국제적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2)

(여성운동의- 역자)이러한 성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성과 어린이는 초국적 자본의 재구조화로 인해 남성보다 더더욱 희생당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과 빈곤화, 악몰에의 노출, 물의 오염, 높은 태아/산모 사망률, 강제 이주, 지불/부불 노동 시간 증가… 이것들은 여성에게 지워진 전 세계적 부담을 드러내는 지표의 이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3). 도시/농촌의 빈민층과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출현한 여성 조직은 서로 상충되는 3가지 힘에 의해 좌우되는 모순적인 영역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 민족 국가, 종교적 근본주의 운동, 신자유주의 의제를 이끌어가는 국제기구.

제3세계 정부들은 남성지배적이며 종종 비효율적이며 부패하기도 한다.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정부에 가해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 또한 분명히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켜왔다. "자유경쟁시장"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는 페미니즘을 타겟으로 삼고 정부 권력에 도전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정치적 성장을 부추겼다. 제3세계 민족국가 정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정치적 억압과 타협 모두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여성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령, 지방 도시 권력을 종교 재판파 종교 지도자에게 넘기는 등으로 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경제의 자본주의적 재편이 여성에게서 기존의 가부장제가 제공했던 보호와 복지마저 박탈하는 반면4), 사회통제 기능에 있어 전통적 가부장제를 오히려 고양시키고 있다.

이젠 그 힘이 약화된 남성지배적 민족국가 그리고 근본주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저명하신 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봉(key)에 있는 USAID와 같은 1세계 국가들의 기관들은 '근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의 경제개발노력, 사회적 서비스, 건강복지기구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운영지로서의 자신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동반자로 의미화한다. 중심부 국가 페미니스트들의 염원인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 교육과 직업에의 동등한 접근권, 그리고 문화적/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재생산 능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종식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양립가능하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정치적 목표가 제도화된다고 할 때, 세계 은행, WTO, 초국적 기업 등은 가장 손해 보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정책모임이나 기타 UN이 개발정책을 조율하려 시도하는 국제회담에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세력은 신 세계경제질서 세력이 아니라 과거의 가부장적 정치/경제 권력을 잃고서 위협받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들이다. 이슬람 정부, 보수적인 무슬림 비정부 기구, 바티칸과 카톨릭 조직, 프로테스탄트 신교 정통파, 그리고 세계 생명권리위원회(the Inter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등등5)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결코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자본주의가 봉건제에 비해 민중들에게 보다 많은 자기결정 및 자기조직화 여지를 주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젠더 질서는 여성에게 공적 생활에 참가하고 권력과 자원를 두고 다툴(남성들과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1세계와 별 다를 바 없이, 제3세계에서도 보살핌에 대한 여성의 헌신과 의무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세계는 세계적 자본주의의 요구 하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개별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보살핌 의무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 보살핌 노동은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국가가 쇠퇴하면서 보살핌 노동은 더욱 더 사적인 영역에 맡겨지고 있다. 이처럼 보살핌 노동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계속되는 차별적 관계는 그 형태가 새롭게 변화했을 뿐 여전히 남성지배를 유지시키고 있다.6)

최근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페미니스트-특히나 노동계급과 도시/농촌의 빈곤 여성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하는 운동을 펼쳐가고 싶은 페미니스트-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정치적 행동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혹은 민족국가 정치에 있어, 페미니스트 조직들 사이에 계급관계나 인종지배가 어떻게 재생산 또는 축소되고 있는지
2. 여성 비정부기구가 당면한 특정한 압력과 저항 가능성의 문제
3. 국제적 여성운동과 국제적 정의를 운동의 동료관계, 및 그 사이 긴장의 끈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신식민주의 사이의 공간에서의 페미니스트 정치

조직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권리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증진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그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성적 모욕(sexual assault)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적인 정치 영역에의 접근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페미니스트 조직은 성적 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논의를 국가 정치 영역에 강제했다.7).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하면 여성의 권리를 신식민주의적 지배관계와 결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어렵고 절박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제3세계 여성들은 서로 모순되는 강력한 두 가지 세력과 싸워야 한다. 한쪽은,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이다. 이것은 남성은 근대 정치/경제 권력의 세계에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문화적 이질성의 담지자가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와 '전통'을 분리하여 규정한다. 또 다른 한쪽은 초국적 자본이다. 초국적 자본은 최근 민족국가를 제압하고 여성을 남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착취에 종사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경제에서 그들을 배제하기도 한다 -동시에 그것은 (여성으로하여금 -역자) 전통적인 남성 통제에서 탈출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치, 미국의 유색 인종 여성들이 기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그들의 분석 카테고리가 백인중산층의 경험을 보편화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유색인종 여성들의 정치적 이익을 주변화 하는 방식을 통해 평등과 기회를 정의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도전했던 것처럼, 신식민지화 된 남반구의 여성들은 북반구 여성들의 지배적 목소리에 도전해왔다.

1975년에 유엔에 의한 첫 번째 국제여성대회의가 개최된 이후, 국제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논쟁이 전개되면서 단일한 '여성'이라는 범주를 의문시하기까지에 이르기도 한다. 이 논의의 중요한 진전은, "인간의 권리"선언을 여성이 지역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의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1993년에 UN에 의해 개최된 세계 인권대회에서 여성계는 "인간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고 여성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다"라고 주장했으며 "성에 기반한 폭력이 인권에 대한 폭력으로써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회담에) 요구하였다. 이 노력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감소를 위한 협정(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협정은 마침내 1979년 UN에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

국가적으로, 여성 조직은 그들의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기 위하여 1966년 유엔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세계인권선언'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자본의 지배 하에서 당연히 예상되듯, 실제로는 오직 정치적, 시민적 권리만이 실질적 지원을 받았다. 반면에 여성의 사회적 권리는, 남성들의 사회적 권리와 함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의 공공서비스 파괴로 인해 점점 파괴되고 주변화되고 있다. 게다가 누가 이러한 권리들의 내용을 정의할 것인가, 즉 어떤 기준이 여성의 인권을 해하는 관습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또한 남아있다. 즉, 어떤 criteria가 여성의 인권을 해하는 관습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그리고 그 캠페인은 최초 탈리반 정권의 수립에 대한 서구의 공모, 탈리반 통치에 대한 워싱턴의 관용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정학적 의제들에 의해 정치적 담화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문화 상대주의의 덕택이 아니다. - 남반구의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의 단언이 어떻게 가부장적 관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 3세계 여성들은 또한 제 1세계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그들의 국가와 문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헤게모니는 서구의 관습을 여성과 사회진보의 척도로 취급함으로써 신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지금까지 1세계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종류의 "보편화시키는" 정치적 담론에 참여해왔으며 그리하여 비서구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화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에게 보다 존경과 힘, 존엄을 줄 수도 있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3세계 '반-페미니스트' 세력이 페미니즘을 서구의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의하기 쉽도록 만들어왔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조지 부시의 주장은 '여성의 권리'가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재창출된 가장 좋은 예시이다. 1997년 서구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으로 출발한 국제 여성 인권 캠페인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8). 탈리반에 대한 승인과 투자를 부정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를 방문했던 이 캠페인은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탈리반에 대한 승인과 투자를 부정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요구하였으며, 처음 탈리반의 임명에 대한 서구의 공모 및 워싱턴의 탈리반 통치에 대한 관용이 총체적인 신자유주의적, 지정학적 협의에 의해 묶여있었음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제3세계 페미니스트의 지도력 하에, 몇몇 단체들은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과정을 나타내려고 시도해왔다. 예를 들면, 무슬림 법 하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마치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무엇이 "이슬람" 관습을 구성하는지 재정의함으로써 이슬람적 담론 틀거리 내에서 종교적/정치적 근본주의에 도전한다. 리타 쿠마라나미(Rita Coomaraswamy)는 이렇게 질문한다 : 우리가 제국적 전략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실제로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가? 그녀는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1) 여성에게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관습은 범죄화 되어야 하며, 2) 다른 관습들은 논쟁과 대화,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인종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해 싸우지만 또한 가부장제 철폐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의 연합 구축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심지어 이런 그룹 안에서도 커다란 차이들이 존재한다[9]. 제국주의 중심부 국가에서 페미니스트 단체의 올바른 역할은 이러한 지역적 담론을 재원 면에서나 존중의 면에서나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누가 여성의 이익과 권리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과 갈등은 노동계급과 빈곤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적/국제적 페미니스트 연합에서 주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여성의 인권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얼핏 보면 계급을 가로지르는 명백한 연대의 기반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남반구의 노동계급과 빈곤한 여성은 종종 남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계급적 관점에서 형성하게 된다. 남성 폭력을 정부의 빈곤 지역에 대한 주류 판매 증진이나 실업률 증가, 전통적인 남성적 일의 사라짐 등과 같은 어떤 특정 사회적 맥락 속의 이슈로 위치 짓게 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중산계급의 주창자들은 국제적 안권정치의 문제를 지역적 영역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그들은 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보다 넓은 원인으로부터 고립되어 법 개정과 공권력의 필요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려 한다[10].

국제적 페미니즘은 조직의 성장을 위해 풀뿌리 회원들로부터 만들어진 기금이 아닌 유엔과 같은 힘 있는 기관, 북반구의 시민주의 정부,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의 사적 재단에 기대어 왔다. 1990년대 초반 UN은, 물론 그 안의 페미니스트들의 압력의 결과로, 지역 여성 그룹이 국가별 회담에 참가하고 개발 이슈를 발언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11]. 제3세계에서의 여성 비정부 기구 또한 이와 비슷하게 외부의 자금원에 의지하였다. 풀뿌리 그룹이 사회 운동 단체가 될 때 그들은 지지자를 결집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창자'가 되면서 (단체가 커지면서-역자) 어떻게든 겪게 될 일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전문화/관료화 과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부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 그들의 사회적 기반과의 연계와 책임을 비교적 잘 유지해오기도 했다[12]. 그러나 엘리트와의 연줄, 국제적 투자자와의 접근, 그리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재원과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조직적 특성은 여성단체들 사이의 계층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들의 민족 국가와 국제적 기금투자자 사이의 이러한 구조적 위치 속에서 이들 NGO들은 국가와 그들의 고객들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하는 조언자, 젠더 '전문가'가 되어버렸다[13].

NGO, 대중적 페미니즘과 계급연합의 문제점

60, 70년대 소위 '황금시대'에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였던 이러한 국가들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정치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이익이 기초적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건강보호는 많은 나라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태아와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었다. 집단적인 혹은 사회적 권리의 확립과 확장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 및 도시와 농촌의 빈민계급, 그리고 토착 집단 여성의 정치적 결집을 위한 기초가 되어왔다. 도시 생활의 표준에 대한 습격, 주변부 생활기반의 파괴, 그리고 IMF가 부과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드는 공공영역은 지난 20년간 여성운동의 가시적 폭발을 가져왔다. 이 행동주의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촉발되었다. 그것은 가구 단위를 넘어선 상호 도움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다른 별개의 공적영역에 참여하게 하였다. 처음 단계에서 모성적 보살핌에 기반한 정치는 전통적 성역할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여성의 어머니로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는 풀뿌리 활동가들이 남성권력에 도달하고 젠더 정체성을 재구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페미니즘적 인식을 단지 국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동체 내의 남성들, 가사노동과 운동조직에 관련한 여성의 원리에 대한 페미니즘적까지도 연결짓는다면 말이다.[14].

70년대-80년대 초까지, 제3세계 내부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여성활동가 사이의 싸움이 있었다. 싸움은 여성의 자유로운 시민적 권리의 정치 vs 여성의 필요의 정치 구도로 펼쳐졌다. 이때 노동/소작계급 여성은 집단적/사회적 권리가 개인적 시민적 권리보다 제3세계 여성에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노동계급/대중적 정치적 결집기관-노동조합, 실업자 조직, 좌파 정당, 그리고 소작인 조작-의 정치 속의 여성 운동가들의 결집/조직화에 의해 타져나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제3세계 페미니스트 조직 자체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자율적 여성 조직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풀뿌리 여성조직 그룹이 빈민촌 여성의 투쟁으로부터 출현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 지대의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그들 자신의 노동계급/대중적 페미니즘 형태를 발달시키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전면적으로 타져나오게 되었다.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행동의 남성적 정치학으로부터 빠져나와, 노동계급과 빈곤 여성들은 성의 정치학을 발언하기 시작했고 특유의 여성적 조직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의식고양, 참여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적 능력배양의 기초로서 개인적인 능력배양의 방법 등등[15]. 이러한 정치적 잔전은 아마도 국제적 페미니스트의 조직화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회담, 워크샵, 회의는 지역의 주변화 된 여성 풀뿌리 조직에 정신적/실질적 지원을 해주었다.

중산층/엘리트 여성들은 최초로 여성의 평등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고 "성의 정치학"이라 널리 이해되는 페미니즘 논쟁의 새로운 목표를 정체화(identify)했던 사람들이다. 노동계급 바깥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미니스트 조직은 새로운 정치적 영역을 열어제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장 좋은 예는, 노동계급, 소작인, 도시 빈민 등의 다른 종류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출현하고 나아가는데 조직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같은 조직이 또한 운동 내부에서 계급적 특권과 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 한, 자유주의적 정치학의 한계 안에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와 전략 틀을 짜는 한,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엘리트와의 보수적 동맹관계를 맺는 한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써 남반구의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microcredit)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NGO의 확산만큼 좋은 예는 없다. 1995년 베이징 행동 선언에서 제3세계 경제 내의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개선과 개입을 제안했지만, 놀랍지도 않게도, 여성 NGO는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데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USAID와 세계은행같은 기관에서 흘러나온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을 타겟 삼아 정말 많은 기금을 벌어들였다. 여성의 경제적 지립을 제공하기 위해 나타난 소규모 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정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즉, 경제의 비공식적 부문에 투입되는 여성을 증가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말은 일의 완수를 위해 그녀들의 아이들 특히 딸들을 착취하게 하였다. 또한 여성들 사이 경쟁적 관계를 증가시켰으며,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16]

더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은 제3세계 여성의 도덕적 인품과 개인적 힘의 문제로 탓을 돌리는 신식민주의적 관점을 강화하여 국가적으로 통제/규율된 발전의 필요성을 완화시킨다. 기층 여성의 물질적 추구와 생존의 힘을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NGO는 여성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주장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대출금을 잘 갚지 않고 그들의 소득을 집안일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며 지역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작은 '붕괴'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옳은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강력한 이데올로기들처럼, 그들은 또한 매우 부분적인 청사진에 의존하며 의도하지 않게도 신자유주의 의제에 보다 연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 3세계 여성들은 자본 지배의 힘이 아닌, 시장을 협상하는 결단력과 용기가 부족한 이들-시장의 경쟁적 도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기대어왔던 가난한 국

기의 "의존적" 남성들-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산업의 출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 3세계 특권층 여성이 신경제질서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여성의 대표로서 자신을 의미화함으로써 NGO 활동을 통해 고용, 국제 여행, 정치적 영향력의 전망을 찾으려하는지를 보여준다.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압박에 직면하여, 여성들을 위한 여성 변호사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힘이 약화되는 틈새시장에 살도록 강요한다. - 여성의 대표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저항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사회적 기반과 그것의 지탱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택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사회적 기반국가 지원의 배당 프로세스로 점차 통합되어간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 영역에서 일하는 NGO역시 비슷한 종류의 압력에 당면한다.

재생산에 대한 권리

1950년대부터 세계은행, USAID, 그리고 다른 개발기구의 압력하에서 개발도상국은 인구제한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든" 여성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들은 수없이 남용되기도 했다[17]. 1970년대부터, NGO와 UN을 통해 일하는 국제적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는 주요 인구정책의 초점을 '출산률' 정책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증진'으로 옮기려 노력했다. 그들은 정부가 실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실질적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익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여성의 재생산 생활을 통제하기보다는 여성의 개인적 자율(교육, 모성, 양육, 가족법의 변화 등등)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생률을 낮추는 것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단지 여성의 삶의 향상 뿐 아니라 출산률 감소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페미니스트의 노력은 1994년 " 인구에 대한 국제회담"과 "카이로 개발회의"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받아들이고 특히 수적 인구 목표에 의해 이끌어가는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행동선언"을 채택하는 중요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국제회의에서 정치적 활동을 지배하는 보다 큰 여성 NGO들이 이끌어낸 전략적 합의의 결과로 그 "선언"은 또한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용인했고 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사적인 영역과 NGO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었다.

수시학적 면에서나 이론적인 면에서나 UN(심지어 세계은행)과 NGO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를 국가적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증진시키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100년 가까이 걸려 일어났던 인구지표상 변화만큼의 출산률 감소를 제3세계에서는 겨우 20년 아내에 만들어냈다. 서구의 출산률 감소가 노동계급 다수의 생활수준 향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반면, 제3세계의 경제적 변화와 구조조정은 "위기가 주도하는 출산률 감소"였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최소한 여성 자신의 재생산 삶을 통제하려는 소망, 여성의 노동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그리고 공격적인 가족계획 전전- IUD(자궁내 피임기구) 주입, 호르몬제 피임약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 점- 등의 반영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산패턴의 변화의 깊이와 급진성은 보다 부정적 원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 여성의 빈곤화, 여성가장 가정의 증가, 무보호상태의 이성적 관계 접촉은 감소한 반면 여성의 노동일수 요구는 증가, 임신(불법) 낙태의 결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에 대한 공포; 가난으로 인해 손상된 건강상태; 출산 전후 몸조리 기회의 부족 등등[18]. 더 이상 정부정책은 예전과 같은 많은 수적인 목표를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남용은 계속해서 체계에 퍼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성이 주문된 우편 신부, 혹은 위험한 출산통제방법이나 불임수술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제도적 맥락은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여성들의 선택권을 매우 혹독하게 제한하고 있다. 빈곤 여성들, 특히 인종적으로 억압받는 공동체의 빈곤 여성들의 불임수술 비율은 인종적/경제적 특권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19].

지구적 정의 운동에서의 페미니즘

세기 말,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 모인 세계자본주의 주도자들은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정당성의 깊은 위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20]. 지구 반대편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활동가들이 지구적 정의를 위한 운동의 정치적 의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적인 소위 엘리트들을 수세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포르투알레그레에 풀뿌리 운동의 대표와 지도자로서 여성들이 참여한 것은 실로 희망이었다 ; 지역적 "반세계화"세력을 구성하는 조직적 네트워크에 여성운동 조직이 함께 한 것 또한 그러했다. 30년 전에는 급진적인 사회운동 내에서조차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리더쉽을 행사하거나, 성적 억압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주제로 다루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 기껏해야 보조 역할로 생각했겠지) 사람들의 투쟁정신, 혁명적 전망, 용기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고 있는 반세계화 조직은, 정치적 의제 설정이나 지휘 체계와 같은 측면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들의 투쟁정신, 혁명적 전망, 용기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지휘하는 조직은 정치적 의제나 지휘 골간에 매우 깊게 영향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지역 여성들이 위원회를 조직하고, 수백 개의 지역 공동체 집회를 연 것에 이어, 멕시코의 싸파티스타 무장혁명 조직은 여성의 혁명적 법안(Revolutionary Laws of Women)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낳고 기를 아동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노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권리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21].

이러한 명확한 성과와 함께, 국제적 여성운동과 다른 국제정의운동영역 사이에 긴장의 영역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의 영역은 세력들 간의 복잡한 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완벽히 분석되기는 힘들다. 이래에서는, 국제적 정의 운동이 풀어가야할 문제들 중 2가지 예에 대한 초벌적인 분석을 제시하려 한다: 1) 여성들의 엔지오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2) 낙태와 성적인 지향(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

여성의 NGO와 노동운동

산업 전반에 걸친 젠더 특징적인 이유들로 인해, 조합의 '전통적 양식'은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이 증명되어 왔다. 여성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전략은, 여성의 보살핌 의무와 그녀들이 공동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공적/사적, (공적) 노동, 직장/가족의 구분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공식적이면서도 사적인 경제영역에서 일하는 대다수 여성들을 고용하는 이러한 산업의 본질은, 남성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남성노동자를 위해 발달되어온 조직화 전략의 효과와 맞아떨어진다. 여성들이 집중된 노동집약적 산업은 단순히 다른 어딘가로 생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파업에 대응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NGO 조직 역시 출현했다. 그것은 남성지배적 노동조합을 떠난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되거나, 어떤 조합도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여성노동의 힘과 여성의 투쟁정신이 성장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NGO는 이제 노동계급 운동의 중요한 지지자를 대표하게 되었다.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제한적 기회로 인해, 여성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하는 데 반해, NGO는 여성들을 고용할 노동 집약적 산업의 여성 직종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노조의 전통적 투쟁방식-특히 파업-보다는 공동체 조직, 도덕적 양심에의 호소에, 노조기금보다는 국제적 기금과 정치적 지원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만약 노

조가 이러한 NGO의 전략적 선택의 근거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여성노동자의 풀뿌리 조직과의 보완적인 결연관계를 시작하는데 실패한다. 이는 또한 NGO를 노조운동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도록 한다. 이로 인해, NGO는 기업지배적인 "감시"기구 -이제껏 초착취 반대 운동에 함께하는 국제 조직을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되어왔던-에 의한 인지창출에 보다 취약해진다[22]. 그러한 궤도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장소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노동계급 여성운동이 노조의 전략적, 조직적 실천양식을 바꾸도록 도전하는 보다 많은 공간을 열어주는 계속되는 노조운동의 정치화 작업에 달려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에서의 침묵

노동운동의 지지자로서 여성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역사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반면, 지난 20여년 간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여성운동이 엄청난 규모로 조직된 것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의미한다. 수세기동안, 여성들은 그녀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전개했다. 여러 지역 공동체들은 지방정부의 쓰레기 수거와, 물과 전기 등의 자원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 정부로부터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어지자, 옷과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공동작업계획이나 가축농장과 기옥 짓기, 폐품 수집[23] 등을 시도함으로써 대안적 생산양식과 서비스 공급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 운동에서 여성 지도력이 등장하고 페미니스트의 요구가 정치적 프로그램 속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었다. 이것은 특히나 멕시코의 시빠띠스타나 브라질의 노동당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세계적 차원의 급진적인 정치적 관점을 견지하는 보다 넓은 운동으로 자리 잡았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 사회 운동의 큰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엄청난 희망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일이 남아있다. 국제 정의 운동에서 몇몇 페미니즘 정치적 아이디어와 요구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된다. 가정 폭력에 있어서의 분명한 진전과 낙태 및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서의 분명한 침묵 사이의 대조는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첫 번째 가능한 원인은 아마도 몇몇 페미니스트 요구가 다른 것들에 비해 유물론의 정치학과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나 임신 회수와 주기에 대한 통제권은 전통적인 이성애적 가족의 핵심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더구나 출산율 통제는 그 자체로 가능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요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남성은 자신의 가정의 여성을 돌보는 의무를 가지고 또한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부장적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관념은 온정주의적 젠더 규범과 배치되지 않는다. 오해하지는 말자; 이러한 이해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는 모두가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힘과 권위를 확장시키며, 여성운동의 승리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매우 힘은 과정이었지만, 그중 낙태와 관련한 운동은 더 많은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낙태는 단순히 일종의 피임법(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월경 주기조절"로 규정되기도 하는)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태는 모성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출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주장하는 능력의 상징으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비준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고 이성애적 관계를 둘러싼 누구도 침해할수 없었던 가족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지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성해방의 핵심이 되는 이슈를 둘러싼 침묵의 두 번째 이유는 종교조직의 역할이었다. 특히 대중운동을 제도적, 금전적 지원으로 지원하는 카톨릭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신도들의 깊은 신앙은 최소한 낙태의 경우에 있어서 활동가가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금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 낙태는 낙태를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여성 카톨릭 신도들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24]. 나는 낙태와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이런 침묵 상태를 강요하는 것은, 여성 신도들의 종교적 믿음이라기보다는 운동 조직이 기금과 정치적 정당성을 카톨릭 교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지구적 정의 운동 내에서, 젠더 관계와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걱정 만큼이나 희망을 준다. 여성 활동가와 그녀들의 조직이, 정치적 장에서 남성지배에 대해 밖에서가 아니라 국제 정의 운동의 네트워크 안에서부터 반대하는 꾸준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급진적 전망과 국제 정의 활동가들의 일상의 정치학을 알려 주게 될지 여부는, 운동이 '참여적이고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정치적 연합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노동계급과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그 조직의 정치적, 전략적 개입의 공간을 만드는 운동은, 강력한 매력지점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오늘날 자신이 신자유주의 질서와 타협하는 와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Linda Gordon and Allen Hunter, "Not All Male Dominance is Patriarchal," Radical History Review, no. 71, 1998; Denis Kandiyoti, "Bargaining with Patriarchy," Gender & Society, vol. 2, no. 3 (September, 1988), pp. 274-290.

2)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리고 UN이 지원한 첫 여성 NGO포럼에는 114개의 여성조직이 참석한 반면 1995년 베이징에는 3000개의 조직이 참석했다. 오늘날 1만여 개의 NGO가 국제 회담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Amrita Basu, "Globalization of the Local/Localization of the Global: Mapping Transnational Women's Movements," Meridians: feminism, race, transnationalism, vol.1, no.1 (Autumn 2000), p.73.)

3) Asoka Bandarage, Women, Population and Global Crisis, (London: Zed Books,1998).

4) Shelley Feldman, "Exploring Theories of Patriarchy: A Perspective from Contemporary Bangladesh,"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25, no. 4 (Summer 2001), p. 1108; Pita Raj et al., "Between Modernization and Patriarchal Revivalism: Reproductive Negotiations Among Women in Peninsular Malaysia," in Negotiating Reproductive Rights: Women's Perspectives Across Countries and Cultures, ed. Rosalind P. Petchesky and Karen Judd (London: Zed Books, 1998).

5) Basu, p. 72.

6) 보다 자세한 논의는 Johanna Brenner, Women and the Politics of Class (New York: Monthly Review, 2000)을 참고하시오.

<SPAN style="FONT-SIZE:

섬세한 정치사상 비판, 급진적 실천성!

캐럴 페이트만? 메어리 린든 쉐인리 엮음,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이후, 2004.

예로부터 여성의 공간은 가정이었다. 실제로 여성은 가정과 가정 밖의 공간을 드나들며 일하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공간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적 공간에서의 핵심적 권리인 정치적 권리는 아주 오래도록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에게 정치란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게끔 한다. 여성들은 지금의 남성 중심적 정치공간에서의 시민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획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여성의 억압을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지 않는 현재의 정치적 공간을 새롭게 확장시켜야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 정치사상 비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정치를 남성적 권리로 정당화해 온 남성적 정치사상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여성에게 새롭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이론적 역할이다. 또한 그 이론적 성과가 공유되면서 여성운동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시야를 확보하고 전략을 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역할이다.

독특한 특질에 주목한 페미니즘 비판

페미니즘 정치사상 비판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에서나 혹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내 단위에서 페미니즘 정치사상 비판은 매우 얄팍하게 진행되어왔다. 그 사상가는 여성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이론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든지 하는 단편적인 이유를 나열할 뿐이었다. 심지어는, '페미니즘 정치사상 비판이 '사상가 누구도 가부장적이었다'라고 낙인 찍는 작업으로 여기는 편견마저도 생겨났다.

이러한 편견을 시원하게 없애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페미니즘 정치사상 비판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책이 번역되었다. 페이트만과 린든 쉐인리가 엮은 『페미니즘 정치사상사』가 그것. 이 책에서는 플라톤, 홉스, 롤즈 등 굵직한 정치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을 균형 있게 조목조목 수행하고 있다.

이 책의 페미니즘적 비판이 뛰어난 점은 각 사상가들의 고유한 사상적 특질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드러나는 가부장적 효과와 페미니즘적 잠재성을 분석한다. 같은 '가부장적' 사상이라도 '어떤' 가부장적 사상인지 각양각색이며, 따라서 그것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사상가들마다 독특한 사상적 특질로 인해 '독특한 가부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가부장적' 사상들끼리도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부장적 사상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들 내부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들은 남성 및 가부장적 사상이라는 정체성 외의 자신의 다른 사상적 특질을 고수해야만 하는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이란 추상적이고 고립된 하나의 주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며 페미니즘 역시 그러하다는 소박한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의 엮은이이자 한 챕터의 필자이기도 한 페이트만은 "들에 박힌 정치이론가와 페미니스트들은 홉스가 부권을 부인한 가부장주의자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며 독특한 사상적 특질에 기반한 페미니즘적 비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페이트만의 분석에 따르면, 홉스는 분명 가부장주의자이지만 지독한 계약론자로서 결코 가부장제를 '자연스럽게'보지 않는다. 홉스의 자연상태는 모권사회이며, 지금의 가부장제와 부권은 정복을 통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오랫동안 투쟁해왔음을 생각할 때 '계약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이것은 보통 가부장적 권력을 자연적으로 보는 필머, 로크 등의 다른 계약론자들과는 구별되는 '철저한 계약론자'로서의 홉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것을 모른 채 여성의 열등함이나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가족제도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홉스한테 가서 강변했다면 홉스를 과연 설득할수 있을지, 아찔한 일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구체적 통찰을 통해 냉철한 비판 뿐 아니라 고전 속에 숨겨진 잠재성들을 찾아냈다. 버틀러는 로크를 맹아적 형태이긴 하지만 '평등권' 페미니스트로 평가한다. 오킨은 존 롤즈를 남성적 정의밖에 이야기할줄 모른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롤즈의 정의는 '가족의 정당성'을 다시 사유하게 하는 전복성을 지닌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발견에 놀라움과 기쁨도 잠시, 우리는 왜 그러한 잠재성이 발현되지 못했는지, 그것을 발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잠재성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을 뿐, 실현되지 않은 꿈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은 오늘의 우리 삶의 고민을 풀어과는 과정과 많이 닮아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오킨의 플라톤 분석을 잠깐 소개해보면 이렇다.

오킨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분석하면서 플라톤이 (전혀 여성해방에 대한 목표 없이!) 가족을 철폐하고 육아노동을 사회화시켜 여성이 육아노동에서 해방되면 여성도 철인통치자가 못 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발견한다. 이후 당시 아테네 남성들의 반발로 내놓은 차선국가에서 플라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가족철폐와 육아의 사회화였으며 자동적으로 여성들은 육아부담으로 철인 통치자는 될 수 없었다. 육아부담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의무이자 공적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의 빌미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평등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의 물적인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섬세한 비판은 급진적 실천성으로!

이런 섬세한 정치사상 비판은 급진적 실천성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 있다. 정치사상 비판이란 '정치'를 특권화시킨 '근대'를 피해갈 수 없으며, 더욱이 여성운동에 있어서 '근대'는 모순적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세계는 탈근대의 시대로 이행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여성들은 아직 근대적 시민권조차 성취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봉건적 형태의 폭력인 강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국경을 훌쩍 넘어선 자본의 착취 시스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 있어서 근대의 문제는 더욱 난감하다. 모하메드(Mohammad)는 제 3세계에는 근대적 인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뚜렷한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은 근대적인 정치적 법적 제도개혁을 투쟁 목표로 삼게 된다고 말한다. 파키스탄과 알제리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권력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강간이 사용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페미니스트작가 야스리마(Yasima)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슬람 세력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최소한의 여성의 존재와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제 3세계에서 근대는 '성취 되어야 할 무엇'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계도 아니고 3세계도 아닌 반주변부 국가에 속한다. 그렇기에, 마치 봉건시대인 듯 유생들이 종묘공원에 설치한 페미니스트들의 미술품들을 설치한 지 40여 분만에 엉망으로 부수어 버리는가하면 어떤 여성들은 예전에 꿈도 꿀 수 없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제 3세계에서 돈을 벌러 들어온 여성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저임금노동과 성적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분명 근대는 오지 않은 미래이자 넘어서야할 과거인 것이다.

그러나 근대는 분명 1세계는 물론 3세계 여성들의 착취를 바탕으로 이룩된 세계이며 뿌리 깊은 남성 백인 중심적 정치사상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구의 해체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지배적인 백인 남성 합리주의적 전통으로부터의 탈중심화를 논의한다[2]. 이는 뿌리깊은 남성중심 철학을 비판하고 여성의 상징계를 구축하려는 이리

가톨나 아예 남성 중심적 철학을 부정하고 여성이란 개념까지 부정하는 크리스테바, 심지어 제 3세계 여성의 여러 가지 생활에 주목하여 상징들을 구축하려 노력하는 스피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아직 근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근대를 목표하고, 혹은 근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의 처지를 간과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을 모하메드는 "제 3세계 페미니스트들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들은 백인 남성중심과 反인본주의적 세력 모두에 대항하면서도 서구의 합리주의적 담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3]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에게, 근대를 부정하는 사상은 오히려 그렇게 할수 있는 여성들의 특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급진적이어야 할 탈근대 담론, 탈식민주의 담론이 문화적, 상징적 차원에 머무르면서 1세계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내에서도 근대적이고 합리적 논리는 남성적인 것이며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간간히 발견된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문화적 감성적 운동방식만이 여성적이고 급진적인 것처럼 인식되어 본래의 급진적 문화운동의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비록 개론서이긴 하지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총체적으로 근대 정치사상을 둘러싼 독특한 특질들을 살펴봄으로써 근대를 둘러싼 쟁점들을 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대 사회의 핵심적 원리가 되고 있는 근대적 계약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는 페이트만의 논의가 탁월하다. 페이트만의 저서 '남과 여 : 은폐된 성적 계약' 등의 번역된 책을 보고 공감하면서도 근대적 계약 등 페이트만이 비판하는 개념들에 대해 모호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을 통해 그러한 개념들이 왜 비판받게 되는지 의문을 풀 수 있다.

마치며

물론 이 책은 제각각의 필자들이 제각각 쓴 글을 모아 놓은 개론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각 글마다 필자들의 관점도 다르고 그 깊이나 만족도도 조금씩 다르다는 게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진행된 페미니즘 정치사상이 대중들에게나 혹은 여성운동에 공유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새롭게 페미니즘 정치사상사를 엮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역자들은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을 독자들이 쉽게 페미니스트 정치연구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이론의 고전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폭넓고 깊게 진행됐는지, 정치 분야에 페미니스트의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취지에 걸맞게 다른 '정치사상사'책이라면 찾아보기 힘들었던 울스톤 크래프트와 보부아르가 당당하게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다. 페미니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평소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새로운 사상사를 엮어낸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실천적인 정치사상 비판, 또한 이에 바탕한 보다 넓은 시야와 깊이를 확보한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의 필자들이 찾아놓은 잠재성을 씨앗 삼아 새로운 페미니즘 정치사상을 싹틔울 수 있다면 더더욱 놀랍고 기쁜 일일 것이다. Imagine

1) Mazmah Mohamad, 「제 3세계 페미니즘과 근대성의 문제」
2) 같은 글
3) 같은 글

독자평 하나.

이매진 봄호는 음. 표지와 첫인상부터 '나 만만치 않다'라는 인상을 풀풀 풍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내용 역시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글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훗.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란 글이 꽤나 기억에 남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초는 성, 계급 모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성과 계급의 모순은 1,2학년 때의 경험으로 각각에 대해서는 어설프게나마 알겠는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두 가지의 모순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선 답답해지고 각각의 모순에 대한 대안이 또 다른 모순을 낳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겪은 위의 글은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접했던 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해 접했던 글의 대부분이 두가지의 억지스러운 결합 혹은 각각이 속해있는 영역이 다른 것으로 상정하고 고 있다고 느낀 반면에 현실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순과 그 모순을 낳는 구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어려운^^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의 끈을 던지는 글을 접했을 때 보다 온전한 느낌의 새로운 페미니즘을 접했다 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위의 글(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가장 인상 깊었지만 그이외의 글들도 구구절절이 좋았습니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용비어천가 같네요. 훗. 좋은 책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하는데요. 이매진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꽤나 어려워서 모든 걸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한 것도 개인적으로 더 발전시키지도 못한 듯 합니다. 봄의 기억들이 날아갈때쯤 여름호가 나온다고 하니, 다시금 머리한번 싸매야 겠네요.

이매진 봄호 정말 잘봤구요. 여름호는..... 쉽게 좀 써요!! ^^ 그리고 힘내세요~

독자평 둘

::사회학과/學班 03 동훈

이매진 봄호를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페미니즘에 관한 고민의 범주를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느낌입니다(문장이 이상하군요. 비문인가_-; 뭐 어쨌든). 1학년 때엔 그저 선배들이 함께 해 보자는, 어느 정도는 주어지는 틀 안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일단은 족했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2학년이 되어 나의 고민들을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고민들, 특히 페미니즘에 관한 고민이 너무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한 쟁점에 관해서도 그렇고, 어떤 쟁점에 대해 나의 관점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매진 봄호의 거의 모든 내용이 위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지만,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페미니즘 세미나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고민지점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새맞이 기간부터 새내기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하는(하지만 이야기가 아주 잘 되지는 않는) 주제들을 그다지 많이 심화시키는 못한 형태로 학회에서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부족함'과 '찝찝함'을 절실히 느꼈더랬죠-_-; 학회와 과반, 더 넓게 보면 학생사회 전반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담론이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매진의 작업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매진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무슨 MC스퀘어 광고 같네요-_-;). 오픈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봄호 나온 거 볼 때도 그렇고, 가끔씩 주워듣는 이매진 소식도 그렇고, 이매진을 접할 때마다 '이 사람들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든답니다. 독자들이 이 글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이미 여름호가 나와 있겠죠? 아아, 기대되는군요(이번엔 또 얼마나 어려울까ㅠ_ㅠ). 앞으로 내딛을 이매진의 발걸음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오픈세미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호호홋 >.<

독자평 셋

용기 있게 내딛는 한걸음, 이매진 파이팅!^^

00 유진

대학생활의 많은 시간을 페미니즘을 고민하면서 지낸 저에게, 페미니즘은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었고, 또 저를 제약하고 있는 많은 억압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또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지나고 대학사회에서 한걸음 멀어지게 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가 그리고 같이 한 여러 사람들과 고민하고 투쟁하고 그런 시간에 비한다면 변한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논쟁을 하고 생각을 나눈 사람들 뿐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 삶 자체가 예전과 비해 그렇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지곤 했지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는, 여전히, 이 제도에 적응해서 생존전략을 짜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런 저에게, 이매진의 발간은 그런 허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걸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서, 혹은 신사회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 가지는 일상적이고 사적인 부분, 성/가족 등에 대한 문제지적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해방감은 여전히 오늘에도 유의미하지만, 그것의 한계 또한 앞서 말한 제 경험이나 지금의 여성운동이 봉착한 어려움들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는 남성중심적인 일상과 문화 그리고 제도를 고발하고 읽어낼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고, 그 결과 그런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리고 남성들은 일상을 바꾸어나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적/공적인 영역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체제에 대한 변혁과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연대에 바탕을 둔 '이중적 민주화 전략'을 시도하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변혁이 아니라 현실이 기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물적 토대를 사고해보자는 이매진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논하며 그것이 지금처럼 단순한 몇몇 여성운동 인자의 제도권 투입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여성 의제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층의 힘과 의지에 바탕을 둔 여성운동 세력의 제도권 진출을 주장하는 정세 칼럼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여성모임연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학칙개정운동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지적과 검토 그리고 성폭력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돌아본 부분들은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사건공개와 자치적 해결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 해결의 한계점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관성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자치 규약과는 또 다른 맥락과 설득력 그리고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학칙의 개정은 분명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정운동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위치를 사고함에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돌아본 이매진의 지적에 동감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분명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사건 해결에 있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분명 미묘하고도 어려운 과제이고, 이것을 권리라는 측면으로 구성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독자인 제 위치에서 앞으로 이매진의 발간에 대해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매진의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인 사고가 지금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그런 억압을 스스로 이겨내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힘을 반영하고 또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주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날 다양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매번 부딪히게 되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서, 과거와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나가는 데에 이매진이 꼭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잊혀진 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시작하며

관악산의 찬바람도 누그러지고, 저마다의 새로운 시작들이 관악을 활기차게 만드는 3월입니다. 지난 겨울,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오픈 세미나를 열며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이후, 우리들의 고민을 담은 책자를 내놓게 된 Imagine에게 올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모두가 전반적인 운동의 위기를 말하는 가운데, 이매진은 여성주의의 이론적 침체가 그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한계 지워지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의 갇혀버린 개념과 이론의 범위에서만 고민하곤 합니다. 언제부터 어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금붕어에게 바다는 그저 무지 또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Imagine은 여성주의가 봉착한 문제점들이 어떤 맥락 하에 있는지 광범위하게 짚어보고 잊혀진 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성주의가 변혁의 원리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검토, 그리고 과학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글이 빽빽한 책을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문제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잊혀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또 반성폭력 운동이 처한 벽을 두드리면서 오늘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하고 부족한 글일지라도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가차 없는 비판을 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가뭄에 만난 콩싹보다도 더 반가울 것입니다. 그간 고민해 온 과정들을 조심스런 마음으로 내보이며 이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책을 손에 든 당신!!

설레이는 새 시작을 함께 상상합시다.

겨울 오픈 세미나 커리 소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쟁점

좌파이고 페미니스트다!

집회는 두배로 나간다!?*

(* 바바라 에렌라이히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란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양쪽의) 회합에 다른 사람보다 배로 출석하는 사람들"로 빈정거리는 투로 정의한바 있다)

노동운동의 온전한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 복원,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노력, 모성보호법을 둘러싼 흐름, 성별 직종분리,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 드러내기, 학내 활동에서의 성별 분업 타파 노력 등 성과 계급이란 화두는 학내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담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이 어떻게 얽혀있으며, 성과 계급에 관련된 논의와 활동이 무엇을 지향하며 구체적인 전략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라는 하나의 주체부터도 활동의 방식도, 중심적인 관심도 다른 계급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의 충돌을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 둘은 따로 따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모순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복잡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두 가지 모순을 산술적으로 "더하기"하곤 합니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집회만 두 배로 나갈 뿐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지요.

내 스스로가 이토록 혼란스럽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논쟁과 활동들이 각각의 '독립된 주제'로 존재하는 학내 담론지형의 혼선은 당연한 거겠죠. 실제로 계급운동 주체의 가부장성, 맑스주의 이론의 남성중심성, 운동 방식의 가부장성 등의 문제는 다른 층위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운동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침체만이 거듭될 뿐, 생산적인 논의의 장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과 계급, 줄타기를 넘어서 새로운 전망을 찾아라!

이제, 성과 계급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대안 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양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 계급 모순의 기원, 현재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얽혀있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현실적 반영체이자 동력인 기존 및 각종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적 원리를 생각해봅시다. 또한 그간 학내의 성과 계급에 관련된 활동과 담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자율적 주체는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계속되는 구성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러한 재기발랄 용감무쌍한(!) 도전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가칭을 붙여봅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따로 정립하는 이중체계론, 반대로 환원론적 맑스주의적 입장의 페미니즘, 운동 현실에서의 좌파 페미니즘, 노조페미니즘 등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을 뿐더러, 아직은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프로젝트의 결론을 알 수도 없기에, '가칭'이죠. 그러나 이는 현실의 물질적 기반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변혁을 모색하려는 기본적인 틀로써 성과 계급 모순을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려 하는 최소한의 의미만은 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이 구성해가야 할 '사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논의 1term

-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1장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제기

2장 페미니스트의 마르크르주의비판

7장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원론

- 미쉘 바렛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분석의 몇 가지 개념적 문제』, 『페미니즘과 계급 정치학』, 여성사, 1995
- 이미경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과 가부장제 : 미스와 미터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 중, 공감, 1998

치즈코는 일본 페미니즘 진영에서 대표적 이원론자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급진주의 페미니즘보다는 정통 맑스주의와 맑스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주로 서술되고 있다. 치즈코의 이론은 하트만, 델피의 이론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원론의 강력한 옹호를 펼치고 있다. 바렛의 이론이 짧게나마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뒤의 커리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글을 읽어나갈 때,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맑스주의 페미니즘으로, 맑스주의 페미니즘을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바렛은 보편적으로 통일론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렛이 통일론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이 글에서 바렛이 고전적 맑스주의나 페미니즘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들은 그가 통일론자이든 이원론자이든 그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유의미한 작업들이고, 그의 분석이 통일론을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통일론자로서의 바렛이 이원론자 혹은 전통 맑스주의를 어떠한 관점에서 비판했느냐 식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바렛이 어떠한 관점 혹은 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차용했는가를 읽어내는 것일 것이다. 바렛은 이 글에서 가부장제, 재생산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통 맑스주의, 맑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논쟁을 서술하고 있다. 바렛은 기존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와 재생산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는 독립된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둘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가부장제라는 개념과 재생산이라는 개념 정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바렛은 맑스주의에서 공백으로 지적되는 '이데올로기론'을 알튀세로부터 끌어옴으로써, 현실사회의 여성억압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둘은 모두 좌파 페미니즘의 실천적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을 때 이 둘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히려 가부장제, 재생산,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각각의 주장을 바렛이 어떠한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 글은 앞의 두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작된다. 앞의 두 커리를 힘들게 읽은 이라면, 이 글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바렛의 이론을 통해 짚어나가고, 웰비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웰비가 기존의 가부장제 분석이 갖는 한계를 결정적으로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는 미스와 미터의 분석을 제시한다. 바렛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앞 커리에서 부족했던 바렛의 입장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웰비의 논의를 빌어 이미경이 기존의 가부장제에 대한 혁신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미스와 미터의 분석은 기존의 분석이 간과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축적체계에서 여성의 경제적이고 불질적인 억압이 갖는 위치를 분석하고 있다. 미스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폭력과 착취, 임노동이 아닌 출산과 양육에 입각한 새로운 노동개념을 제기하는데, '남성-수렵자 모델'이라는 기원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폭력이 여성에 대한 물질적 착취로 전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미터는 신국제분업이라는 자본의 축적전략이 여성이라는 주변적인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스와 미터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기보다는, 가부장제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역사적 분석 2term

-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4장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

- 미셸 바렛, 『여성 억압과 가족』, 『페미니즘과 계급 정치학』, 여성사, 1995
-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1998 중에서 『아메리카 핵가족의 역사』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사회주의 페미니즘(혹은 이원론)과 맑스주의 페미니즘(혹은 통일론) 논의의 구체적 영역으로서 '가족'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살펴보려 한다. 우에노 치즈코나 바렛의 가족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여성 억압의 최고지점(?)으로써 '가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성억압의 물질적 토대(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역사적 분석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에노 치즈코는 가부장제를 물질적 기반을 갖춘 성지배의 구조라고 분석하며 델피의 이론적 틀을 빌려와 '가내제 생산양식'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가사노동이라는 여성 노동의 남성전유와 그로 인한 여성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한 물질적 기반에 기초한 '여성 계급'의 가능성을 역설한다. 그리 이론적으로 분석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번 텀과 관련하여, 여성 억압의 물질적 토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족과 관련하여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즈코의 결론 부분인 '여성=계급?'은 지금까지도 논쟁지점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커리인 「여성억압과 가족」에서 바렛은, '가족(the family)이 뜻하는 본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가정(assumption)을 비판하고, 전체 사회구성체와 연결된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을 파악한다. 즉, 가족을 '사회경제적 제도'이자 동시에 '이데올로기'라는 이중적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렛 가족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가족-가구체계이다. 바렛은 가족개념의 계급적 구성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경제적인 가구구조와 결합하여 어떻게 등장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이 양자의 통합체인 가족-가구체계가 여성억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가족-가구체계가 성차와 여성억압이 구성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남성과 여성이 임노동과 계급구조에 포섭되는 물질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왜 '가족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바렛의 분석은 가족형태에 대한 변화까지는 구체적으로 짚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인 이미경의 「아메리카 핵가족의 역사」,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에서 현재의 '가족의 위기'라는 쟁점까지 살펴보자. 이미경 분석의 이론적 틀은 아메리카의 여성학자인 스테파니 쿤츠의 가족 분석과 친화성을 가진다. 쿤츠는 신자유주의적 가족 논쟁에 대한 반론을 역사적 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메리카적 핵가족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물질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쿤츠의 시사는 남한 가족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남한에서 가족의 위기는 금융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가시화되었고, 세계경제의 반주변부라는 조건에서 아메리카적 핵가족과는 달리 대량소비 없는 핵가족으로 이식되었다. 따라서 두 커리를 읽으며 아메리카 핵가족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남한 핵가족에 대한 분석을, 남한 사회의 반주변적 위기, 물질적

조건, 이데올로기적 토양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덧붙여, 자본주의 경제구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다 보면, 1차 성혁명, 2차 성혁명과 같은 부분을 가볍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형성되었나 라는 측면에서 좀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또한 바렛의 글에서도 중요시되는 '가족임금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이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3term
정현백, 『서구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새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소, 2001
『오늘의 페미니즘 : 세계여성운동』, 문원출판, 2000
-J.Bremer, 『미국 : 오늘날 최상의 페미니즘, 최악의 페미니즘』
-Bianca Beccalli,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진보성』
이탈리아 공산당, 『여성현장』, 『한국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내용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는 여성운동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단순히 서구 몇몇 국가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여성 운동들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흐름의 여성 운동을 보고 또한 그것들이 지니는 함의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운동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 텀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커리는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구분 짓던2) 서구(특히 미국) 중심3)의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여성 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1세대 페미니즘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동구권 사회의 여성 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2세대 페미니즘을 보는 데는 유럽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매우 중요하게 파악하여 2세대 페미니즘 전반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의 여성 운동을 살피면서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페미니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각기 다른 시기 강력한 여성 운동들이 출현한 것을 일련의 물결로 지칭하고 분류를 시도한다. 이러한 도식 속에서 제1의 물결은 여성의 평등권(특히 참정권)에 관심을 가졌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여성운동 흐름을 뜻하고 제2의 물결은 여성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저항했던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여성운동 흐름을 일컫는다.
3) 지금까지 페미니즘 역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전세계 페미니즘의 주된 경향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커리는 미국의 페미니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이었으나 가장 비판받는 2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여성운동은 계급과 분리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정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의 연합과 여성 로비가 비대한 여성정치를 실현한다. 또한 어느 정도 물적 조건을 갖춘 백인 여성들 이외의 여성들의 삶을 도외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출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과의 연대를 무시한 채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낙태 합법화 운동의 예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소위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미국의 페미니즘을 바라보면서는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비판해보자.
미국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페미니즘과 좌파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차이와 평등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집단 교육을 통해 노조 내의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함께 전략을 구사하였던 이탈리아의 노조는 노조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등과 차이(보호)의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제시한 차이의 정치는 구체적인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다. 이와 함께 80년대 차이를 부각하며 새롭게 대두되었던 문화 페미니즘 역시 차이의 부각과 문화의 활용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영역까지 아우르는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문화운동이 아닌 문화주의로 흐르면서 모호한 분리주의 실천 전략으로 귀결되었던 부분은 비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여러 한계 지점들을 가졌지만 큰 교훈을 준다. 강력한 노조 페미니즘의 성과로 의식적 차원에서부터 페미니즘이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었던 점이라던가 제도적으로도 여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이다. 노동 시간의 유연화가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경우 좋은 대안일 수 있다는 점과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던 차이의 강조가 오히려 급진적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커리는 이탈리아 공산당 내에서 노조 페미니즘의 위치와 좌파 내에서 페미니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 현장은 서로간의 교통을 통해 여성들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성이 피해자로 각인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서 운동의 주체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참여하는 정치로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 영역을 변화하려 한다. 단순히 기존 정치의 흐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남한 사회 및 학내 여성운동 4term
오장미경, 『80,90년대 여성운동에 나타난 운동론 쟁점들』, 『석순』 17집
최성애, 『노동조합과 성의 정치학』,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 출판부, 2000
이미경, 『여성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박문세원, 『대학 여성운동의 발자취』,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시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닌 누군가의 대답을』 『정정헌』 제28호 중, 1998

첫 번째, 두 번째 세미나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전반적인 이론적 틀, 그 작업의 보다 구체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살폈다. 또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오늘날 세계 여성운동 흐름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노정해왔는지 살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세미나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주변- 남한과 학내 여성운동의 쟁점들에 대해 살피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보자.
첫 번째 글 "80,90년대 여성운동에 나타난 운동론 쟁점들"은 80년대 이후 남한 여성운동의 흐름을 당시의 '쟁점'을 중심으로 짚어내고 있다. 80년대 민중지향성 속에서 여성해방을 사고했던 여성운동은 90년대 접어들어 사회가 소위 '안정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은 독자세력화 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 분위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자유주의 혹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적 경향이 남한 사회에 지배적인 여성운동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80년대 여성운동의 의의와 한계,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독자화 과정의 의의와 한계 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화'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과연 여성운동의 '독자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경계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남한에서 이런 방향으로 여성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
다음 글인 "노동조합과 성의 정치학"을 통해서는 저번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젠더 주류화' 전략이 특수하게 '노조'와 같은 운동사회에서 어떻게 사고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노조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형태가 성별 분업, 노조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 등의 양상으로 노조원 남성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 노조원들의 이해(때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부딪치는 여성 의제가 어떻게 노조에서 배제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은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분리주의적 전략을 어떻게 사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그 과정에서는 운동의 내용 뿐 아니라 활동 양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남성적 조직원리'에 대한 정교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적 원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성운동을 어떤 원리로 만들어 갈 것인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경의 "여성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추상적으로나마 제시해주는 글이다. 착취 받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어떤 식의 '국제 연대'운동이 필요한지, '법인 환경주의'와 리틴 아메리카 페미니즘의 국제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호하게 '국제연대'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 운동으로 펼쳐낼 때,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승하는 NGO적 방법, 제도화의 길로 가게 되며 오히려 제3세계의 현실과 멀어져버리는 난망함과 대안적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연대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종, 민족, 국가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여성들의 해방을 어떻게 함께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특히 반주변부로서의 남한에서 여성운동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논의해보자.
이제 학내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와야 한다. "대학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통해 학내에서 '여성운동'이 자리 잡게 된 자취와 주요 이유 및 쟁점들을 살펴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닌 누군가의 대답을"이라는 시타가 쓴 글을 성찰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 글은 이제껏 논의해온 이론적/실천적 쟁점들이 가장 구체화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쟁점을 던지고 있다. 학내에 계급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학생회'라는 물질적 기반 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시기, 여성운동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기존의 운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국면, '연대'라는 허울 뒤의 기존 좌파운동의 패권적 모습을 비판하며, 여성운동이 독자 세력화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까지가 이 글의 쟁점이다. 이 글이 98년에 쓰여 졌고 그 후 5년간 많은 것이 바뀐 만큼, 오늘날의 학내 여성운동의 현황과 나아갈 바는 우리의 고민과 실천으로 채워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기획1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I. 문제의식

오늘의 페미니즘, 오늘의 여성운동은 어떠한 전망을 그리고 있는가. 90년대,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대중적 성장기'를 지낸 후의 남한의 여성운동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처한 듯 하다.
80년대 페미니즘이란 계급운동의 일부이자 성과로서 존재했고, 페미니즘의 전망은 곧 계급운동의 전망과 동일시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90년대의 여성운동은 전 시대의 계급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하여 여성들 고유의 경험과 차이에 기반하여 기존의 계급운동의 전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전망을 가진 독자적 여성운동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운동들의 전반적인 퇴조 속에서 여성운동도 이렇다 할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운동들의 제도화 속에서 여성운동은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을 취하는가하면 개인적 경험 공유하기, 피해자로서의 여성 감성의 공유 등 여성운동의 초벌적인 작업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페미니즘 이론의 부재와 확장된 여성운동 사이의 벌어진 간극을 말하는 것이며, 더 이상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사회 운동으로서의 전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망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답해야 한다. 여성해방과 이를 위한 해방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사회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전망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잊혀진 쟁점들을 복원하려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90년대 운동의 결과로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남한 여성운동의 변화기에 있었던 성/계급의 논쟁-쟁점들의 소멸, 즉 페미니즘과 맑스주의의 결별의 상황으로 돌아가 문제제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기계적 결합이나 양자 모두를 넘어서는 것이며, 잊혀진 쟁점들을 복원하는 작업 속에서 사회적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론과 여성운동의 돌파구/전화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 맑스주의 운동이 노정해 온 가부장적 한계

그간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논쟁에서 맑스주의의 한계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결과는,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맑스주의 이론의 폐기, 혹은 여성 억압의 이론을 무리하게 끼워넣는 식으로 맑스주의 이론을 변형하려 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고찰에 앞서, 이 부분에서는 맑스가 살던 당시, 사회주의 혁명기 하에서 역사적으로 맑스주의가 노정해온 여성 억압적 측면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려 한다.

1. 맑스주의 이론의 공백

맑스주의 운동의 실천태가 노정해온 가부장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형태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맑스주의 이론의 공백과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페미니즘과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또한 이론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론에 대한 고찰이 일차적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맑스의 이론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고, 자칭 맑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들춰보아도 각기 그 해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과연 맑스주의 이론이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만큼,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불거졌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맑스주의 이론에 내재한 한계 개념, 고유한 모순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논쟁에서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있는가/없느냐'가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쟁

점인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맑스주의 분석이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이해되듯이, 무성적(sex-blind) 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맑스주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 세계관/남성적 철학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분석 틀을 지닌 맑스주의 이론이 여성 해방의 이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이 본래 마르크스주의적인 문제설정에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부차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의 해방을 근본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여성억압과 맑스주의의 역사

이탈리아 출신의 저명한 여류 마르크스주의자인 마리아-아토니에타 마치오키는 1979년에 쓰여진 한 논문에서 성적 차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중적 도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그 안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은폐되고 억압받아 왔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나라 - 여성 혁명적인 요소와 더불어 사회주의를 위한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에서 폭발한 지앙창에 대한 여성혐오에서 출발하여,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들과 그들의 여자 간의, 다양한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들의 창시자 및 계승자들과 그들 주변에서 고통 받은 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생소한 그러나 확고한 분석으로 나아간다. 나는 이로부터 거의 언제나 모호한 태도, 사회적 위선, 쁘띠-부르주아적인 점잖음, 편협한 믿음이 혁명가들, 위대한 혁명가들과 그들의 아내, 딸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1)

이 밖에도 마치오키는 남성 마르크스주의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 베벨, 레닌, 마우쩌둥, 그람시 등의 이중도덕을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맑스의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도덕의 은밀한 실천은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르크스가 여성문제에 이론적으로 기여한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마르크스가 여성에 대해 사고한 것"을 최초하게 반성할 수 있는가? (…) "당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르크스는 "인간에게서는 단순성, 남자에게는 힘, 여자에게는 연약함"이라고 답하였다. (…) 아버지로서 마르크스는 세 딸에게 낡아빠진 권위를 표명하였고 그녀들이 순결을 지켜 결국 시집을 잘 가도록 감시하였다.2)

또한 맑스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혁명기의 역사적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시 해방의 물결 속에서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해방의 목소리를 내었던 혁명가들이 어떤 식으로 억압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맑스주의가 결코 여성 해방까지 담보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레닌은 10월 혁명에 이어 만들어진 법령과 혼인관계를 통해 여성해방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음에도, 오래지 않아 클라라 체트킨과 같이 정치와 성 해방을 관련지우는 혁명 지도자들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성 문제에 관한 팜플렛을 쓴 독일 공산당의 좌파 지도자인 루쓰 피셔(Ruht Fisher), 모스크바에서 유아의 성을 다루는 최초의 정신분석기관을 연 베라 슈미트(Vera Schmidt), 정치혁명과 밀접하게 연관 된 성적 혁명을 이론화한 콜론타이를 비판하였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남성 마르크스주의의 원조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여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레닌이 이를 다시 억압한 것이다.3)

20세기 초에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여성 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고, 많은 여성들이 10월 혁명에 가담함으로써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한 희망과는 반대로 현실은 소위 사회주의 체제가 창출된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 공산당의 주요 분파들에서 스탈린주의와 더불어 여성들에게 여성혐오의 폭풍-팔루스정치적인 억압-이 몰아친 것이다.4)

러시아 혁명기의 콜론타이는 볼셰비키당 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 성도덕, '자유연애'(free love)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했고, 그녀는 경제적 혁명이 자동적으로 진보적 감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혁명 이후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의 확립을 역설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가족 형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련의 가족 정책은 핵가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콜론타이의 문제제기는 최근 페미니스트들이 재발견하게 될 때까지 묻혀 버렸다.5) 또한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비마르크스주의적인 또는 마르크스주의 이전적인 조류에서, 여성 해방의 사상과 운동이 펼쳐졌음에도 결국은 종별적인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남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행태 등으로 인해 여성 해방의 역사가 간과되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해방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역사적으로 은폐되고 간과되어 온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조류와 여성 맑스주의자들의 활동, 혁명기의 여성 해방의 운동을 복원시켜내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1) 마리아-안토니에타 마치오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둘러싼 몇가지 논제들」,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공감, 1997.
2) 같은책,3) 윤소영,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 공감, 1996.
4)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앞의 책.
5) 권현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3. 맑스주의자의 여성 억압의 인식

맑스주의 페미니스트6)인 미셸 바렛은 " 맑스주의는 비록 전유와 착취관계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지만, 착취자나 피착취자의 성(Gender)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언급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 분석은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는 최근에 종종 지적되고 있듯이 '무성적(sex-blind)'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렛의 지적이 맑스주의자들 내에서 완전히 공유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많은 맑스주의자는 맑스 이론을 통해 여성 억압을 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엥겔스의 논의를 살펴보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엥겔스는 가족을 통한 여성 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가족을 생산관계의 결과로서 환원하여 보는 맑스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성억압의 고유한 측면을 설명해내지 못한 점 등에서 많은 부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억압에 대한 맑스주의 접근을 살펴보면 기능주의와 환원주의 문제가 많은 분석에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기능주의적인 설명의 예를 보면, 여성억압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창출되고 동시에 거기에 기능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지금 어떤 대상이 가진 기능이 이전의 기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회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특징짓는 구체적인 역사적 갈등이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억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내지 못한다. 또한, 성별 관계가 자본의 작용 결과로 환원되는 '환원주의'적 설명을 통해서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생산양식이나 역사적 시기에서도 자본주의와 비교될 수 있는 형태의 남성 지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여성억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정당화되기 보다는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식으로 미리 가정되고 단정적으로 주장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해방 없는 여성해방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맑스주의자들 내에서 종종 보여진다. 노동해방이 여성 해방의 선결조건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성 의제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차화되고 '노동 운동의 중심성'이 강조되어 왔다. 노동자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화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다면적인 주체화와 해방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일한 목표 설정', '단일한 투쟁'을 강조해 온 그 동안의 노동 운동 진영은 근본적인 여성 해방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형태는 앞서 얘기했듯이 맑스주의 이론의 내적인 한계, 모순 개념과 분리해서 사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오늘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적 오류인 것이다.7)

6)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고, 필자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를 때가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을 엥겔스로부터 시작 되지만, 이후 알튀세에 의한 맑스주의의 전회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네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즉 바렛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이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치즈코 등에 의해 주장되는 '이중체계론'(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맑스주의 페미니즘-통일론 주장, 이원론 비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원론' 이라고 정리하려 한다.
7) 이와 같은 맑스주의 운동의 실천태가 노정해 온 가부장적 한계는 남한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part3

III. 남한 및 학내여성운동

1. 1990년대 이후 남한 여성 운동

앞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맑스주의 운동이 그 실천태에 있어 보여준 가부장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한계들은 맑스주의 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맑스주의 운동 진영의 가부장성은 물론, 역사적으로 한국에 특수한 상황들이 맑스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 여성운동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면서, 여성운동의 변화에 대해 좀더 한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 주류를 차지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1) 1980년대 남한 여성운동 진영의 상황

1980년대 남한에서의 여성운동은 격렬했던 계급투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민중운동 진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하였다. 80년대 여성운동의 모습은 성/계급 논쟁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구의 성/계급 논쟁이 주로 여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계급모순이나 성모순이냐를 둘러싼 여성운동과 계급운동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 남한의 성/계급 논쟁은 여성운동과 계급운동 사이의 대립보다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내의 일원론적 입장과 이중체계론적 입장)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여성 운동의 시작으로 불리며 일원론의 입장에 서 있던 대표적인 단체인 '여성 평우회'는 1.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제 성차별 문화 개혁, 2.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건설 3. 민주, 통일 사회의 건설을 창립 취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 여성부'는 여성운동의 역할을 '민주화 운동 투쟁과 기층 여성 운동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하위 운동이며 여성운동의 주체는 민중여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지 등 여성운동을 민중운동 진영의 한 부분으로 사고하는2) 입장이 성/계급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1984년 창립된 '또 하나의 문화'의 경우 이중체계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는데3) 이들은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슈와 영역을 가진 독자적 사회운동임을 주장하였으며, '여성운동은 철저히 전체 운동 속에 위치지어져야 한다네'는 당시 여성운동의 주요한 입장과 달리 자율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또한 제도 개혁보다 일상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중산층 지식인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명시하였다.5) 이화여대 여성학과 출신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학파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남한에서의 성/계급 논쟁은 당시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성운동의 미성숙성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래 페미니즘 사상은 근대에서 출발하였으며 서구의 성/계급 논쟁은 공고한 근대 사회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1980년대 성/계급 논쟁이 이루어질 당시의 남한 사회는 전근대와 근대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고, 근대적인 사상인 페미니즘이 성숙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남한의 여성운동과 맑스주의 운동이 성/계급 논쟁에서 거의 갈등을 겪지 않았던 것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 그것이 우세해서였다기보다는, 페미니즘 사상이 제대로 논쟁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게다가 전근대적 군부 독재 체제와 치열한 계급투쟁이라는 당시 남한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는 그 어떤 운동세력도 민중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주의?급진주의 페미니즘 사상에 기반하고 있던 페미니스트들도 표면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 당시 페미니즘이 민중운동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고,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라 할 때 '맑스주의'도 이론적으로 정교한 맑스주의가 아닌 민중운동 내의 공통의 인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애매모호한 '맑스주의에 대한 동의지반'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맑스주의 페미니즘, 일원론, 이중체계론 등으로 딱 잘라 유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곡해의 소지가 더 많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일원론자', '이중체계론자'라는 표현이 아닌 '일원론적 입장', '이중체계론적 입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유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민중지향적 성격을 지닌 페미니즘 일반을 두루 지칭하는 표현임을 밝혀 둔다.

2) 1980년대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구조를 타파함으로써 민중여성이 당하는 착취, 억압을 철폐하는 운동으로서 전체 민중운동의 과제와 동일한 일반과제를 갖기 때문에 자주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인 동시에 민중여성의 생활상의 요구와 이해를 관철시키면서 여성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여성대중을 변혁주체로 형성시킨다는 특수과제를 갖는다고 정의되었다. (이승희, 『여성이론과 정치이론』)

3)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을 사회주의 페미니즘 내의 이중체계론자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이 한국 사회 변혁의 필요성 및 계급 모순에 대한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성/계급 논쟁 속에서는 '이중체계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 뿐, 이들의 실제 경향성이나 이후의 활동 양태는 오히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더 가까웠다.

4) 여성 평우회, 1985
5) 고정희 외, 1994:24-25

(2) 198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

1980년대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민중지향성과 중요하게 관련지어 규정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기존 여성 단체들의 활동은 사회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자질향상을 통한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고, 심지어 정부정책 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생겨난 많은 여성단체들은 그들에 활동에 대해 확연한 경계를 긋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정치투쟁과 민중여성의 생존권 지원 투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내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결합한 여성노동자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여성농민운동의 독자적 조직결성이 시도되면서 민중운동 내 여성부문이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은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당시 24개 단체 가입)'이 결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당시 활발했던 정치투쟁의 전선에 여성운동을 결집시켰고, 이 때 보여주었던 힘은 여성운동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여성운동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80년대 여성운동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기반이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많은 한계 또한 지니고 있었다.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영향 아래 시작된 남한의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를 '당연히' 여성운동의 이념으로 생각하였다. 게다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라 할 때 '맑스주의' 또한 정교한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변혁에 대한 민중운동 내의 공통된 의지 및 인식'에 더 가까웠다. 또한 여성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정통 맑스주의가 아닌 틀거리들을 모두 배제하려 함으로써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렸고, 여성운동의 주체를 민중여성에만 한정시킴으로써 여성운동의 대중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한계들은 90년대 민중운동 세력의 약화와 함께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3) 남한 맑스주의 운동 진영의 가부장성과 여성운동

한편 1980년대 주류 여성운동이 민중운동 진영과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성모순에 대한 인식은 극히 미미하였다. 1980년대 남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민주화에 대한 요구, 통일문제 등)에서 여성운동이 민중지향성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민중운동 진영은 여성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단지 여성운동을 민중운동의 하위로 규정했을 뿐이었다. 민중운동 진영의 내부의 가부장성과 성폭력 문제, 그리고 여성의제에 대한 사고와 실천이 거의 없었던 점은 민중운동 진영 및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비판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현실에서 여성들은 함께 투쟁하고도 다른 남성 노동자들 혹은 활동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하고 배제당하기 일쑤였다. 남성 활동가들이 성모순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것은 언제나 오로지 '더러운 자본의 탓' 때문이었고, 계급모순에 함께 맞서 싸울 때 여성해방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막고 남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 혹은 실제로 민중운동 내부에서 지행되는 가부장적 행태들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않도록 만드는 면죄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래에 인용한 한 노동운동가의 '여성운동론'에는 당시 맑스주의 운동 진영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이 글은 1980년대 말 제조업 생산직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가 발생하자 소수의 남성 노동자들이 구사대를 조직하여 이를 저지한 사태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대립구도에 빠뜨리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덫에 그 스스로 빠져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사대원의 이 같은 충돌은) 부분적으로 일부 잘못된 이념을 가진 노동자들이 남성 또는 고참 노동자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 분열주의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 (…) 먹을 입이 하나인 노동자의 입장과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가족을 가진 가장 노동자는 그만큼 무거운 부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싸우면 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야말로 자신의 애인이요, 남편 또는 오빠, 아저씨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 상층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여성들에게 남성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교육(용접 등)을 실시하기도 (…) 이러한 활동은 (…) 오히려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 일익 (…) 남성 근로 민중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6)

맑스주의 운동 진영의 가부장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함께 일하는 여성들에게 커피 심부름, 걸레질 등 보살핌 노동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운동 진영 내 가부장성과 반성없음은 1990년대 들어 민중운동의 힘이 약화됨과 동시에 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등을 돌리게 만듦으로써 더욱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또한 1980년대 주류를 차지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90년대 들어 방향을 상실하고, 90년대의 주류 페미니즘이 맑스주의 운동과 관련된 쟁점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6) 장명국?이경숙,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새벽, 1988년 3월호.

(4) 1990년대 남한의 상황과 여성운동의 변화

1990년대에는 남한 사회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크게 변화했는데, 80년대 주류를 차지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앞에서 서술한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한계에 봉착하였다.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퇴조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군부정권이 해체되어 부르주아 정치체제로 이행해 가면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뚜렷한 분화 및 고착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계급투쟁에서의 이러한 패배에 따른 민중운동 세력의 약화는 동시에 민중운동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 80년대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경직성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힘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공백은 1990년대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및 급진주의 페미니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각종 포스트모던 담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페미니즘 조류의 형성으로 메워졌다. 많은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차별적이었던 민중운동 진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등 여성문제의 독자성과 운동의 자율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수립하려 했던 80년대 여성운동권과는 달리 여성 고유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변혁의 대상을 외부에 설정하기보다는 여성들의 일상적 생활공간 내부를 들여다보고 변화시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특히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대중적 활동을 벌여낸 것은 90년대 여성운동의 커다란 성과였다. 성폭력에 관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들의 노력은 이전까지 단순히 '강간'으로만 인식되었던 성폭력 개념을 '성희롱'에까지 확장시켜 내었다. 동시에 이들은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모아내어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마련되게 하였다. 또한 여성의 언어,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성신문', '여성과 사회', 'if' 등 다양한 여성주의 매체가 등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등 많은 여성운동의 이슈들이 전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여성의 몸과 일상, 문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이 여성운동의 풍성함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80년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내세웠던 쟁점과 가치는 '묻혀' 버렸다. 물론 운동의 다양성과 여성문제의 독자성에 대한 강조는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운동 지형 전체에 대한 관점을 묻어둔 채 전개되는 여성 내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운동은 종종 '여성의 일상에만 천착하게 됨으로써 변혁적 전망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토록 풍부한 페미니즘 조류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향성이 자유주의 혹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여러 변화 끝에 1990년대 남한 여성운동 진영 내에서는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사상적 주류로 자리잡았다.

2. 90년대 이후 학내 여성운동

남한 사회에서 90년대에 일어난 변화들은 학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학 내 여성운동은 학내에서 하나의 독자적 운동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학외의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했다. 80년대 후반의 여성운동이 '전체 운동'의 부문으로써 여성운동을 사고하고자 하였던 것에 반하여 새로운 여성운동은 학생운동 진영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고 독자적 운동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부터 학내 여성운동은 변혁적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학내 여성운동의 변화양상을 짚어보면서, 여성주의가 어떤 한계들에, 왜 부딪쳐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학내 영페미니스트의 등장

90년대는 80년대와 달리 민중운동권의 약화, 포스트모더니즘의 범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학내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던 시대였다. 80년대에는 물계급적이라 비판받았던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주류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 학내에서는 여성의 남성과의 '차이'가 강조되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고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독자적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반성폭력운동은 영페미니스트 그룹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들은 학내의 일상적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99년 서울대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으로 그 대중적 인지도 및 활동력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간 이들은 '영페미니스트'로 불리우며, 기존의 여성운동-올드 페미니스트-을 비판하고 그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들은 실천방식에서도 '기존의 운동전략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적인 것의 정치화', 수평적 조직구조의 형성, 소집단 지향성, 급진주의적 방식의 선호, 문화전략의 강조 등은 80년대 여성운동을 하던 이들이 주축인 기존 여성운동권의 수직적, 관료제적 운동방식, 온건한 실천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들은 이미 상당히 커버린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단체연합 내 소속단체들이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급진적 이슈'를 문제제기하면서 비제도적이며 소그룹적이고 게릴라적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이들은 학생운동권의 남성 중심성과 가부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고자 했다. 이들은 운동이 희생을 강요하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즐거운 일로 보며,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어떻게 즐겁게 싸울 것인가에 큰 관심을 보이며, 투쟁방식도 '재미없는' 대규모 거리집회보다는 각종 축제와 문화제, 퍼포먼스 등 문화 이벤트를 자주 애용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에 유행처럼 번졌던 성정치문화제, 페미니즘문화제, 여성제 등을 기획하고, 96년엔 '의례적인' 고대생들의 이대 대동제 난동사건을 집단 성폭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98년엔 지하철 역사를 떠돌며 게릴라식으로 성추행 방지 퍼포먼스를 벌여 지하철공사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것도 그들이다. 이들은 부계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별명)을 부르고, 나이의 차이를 무시하기 위해 학번을 따지지 않고 반말을 한다. 또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해 조직의 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회의는 수다로 한다. 꽉 짜여진 조직틀을 거부하고, 사안별 연대를 통해 '치고 빠지기식' 운동을 한다. 이런 실험적 특성 때문에 게릴라 페미니스트로도 불린다.7)

대학 내의 영 페미니스트 운동은 그래서 조직의 거대함과 대의제의 허구성, 수직적 구조등을 탈피하고자 '연대체', '위원회'등 수평적인 형태를 고민했다. 이것은 여성 자치 모임, 소모임의 형태로 나타났고 동시에 학생회의 위계구조와 조직적 질서에 대해 비판을 시작하게 했다.

7) 오장미경, 「여성운동, 차이와 연대의 정치를 고민하기」, 『이대교지 2000년 9월 61호』

(2) 활동 양상의 변화

80년대의 여학생운동은 기존 운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곤 했다. 민족, 민주운동에 대한 투신하기보다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여성 활동가의 문제제기들은 전체 운동의 단결을 깨는 행위로 생각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90년대에는 93년 서울대 신정휴교수 성희롱 사건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진영 및 학생운동진영 내부의 성폭력과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사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조직보위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조직화의 길을 걸었다. 총학생회가 가지는 수직적 체계에 포함된 채로는 제대로 된 비판이나 독자적인 주체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곳곳에서 총여학생회가 여성모임이나 여성위원회로 변화하고 기존의 권위적 위계질서에서 탈피한 수평적인 조직체계가 추구되었다.

그러나 독자적 조직을 세워낸 여성운동들은 한편으로 학생회와 함께 대중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운단위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용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다. 99년 서울대에서 관악여모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운동 단위들과 학생회조직이 함께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그 예이다.8)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생회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꾸준히 연대하고 있었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기존 운동권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이거나 비하였던 것이다. 99년에 그 성과가 정점에 이르렀던 여운단위와 학칙위의 연대는 학칙제정운동의 승리로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가운데 결국 학생회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불신만 남게 되었고 이후 여성운동의 반(反)학생회 노선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학생운동이 보여줬던 불성실함과 오만으로 인해, 여성운동이 이른바 주류 학생운동에 대해 가지는 불신과 적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학생운동의 반정립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여성운동 내부에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이 여전히 학생운동에 종속적임을 반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의 자기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러한 공적 영역(예를 들면 노동해방, 민족 통일 등) 변혁 일관도의 주류 운동에 대한 총체적 거부감은 대중관의 부재, 다양성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등 여성운동 진영의 탈정치화를 가져왔다.9)

주류변혁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감은 새로운 변혁운동을 낳기보다 탈정치화로 나아갔고 이는 여성운동의 계토화와 그에 대한 비판들을 동시에 불러왔다. 최근 비판받는 페미니즘의 상품화나 문화주의 경향 역시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반(反)학생회, 반(反)좌파의 정서는 운동의 내용면에서도 결별을 낳았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쪽이 우선이라기보다 동시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여성억압의 문제는 기존의 진보진영에서의 논리로 설명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반(反)좌파라는 기치 아래 맑스주의의 폐기로 이어졌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은 여운단위들의 활동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90년대 들어 여성운동의 관심부문은 계급운동이 그간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나아갔다. 생태주의, 장애여성, 레즈비언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계급적 차원과 분리된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여성주의의 접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지 못한 채 제한된 영역에서의 문제제기만을 해왔다. 이는 또 여성주의적 문제 설명 방식이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했다. 분노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경험적이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여성이 저항주체로서 다시 서고자 할 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과 공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변혁을 위한 전망도 필수적이다.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오늘날 여성운동은 대중성과 변혁의 가능성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8) 특히 99년에 관악여모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함께 대중적인 반성폭력운동을 생각하면서 반성폭력 활동단 '바로 지금'을 통해 함께하는 투쟁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담론들이 이때 상당 부분 알려졌다는 것에서 당시 활동단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바로지금'은 총학이 본부점거투쟁을 하면서 5대 요구안중 하나로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내걸어 이를 본부 측의 제정약속을 받아내며 승리로 끝났다.

9) manifesto Ⅱ, 『또 다른 변증법, 상호비판을 통한 자기정당화를 넘어-관악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의 자기확장을 위한 진지한 모색』

(3) 여성운동과 좌파의 결별

한편 그간의 좌파조직의 가부장성과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운동진영의 가부장적 양태들은 굳이 80년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좌파 내부에서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성 활동가들과 여전히 노동운동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남성적 활동양식을 최고로 여기는 일부 활동가들을 생각해보자. 활동의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노선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들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거 시기에 이제는 어느 선본이나 내놓는 여성정책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얕은 이해에 기반한 것이 많아 일부에서는 '학생회가 여성주의를 리셀링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회의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학생회도 간부급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 오늘날 여운단위와 학단위 사이에 논의의 장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은 여성주의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하는 학생운동진영의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학생회가, 학생운동세력이 그렇게 전화되었는가를 확인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학생회 속에서도 여성정책을 싸내고 여성국을 결의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도 그만 가지지 않아도 그만인 속에서 여성국은 모든 여성과 관련된 사안을 '오롯이' 전담하며 결국 여성은, 여성주의는 학생회 내부에서 다시 한 번 부차화된다. 문제는 이렇게 몇몇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성주의가 학생회의 전체 입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여성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그들 학생회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내부에 여성주의자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결국 변혁적 세력을 자처하는 학생세력이, 학생회가 여성과 여성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학생에, '노동자'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독자적으로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입니다'라는 그들의 선언은 그러하기에 씁쓸하다. 과연 그 '학우'에 여학우도 포함되어 있는가.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그들의 학생회가 과연 여학우에게도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어 왔는가.10)

'다르다'는 것만으로 다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좌파가 가지는 활동양식, 언어, 기풍 등이 힘들다. 이직은 문화의 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 좌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 (…) 여성주의자들이 좌파와 같이 활동했던 경험들을 들어보라. 여성노동권을 외치면서 노동자 형님을 말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조직보위를 내세우는 일들은 다만 과거일 뿐이었나. 치열한 평가와 반성을 거쳐서 변증법적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믿을 수 있는 여자는 그리 쉽게 생기지 않는다.11)

이제 학생운동진영은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여성주의의 노선을 비판함으로써 여성주의에 무관심함에 대해 면죄부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여성주의에 대한 무지와 오만은 스스로 정치의 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진정한 변혁의 전망은 좌파의 현실분석과 변혁의 틀 속에 성차에 대한 인식을 적극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다.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전선에 '여성도 함께' 복무할 것만을 주장하며 진보의 이름을 여성주의에 붙이기를 꺼려하는 좌파라면 연대의 가치는 분명히 없다. 그러나 단순히 좌파와의 연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전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운동 자체가 좌파적 변혁의 전망을 가지고 이론적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들이 결국 맑스주의와 좌파적 가치들에 대한 전면 폐기로 이어지는 것은 '비약'이다. 페미니즘 내에서 중요하게 논쟁되어야 할 성과 계급이라는 쟁점은 '학운단체 VS 여운단체'의 감정적 대립과 엉키면서 2000년 이후로는 부딪쳐보지도 않고 서로서로 '감정'만 다음 학번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그 결과 성과 계급에 대한 논쟁자체가 사라진 지금의 현실이 남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운동이 처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 논쟁과 생산의 공간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

10) 「학생회, 그 '대표체'의 부족함에 관하여」, 『2002 여성연대한판 자료집』

11) 「좌파와 여성주의자들의 마찰메이데이 여(女)을 중심으로」, 『2002 여성연대한판 자료집』

▶기획1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part4

Ⅳ. 여성운동-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학내 학생운동-여성운동 사이 갈등과 여성운동에서의 맑스주의적 문제의식의 사장의 원인으로 주요하게는 맑스주의에 기반한 운동의 현실적 실천태가 보여준 가부장성과 패권적인 모습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맑스주의 이론의 불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논쟁의 시기가 한참 지난 지금은 논점조차 사장된 채, 마치 맑스주의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하게 논의된 쟁점을 짚어보고, 논쟁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보겠다.

1. 이론적 비판 첫 번째 : 맑스주의 이론은 무성적(sex-blind)이다.

먼저, 기존의 맑스주의 이론틀거리 내에 "여성의 억압"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회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이 비가시화, 억압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학내 여성운동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여성 맑스주의, 그리고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노조 페미니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은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지향한다는 맑스주의 이론에 치명타를 입히는 비판이었으며, 특히 운동이 담보하는 '진보성' '도덕성'을 통해 많은 부분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던 남한 학생운동 진영에 더더욱 치명적이었다. 이는 단지 남성들만의 해방이 아닌 '여성들' 또한 함께 해방하기 위한 지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였다.

맑스주의는 분명 인간해방을 위해 주요한 이론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 방점을 찍고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우리는 중요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의 인간이란 누구인가?" 해방될 '인간'이라는 범주에 '여성'도 포함되는가? 맑스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성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0세의 맑스가 노동자들의 국제주의를 위해 서술한 ?공산당 선언?에서조차,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여성은 남성들의 혁명에 의하여 해방되어지는 존재처럼 그려져 있을 뿐이다. 생산노동 영역에서의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여성 억압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의 논의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라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범주로 뭉뚱그림으로써, 노동해방이 달성되면 여성해방도 달성된다는 순진한 낙관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이예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1)

학내에서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의도한 것만큼의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다. 우선, 단순히 (계급, 민족모순 만큼이나) 여성문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신처럼 받들고 있는 '맑스주의'가 그 자체로 무성적(sex-blind)이며 한계가 명백함을 설득력 있게 알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맑스주의의 전화로, 또한 -맑스주의 아닌 그 무엇 또한 운동의 이론체계로써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성 억압에 대한 이론의 독자적 층위를 획득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다. 이는 실천적으로 이어져서 계급운동에 연대할 때에도, 조야한 형태이지만 여성노동자가 처한 독특한 특질에 주목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이러한 맑스주의의 무성적인 이론체계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맑스주의의 이론적 폐기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운동 상황 및 여타 관계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론의 폐기/존립을 논할 때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이론의 유효성 및 한계를 검토하는 과정이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3)는 점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는 남성적 이론과 여성 억압 체계의 변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체계가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이론이기에, 여성주의 경제학, 철학 등등이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여성주의적 학문이 등장하기 위한 출발점, 기반, 혹은 연구방법론으로써는 기존의 '남성적 학문'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그럼, 어차피 모두 남성적인 이론이니 그냥 맑스주의도 포기하지 말고 쓰라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큰 맥락 속에서는 대부분이 '남성적인 학문'이지만 그 이론들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그 속의 '여성들의 경험'을 보아야 한다.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억압적'인 기제에도 -'차선'의 선택이겠지만- 나름의 선택과 적응을 통해 살아간다. 가령, 가족은 여성들에게 분명 억압적인 공간이지만, 그 여성의 생활을 다각도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요구들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을 복지 기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점, 여성의 공적 경제영역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생존 경로 선택, 팍팍한 여건에서 감정적 안정감의 필요성 등등- 이 어우러지며 구성되어 온 것이며 지금 현재도 그러하다. '남성적 학문'의 기반이 되는 '남성적 경험의 역사'를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와 경험들이 녹아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적 학문' 또한 어떤 점이 대안적이었고 어떤 점이 한계적이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화해 갈 것인지가 운동과 이론의 과제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사회의 물적 조건 등등이 엉겨서 복잡한 성별 체계(gender-system)를 이루고 작동할 때, 남성적 이론 역시나 이제까지의 상황 상 가능했던 수준의 타협의 산물인 성별 체계(gender-system)의 결과물이다.

여성운동 이론을 어디서 떨어뜨려 주는게 아니라면, '여성들' 삶이 녹아들어가 어디인가 숨어있을, 이제까지의 이론을 시작으로 변이를 일으켜 여성주의 이론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로 문제설정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과 그 방식은 기존 정치적 세계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해방적 요구를 물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투쟁과 결합시키는 정치를 개발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만들지 않은 기존의 남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그 역할과 방법이 강제되겠지만, 우리는 이제껏의 남성적 담론의 언어를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전유할 수 있다.4)

맑스주의 또한 무성적이지만, 역사적 분석을 통해 물적 토대를 분석하고 바꾸어내려는 문제의식과 방법이 유효하다면, 맑스주의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화에 기폭제일 수 있다. 보편적인 1세계 여성들만의 페미니즘으로 일면 위기에 놓인 '여성들간의 차이' 문제를 접근할 때 또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물적 토대 분석에서 출발하는 맑스주의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beyond 고학번모임(시타/바리/피소/하리),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98년 9월 공산당 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 물론 이론적 비판과 이러한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결 고리를 갖고 벌어진 일들이라 평가할 수는 있다.

3) 최소한 공개적인 논쟁으로써 벌어지지는 않았으며, 당시 인식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

4) Johanna Brenner,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 US Feminism Today」, NLR no.200.

2. 이론적 비판 두 번째 : 맑스주의는 계급 환원론이다.

어쩌면 여성운동이 맑스주의를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급 환원론'적 경향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이론적 경향과 실천적 경향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부분이라 더더욱 그러하다.

맑스주의는 본래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노동과 자본의 갈등 외의 다른 모순에 대해서 이론적 차원의 '인정'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 스스로의 '전역성'을 가정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특징은 이론의 '외부'를 사고할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며, 이것이 맑스주의의 '환원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역적'이라 생각하는 '맑스주의' 이론 내로 계급 이외에 제기되는 모순들을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 다른여타의 모순을 계급 모순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학내 몇몇 좌파활동가들의 가부장적 성품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맑스주의 이론에 공통적으로, 맑스주의 운동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질 때면 줄곧 나타나는 모습이며,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엥겔스가 성적 불평등과 성적 분업을 단지 생산에서의 계급 분화와 사적 소유의 결과로 환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엥겔스의 주장과는 달

리, 성적 억압이 계급사회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관계의 많은 측면들이 단순히 계급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5)

'여성의 억압은 자본에 기능적'이라는 주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주의라기보다 오히려 환원주의이다. 이 경우에 성별관계(gender relation)는 자본의 작용 결과로 환원되고 있다. 이러한 환원은 이제껏 경제주의로 알려진 분석형태에서 아마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경제주의에서 이데올로기 종류의 현상은 이미 가정된 경제적 결정인자로 환원되고 만다. 여성억압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환원의 문제는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남성지배의 특정한 형태와 예를 들면 자본의 이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왜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중략) 더욱이 환원적 관점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생산양식이나 역사적 시기에서도 자본주의와 비교될 수 있는 형태의 남성지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6)

이러한 계급 환원론적 경향은 실제 맑스주의 운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현실적 여건', '이론적/ 혁명적 단계'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을 후순위로 놓거나 아예 계급운동에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발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개념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성별 개념의 결여가 그들에게 전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념적 기반이 곧 세계관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할때, 맑스주의의 이같은 무성적(gender-blind)성격은 '계급모순/민족모순의 중심성 주장'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심성 주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 환경, 교육, 인권, 평화 등"의 많은 전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크고, 더 중요하며, 더 본질적인 전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놓인 전선이라고 말해집니다.7)

위 인용글은 학생운동의 계급 환원론적 경향과 여성운동을 부차화 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분석이다. 맑스주의 이론은 스스로가 결코 '전역적'이지 못하며 명백히 한정된 대상으로 하여 한계를 가진 이론임을 인정해야 하며, 무성적(sex-blind)인 이론에 대해 성찰하며 어떻게 하면 남성들만의 해방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구분하여, 성급히 '환원론'이라 이름붙일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판단이 모호하고 이론적 논쟁과 학문적 진척이 필요한 사회주의 페미니즘 내의 일원론자와 이원론자 사이의 논쟁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개의 개념/체계를 주장하는 이원론자들과 이러한 주장이 여성억압을 물적 기반 위에서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혁과 멀어진다고 주장하는 일원론자들의 대립은 그리 간단치 않다.

다음은 이원론을 옹호하는 우에노 치즈코의 일원론 비판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마르크스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다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이기 위해서는 우선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전제, 즉 '가부장제'란 개념을 자본주의와는 별개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동등한 자격으로 통합시킨 최된 통일론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통일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바렛이나 영 같은 사람들이 두 개념의 '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 그들은 "자본주의 아래 가부장제를 통일"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일원론에 빠져 있다.8)

이에 따르면, '페미니스트'이려면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별개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원론자들의 시도는 사실상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에 종속시키려는 '환원론적' 시도이다. 그러나 비판의 주요 표적이 되는 바렛의 논리를 짧게나마 살펴보자.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여성억압이라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성지배와 그에 대항한 여성의 투쟁은 자본주의의 맥락에 선행하며 그 맥락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게일 러빈이 매우 신선하게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하의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매우 일상적인 모욕들이나 전족, 정조대, 비잔틴 제국의 믿기 어려운 행렬, 물화된 경멸들 등등을 모두 설명해낼 수 없다."9)

둘째, 나와 비판자 사이의 주된 차이가 독자적 페미니즘의 정치운동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그들은 내 분석의 출발점인 이분법-세계에 대한 설명과 정치적 우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맑스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긴장-을 무시했다. (중략)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특수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적 분석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적 관점의 이슈로서보다는 페미니즘 그 자체의 측면에서 다루려고 했다.10)

바렛에 의하면, 이중체계론의 중요한 결함은 그것이 '무성적' 맑스주의 범주의 미흡함을 가부장제 개념으로 보완하려 함으로써 맑스주의 이론 영역을 불필요하게 한정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맑스주의 이론틀이 가진 결정적 통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경험주의 사회학 영역에 확고히 묶어놓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은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11)

첫 번째 인용문을 살펴볼 때, 일원론을 대표하는 바렛 역시 '자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 억압'의 고유한 특질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론의 중심인 "사회주의 페미니즘적 분석"은 "페미니즘 그 자체"에서 출발한 것임을 뚜렷이 밝히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환원론' 라벨을 붙일 수는 없다. 다만, 바렛은 이원론자들의 '가부장제 개념' '가부장제 생산양식'을 독립적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분석은 유물론적 분석이 아니기에 조건을 정확히 보고 바꾸어야 하는 '변혁'의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론'이라는 논쟁점 쟁점에 대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환원론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계급운동과) 다른 영역의 운동을 '언급'해도, 아예 언급하지 않아도 "환원론적"이라 비판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물론, 기본적으로 학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학생운동이 전혀 성찰적이지 않았으며 기존의 운동에 여성운동을 통합시키려했던 경향이 존재했음을, 또한 현재에도 자기반성 없는 패권적 모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더 정교한 비판을 가하지 못한 여성운동 진영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환원론에 대한 정교하지 못한 비판이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맑스주의적 문제제기 또한 추상적인 '환원론'이라는 비판으로 사장되게 하는데 기여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5) 권현정,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6) 미셸 바렛,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분석의 몇 가지 개념적 문제」, 『오늘날의 여성 억압』

7) 시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닌 누군가의 대답을」, 『정정헌 제 28호(1998)』

8)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9) 미셸 바렛,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분석의 몇 가지 개념적 문제」, 『오늘날의 여성 억압』

10) Michele Barett, "Rethinking Women's Oppression : A Reply to Brenner and Ramas", NLR no.146.

11) Johanna Brenner and Maria Ramas, "Rethinking Women's Oppression", NLR no.144.

▶ 기획1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part5

V.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앞서 맑스주의의 페미니즘적 한계와 그것이 노정해 온 남한 사회, 그리고 학내 운동에서의 가부장성, 그리고 그것에 의해 혹은 그것에 대해 여성운동이 취하였던 스스로의 변화 모색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맑스주의 자체의 한계와 맑스주의 운동의 실천적 한계를 짚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의 유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역사 인식, 정세 인식에 기반하여 현재 여성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될 것이다.

1. 여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이다.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이어야 한다.

여성운동은 분명히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역사와 문제의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내뿐만이 아니라 학외까지도 여성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이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68 이후 급부상하였고 남한 사회에서는 90년대 들어서 부각된 신(New)사회운동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의식화 소그룹, 육체의 정치, 일상의 정치, 여성적 경험 혹은 감수성의 공유, 자율성, 문화주의적 운동 등을 떠올리며, 기존의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 등과는 다른 그 무엇이라 여기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신사회운동'의 도식은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탈각시키고, 오히려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의 정치를 일상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오류를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장미경이 여성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사고하는 틀을 비판하는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하겠다.1)

1) 장미경, 「신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2000, 문원출판

(1) 신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운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생활세계의 문화 혁신을 통한 일상의 정치를 주요 이슈로 내거는 신사회운동2)은 이전의 노동운동 중심성에 의해 가려졌던 많은 운동의 이슈들을 제기하는데 기여하였다. 민족, 인종, 여성, 평화, 반전, 반핵, 생태, 장애, 동성애 운동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은 예전의 시대와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과 탈물질적인 가치의 비중 증대라는 시대적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회모순들을 치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부차화되거나 중시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운동의 현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후기 산업사회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신사회운동론자들과 대중들이 여성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날의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인 신사회운동과 동궤에 놓여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여성운동의 역사의 한 면에 불과할 뿐, 전반적 여성운동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의 소산으로서 발생된 신사회운동이란 여성운동 속에서도 제2기 여성운동, 그 중에서도 급진적 여성해방운동만을 포함시킬 수 있거나 진정 현재의 여성운동에서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는 여성 생태운동, 여성 정신문화운동 등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설명하는 틀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 '여성운동 = 신사회운동' 도식의 문제점

'여성운동=신사회운동'이라는 도식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여성운동의 역사와 이슈를 협소화한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 명명해 버리면, 신사회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인 60년대를 여성운동의 태동기라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여성운동은 20세기 초반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에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으로 60년대 후반의 제2기 여성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기 여성운동 속에서도 특히 급진주의 페미니즘 내에서 이루어진 육체나 성, 문화 등의 색다른 이슈들과 소규모의 의식화 그룹, 풀뿌리 조직 등의 새로운 조직방식에 주목하면서, 이것들을 여성운동의 전면적인 특성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운동 역사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히 협소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신중산층과 탈상품화된 집단을 운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신사회운동을 여성운동의 상위범위로 상정하였을 때, 맑스주의 여성운동이나 여성노조원들, 그리고 제3세계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노동계급 출신의 여성주체들을 운동의 주체에서 탈각시키며, 광범위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이는 단순히 역사의 상당히 큰 부분을 폐기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폐기된 역사 속에서 숨쉬었던 여성운동의 키워드인 노동, 계급, 참정권 등과 관련된 이슈를 놓치는 효과도 낳는다. 여성운동은 육체와 sexuality,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이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이슈를 제기해 왔으며, 운동의 자율성, 일상성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운동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이 오히려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사적 영역으로만 고립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3)를 전제로 하여, 사적 영역이 결코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간과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정치의 공간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의 영향에 대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낳았고,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를 중시하는 전략 또한 고립되고 게토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 사적 영역의 적극적 힘을 사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상호교통적인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분법은 비판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그 본연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실제로 이러한 신사회주의적 사고틀은 서구 중심적, 남성 중심적, 부르주아적 시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가 여성운동을 여성 혹은 남성의 일상적인 문화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문해 보자.

세 번째로, 문화와 일상적인 sexuality의 억압과 착취, 이데올로기 등에 주목하는 신사회운동의 틀만으로는 여성의 현실을 온전히 읽어낼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신사회주의자들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의 장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치를 통해 어떻게 그 모순들을 끊어낼 수 있는지, 대안적 사회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혁적 전망을 상실해버렸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적인 여성의 삶을 제대로 분석할 수도, 바꿔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요즘 여성들의 노동현실만 보더라도, 그녀들이 가정에서 감정노동을 도맡아 수행하고 시장에서의 그녀들의 노동력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 끊임없이 자신의 sexuality를 팔아야 하는 노동력의 특성과 그녀들을 흔고 지나가는 성폭력적 시선들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녀의 일상생활 혹은 sexuality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4)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모순은 gender-system에 의해 중층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민중생존권의 위기에 대한 분석 없이 여성이 일터에서 해고 1순위가 된다거나, 육아와 노인부양을 포함하는 많은 사회적 서비스의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 현실은 제대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2) 신사회운동론자들의 논의는 여성운동을 단지 문화적 측면이나 방어적 측면에서만 인정하는 오페나 투렌에서부터, 그 영역을 확대시켜 해방적 관심과 정치경제학적 제도

를 포괄하는 하버마스나 기든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생활세계의 이분을 전제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정치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비판으로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틀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3) 하버마스는 이를 '이중사회(체계/생활세계)론'으로 정립하였다.

4) 물론 그것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3) '사적/공적', '노동/여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코헨과 아리토의 '이중적 정치전략'이 유의미할 것이다. 이들은 "여성운동의 정치는 국가와 행정, 경제의 체계영역을 직접 공격하는 영향의 정치(the politics of influence)와 정치적 공공영역의 개혁을 꾀하는 포섭의 정치(the politics of inclusion), 생활세계의 영역에서의 개혁을 꾀하는 의사소통적이고 담론적인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의 측면을 모두 지녀왔다"고 여성운동의 정치를 폭넓게 정의한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영역에서의 변혁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개혁을 꾀하는 전략과 새로운 정체성, 사회 규범, 연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꾀하는 '이중적 민주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코헨과 아리토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운동은 구사회운동, 여성운동은 신사회운동이라는 도식을 폐기하고 이중적 정치전략으로 여성운동의 전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5)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해야만 현재 게토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여성운동의 활동력과 영향력을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내에서 팽배한 노동운동이냐/여성운동이냐 식의, 이 두 운동이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넘어서서 노동권과 여성권의 만남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여기에 기존의 노동운동이 사적 영역의 정치성을 간과해왔던 사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밑받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화가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변혁적 전망을 밝히기 위한 페미니즘 이론화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유효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변혁적 여성운동의 이론적 전망을 위하여

(1) 9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 : 객관적 평가와 전망 모색의 부재

여성운동의 사회 변혁운동으로써의 전망을 밝히는 여성운동 이론은 실제 운동의 요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듯 하다. 90년대 한국 여성운동은 그 엄청난 대중적 성과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객관화된 평가가 부족했다는 장미경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6) 앞에서 지적한 '여성운동=신사회운동'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사회변혁운동으로써의 여성운동의 전통을 비가시화 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논의조차 비가시화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개인적인 것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시적 담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회의로 연결시키며 꼭 논의되어야 할 여성운동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조차도 여성운동에 대한 '외부적 비판' 형태로만 제기되어 왔다.7) 그러나 '외부적 비판'이 아닌,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냉철한 평가와 활로 찾기로써의 '장기적 전망 연구'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분석틀로써 맑스주의 이론은 한계적이지만 변혁운동 이론의 틀로써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6) 오장미경, "80, 90년대 여성운동에 나타난 운동론 쟁점들"

7) 이러한 외부적 비판은 종종 '교조화 된' 맑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맥락상 '여성운동은 (장구한 역사와 중요성, 이론, 동력을 가진 맑스주의와 달리) 장기적 전망이 부족하다 (따라서 덜 중요하다)'라는 투명하지 못한 함의까지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페미니스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장기적 변혁적 전망'에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만 되었다.

(2) 이데올로기 변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현실이 기반하고 있는 물적 조건의 변혁이다.

여성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거시적인 변혁의 '대상'에 대한 투쟁에는 동의하되 자기 자신과 개인적인 것에는 티끌만큼도 침범당하지 않으려했던 소위 '80년대 운동권'들에 대한 반편향으로, 90년대 이후 남한 여성운동에서는 변혁의 '대상'이 어느 먼 곳이 아닌 우리 자신, 나의 친구 가족들이 되는 여성운동의 특성이 더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변혁이란 것이 먼 곳에 숭고한 사람들만이 희생정신으로 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하나하나의 변화로 이루어낸다는 이상과 가능성을 생활 속의 작은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던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약점은 또한 '나와 너의 생각을 바꾸자' 라는 말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런 경향은 결코 '보통'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융합할 수 없을 듯 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급진성'과 또한 '제도화'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게 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맑스주의가 교조화되면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물질적 조건'의 변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왜곡되어 나타났고, 68을 경유하면서 전세계적인 변혁 운동의 흐름도, 이론의 흐름도 과거 '허위의식'에 불과했던 이데올로기가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고찰하게 되었다. 특히나 제2세대 페미니즘을 구성했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좌파 활동에서의 교조성에 환멸을 느끼며 새로운 여성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억압적 이데올로기, 문화기제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학내 여성운동은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대중적 호응과 파급력을 가졌으나, 여성 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만 찾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는 학내 여성운동의 이론적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이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가족 담론'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학내에서 '가족'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세미나를 할때 주요 내용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가족이란 집단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개인적인 관계들의 불협화음,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가사노동 및 기타 보살핌 노동, 그리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남성들의 인식, 딸로서 겪게 되는 차별 등등.. 가족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이기에 '가족' 세미나는 주로 개인적 체험을 털어놓으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의 문제점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곤 한다. 그러나 가족의 대안적 형태나 전망에 대해서는 비혼 생활에 대한 재해석, 공동체 가족[8] 이상을 제시하지 못한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릴 수는 없고..'라는 갑갑한 마음으로 세미나는 끝이 나곤 한다.

이 갑갑함의 이유는 세미나가 이데올로기의 현상적 분석과 자신의 체험으로 공감하는데서 그쳤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제도가 개인에게 그렇게 갑갑함을 주고 여성을 착취하며, 가족이데올로기는 그 개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배타적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심지어 세미나를 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조차도 쉽사리 '가족 버리면 되네'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여성에게, 그보단 덜하겠지만 남성에게도 억압적인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들의 (아주 차선책이겠지만)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젠더(gender)가 중요한 매개체이긴 하되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젠더 시스템(gender-system)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족 이데올로기'가 처한 토대이다. 가족제도, 가족 이데올로기 하에서 억압받는 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이란 문제의식 또한 물질적 토대를 분석하고 변화시킨다는 전제 위에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9)

8) 물론 현실성있는 대안 가족 형태로써 공동체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물적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공동체 가족'을 '보편적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당한 시적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사비로 건물을 짓고 공동육아를 시도하는 사례 등은 폐쇄적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택할 수 있는 선택항이며 보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9) "그녀(바렛)는 일단 이데올로기가 물적 실체에서 분리되면 모순에 기한 역사변화에 대한 결정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분석적 유용성도 갖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들은 이중체계론처럼 결국 우리를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기타 등등의 서로 다른 요인들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부르주아의 다차원적 결정론으로 후퇴시킨다." (Johanna Brenner and Maria Ramas, 「Rethinking Women's Oppression」, NLR no144)

바로 이 부분이 맑스주의가 여성운동의 전망 모색에 필요한 이유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형평성에 주목했다면, 이러한 한계를 절감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기회균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인식지형의 변화를 일구었지만, 이는 앞서 가족 세미나의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조건',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기에 여성운동이 장기적인 대안적 체제를 꿈꾸기에 한계적이다. 세미나에서, 억압의 문제점과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낼 언어가 부족하고 경험의 토로와 감정적인 공감에서 멈추는 모습 또한 억압적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을 세우지 못한 데에서 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질적 조건의 변혁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때, 여성운동은 맑스주의의 문제의식과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새롭게 장기적 전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억압의 토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운동에서 맑스주의를 적극 받아들여 맑스주의 페미니즘(혹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써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망을 찾는다고 했을 때, 기존 맑스주의 이론의 '토대'로써 여성억압의 토대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 맑스주의에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계급'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억압의 독자적 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억압적 체제를 어떻게 대안적 체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찾아보려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남한사회에 지배적인 '여성 억압의 토대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어느 모순보다도 여성 억압이 우선하며 가부장제라는 틀로써 전사회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여성은 계급(10)으로써 존재한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의 입장(11), 그리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독립된 체계를 이루되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고 있다는 (이원론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입장(12)이 그것이다.

10) 급진주의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성들의 범주를 '계급'으로 볼 것인지, 계급에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보편적인 가부장제의 억압을 공통적으로 겪는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써 '여성'범주를 인정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11)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12)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왔듯이 여성 억압의 모순은 그 어느 것에 '종속'되어 이야기 될 수 없는, 오로지 '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특수성,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조화 된 맑스주의자들이 착각하듯 사회주의 세상이 오면 여성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에 선행하며, 사회주의 세상이 와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잠깐 소개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와 (이원론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입장은 어쩌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성 억압의 '특수성',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운동이었고 지금의 당연한 인식은 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틀은 '선험적인 선언'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13). 초역사적인 '가부장제' 틀을 전제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생물학적 본질주의 혐의(14)와 '초역사적' 가부장제틀에서 비롯되는 '장기적 전망 없음'(15)으로 인해 변혁 이론으로써의 유효성을 많은 부분 상실했다. 또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원론)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계급의 틀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을 산술적으로 도입했을 뿐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두 개념간 갈등과 실천태의 모호함만 더해졌다.(16)

13) 이제까지의 이런 '선언적' 인식은 일종의 여성운동이 (맑스주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필수불가결 했으며 또한 그렇기에 넘어서기 어려운 그 무엇이었다고 생각한다.

14) "이들은 남성지배라는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범주를 상기하면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거의 제거해 버린다. 또 이들은 종종 남성지배를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가정된 논리 속에서 파악한다. (…) 생물학주의적 주장들은 (…) 사회적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구축된 현상을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라는 범주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자이다." (미셸 바렛,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분석의 몇 가지 개념적 문제」, 「오늘날의 여성 억압」)

15) "가부장제 개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그것이 대체로 특정한 생산양식 내에서의 탐구에 저항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초역사적 억압을 암시한다는데 있다." (같은 책)

16) 물론 크리스틴 델피와 같은 이들은 가부장제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본질주의적 경향을 넘어서 물질적 토대를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가내제 생산양식'이 그 예인데, 이는 공적 경제영역과 불가분의 영향을 주고받는 가내 영역을 '가내제 생산양식'으로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억압의 기반을 '가족내부'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사 및 가내에서의 성별분업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여성억압이 결코 자본주의 억압체계로 설명될 수 없는 '독자적'인 억압체계임을 넘어서 그 억압체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바렛은 이원론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비판을 통해 표시하고 새로운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의 전망을 밝히려 하고 있다. 이원론자들의 경우, 여성 억압 또한 그 물적 토대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등되는 '가부장제 생산양식' (가내제 생산양식)을 고안해내거나 '여성은 프롤레타리아이다'(17)라

는 선언을 하면서 '맑스주의'만큼이나 동등한 위상의 '페미니즘'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이론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운동의 힘관계에 크게 좌우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지만, 바렛은 그 이론들의 의의와 한계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길을 주장하고 있다.

17) "크리스틴 델피와 몇몇 사람들은 여성억압에 대해 좀더 적절한 유물론적 분석을 개발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델피는 부르주아 남성과 이혼한 부인의 사례를 통해 계급관계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가부장적 착취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비록 자본가 계급 남성과의 결혼이 여성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다 해도 그것이 그녀를 부르주아 계급의 일원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 사실상 여성들은 (나이나 저문직종의 훈련 부족이라는 추가적인 불리함과 함께) 본질적으로 존재해온 프롤레타리아트이다" (같은 책)

바렛은 자본주의 억압체계와 가부장제 억압체계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려는 이원론자들을 초역사적인 가부장제를 전제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다를 바 없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녀는 여성억압이 자본주의 모순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다른 억압의 충위를 가진다는 점, 그렇기에 사회주의 세상에서도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스스로도 무성적인 맑스주의 이론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시도한다. 그러나 분석 및 이행 전략에 있어 그녀는 이원론자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 바렛은 이원론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순들이 뒤엉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굳이 두개의 체계로 상정하고 애써 그 관계를 설명해내려 하는 기능론적 설명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 모순과 여성억압이 따로 구분해내기 힘들만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여성 억압이 자본주의 모순에 종속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변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바렛의 요지인 듯 하다. 지독하게도 현실적인 이론 분석이며, 바렛의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이 돋보이는 것도 그래서이다.

바렛이 제공한 상상력과 이론적 기반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넘어, 이제 "역사적 가부장제 형태"를 연구하고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전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가족이란 화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단순히 가족의 억압성, 태초부터 그러했던 모순이다, 아니 예전에 안 그랬기에 변화가능성 있다 등등의 조야한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가족 체계가 다른 사회 기제들과 관계 맺고 작동하는 모습과 그때 여성들의 역할의 변화 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4) 교통하는 여성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적 가부장제 형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가부장제', '여성억압'('여성만'의 문제 라는 의미에서의)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가부장제와 공존하고 있는 다른 억압체계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애초에 '가부장제'라는 것이 그 어떤것과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며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또한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가 성립하는가'라는 난감한 질문에 봉착한 여성운동의 현실을 본다. 중산층 백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이 많은 유색인종 노동자 여성들의 운동을 딛고, 그녀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던 여성들 내부의 '차이'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여성'운동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

끊임없이 가족의 해체 일로를 걸어온 흑인 여성들에게 '가족 밖으로 나와서 공적영역에서 일할 권리를 달라'는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요구는 페미니즘일 수 없다. 생리휴가는커녕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산하면 '당연히'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주5일제 실시 및 생리휴가 무급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조치는 페미니즘일 수 없다. 또한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원주민 여성에게 전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을 말하며 여성과 자연을 신화화시키는 NGO의 담론은 페미니즘일 수 없다. 민족운동과 결합해야만 최소한의 여성의 생존권 보장이나마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여성운동이 민족운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3세계 여성운동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민족주의를 넘어선 포스트 민족주의적 국제연대를 하자'고 강변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은 없다.

이런 '차이'들이 문제되는 지점은 바로 그동안 너무 선험적으로 '여성'이라 이름 붙여진 집단에 대하여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환상적 자매애'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때의 '환상적 자매애'는 대개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자매'라 보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다른 영역과 교통하는" 여성운동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이를 담지하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은 보편적 '여성'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여성들의 삶의 토대 분석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러할 때 일률적인 남성/여성의 전선으로 깨끗하게 가를 수 없는 복잡다양한 여성들의 현실들을 올곧게 반영한 여성운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의 '서로 다른' 현실은 사실상 밀접하게 엉겨 있으며, 이러한 억압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이 처한 조건들(물적 토대)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분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여성들의 삶일수록 필요한 것은 그 관계, 토대에 대한 체계적 분석, 이에 기반한 연대이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화를 위해 맑스주의를 적극 결합한 흐름은 페미니즘의 매우 급진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모순지점들은 분명 기존의 맑스주의 운동이 담보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 맑스주의 운동 자체도 전화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나 혹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맑스주의를 대신해 다양한 모순을 떠안을 수 있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주의적 '다양성' 인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음의 인용문을 볼 때, 얼마나 여성들 간의 '차이'에 기반한 페미니즘을 위해서 맑스주의적인 유물론적 분석이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조건하에 서로 '다르게' 처해 있는 여성들의 차이를 결코 '계급'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다층적 분석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싸우는데 매우 유효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익집단으로 파편화된다면, 우리는 페미니즘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성과도 편파적일 것이며, 지배계급이 아닌 다른 피억압 집단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리주의 접근은 흑인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백인여성들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는 백인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지 백인들에 의해서 이해되거나 그들이 단독으로 투쟁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백인 여성에 대한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훈련'은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무기라 해도 인종차별적 요인이 심리적 지배나 자기최료적 힘이라는 특별한 믿음이 없는 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 서로 다른 여성집단 간의 정치적 협력이 많이 요구되는 통합은 아니라 해도, 계급분석의 맥락에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론적 기초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맑스주의는 그 차이를 없애기는커녕, 흑인여성과 백인여성의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는 대영제국의 과거, 오늘날 세계무역에서 영국의 위치, 다국적 기업의 역할, 민족해방운동의 중요성, 산업예비군의 역할, 국가의 강압적 역할 등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우리의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거나 인종차별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 자본주의가 영원히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프롤레타리아 적대세력들을 창출할 것이라는 상정도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계급연대의 숨겨진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18)

18) Angela Weir, Elizabeth Wilson, "The British Women's Movement", NLR no.148.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자유란 간섭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단지 소극적으로만 보장된다. 풍요로운 1세계 여성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그보다 더 많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 속에서 1세계 여성의 자유는 상당부분 제3세계 여성의 자유를 착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1세계 여성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1세계로 이주해 가정부 일을 하며 착취당하는 제3세계 여성의 모습은 쉽게 떠오르는 장면이다.

다양한 지반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어떤 여성의 삶의 권리가 다른 여성을 착취하며 영위되지 않는, 모든 여성에게 자유로운 삶의 권리를 갖는 대안적 원리를 찾아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자"는 모호한 말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삶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여성들의 삶의 기반과 넓게 교통하고 어떻게 체제를 변혁할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맑스주의는 '여성들 간의 차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체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차이의 페미니즘"의 전화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Imagine의 방향성과 분리주의에 대한 소고

앞에서 우리가 보는 현재 여성운동의 상황과 그것의 혁신을 위한 조건들, 혁신의 방향성 등을 거칠게나마 서술하였다.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magine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의 경험이 학내 여성운동 전반을 분석하기엔 많이 부족하기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점차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글을 쓰고 Imagine이라는 모임을 결성한 것은 첫 번째로는 좌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공간을 찾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다들 여성운동이 전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오늘날,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현재 여성운동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페미니즘 역사에서 묻혀졌던 성과 계급/여성권과 노동권/안과 밖의 정치와 관련된 논쟁들과 쟁점들을 복원해내고자19), 단순히 복원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페미니즘의 변혁적 전망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19) 사실 이러한 쟁점들이 '묻혀있다'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순간, 학교 안과 밖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이것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일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 학내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거의 묻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학외에서는 학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전의 쟁점에서 별 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 Imagine의 방향성

우선, Imagine은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활동양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기존 좌파 활동가들은 학생회나 정파조직 외의 어떠한 공간도 마련하지 못했다. 학생회나 학생정파조직 모두 가장 대중적인 대표조직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중동원을 해내는 만큼이나 좌파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페미니즘이 성 변수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 아닌 만큼 노동, 계급, 민족 등의 다른 사회모순들과의 연결점을 밝혀내고 그것에 기반한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좌파조직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소위 사이클 사업을 때문에 페미니즘과 같이 기존 사이클로 안착화 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빡빡한 기존 사이클 사업들 때문에 페미니즘을 독자적으로 심도 깊게 풀어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

▶가족 세미나 새롭게 하기 - 가족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가족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도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어머, 정말 이런 줄 몰랐어요. 가족은 그냥 좋은 것인 줄만 알았어요"
" 어차피, 전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가족은 언제나 저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왔어요."
" 요즘, 대안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으로 하게 된 가족 세미나가 자신에게 어떠했는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가족에 대해 고민해보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가족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주고 받으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경우가 있었을 것 같네요. 혹은 포근한 안식처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적도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주제는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에 날카로운 이론적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몇 십 년을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도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아주 사소한 것처럼만 보이던 생활의 이면을 들추어보게 된 경험은, 충격적이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운 깨뜨림의 시작이었겠죠? ^^; 보이지 않던 억압에 이름을 부여하고, 일상의 정치를 고민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왕성한 호기심을 지니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나 홀로의 투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더 나은 가족의 모습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Cool~ 하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욕탕방 고양이'나 '비람난 가족'이나 한 동안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워낙에 Cool~ 한 분위기를 연출했는지라 '가족'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셔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처럼 무엇이 이렇게 답답한 것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다른 사람과 달리 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느낌들 과연 나는 '가족'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가족 세미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가족 세미나에서 느껴졌던 미진함, 뭔가 부족한 느낌을 채워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미나를 통해, 나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결코 '나만의'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삶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러한 문제가 위치하고 있는 틀거리 자체를 변

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에 더 많은 고민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가족 세미나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 내부에 응축되어 있는 모순을 사고하는 것은 가족 세미나의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저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는 한풀이 식으로 되거나,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일상의 조그만 변화도 만들어내기가 힘들겠지요.

또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대안가족 담론은 오히려 가족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예로, 가족의 폐쇄성을 넘자는 의미에서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자신만의 공간을 갖추고 산다는 화려한 독신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유가 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내부의 모순, 일상의 억압과 관련한 문제에서 나아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의 관련성, 국가 정책 속에서의 가족, 가부장제와 가족 등과 같이 물질적 토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대안' 이라는 담론 틀 속에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는 은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용기만 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듯이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세미나 두 팀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새내기들과 함께 하더라도 알찬 내용으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요 ^^

첫 번째 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세미나와 그리 많은 차별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족 낯설게 보기'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지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 부분을 다루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이후의 세미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더 많은 문제의식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팀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온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의 가족을 낯설게 보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여성을 다양한 형태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족 형태' '가족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 임금제'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면서 '구조적 폭력'으로서 가족을 사고하고 진정한 여성 해방의 정치를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팀 소개에 담았습니다. ^^

가족, 낯설게 보기

장필화,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 통념과 규범의 비판' 『여성 몸 성』, 또 하나의 문화, 1999
조성숙, 『어머니의 경험 · 세계의 모성 이데올로기』,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 아카데미, 2002
정고미라, '제 1장, 노동 개념 새로 보기 :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 출판부, 2000
미셸 바렛, 매리 매킨토시, '2장 반사회적 가족',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
또 하나의 문화 편집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2003

대중가요는 여전히 영원한 사랑을 찬미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제가 무엇이든지 '사랑'이라는 소재가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무언가 밋밋한 느낌이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사랑, 사랑, 사랑타령을 보고 듣고 자라며, 사랑이 무언지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았건만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으며 일생일대의 그 날을 고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화시키기야 힘들겠지만, 삶에 지치고 외롭다고 느낄 때면 내 곁에 있어줄 나만의 유일한 누군가를 꿈꾼 적은 한 번 씩 있지 않을까? 온갖 환상들로 교묘히 포장되어 눈부신 단어처럼 보이기만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만큼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벗기기는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사랑'이란 말로써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지고 은폐되어 온 '사랑의 역사'가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두어지고, 그녀들의 존재는 사라진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온, 그리고 현재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쿨~하게 하는 것이 신세대 감각인 양 보여 주는 온갖 이미지들 속에서 진정으로 쿨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닐까?

장필화의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되기'라는 글을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가려져 있는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 마치 동상이몽 같은 서로의 다른 관념, 그리고 사랑-연애-결혼과 같은 도식이 남성 중심적 사회 체제를 얼마나 공고히 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비판해보자. 남성과 여성이 결코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과 사랑은 남성과 분명히 다르고 그러한 간극에서 무수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가족 내부를 파헤치기에 앞서,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 혹은 성,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내면서 자신의 삶에서 한 발 짝 벗어나 보자.

이를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신화로 얼룩져 있는 '가족'에 메스를 들이대어 보자. 한꺼풀 한꺼풀, 드러나지 못했던, 무수한 목소리들이 넘쳐 나올 것이다. '어머니의 경험 세계와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커리는 가족 내에서 당연시 되어 왔던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의 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고, 본성적으로 사고되어 왔던 모성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얘기를 풀어내보자. 요즘 보수주의 일각에서는 가족 해체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금 '모성'을 강화하는 담론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황과 관련지어 '어머니'라는 가족 내에서의 한 주체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참고로 이 커리에서는 '모성'이 남성 지식인이나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들로 인해 어떻게 발화되고 문학 작품 등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고 있는 지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커리의 마지막 부분인 '모성이데올로기의 극복'이라는 부분은 좀더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써 존재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빼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자. 가사노동은 페미니즘 노동 담론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가족 세미나를 통해 노동 전반에 대해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고민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고미라의 '노동 개념 새로 보기'는 부제가 '감정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이듯이 그동안(혹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해온 주부의 노동에 이름을 부여하고 묻혀져 온 여성들의 노동을 새로이 바라보는 데에 아주 좋은 글이다. 그 동안 이 글은 '여성 노동 세미나'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부의 가사노동, 감정노동에 주목해서 보면, 가족 세미나에서도 괜찮은 커리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이중부담이 강화되는 현실을 생각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당연히 전제되는 '보살핌의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왔는지 예리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가족 세미나에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은 반사회적인가'라는 커리를 통해 이론적인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다져보자. 바렛은 여성 억압의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 주목하는데, 이 책에서도 가족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 강조되고 있다. 부와 가난의 세대적 재생산 문제, 사생활권의 보장이란 명분 아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이 은폐되고 있는 현실, 남성들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와 사회적인 권력 구조 간의 관계 등 가족이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구체적 경험들에 이론적 논거를 녹여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가 잘 되었다면, '가족, 낯설게 보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물론 고민해야 하는 더 많은 지점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커리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는 다음 세미나를 기획하며 대안가족 담론을 가볍게 살펴보기 위해 실어보았다. 이 책은 보살핌의 공간을 확대하고 모성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오십대 페미니스트의 비전 제시, 전통적인 결혼이나 가족을 거부할 때 함께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십대 페미니스트의 모습, 동성애 가족의 경험담으로 시작하는데 그만큼 가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세미나를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기 보다는, 그 중 몇 개만을 선택해서 가볍게 읽어볼 수 있을 듯 하다.

자금까지의 가족 세미나의 결론 격이 이러한 대안 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머물렀다면, 두 번째 팀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족, 국가정책 속에서의 가족 등과 같이 사회구조 속에서의 가족을 살펴보도록 하자.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찾는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도모되지 않는다. 가족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가-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이 기초하고 있는경제적 토대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그러한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팀을 통해 이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보도록 하자.

첫 번째 팀 '가족 낯설게 보기'를 통해 사람이라는 신화로 얼룩진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족 중심 이데올로기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따라서 가족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 가족의 모습과 신화화된 '스위트 홈'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1팀에서 살펴본 대안 가족 모델들이 흥미롭게 와닿기는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대안이라기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스위트 홈'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강한 탓일까?

두 번째 팀에서는 이러한 의문들과 관련하여 '구조적 폭력으로서의 가족'이라는 측면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현재 가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첫 번째 커리 '여성억압과 가족'에서 미셸 바렛은 '가족(the family)이 뜻하는 본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가정(assumption)을 비판하고, 전체 사회구성체와 연결된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을 파악한다. 즉, 가족은 '이데올로기'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제도'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바렛은 가족개념의 계급적 구성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경제적인 가구구조와 결합하여 등장하고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렛은 이 양자의 통합체인 가족-가구체계가 여성억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역사에 따라 변화하며, 가족의 형성 및 해체는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기반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자. 특히 핵가족을 유지해 주는 물질적 기반인 가족임금에 대한 분석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억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가족 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어서 두 번째 커리인 '아메리카 핵가족의 역사',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를 통해서는 가족의 역사적 형태 및 가족을 둘러싼 구조적 상황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이 두 글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 구조적으로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렛의 관점과 많은 부분 맞닿아 있다. '아메리카 핵가족의 역사'는 미국에서 핵가족이 형성되고, 전성기를 맞고, 쇠퇴하는 과정을 각 시기 미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는 주로 아메리카 가족과의 유사성이라는 잣대를 통해서만 남한 가족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한 가족형태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가족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책에서처럼 나름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 커리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가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분석에 입각하여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 가족 이야기'라는 책의 일부다. 여기서도 '가족임금과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앞의 두 커리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부인들이 남성 생계 부양자에게 종속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업 주부의 길을 선택하고 가족임금제를 옹호하게 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생생한 분석은, 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한 해결이 기존의 가족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이 이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여기까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면 '가족 내에서의 억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커리인 10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필자의 짤막한 제언에 주목해 보자. 필자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가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토대로, 노동자 가족 내에서 여성이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교대제 근무 폐지' 등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한다. 이는 '가족' 내 여성억압 문제의 대안이 다양한 여성들이 놓인 다양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신선한 예로, 기존의 '대안 가족' 논의 등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또다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힌트를 제공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what is to be done?

1. 여성과 정치의 부조화스러움
여성과 정치, 머나먼 간극

'여성'과 '정치'는 참으로 부조화스러운 말이다. 다른 어떤 사회변혁운동이 근대 정치체제와 잘맞아 떨어지겠냐마는, 여성운동은 근대 정치체제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질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권리를 '사회의 틀을 짜는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라 할때, 근대 역사 속에서 여성들에게 그러한 권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우선 여성에게는 근대적 시민권이 형식적으로나마도 주어지지 않았다. 근대적 시민권의 개념이 소유권에 기반한 정치적 참여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권리조차도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참정권이 1918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을 본다면, 여성이 최소한의 참정권을 얻는 데에도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는 '남편의 의사' '가장의 의사'에 종속되어서만 겨우 발현될 수 있었고, 사적 관계에서의 여남 권력관계를 생각할 때 여성들에게 정치적 의사의 형성 및 표현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형식적인 '참정권'이 보장된 후에도 여성들의 문제는 대개 '정치'의 관심영역에서조차 아예 벗어나 있었다. 근대 대의제 정치 체제는 물론이고 그에 대항한 대안적 정치공

간들 -노동자 정치, 민중봉기- 또한 공사영역 분할에 근거한 사회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적 관심과 권리는 공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때 여성들의 영역은 일터와 대비되는 '가정'으로 표상되는 '사적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1), 여성들의 의제는 정치와 상관없는 일, 사적인 일로만 치부되었다. 이에 정치적 의제로 채택되는 것 자체가 여성운동의 과제일 만큼 상황은 열악하다.

그러나 여성운동, 정치를 사고해야 한다!

'정치'란 것을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힘과 싸움의 구도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여성운동 역시나 정치의 한 귀퉁이 모습일수도 있다. 기존의 '정치'혹은 '정치학'이 여성들의 영역을 정치적 대상에서 제외시켜온것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영역을 새로운 정치적 공간으로 사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68 이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사적인' 영역을 '정치적' 공간으로 사고하고자 했던 것, 여성 주부들의 생활영역을 정치의 주요한 지원으로 위치지으며 '생활정치'를 사고한 것2)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그간 감추어진 여성들의 영역을 새로운 정치적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공간의 문제를 중심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근대 정치체제, '남성적인' 합리성만이 존재하는 그 체제의 '정치'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이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러한 정치로 인해 많은 부분 틀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적 합리성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재정의하고 확장시켜낼 필요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의 대항적 공공영역(counter-public sphere)을 제안하는 펠스키(R. Felski)는 안으로는 성별적 공간과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밖으로는 정치/이론활동을 통해 기존의 구조에 도전하는 정치문화적 전략들을 펼침으로써 공적 영역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펠스키와 맥락은 약간 달리하지만 캐롤 페이트만(C. Pateman)은 여성이 기존 정치체제에서 '시민권' '근대적 개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제와 이를 거부하고 여성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와 시민권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과제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울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3)라 칭하면서 새로운 여성적 시민권의 공적인 인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여성들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가는 문제설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협소한 의미에서의 기존 정치 공간을 통해 여성들의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한 문제설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성운동이 '정치'와 관계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이며, 여성운동이 기존의 정치에 개입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양식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1) 물론, 실제 현실은 가정에 유폐된 것은 일부 부르주아 중산층 가정의 여성들일 뿐이었으며, 사실 대다수 노동자 여성들은 집밖에 나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니 공적 영역에 분명 그녀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노동자 정치의 복합적인, 가부장적 전략 속에 '가족임금제'의 표상 속에 '가정에 있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공적 영역에서 기여하는 그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의 의회정치 뿐 아니라 노동자 정치에서조차도 그녀들은 가부장적 인식 및 현실적인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배제되었다. 지난 100년간 노동자 운동 양식 및 내용의 가부장성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2) 김종미, 「생활정치와 사회주부 :: 사회적 어머니 역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재고」,

3) 울스톤 크래프트는 여성이 'woman's task'를 수행할 경우에는 '어머니'로, 'woman's work'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으로 다르게 인정되어오며 그 간극 사이의 갈등을 겪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C. Pateman, 『The Disorder of Women』, 1980)

2 오염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오늘과 나아갈 방향 모색

현재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많이 오염되어 있다. 2000년 한창 활발했던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침묵기를 거쳐 2004년 오늘 또 진행되고 있다. 총선이 있는 4년을 주기로 그 해 여성계의 주요한 목표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이 때의 '정치'가 '의회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If, Herstory 등의 소위 '여성주의 저널'에서 선거 시기에만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며 여성국회의원 후보들 인터뷰에 초점을 두는 모습에서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여성운동과 정치가 맺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포괄적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여성의 정체세력화는 단지 의회에 여성국회의원을 보태는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 늘이기, 또는 여성운동가들의 국회진입이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길인지 탐탁치 않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세력화의 오염된 지형에 대해서 여성운동계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의 정계진출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여성연합과 관련 단체들은 이를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있고, 몇몇 뜻있는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제도화된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무관심하거나 이에 대해 또 중견 페미니스트들은 철없는 '영페미니스트'들의 말이라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어떤 제도화인지가 문제다!

'의회정치' 혹은 '제도화'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투항'하거나 혹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제도화'는 그 자체로도 여성운동의 자발적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기존 제도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조금씩 맞추다 보면 여성운동의 자체적 의제를 발굴하고 힘을 키워가는 데 투여할 역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호주의 강간 위기 센터4)나 미국의 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제도화를 통해 잠깐 확장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점점 여성운동의 독자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 사례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제도화가 기층 운동의 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제도정치를 우회할 수 없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외에는 호소할 곳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모를 덜어주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치, 자신 또한 처벌받을까봐 포주를 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생각할 때 한계적이나마 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 등은 매우 급박하게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직접 발의/의결할 국회의원과 법조계, 행정부의 관료 또한 필요하다.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해 '제도화'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반으로써 필요하다는 것 정도가 이 글을 관통하는 기본입장이 될 듯 하다.

4) 호주의 '강간위기센터'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는 급진적인 여성 운동 조직의 하나로 출발했으며 그 운동의 성과로써 70년대 경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호주가 시장경제와 경제적 합리주의를 도입하면서 시민/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었다. 캠페인, 연대활동 등의 정치적 활동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간위기 센터'의 경우 더 이상 독립적인 운동 단체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채, 국가의 성폭력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담당하는 하나의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경자, 「여성운동의 제도화, 그 후 20년: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Ida」 기사에서 재인용)

5) 1970년대 경 미국의 여성운동은 제도권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으로 양분되었으며 이후 자율적 여성운동과 이를 지탱하던 풀뿌리 여성운동 단체들은 쇠퇴하고 여성 로비와 법제도에 기대는 제도화된 여성운동이 미국 여성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재편과정에서 법제정과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점차 대중 행동주의와 단절되었고 정치제도권 내의 사람들은 상당히 감소된 기대와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J.Brenner,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 US Feminism Today」, 『New Left Review』 no.200.)

3. 의회에서의 젠더 주류화 정책 평가와 비판

최근 여성계의 관련행보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6))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의 흐름은 이러한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그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 전용 선거구제' 문제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의원 공천 리스트 작성'을 들 수 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는 총선여성연대가 국회 정개특위에 안을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기세를 통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 제도는 몇 개의 지역구를 묶어 일종의 광역구처럼 지정하고 여기에 여성후보들만을 출마하게 하여 따로 투표, 선출한다는 제도이다. 그러면 최소한 여성의원 몇 명은 확보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의 입장이었다. 당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이것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확대하려는 '꼼수'라 비판하고 비례대표에서의 여성 공천 50%할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했다.7) 이에 총선여성연대 및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여성의 국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적극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역시나 야합에 의한 '립서비스 차원'8)이었던 만큼 이 정책은 흐지부지 없어지고 결국 50%의 공천할당이나마 존재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진출통로가 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뒤늦게 선거법 개정에 대해 비판성명을 낸 두 단체의 모습은 무력함 자체였으며 믿을 것은 의회 정치의 야합이 아니라 여성기층의 힘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족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 여성예비후보 103인을 선출하여 발표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 그 명단을 전달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이들 후보자를 적극 공천할 움직임은 없으며, 의명을 요구한 한 정당 간부는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가 "전혀 약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9)그러나 아무런 대중적 기반 없이 진행된 리스트 선출 및 공천 권유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6)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범 여성단체가 힘을 결집하여 정치개혁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7대 총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전국 321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 채택,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채택,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공천위원회 여성 30% 참여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7) 첫째, 정치권은 여성전용선거구제도입 논란으로 정치적 쟁점을 이동시킴으로써 현역의원 기득권지키기 차원의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지역구 당선의원숫자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각 정당이 정당지지도에 비해 많은 수의 비례대표를 할당받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경우 의석수가 줄게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가급적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를 가능한 줄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논의는 여성정치인 진출을 위한 제도개혁이라는 순수한 취지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한다」)

8)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와의 면담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는 각 당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바 있다.

9) 한겨레 2004. 01. 15

젠더주류화와 과소대표성 해소

비록 지금은 흐지부지되어 있지만, 두 가지 제도는 일단 의회에서의 '젠더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젠더 주류화 전략이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으로 인해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집단에 그러한 성을 진출시킴으로써 그 영역을 특정 성 또한 진출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어내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정 성의 '존재' 자체가 집단 내/외부적으로 가져오는 변화를 믿는 것이다. 가령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대학에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하나둘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대학은 과거보다 여학생들에게 점차 익숙한 영역이 되어온 것처럼 말이다. 여성들의 의회 진출을 통해, 지금은 다수 남성들의 세계이자 그 속에 몇몇의 여성들이 명예남성화 전략을 통해 살아남던 그 세계가 어떤 점에서 남성편향적인지 알리고 여성들 또한 진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단지 젠더주류화 전략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성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곳에 진출한다는 것은 단지 금지된 영역에 개별 여성이 진출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의회 진출은, 이때까지 묵살되어왔던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의제를 발언하고 실현해갈 수 있는 '과소 대표성'의 해소 문제로 위치지어져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여성의 의제를 혹은 의제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성의 정치세력화라고 아찌 부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겪어왔을 집단적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갖는 힘과 믿음을 저버리자는 않되, 그 믿음이 현실화되어 최소한의 '여성 의제'를 말하고 바꿔내는 방향으로 의회에서의 젠더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 여성 국회의원 확충 문제가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의 한 전략으로써 유의미할 수 있다.

젠더주류화를 정치세력화로 착각했던 여성전용선거구제/여성의원 공천리스트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과 여성의원 공천리스트는 모두 '과소대표성 해소'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 외의 전망은 갖지 못했다. 여성지역구의 경우, 제도 자체로도 아무런 기준 없이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 증가만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체계화된 전략 없이 '적극적 조치'이니 환영한다는 여성계의 단순한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시행되었다 해도 내포된 효과는 더욱 해악적이다.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의 활동을 펼치던 여성들을 '여성 지역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몰아넣고 여성들끼리의 싸움을 하게 만들수도 있었으며10) 또한 '광역구'가 되는 순간 돈이 많이 들고 이름값으로 선거를 하게 되므로 단지 명망가 엘리트 여성들의 진출통로가 되기 더욱 쉽다.11) 그런 틈바구니에서 여성의 의제를 국회에 반영하는 '정치세력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역시 결성 목표는 '여성 의제의 주류화'였으나12) 실제 리스트 작성 기준 및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75인의 총선여성연대 참여단체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이나 준비위원들등 '뺀한 사람들'이 103인을 추천하였기에, 전혀 여성 대중의 뜻을 모아 작성된 리스트가 아니었다. 또한 추천의 기준조차 제

대로 확립되어있지 않았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도덕성과 신망성', '사회발전과 공익성', '전문성', '민주적 리더십', '양성평등의식 및 시민의식'을 후보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도덕성'은 기준이 모호하며,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라면 의회 진출 예비 후보에게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여성의 의제를 제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제시한 '양성평등의식'부분은 국회의원 부인모임 총무, 청소년지도자연합회 부인회장, 어머니회 이사, 여성회관 관장, 전문직여성클럽 임원직, 국제 여성봉사단체 감사 등등의 경력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현실태는 여성국회의원 진출 문제를 정치세력화의 맥락속에 제대로 위치짓지 못하는데에서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그 결성 목적문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분명한' 국회의원이 '여성의제'를 주류화 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그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참신하고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있으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정치개혁을 진전시켜 맑은 정치의 새판을'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의 맥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성이 하면 깨끗하고 잘된다는 여성에 대한 도덕적 신화화에 기대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의회에서의 젠더 주류화 정책이 곧 정치세력화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는 정치를 의회 정치 속에 가두어 협소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여성의 삶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 사고 없이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신화화가 맞물린 결과라 볼 수 있다.

10) 실제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의 경우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성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이 여성 의원을 발굴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들까지도 여성선거구제로 몰아넣고 여성의원의 범위를 '여성지역구' 선에 한정지으려는 당내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일부 여성단체들은 비례대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26명 여성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성정치 세력화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것은 몇몇 기득권층 여성들의 출세의 장이 아니라, 여성 중에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또 여성차별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과 성차별 등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여성노동자, 농어촌, 노점상 등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돈과 조직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선거구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광역단위 선거구는 필경 일부 돈 많은 특권층이나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된 수구, 보수 여성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반여성적' 여성 정치참여 더 이상 안된다」)

12) 홈페이지의 소개문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려면 성인지적 관점이 분명한 여성들이 17대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그러한 역할을 지지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담당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4. 정치세력화 전략으로써의 의회 진출,

그렇다면 기층과 유권자의 힘을 믿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다!

의회에서 젠더 주류화 전략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기능하기위해서는 여성 대중 및 유권자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소대표성 해소'라는 한계 내에서의 모범적인 사례로 에밀리 리스트를 들 수 있다.

에밀리 리스트는 유권자 운동과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의회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고 유권자들을 결집시킨 사례로 꼽힌다. 미국, 호주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성 유권자 운동 '에밀리 리스트'는 국회에 보낼 여성이 누구여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지원과 지지를 모아서, 낙태 합법화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여성 후보들에게 직접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재정적 지원은 수만 명의 여성 유권자들을 후원자로 조직하여 이루어진다. 소위 '여성의 해'라고 불리던 1992년에 에밀리 리스트는 4명의 새로운 pro-choice(낙태권리 인정) 민주당 상원 의원과 20명의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일조했다. 에밀리 리스트는 의회 진출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큰 재정적인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밀리 리스트가 지원한 여성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유색 인종 여성이다.

에밀리 리스트 여성 정치 참여 운동은 정치적 이념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 후보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민주당 후보일 것, 둘째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3) 등등. 미국의 경우 여성운동의 핵심 사안인 낙태 합법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후 의정활동이나 행정을 해 나갈 여성을 지지하는 것이 에밀리 리스트의 방향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는 에밀리 리스트를 참고하여 여성후보 공천 리스트를 고안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코 유권자?기층의 힘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방향성과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13)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다른 미국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당정계와 분리된 독립적 여성운동이 그간 230년간의 로비정치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공화당/민주당을 중심으로 낙태반대, 동성애 반대 등의 쟁점이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가장 큰 여성운동단체인 NOW는 민주당의 좌익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정치적 힘을 갖기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전략 평가 및 모색

의회 진출에 초점을 맞춘 정치세력화 전략을 뒷받침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몇 년간의 여성계14)의 제도화 전략과 맞닿아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부 신설과정 및 운영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체제 내화되었으며 사실상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연합이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여성운동 단체의 대표의 정계진출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양가적이다. 여성운동의 중심이어야 할 대표단체가 특정 정당, 혹은 정부기관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한계지점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되지만, 간혹 그나마 중앙기관과의 통로가 마련되어있어 없는 것보다는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계가 처한 협소한 지반으로 인해 내부에서 차마 비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이 때문에 몇 년째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냉정하게 여성연합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전략을 바라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은 후, '제도화'가 어떤 맥락에서 필요하며 어떻게 '힘을 빼앗기지 않고'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4) 여성운동의 범위는 물론 여성연합으로 한정되지 않는 기층 여성운동단체까지 포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도화'를 논의하는 만큼 그와 연관이 깊은 '여성연합'을 둘러싼 일련의 여성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지난 6년간의 동거 평가

여성계에서는 최근 몇 년을 여성계 최고의 해로 평가한다. 50년간 염원해왔던 호주제 폐지가 힛이슈로 떠올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최초로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장관이 탄생하고 등등. 그러나 여성운동 전반적 입장에서 볼 때, 한계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해졌다고 불만이 많다. 이에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일정한 국가기관 혹은 정당의 여성운동 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란 부분조차 아니란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단지 명망있는 여성운동 단체장들-여성연합의 대표, 여성신문의 대표 등등- 한두명이 계속 정계에 유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여성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과 꼭 같다. 몇 안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계로 유입된 것은 4공화국 때부터 정권의 미약한 정당성을 메우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였다. 여성 국회의원 지리에 여성교수, 단체활동가들이 들어가는 여성엘리트의 충원 통로는 이런 식으로 마련돼 왔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통로로 저명한 여성 운동계 인사들이 정계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앞세운 '제도화'라기 보다는 제도권 정치에 '흡수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몇몇 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단체 상근자들과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정계진출을 결정함으로써 단체 운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혀15) 정계진출이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여성운동을 밟고 정계에 진출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15) 여성계 인사의 정치입문이 파문을 일으킨 것은 이오경숙 대표가 처음은 아니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계경 여성신문사 대표이사가 한나라당 대선기획단 기획위원에 임명되자 파문이 일었다. 조이여울씨 등 여성신문사 기자 5명이 비판성명을 낸 후 여성신문을 떠났고, 여성인권변호사 최은순, 정연순씨가 여성신문사로부터 받은 상을 반납했다. 여성운동 원로인 이이효재 선생의 이계경씨 '고무, 찬양'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겨레 2003.12.08. 여성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이여울-고은광순의 테마대담 중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과 기층 여성들은 더욱 고통 받고 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관심이 '탄핵'에 쏠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틈을 타서 정부는 그동안 '골치아팠던' 민중들의 문제들까지 완전히 억누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16)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힘이 되어야 할 여성계가 이렇게 여성 민중을 힘들게 하는 이 국면이 도래한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 국면의 책임이 수구의 반격과 그것을 막아낼 대안과 힘이 없기에 쇼정치로 일관한 허구적 '개혁' 이미지의 열린우리당에 있다고 볼때 안타깝게도 여성연합은 그간 그 허구적 '개혁' 이미지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87년 민주화 열망을 보수적으로 '재민주화'한 채 단지 정치적 이미지는 개혁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실제로 아무런 민중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도 없었던 열린우리당은 정쟁을 거듭하다가 대통령 탄핵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개혁이미지'를 앞세운 쇼정치에 민중들의, 여성들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러한 '개혁 이미지'창출의 몇 가지 중심이었던 '여성'이란 화두에 고스란히 이용당한 여성연합의 행보는 비판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기층 여성들과 함께 하며 한국 여성운동 단체들의 모임으로써 여성운동의 장기적 전망을 고민해야할 단체가 기존 정당 손들어주기에 급급하고 탄핵정국으로 인해 기층 여성들의 요구는 이제 들리지도 않게 된 피해를 초래한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핵반대'의 맥락으로써 '정치개혁 완성'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여성계는 이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진정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똑바로 봐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구호 속에 여성운동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16) 대통령 탄핵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동안,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해 국내 노동단체와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 제도화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는 몇 안되는 그룹들은 그 대안을 정당으로부터의 여성운동 자율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취지에 100% 동감하면서도 또한 그와 동시에 '제도화'란 영역을 여성운동에서 정확하게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미리 제시했듯 '제도화'가 갖는 일반적 효과 때문이다. 제도화가 여성해방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반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화'라는 부분은 그 필요성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유효성 등을 아울러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의 자율성-초당적??

최근 여연의 행보를 비판하며 특정당에 기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판의 근거는 '당과 함께해서'가 아니라 '열린 우리당'이 여성의 해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당적인 자율성은 이제껏 여성운동이 불가피하게 노정해왔던 길이기에 굳이 그 길을 대안인양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대 대의정치체계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여성운동은 한국에서 놀랍게도 제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져왔다. 여성계에서의 주요의제들은 주로 '법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성과여부 또한 법개정 달성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었다. 그 과정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초당적' 문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문제가 초당적으로 동의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국회에서 여성운동의 문제가 '의제화'되어 찬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에서는 그나마의 당별/국회의원별 의견차이가 존재함에 비해 그와 상관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인터뷰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상황은 여성의 의제가 국회에서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부차적으로, '사회 복지'의 한 귀퉁이로 다루어져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의제가 되어야 할 여성의 의제가 '모자복지법'과 같은 이름으로 예산 얼마를 할당해주면 되는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며, 여성운동 단체들은 법 몇 개를 통과시키기 위해 이러한 차원의 관심이나마 '감사하며' 어떻게든 영합하는데 급급한 열악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의제를 기층의 요구를 담아 생산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몇몇 여성의원의 국회 진출, 여성 대중운동 등등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총체적 과정이다.

제도화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기층여성의 요구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여성운동 제도화의 방향은 제도화되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생산하고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최근 몇몇 단체장의 정계진출로 정치세력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 여연은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써 다른 소규모 여성단체들을 지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인 의제의 제도화를 위한 정교화 작업을 통해 보다 넓은 맥

락의 여성의 정치세력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분명 제도화는 소규모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물적/인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사회 지도층 및 교수 등등의 전문 인력과 손을 닿고 있는 여성연합과 같은 중견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층의 현실적인 급박한 문제제기가 '제도화'되어 현실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제도화의 애초 목적이 현실적인 여성들의 구제에 있었음(성매매특별법/성폭력특별법)을 생각할 때, 그 의제는 기층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도화'라는 기층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과 '기층의 현실적 요구'라는 구체적 부분을 긴 끈으로 이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그 과정은 제도화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주류 여성운동단체와 보다 기층과 호흡할 수 있는 제도 바깥의 소규모 여성단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담보되어서야 가능한 일이다. 기층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성연합은 여성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조그만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성매매 방지법이 풍부한 담론화 과정 속에 위치지어짐으로써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내고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계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정된데 반해서, 일부 정부 야합으로 통해 이뤄진 모성보호법은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옭죄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경험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기층 여성들, 현실적으로는 기층여성들과 맞닿아있는 소규모 제도권 밖 여성운동과의 밀접한 관계가 담보되지 않는 한 '제도화'란 특정 계층 여성들의 이익에 치중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점차 여성 로비 방법에 치중한 법제정/국가정책 결정을 진행해온 제도내 여성운동은 점차 대중 행동주의 및 풀뿌리 여성운동과 단절되고 제도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결국엔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게 되었던 현실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7. 글을 맺으며

총선이 다가오며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간간히 이야기되는 이슈이다. 그러나 일각은 의회에서의 여성 정치인을 증가시키는 문제에만 매진하고, 또 일각은 이에는 고떡도 않고 하던 활동만 계속하며 주류 정치를 비판하고, 또 일각은 특정 당이 여성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수많은 말 속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통해 만들어가야하는 것인지의 기본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며 여성들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Imagine

기획취지

90년대 학내 여성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던 '반성폭력'.

이젠 익숙한 단어.

이젠 그 말만 나와도 다들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마디씩은 할줄 아는데... 어째 오늘의 우리들의 대학은 뭔가 수.상.쩍.다.

수상쩍은 현재 관악의 지형을, 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받아안으며,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짚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큰 틀을 모색해본다.(「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어제와 오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은 크게 1)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사과자보'를 통한 해결과 이를 둘러싼 담론 변화, 그리고 2)반성폭력 학칙 제정/학생회칙 제정운동을 통한 반성폭력 대중운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통해 확산되었다. 특히 실명공개사과자보는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해결 및 피해자의 치유 차원의 운동'과 '공간을 반성폭력적으로 변화시켜내는 차원의 운동'이 영킴으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그 둘은 분명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각각을 위해 약간의 다른 방식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먼저 그 둘 사이를 관통하는, 성폭력의 핵심적인 개념규정이 되어왔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의미로 풀어가야할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근대적 소유적 자유주의 개념에 갇힘으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를 넘어서」), 그리고 보다 폭넓은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논의한다.(「반성폭력 운동, 시민권 운동으로」) 또한 동의지반을 잃어가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내용을 다시 고민하고(「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체성 재구성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 논의해본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성폭력 없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원리와 내용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갈지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반성폭력 운동, 또다른 과제」)

성폭력은 여성운동 중에서도 가장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중 하나이다. 우리의 글 또한 딱부러진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야기되지 못했던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첫 껍질깨기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독자들 역시나 함께 문제제기를 다듬고 그 공백을 발견하고 메꾸어가는 마음으로 글을 만났으면 한다.

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어제와 오늘

90년대 초, '신 교수 성희롱 사건'1)을 필두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90년대 중후반 활발히 전개된 학내 반성폭력 대중운동으로 인해 대학은 분명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명확히 알 수 없는 갑갑함만이 존재하는 오늘날 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지형을 90년대 중후반 이후 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기반하여, 과연 성폭력 없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기존 반성폭력 운동의 논점과 공백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약대 신◇◇교수가 대학원 여학생 조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해오다가 조교가 이를 거부하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건. 이 사건은 학내 외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싸워서 결국 우리나라 법원에 최초의 '성희롱'개념을 도입하게 하였다.

1. 90년대 중반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성과

반성폭력 담론, 대학에 첫발을 들여놓다

90년대 초반부터 사회의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이란 화두로 각종 입법 및 대중운동을 펼쳐가고 있었던 데 반해서 대학 공간은 오히려 사회보다 더 늦게 '성폭력'이란 화두와 만나게 되었다. 아마도 당시 대학은 민중 지향적 민주화운동의 산실로써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부도덕한 치부'로만 생각되었던 '성폭력'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 교수 사건을 계기로, '평화로운 듯한' 대학에서 사실은 은밀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바꾸어가려는 적극적인 흐름이 학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신 교수 사건이 학생-교수간 성폭력 사건이었다면,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은 학생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또한 드러내고 공동체를 반성폭력적으로 바꾸어 가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는 항상 반민주, 독재세력을 향해 전선을 외부에 쳤던 것과 달리, (함께 싸웠던 '동지들'인) 대학 내 공동체 내에 전선을 설치하게 되면서 큰 충격과 반향,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큰 흐름은 1) 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사과자보'를 통한 해결과 이를 둘러싼 담론 변화 2) 반성폭력 학칙 제정 및 학생회칙 제정운동을 통한 반성폭력 대중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실명공개사과자보'를 통한 사건 해결과 담론 변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첫걸음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에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서, 그 동안은 술자리 비화로만 존재하던,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도 '잊고 싶은' '어쩌면 내 탓이었던' 일을 처음으로 '가해자가 가한 폭력' '성폭력 사건'으로 의미화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마주대하고 이겨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자아에 남아있는 고통과 분노를 공개적인 '언어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것을 '피해' 및 '사실'로써 드러내고 피해로 '인정'받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황정미씨는 대학 내 실명공개사과자보를 성폭력 운동의 출발로 평가하면서 일종의 '인정투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2)

또한 실명공개사과자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공개된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은 사건공개 전략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이다. 이는 침묵하고 있던 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 사건이 무력하게 당하고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사과자보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을 단지 '외부'의 권력자가 저지르는 도덕적으로 나쁜 문제로만 받아들이던 학내 공동체들은 이제 공동체 속 일상에 녹아있는 성폭력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 성폭력이 문제이며 자신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폭력적인지, 가해자의 포지션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얘기하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 피해자에게 친화력을 갖는 공간을 갖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 실명대자보에 대한 여학생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위치(position)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인정투쟁이다.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떼다가 입증할 수 없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부인하면 그 피해사실 또한 없어져버린다. (…) 자신의 체험과 분노와 피해가 그대로 무화(無化)되는 엄청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가해자를 공개함으로써 그 실재를 공중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실명 대자보는 바로 그 수단인 것이다. (황정미, 「성폭력의 정치에서 젠더 정치로」,)

2) 이김보명, 「반성폭력 운동에서 실명공개의 의미」, 『2001년 여성연대 한판』

성폭력 없는 대학을 위해 - 반성폭력 학칙제정/ 자치규약 제정운동

성폭력 실명공개사과자보가 가져온 학내의 충격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반성폭력 학칙/자치규약 제정 운동이 전 관악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성폭력의 실명공개사과자보로 표상되는 '자치적 해결'3)이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면서 여성운동가들은 '학칙'을 통해 개별 성폭력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가 단지 학생공동체 구성원들 뿐 아니라 학교 본부 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 또한 갖고 있었다. 활발히 이루어지던 학칙제정 논의는 98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어떤 선본이 당선되든 학칙 제정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마침내 99년 3월 서울대 반성폭력 학칙 제정 실천단 '바로 지금'을 통해 대중적인 학칙 제정운동을 펼쳐내었다.3)

이와 동시에 학내 공동체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방 및 해결 노력을 위해서 각 단대에서는 반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운동이 병행되었다. 이에 98년 인문대와 사회대에서 반성폭력 학생회칙이 제정되었고 공대역시 학생회칙이 제정되었다3). 학칙이 보다 제도적이고 본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이었다면, 학생회칙의 경우 학생 공동체 내의 책임을 인식하며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자치규약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오히려 자치규약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었다.

4) 학교 본부, 교수 등이 관여하지 않고 주로 가해자 대리인, 피해자 대리인, 여성모임 인자, 단위 관계자 등의 학생 공동체 내의 인자들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치적으로 구성했던 방식을 말한다. 비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및 사과,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가해자의 재교육 등의 이후 대책을 논의했고 '실명공개사과자보'를 그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5) 97년부터 시작된 학칙제정 운동은 2000년 6월 30일에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식으로 통과되고 그해 11월 관련 시행세칙이 제정되고 이어서 12월에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가 개소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6) 인문대의 경우 99년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학생회칙을 실질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자연대의 경우 2002년 학생회칙 제정이 아쉽게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아직도 다른 단대의 경우 반성폭력 학생회칙은 제정되지 않았다.

2. 01년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 양상과 문제점

무너진 합의, 무너진 전선

그러나 언뜻 학우 대중들 사이에 '동의되는 듯' 보였던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들은 2001년 ○○씨의 사건을 필두로 한 몇 개의 역풍(backlash)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렸다. 2001년 가을, 예전에 자신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실명공개사과를 했던 ○○씨는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자보를 냈으며 동시에 피해자를 고소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절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급기야 '성폭력 조작?'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이 시기 이후 대중들에게는 성폭력 '조작'이란 단어가 기억되었다. 비슷한 시기 공개되었던 다른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고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폭력으로 인해 한번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일은 당시 학내 뿐 아니라 전 KBS노조부위원장 사건, 경북 경산 K대 교수 사건 등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난 가해자들의 '역풍'이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이를 '역고소'라 흔히 칭한다. 이는 전반적인 반성폭력 운동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관련 대항논리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마련하기까지 했었다.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학내 성폭력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성폭력 관단에 있어서 보수적인 법원에서마저도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애초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접근방향은 '공정한 법적 처벌'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바꾸어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3]. 따라서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을 열어가야 할 시기에, 이러한 믿음을 배반한 이데올로기적/법적 역풍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여성운동 진영은 너무 많은 힘을 써야만 했다.[3]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후 반성폭력 운동은 대중 단위에서의 영향력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축소/퇴보하게 되었다.

7) 성폭력 사건이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일상화되고 정상화되어 문제제기조차 되지 못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오래된 구조화된 폭력임을 말하고 공동체 내에서 함께 풀어가려 했다.

3) 가해자 측이 가해자의 부모, 친인척 등의 지원 속에 법적 소송을 들고 나왔다면, 집에 알리지도 못한 채 몇몇 여성활동가들의 힘으로 갑작스런 소송에 대응해야 했던 피해자 측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운동 활동가들은 힘에 부쳤으며, 더구나 이후 비공개로 해결된 성폭력 사건의 해결 역시 그들의 몫이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은 그 특성상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여성운동 활동가의 역량투여는 고스란히 대중적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갈 현실적 역량 부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시, 평화로운 학교

01년 이후 다시 관악은 평화롭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출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거의 유일한 해결방법이었던, '가해자 실명공개사과자보'-이에 덧붙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 공간분리 및 가해자의 재교육 이수가 주로 병행되었던-의 방법이 01년 이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비공개적 형태'로 겨우겨우 해결되고 있다. 이때 '비공개적 형태'란, 기존의 실명공개사과방식에서 사건의 사과문 '공개'를 제외한, 가해자의 개인적 사과와 공간분리, 재교육 이수 등의 최소한의 가능한 부분들을 피해자, 가해자, 신고를 받은 여성모임 주체(혹은 각 단위의 여성주의 인자), 경우에 따라 각각의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비공개적인 비대위를 꾸려서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사건 공개의 의미 중 하나는, 가해자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공간분리'에 대한 긴장감을 일깨움으로써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하고 피해자의 생활권을 보호하는데 있었다.[4] 그러나 사건이 공개되지 않자, 사람들은 묘하게도 그 사건을 알고 있어도 '별 것 아닌 일' '미미한 일'로 인식하게 되었고 공간분리 및 피해자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4]. 그래서 사건 해결조치 이후에도 가해자는 생활 속의 긴장감 없이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고 주변사람들 역시 이에 무감각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고 공간을 떠나고 있다.

또한, 실명 공개 방식에서도 큰 공백이었던, 계속 메워가야 할 부분이었던 피해자의 '주체성 재구성 과정'에 대한 고민은, 가해자의 '역풍/역고소'에 끌려 다니며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처음 사건을 공개하던 몇 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진척이 없는 채, 몇 년간 같은 담론이 축소재생산 되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의 '사건 공개'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시작이자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고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은 삭제된 채 마치 '성폭력하면 '공개'하는 것이 '불멸의 원칙'인 듯 여기는 편향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의 주체성 재구성 과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몇 가지 '화석화된' 성폭력 해결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피해자 개인이 혼자 부담을 감당하며 치이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건 해결과정은 어떠해야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한 현실이다.

9) 시타, 「나는 저놈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가해자 실명공개의 의미와 효과」, 『2001 여성연대 한판』

10) 여기에서 또한 기존의 실명공개사과자보가 주는 '충격'이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본다. 당시 학내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반대는 실상 '공개된 나쁜 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이, 공개되지 않자 '그냥 그런 일'로 치부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

학칙 개정, 큰 틀에서 바라보자!

지금 현재에도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학우 대중들은 그 사건이 '공개'되지 않는단 이유로 전혀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떤 깔끔한(!) 해결책도 없는 채로, 피해 당사자 및 일부 해결주체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최근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성폭력 학칙 개정'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학칙 제정운동의 문제의식이었던 개별 사건 해결의 전문화/제도화 및 성폭력에 대한 본부의 책임을 지우는 맥락과 일치한다. 또한 기존에 개별사건의 자치적 해결과 반성폭력 대중운동의 차원이 뒤섞이며 '피해자 지원'이란 부분은 의도치 않게도 뒷전으로 미뤄졌던 점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폭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또한 그 속에서 피해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존재하는 지금, 반성폭력 운동이 봉착한 위기는 '학칙 개정'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의 문제로써 사고하려했던 기존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과 성격이 다른 '학칙'의 성격에서 오는 문제, 피해자 지원이 과연 무엇인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학칙을 통해 대학 본부로 하여금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과 사건 해결에 책임을 지게끔 한 것은 여성운동 단위가 보다 적극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기 위함이었음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칙개정의 내용과 방향성은 전반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전망 속에서 학칙개정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어떤 한계를 내정하고 있는지 맥락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3. 2004년 봄, 관악 반성폭력 대중운동의 지형

반성폭력 아이템의 관성화- 실내용 부실의 효과 드러나다!

01년 역풍/역고소 이후 개별 성폭력 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내 반성폭력 대중운동의 지형 또한 많이 열악해졌다. 물론, 비슷한 시기, 반성폭력 운동 뿐 아니라 과반 중심의 학생회 운동 역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양상도 단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반성폭력 지형 역시 단대별로 많이 다르고 하나의 흐름으로 짚어내기에 난감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치규약 제정이나 반성폭력 교양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반성폭력 운동이 '잘된다'고 하는 단위에서조차도 반성폭력 담론의 '관성화' '구태의연함'은 위기신호이다. 이는 활동가 개개인이 성폭력을 대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98년 담론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성폭력 담론의 내재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몇몇 개념어의 표면적 사용 외에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을 어떻게 잡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방어적'인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혹은 역설적이게도(?) 학우들은 그런 성폭력 이야기를 이제 '지겹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01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대대적인 역풍/역고소에 대중 단위들이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것도, 이후 사건이 공개되지 않자 '평화로운 듯' 반성폭력을 또 남의 일보듯 하고 있는 것도, 기존 반성폭력 대중 운동의 동력이 '사건 공개'라는 충격요법이었고, 그 동력을 통해 반성폭력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가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표시일 것이다.

보수적 도덕주의와의 결부

반성폭력 담론의 실질적 내용 부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반성폭력 문제의식의 '힘'과 '영향력'이란 조건과 맞물리면서 기이하게도 매우 '보수적인' 주체들을 탄생시키고 있다.[4]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걸 하면 나쁜 거라고 하니 단지 눈치로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언제든 그런 언행이 허용되는 '성폭력적' 공간으로 편입되면 다시 그 '성폭력적 분위기'를 향유하는…. 학우들은 성폭력을 점점 더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들의 인식은 성적 보수주의의 맥락과 이어지게 된다.

교수 성폭력 문제를 대하는 학우들의 태도에서도 또다시 적을 학생사회 바깥의 권력자에게 돌리고 교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품' '도덕'을 문제 삼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예전 부천 성고문 사건이나 공권력에 의한 연대 성폭력 사건을 두고 벌어졌던 논쟁지형과 매우 유사하다. 공통의 적이 '성폭력'과 결부되었을 때 왜 '성적 폭력'의문제인지는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성폭력을 선악의 기준에 세운다. 이때 '선악의 기준은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점잖지 못한 일, 도덕의 문제로 사고하는 보수적인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다.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을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 및 폭력 행위라기보다는 여성의 '정조' 혹은 '보호해야할' 순결한 여성의 그 무엇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는 일견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듯 보이겠지만, 결국 여성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율적인 성적 결정권을 추구하는 반성폭력 운동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편향이다.

4) 물론 이러한 기이한 주체 탄생의 책임은 문제의 변화보다도 자신의 '나쁜 놈 되지 않기'만을 신경 쓰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폭력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반성폭력 담론의 부족함 또한 지적되고 메워져야 한다.

반성폭력 담론의 틀을 다시 짜자 : 관계맺음 양식의 변화로

보수적 도덕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근거로 성폭력에 반대하든 간에) '처벌'할 수는 있지만, 결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너무나 일상과 혼재되어 있으며 때로는 '정상화'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느끼는데도 주변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설사 명확히 인식된다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벌'만으로는 결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성폭력이 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한 공간의 분위기에 맞춰,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특정 언행만을 조심한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공간과 그 공간의 사람들 사이 관계맺음의 양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너무나 일상화되고 정상화되어 '우리의 우애로운 관계'와 명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며 어떻게 대안적인 관계 양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앞서 계속 지적해왔던 반성폭력 담론의 빈약함이 다층적으로 풍부해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새로운 질문을 예비하며

01년 이후 학내 반성폭력 지형의 침담함은, 새로운 전선을 어떻게 세울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지 보다 풍부한 고민 속에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진다. 어쩌면, 그동안 합의되었던 공동체 내에서의 원칙이 '무너졌다기 보다는, '합의된 듯'보였던 원칙이 그렇지 않았음이 이러한 역풍(backlash)을 계기로 처절하게 '드러났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반성폭력 운동의 엄청난 폭발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더 이상 외부의 독재 세력, 공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반대와 같이 단일하지 않았고 쉽게 합의 될 만큼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운동에 대해 '역풍'이 불고 그로 인해 운동이 타격을 입고 한동안 '침체'를 겪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려는 운동 외부적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원인에 타격을 받아 위기를 직접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운동 내부적 동력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공백'-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 외부적 타격과 어우러져 드러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운동이 한걸음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내재하는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며 외부적 조건들을 바꿔가는 데 있는 것 일 테다. 현재 우리가 있는 반성폭력 운동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한다. 98년에 제기되었던 반성폭력 담론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제, 어렵고 조심스러운 작업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특히 반성폭력이란 화두는, 여성운동 중에서도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기에 논쟁적인 글 몇 개로 그 범주를 쉽게 재단하게 되지는 않을까 경계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러한 이유로, 또한 아주 기본적 성폭력 개념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외부적 공격에 대응하기도 힘들었기에, 성폭력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와 논쟁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그 공백은 문제제기, '질문'조차도 안 되고 있는 오늘을 보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를 넘어서

1. 들어가며

최근 제정되고 있는 성폭력 학칙들은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율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전의 '정조에 관한 죄'라는 가부장적 인식 아래 규정되었던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 재규정한 것은 이전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편과 아버지라는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의 몸을, 여성의 순결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온전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의 여성은 성폭력과 관련한 담론에서 부재한 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는 '지켜져야 할 순결'이 다른 남성에 의해 빼앗겼다는 인식만이 팽배한 것이다. 이는 남성들 사이에서 '소유물로서 여성'이 사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동체에서 여성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기 보다는 남성들의 교환체계 내에서 존재함을 뜻한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 하에서는 순결을 빼앗긴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성폭력의 본질은 은폐되어 버린다. 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뿌리에서부터 다시 사고해보게 하는 급진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는 단순히 글자 몇 개를 끼워 맞추어 문구하나를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다. 가부장적 사회적 구조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저항함으로써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작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의 폭발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점차 수그러들면서 학내 반성폭력 담론은 몇몇 개별 사건에 대한 반짝 논의로 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2) 아직까지도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성폭력 담론 그 자체가 '예전의 논의'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의 중심 개념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초기의 적극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 서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오염된 형태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언명만이 존재할 뿐,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냐에 따라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식됨에 따라 어떤 문제를 낳는지 살펴보고, 성적 차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함을 얘기하려 한다.

2. 자유주의 틀 속에서 오염된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자유주의 해석틀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초기의 급진성이 탈각되고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재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C. B.맥퍼슨은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17세기 정치철학을 '소유적 개인주의'라 명명하는데, 이는 개인이 스스로 '시민주체'로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치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 개인들 스스로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물적 재산을 소유하듯이 자신의 능력과 육체를 소유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각 개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3)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경계가 엄격히 그어져 있기에 개인이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는 사고되지 못하고 원자적 ? 추상적 개인으로만 상정될 뿐이다. 또한 프랑스 혁명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여성들은 '수동적 시민'으로 분류되어 공동체 내에서 배제된 것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도 결국은 남성들만이 누리는 시민적 영역에서 관철되는 이상인 것이다. 이렇듯 개인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정치의 출발점이며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1) 개인 vs 개인 : 여성도 성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인가?

근대적 '개인'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온 역사처럼, 현재의 여성의 위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내 반성폭력 운동 담론에서 보여 지듯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온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성적 자율성을 지닌, 성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사고되지 못했음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하지만,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이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주의 해석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학내 성폭력 논쟁을 보면 대다수의 학우들에게 성폭력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사고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고 은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개인'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성적 자율성을 여성 개개인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절대 그렇지 못하다. 여성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왜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과 어떻게 하면 여성들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 그저 '여성들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로 사고되고, 여성 또한 성적 자율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여성'의 문제를 사고하지 못하는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논쟁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도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 사회적 맥락을 둘러싼 다양한 지점들이 사고되지 못한 채 성폭력의 문제가 그 둘만의 문제로 치부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관계맺음에 대한 전반적이 고민이 생겨나지 못하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라는 편가르기 식의 말초적인 감정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이 성적인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위치지우고, 여성을 사고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항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사건'이라는 측면과 함께, 성폭력의 발생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사고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말 '동의' 했을까?

위와 같이 성폭력 논쟁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여성과 공동체 내부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은 탈각된 채 '결국, 성폭력이냐? 아니냐?' 라는 이분법적 결론 구도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는 다시, '동의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한다. 즉, 성적 자율성을 지닌 (여성)개인이 동의를 했으면 성폭력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전의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동의여부' 자체가 아예 무시되고 신체적 외상이 있는지와 같은 조야한 수준에서 성폭력 유무를 판단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동의여부'는 No 라고 확실하게 밝히는 경우나 강하게 저항했을 때에만 그 확실성이 보증되고, 결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상황적 맥락이나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 관계 측면은 사고되지 못한다.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결코 여성의 '강요된 동의'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no가 yes 로까지 읽히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4), 여성이 no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그에 수반되는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여성의 현실이다. 일례로 연애 관계에서 남성이 스킨쉽을 원할 경우, 여성이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많은 남성들이 '나를 싫어하는냐,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이는 곧 연애를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의 신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관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여성의 감정과 언어는 남성들의 관념 속에 갇혀 버리고 결국 여성은 온전히 주체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싫다고 느끼지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된 선택'으로서 동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동의가 결국엔 자발적 동의로 읽혀진다. 자율적으로 선택한 여성(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여성이 그 경험을 성폭력이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동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자율적 동의와 강요된 동의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해석 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까지 낳는 것이다.

3) '법'에게 기대해봐?

이와 같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는 '법' 체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법은 성별화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개인'을 상정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유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개별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 생겨날 수 있다. 법 체계에서 성폭력의 개념 규정부터가 모호한 현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여부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성적 개인을 상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그러한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2차 3차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 집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다른 사건들과 동일한 경우로 처리함에 따라 조사과정 자체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체계에 호소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와 모순을 노정한다.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성폭력의 개념을 협소하게 제한된 틀 내에서 규정해야 할 뿐 아니라, 성폭력을 끊임없이 세분화하고 서열화해야 하는 것이다.5) 90년대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보면, 초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광의의 의미가 법 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좁은 의미로 규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 특별법은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란 성폭력의 정의를 누락시키고 이를 '성폭력 범죄'로 바꿈으로써 성폭력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들의 단순한 형용어로 치환해놓은 것이다.6)

또한 성폭력특별법은 형법보다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강도강간, 통신 매체 이용 음란까지 성폭력 범죄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이 성폭력으로 느끼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이는 성폭력이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이기 때문에7)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법의 양분법적 인식이 처음부터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8)

자발적 동의와 강제된 동의가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사랑과 폭력이 구분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명확한 경계를 그을 수 없는 현실에서, 법을 통해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는가. 결국 보편적인 시민권을 성문화하는 법에서는 '여성'의 이름은 삭제되고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의 '개인'만이 인식될 뿐이다.

3. 성적 차이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사유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유주의 담론을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도 대부분 이와 관련한 쟁점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유주의 해석 틀 내에서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 속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개인' - '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이리가레(Luce Irigaray)는 <세계인권선언 비판>에서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17조로 되돌아가 보자.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강간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하철 광고에 나의 벌거벗은 육체를 착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권리'에 대해 쓰여 있긴 하지만 여성의 일상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상징적 ? 표상적 이미지 또한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며, 근대 정치 일반이 여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전히 '부부강간'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현실9)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이다. 일례로 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낙태의 문제를 두고 '태아의 생명권vs 여성의 선택권'의 논쟁구도를 설정하는 것10)은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여성의 자발적 모성권과 같은 '여성권'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 등의 포괄적인 일상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젠더 관계를 관통하는 사회적 권력관계, 가부장제적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며 중성화된 '개인'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중범적인 성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양성간의 민주적 관계의 전망과 공동체의 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

2) 이는 논의 자체가 완전히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담론화시키려 했고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2001년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 학내 구성원들사이에서 생산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가십거리' 로 전락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C.B. 맥퍼슨, 이유동 옮김,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4) 이와 관련하여, 민주적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언어적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서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언제나 무시되고 있다는 페이트만(C. Pateman)의 주장에 주목할 만하다. 그녀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개인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들은 개별 생활에서 항상 동의하거나, 명백한 거부는 부인되고 거부의 표현도 항상 동의로 해석되어버리는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의 말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페이트만은 이러한 무효화야말로 양성이 실질적으로 '개인'이라는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5) 현재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평가해볼 지점이 있다. 내규나 성폭력 학칙 등을 보면, 어떤 것이 성폭력이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중심적인 예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인지 그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행위자체를 끊임없이 세분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행위중심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감정적, 정신적 측면과 같이 성폭력의 세세한 결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6) 신상숙, 앞의 글

7) 실제로 어느 것이 강제추행이고 어느 것이 강간이나 준강간(제299조) 또는 업무상 위력 ? 위계에 의한 간음(제303조)인지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은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배은경, 앞의 글)

8) 배은경, 앞의 글

9) 캐롤 페이트만은 남성과 여성간의 '은폐된 성적 계약에 대해 얘기한다.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써 남성이 자신의 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고 이는 암묵적으로 결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계약(sexual contract)인 것이다. 즉 여성 자신이 성적 주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10) 1973년 미국전역에 걸쳐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했다기보다 시민의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승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낙태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에서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로 변화했다. 그 결과 두 개인의 권리, 즉 어머니의 권리(여성의 선택권)와 태아의 권리(친생명)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재생산의 권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낙태를 할 권리'라는 협소한 정의를 벗어나 임신과 출산 여부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의미를 가진 적극적 의미를 띠는 것이었다(권현정 외,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이렇듯 낙태의 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권' 의미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자신의 육체에 대한 통제' '자발적 모성을 향유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 자신이 그러한(출산, 낙태 등) 결정을 내리는 상황과 결정의 이유 및 결과 모두를 고려하는 - 재생산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사고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종별적인 성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 시민권의 정치로!

1. 들어가며

성폭력은 일상적인 문화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상화'되어 있는 성폭력은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은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주체적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의 교육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침해를 야기하며, 직장에서 여성에게 차 나르는 부수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박탈을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보호와 함께 기장 기본적인 여성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며, 노동권, 학습권, 생활권 등 여성의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요구까지를 포함하는 운동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반성폭력 운동에서 시민권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 자체가 시민권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시민권 운동이 반성폭력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라 인식되는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까지도 침해하기에[1] 반성폭력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동안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남성들의 권리만을 의미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성인지적인 시민권 확보를 위해서 반성폭력 운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폭력이 단순히 '나의 의사에 반하는 내 몸 혹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제'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서서, 여성의 시민권 쟁취 운동으로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의미가 재확인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려 한다.

2. '몸에 대한 권리'라는 문제의식의 등장과 현재의 성폭력 담론

1986년 부천성고문 사건과 1996년 연세대 시위대 진압 시 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여학생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폭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처음 이 사건들이 사회에 알려졌을 때, 많은 여성들의 피해는 성폭력의 피해가 아니라,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의 피해로 탈바꿈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성을 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 ? 조작하려 했던 공권력의 언론 조작도 한 몫을 했지만, 당시 이 사건을 담론화했던 많은 운동단체들이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부독재 타도'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군부독재정권의 '파렴치한' 폭력으로 이를 선전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사람 셋만 모여도 잡혀간다는 살벌한 시대상황에 거부감을 가졌던 시민들의 보편적인 반독재 정서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의식의 결합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후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재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리 밖'에 존재하는 거대한 권력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을 비판하면서,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섬세하게 접근하려 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거시적 모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몸'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었다면, 성폭력 담론의 등장으로 인해 '몸에 대한 권리'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섹슈얼리티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요구로 나아갔던 과정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다른 차원의 폭력으로 이름붙이려 했던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성폭력 그 자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자. 물론,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독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그것에 얽혀있는 사회의 다른 모순들도 함께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6년 부천 성고문 사건과 96년 연대사건 때는 성폭력 사건이 온전히 성폭력 사건이라 명명되지 못했기에, 독자적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실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담론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독자적 결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폭력 담론은 오히려 지나치게 '몸에 대한 권리'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광범위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반성폭력 담론을 좁은 요구 속에 갇히게 하는 문제를 낳고, 따라서 이제는 반성폭력 운동이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 환경들로, 가부장제라는 개념만으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상황들로 눈을 돌려야만, 좀 더 현실적이고 폭넓은 반성폭력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반성폭력 운동의 적극적 해석을 위하여
- '교수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정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성적 행동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까지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몸에 대한 권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정의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1993년에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탈락된 채,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등 행위 중심의 형법조항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법이 성폭력을 몸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은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적 침해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학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수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자. 이번 관악의 교육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교수 성폭력'이다. 교수 성폭력 자체가 새로운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관악 여성운동 단위가 아닌, 총학의 교육투쟁위원회에서 학습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교수 성폭력 문제는 결코 '내 몸은 나의 것'에 갇힐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여성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강요된 스킨쉽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중심적 이미지의 강요는 분명한 성폭력적 상황이지만, 이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교수 성폭력의 또 다른 결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

교수 성폭력은 흔히 사람들이 성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물리적 성폭력에 더해, 교수의 학문적 우위성으로 피해자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그 특수성이 있다. 학생의 학점, 졸업, 논문, 취업까지를 책임지는 교수의 지위적 우위성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발언하기조차 힘들며, 또한 발언했다 하더라도 가해 교수에 의해 혹은 동료 교수나, 교수의 학문적 성과 등을 들어 교수의 권위를 세워주기에 급급한 대학당국에 의해 보복성의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의 형태는 물리적 성폭력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생존권, 생활권, 학습권, 노동권 등에서의 침해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학생-교수 간에 큰 권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학교라는 생활공동체에서도 '알아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수 성폭력 반대 운동은 생존권, 생활권, 학습권, 노동권 등 전반적인 여성의 시민권 요구를 담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MIT의 성폭력관련 정책(1996)은 교수 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MIT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성폭력도 허용될 수 없다. : 이는 MIT의 특징인 다양한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일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MIT에서는 누구도 성폭력의 위험 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은 일지라나 학생의 신분을 중지하거나 그 이상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성폭력이란 언어를 통해서든, 신체적이든, 캠퍼스 안에서든 밖에서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행동이며, 이는 또한 MIT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과 일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성폭력은 교육이나 일, 그리고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3]

이처럼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온전한 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인 요구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반성폭력에 대한 요구를 학습권이나 노동권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성폭력'의 피해로 담아내면서도, 그와 함께 보편적인 피해자의 시민권 쟁취 운동의 관점에서 그것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 성폭력의 경우, 반성폭력의 요구는 학습권 등을 포함한 시민권 운동일 수 있다. 피해여성이 성폭력의 경험을 극복하고 삶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 형태의 관계맺음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민권의 정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요구 또한, 반성폭력 운동이어야 한다. 학습권을 요구하는 데 있어 성폭력으로 인해 학습권과 생활권을 박탈당하는 여학생들의 피해(혹은 잠재적 피해)를 인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해석은 성폭력의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성폭력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소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성폭력'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폭력이나 가부장적 여성의 이미지를 강요하는 등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보편적 시민권 쟁취를 통한 적극적 삶의 영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등장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분위기 조성 등의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4](여성을 '놀리는' 것)이 연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 성희롱의 문제제기에는 '성폭력의 의미확장'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이란 두 가지 맥락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 성폭력 특별법에서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단순히 행위 중심의 형법조항만 제시됨으로써 법적으로 성폭력이 물리적 성폭력만을 지칭하게 된 상황에서, '성희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폭력의 의미를 확장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와도 관련된다. 당시 여성운동 진영은 특정한 성적 행위의 승인 혹은 거부 때문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으며,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려 노력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성폭력'이 담보할 수 없는 이러한 고용상의 성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신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제대로 간파하여 "성적 괴롭힘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5]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어떤 이의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 육체적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의 수용 또는 거부가 불공정한 고용결정을 낳는 등의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개념이다. 따라서 성희롱 규정의 핵심은 기존의 성폭력 범죄에 고착된 성폭력의 의미를 확장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해당 공동체의 집단적 해결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6] 노동권 확보는 개인 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평등 고용과 관련해서 그 문제의 심각도와 이를 다루는 법적 측면이 매우 심도 있게 강화되었기에, 이러한 성적 차별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가 법이나 대학 학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희롱'이 가지는 어감으로 인해 '성희롱'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폭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내 여성운동 단위에서 이 용어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라는 논쟁보다는, 본래 그 개념이 제기된 맥락과 문제의식을 풍부히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exual harassment를 '성적 괴롭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사적/공적 영역의 이분은 '사적 영역은 열등하고 공적 영역은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여성은 열등하고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남성은 우월하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여성이 사적 영역을 담당하고 우월한 남성이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 식의 순환론적인 남성중심적 사고를 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은 공/사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부천 성고문 사건 - 필자 주)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민족민주운동을 하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성적 폭행'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해 8월에 열린 여성인권대회에서는 '여성해방과 성고문'이라는 주제로 고문과 성폭력의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정유석,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정정헌 제28호(1999)』)

3) 임미희, 「성폭력의 개념과 반성폭력학칙의 의미」.

4) 물론 이것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분위기 조성 등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5) 신상숙, 위의 글, p23.

6) 같은 글, p36.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지면서 여성운동가들은 성폭력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성폭력까지도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묻혀있었던 성폭력을 언어화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발언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는 적극적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비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늘 베일 속에 숨어있었던 피해자들의 발언의 기회와 피해자의 위치를 찾아주고자 도입했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주장에 막혀 동의지반을 잃어가고 있다.1) 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피해자들만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 성폭력이 단순히 넓은 범주의 개념이며,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인식을 기준으로 그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의 명제로는 무너진 동의 기반을 다시 복원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개의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판단과 책임마저 떠넘기게 되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입증 책임까지 전가시킨다.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했던 명제가 그 추상성으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지키고자했던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찰하고, 그 추상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백을 어떠한 구체적인 언어로 채워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1.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려면 그 성폭력 자체를 사실로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물리적, 신체적 증거는커녕 증인조차 없는 성폭력 사실은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여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당사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인 선택과 배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이 다를 때 누구의 기억이 과연 '사실'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성폭력의 특수한 성격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분명 폭력임에도 폭력임이 인지되지 못하는 매우 특수하고 철저한 폭력이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비난을 피해 자신을 감추어야하는 해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해결 과정에서조차 계속해서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드는 의심의 눈초리와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수한 비난의 화살이라는 또다른 폭력을 견뎌야 한다. 전후사정이 어찌되었건 간에 성폭력의 원인이 항상 여성의 부주의함으로 되돌려지면서 가해자의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고,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낙인찍힌 채 내부의 자책과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성폭력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당혹감 등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이해 역시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피해자의 복장과 직업, 생활 방식 등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들추어 피해자의 도발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듯 몰아간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평소 아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관념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고소가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과 함께 작용하여 두려움, 공포 등으로 인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입을 더욱더 막는다.2)

또한 남성중심적 인식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강조되어 성폭력 자체가 은폐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3) 성폭력에 대한 평가와 해결은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폭력이다' 식의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한실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 관계들 속에서 피해자가 떳떳이 자신의 지위를 찾아갈 수 있기 위해 대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2.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 바라보기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무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남성의 말을 믿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그대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 구조적인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실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확연히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결국 발언력이 큰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기 쉽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이 바로 피해의 결과이자 확고한 증거이며, 이러한 고통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며,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4)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규정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강한 객관성을 지닌 해석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3.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편견을 깨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교수-제자와 같은 명백한 권력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거부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은 연애 관계에서, 혹은 구애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부 여부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데 비해 유독 성폭력에서 이를 고수하는 것은 성폭력의 범죄성을 기각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적인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책임에 관한 논의는 거부하기가 힘든 여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 또한 이전에는 사적인 관계, 혹은 여자라면 감수해야하는 일에 불과하였던 문제들이 성폭력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거쳐왔던 힘든 과정에 대한 인식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다.

당시에는 성폭력으로 뚜렷하게 인지되지 못했던 것을 후에 성폭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 또한 늘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피해자가 사후적인 성찰,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로 재발견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몰이해가 깔려있다. 성폭력의 재구성에서는 그 당시에는 판단내리기 모호했거나 무의식적으로 부정했던 기억들이 회고를 통해 점차 자각되고, 당시에는 몰랐던 상처와 모멸감의 의미가 점차 선명하게 인식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4. 피해자 중심주의의 재구성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당하는 지점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성폭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성폭력의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 성폭력'이라는 지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당성의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논쟁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터져나온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육체적 외상보다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위축감,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기에 피해자 관점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수준의 원칙 정도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다는 원칙은 남성 중심의(가해자의) 관점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니지만, 현실 인식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왜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란 누구를 뜻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에 관한 논의는 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확장시키려는 여성주의자들과 이에 반발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마초들이라는 험한 구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대립 속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큰 틀에 동의하고 무조건 따르면 여성주의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 원칙에 대해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요구하면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틀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성주의 성과들이 와르르 무너질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이런 협소한 구도는 문제제기 자체를 힘들게 하였고, 비어있는 부분에 관한 논의를 막아왔다. 아직도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고 난감한 부분이 있어 황정미씨의 「성폭력의 정치에서 젠더 정치로」 논문에 나타난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합리적인 여성, 그리고 개별 피해자

성폭력 성립 여부는 당시의 정황과 일반적인 상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공론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신교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6)은 이를 잘 보여준다. 2심 판결문은 이른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교수의 행동은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 판결7)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식적 법리의 배후에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과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의 독특한 경험에 기초한 '합리적 여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오래 전부터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일반 평균인이 암묵적으로 남성의 경험만을 반영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기준에서는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재차 심차 고통스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황정미씨는 이에 대해 '합리적 여성'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여성 피해자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되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관점은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 집단 중 한사람이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경험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이므로 입장이 다를 경우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해야하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의 독특한 경험에 기초한 '합리적 여성'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때 개별 피해자의 '독특한 체험'은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합리적 여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두 가지가 동일하지는 않다. 개개인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곧 '여성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피해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느낌과 고통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것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이다.

'합리적 여성'이라는 기준의 유효성은 개별 피해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하여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몫을 넘어서는 연구자나 전문가의 노력, 나아가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운동의 발전 등 종합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피해 사실을 개인적인 '체험의 구체성'으로 환원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러한 피해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의 구체성'을 마련해야하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황정미씨의 주장이다.

(2) 합리적 여성이라는 기준에 대한 비판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기조차 힘들게 되어버린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금 분석한 황정미씨의 시도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 기준으로서의 합리적 여성이라는 개념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칼날을 세운다. 그러나 과연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앞선다.

먼저 '합리적 여성'이라는 단어를 보자. 합리적 여성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남성에게만 쓰인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남성성에 기반한 합리성이 아닌 다른 긍정적 의미로 여성에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인식에서처럼 여성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인식한 합리적인 주체로 설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여성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여성을 양분화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합리적 여성이라는 말은 비합리적 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합리적'이라는 말이 쓰여온 방식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으로부터 무고한 가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좋은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가진다.[8]

'기준의 구체성'이라는 부분도 약간의 우려를 낳는다.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체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보편적 기준이 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주의 여성 집단을 보편화하게 되고, 이 경우 그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는 여성과 범위에서 모호시되는 성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준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안이 성폭력인가 아닌가라는 성폭력 성립 여부에만 집착하게 만든다.[9] 이는 반성폭력을 운동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폭력 사건 처벌 구도에 매몰되게 만든다.

5. 피해자 중심주의, 다시 시작하자!

피해자 중심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는 늘 대두된다. 피해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다. 하지만 '정당성'이란 단어는 결코 고정되지 않은,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반성폭력 운동의 현실적 과제 중 하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정당성 개념을 여성의 경험과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싸움일 것이다. '애초부터 존재하는 객관성'은 없다. 단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성폭력과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반성폭력 운동이 존재할 뿐이다.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으로의 전환의 지점에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빈다.

1) 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 후 가해자의 역고소 backlash를 맞으면서 대중들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2) 조국,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방안

3)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특히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인 경우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은폐된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배제, 더 리얼하게는 매장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이러한 은폐를 정당화한다. 지음,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4) 물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부여될 수는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음,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5) 앞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글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서울 고등법원 제9 민사부 판결문 사건 94나15368 손해배상(기)

7) 대법원 판결문 95다39633 손해배상(기)

8) 학칙의 규정을 보면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이 사건을 곡해하여 무고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의도를 다분히 읽을 수 있다.

9)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인지되지 못했던 것들을 성폭력으로 인정한다는 인정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히 '성폭력이냐 아니냐'에만 집착하여 더 이상의 이야기를 못하는 구도이다.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

1. 문제의식

드러나지 못했던 침묵 속의 수많은 외침들을 반증이라도 하듯 90년대는 성폭력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고,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폭력 사건을 규정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자'가 등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성폭력 사건의 원인 제공자나 정조를 빼앗긴 희생자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반성폭력운동에서 성폭력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재규정 하고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를 설정한 것은 이전의 가부장적인 관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여성주의 입장의 반성폭력 운동이 현실담론에서는 모순적이게도, 그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진 보수적 입장과 공명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적자율권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의 반성폭력운동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확장하는 운동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여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주장에서도 호응을 얻었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1] 또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전반적인 여/남의 권력차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주었던 잠재적 피해자 개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인식 속에서 오히려 과도하게 수동적인 이미지로 규정되기에 이른다.[2]

이렇듯 90년대 반성폭력운동은 성적자기결정권,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등의 중요한 개념을 그 성과로 남겼으나, 우리는 현재 오히려 그 개념들을 협소하게 수용하고 있고, 때로는 그 개념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로서, 수동적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과 그럼에도 적극적인 주체가 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그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과정, 지원 방안이 미흡했던 현실 속에서 치유와 지원의 문제는 피해자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부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반성폭력 논쟁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처벌에 그친 경향[3]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적극적인 주체라기보다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개념에 대한 평가와 이 개념들의 본래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민,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에서 고민이 미흡했던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큰 줄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수동적 피해자 '보호'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로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이중화된 성규범'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중 성규범은 남성들에게는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는 남성성의 신화를 안겨주는 반면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성욕과 철저한 순결을 강요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여성은 (남성, 가족, 공동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아내, 애인-과 아닌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여성-사적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여성-으로 양분된다. 여성의 정체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이중성규범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시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쉽게 상처받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거나,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성폭력 사건 성립이나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가 쉽게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분화는 어느 쪽이든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실에서 이중 성규범은 암묵적인 침묵의 강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기력과 자책이라는 이중의 고리를 안겨준다. 또한 이중의 고리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며, 성폭력이 만연한 위험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규제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역시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수동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폭력 정의의 불충분함에서도 기인한다. 1994년 개정된 성폭력 개념은 기존의 통념이나 법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관한 정의가 누락된 법은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또한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고 통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회피했다.[4] 성폭력에 대한 일관된 정의의 부재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근대사회의 성원이며 시민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피해자로 표상해야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5]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사법체계에 호소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주장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는 통념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6]

피해자 '권리 보호'와 능동적 주체로서의 피해자 - 피해자 정체성 재우기 & 보수주의와의 결별

이중화된 성규범과 법체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일관된 정의의 부재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풍토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수동적? 방어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성폭력이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성폭력운동이 이제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고 드러내려는 시도라면,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의 긍정적?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욕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수반해야 한다.

반성폭력운동에서 수동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의 설정과 그 '권리에 대한 보호'라는 문제설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약하고 순진무구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와 욕망을 가진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 보호'의 차원으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능동적인 욕망과 권리의 규정, 그 권리에 대한 보호 담론은 이제까지 적극적 피해자 정체성에 대한 담론의 부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기존의 반성폭력운동의 피해자정체성의 재구성과정은 '(수동적, 희생적) 피해자에서 (적극적)생존자'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면밀한 탐구 없이 피해자가 치유를 통해 '생존자'가 되거나 '페미니즘의 입장을 견지한 여성활동가'가 되는 것으로 쉽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은 피해의 경험들을 모으고, 피해자들을 생존자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성주체로 '명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에서 생존자, 여성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은 반성폭력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만 '어떠한 담론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내용이 없는 것은, 외부적인 시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칭을 선언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 이름 달기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피해자 정체성은 어떠하고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해자는 수동적으로 보호받고 침묵해야만 하는 개인적,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었지만,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격이자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에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담론과 방안이 필요하다. 능동적 주체로서의 피해자 규정은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들이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성폭력의 일상성을 드러내게 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주변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질 수 있게 한다.

결국 이러한 능동적인 욕망과 권리를 가진 피해자, 또 그 권리에 대한 보호담론은 이제까지 반성폭력 담론과 보수주의 담론의 공명을 깨고 이 둘이 근본적으로 결별 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3. 잠재적 피해자와 집단적 생존권의 요구

1990년대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이 컸다. 민경자(1999)에 따르면 1990년대 반성폭력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논지를 우리 사회에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민주화운동에 충실했던 여성운동은 1990년대 초부터 여성의 동일성에 입각한 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속해 있는 사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불평등과 권력의 장소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반성폭력운동이 여성운동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90년대 여성운동이 '가장 설득력 있는 여성억압의 사례'로서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 전반'의 동일성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7]

반성폭력운동이 여성 전반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잠재적 피해자' 개념을 통해서였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폭력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반성폭력을 비판하는 담론은 반성폭력담론이 남성을 일방적인 잠정적 가해자로 상정하는 등 남성에게 불공평할 뿐 아니라 잠정적 피해자인 여성의 수동성을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현실적인 남여의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이제까지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순결이데올로기와 성에 대한 두려움, 수동성을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성적 자유주의의 주장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담론은 피해자 여성들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성폭력운동의 '잠재적 피해자' 개념은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반성폭력운동, 여성주의에서의 잠재적 피해자란 피해의식과 수동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그들 간의 연대와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일차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은 피

해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며, 그 전까지는 가슴속에만 묻어두던 피해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집단적 공감은 이중적 성규범으로 인해 두 편향으로 분할된 채 침묵을 공공연히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연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된다.

잠재적 피해자 개념은 성폭력을 판단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생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경험임을 의미한다. 결국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경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생존권' 싸움이자 저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권리주장이 함께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성폭력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개별 사건의 해결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문제로 이어지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출현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8] 감춰진 성폭력이 또 다른 피해자를 겨냥하고 있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의 저항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잠재적 피해자들은 구조적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잠재적 피해자들의 집단 생존권 투쟁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으로서 성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타인과 관계 맺을 자격, 시민권을 얻기 위한 실천이다.

잠재적 피해자 개념을 통해 여성은 분명 여/남 권력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집단적인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일상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기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제기했던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피해자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집단적인 생존권과 시민권[9] 획득의 문제, 시민권을 부여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인 권리 쟁취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4. 남겨진 과제들

성폭력은 분명 나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성별권력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인적인 관계라는 세세한 결들로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즉, 우리들 모두는 피해의 경험에서 오는 혼란-사랑과 욕망, 폭력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묘한 문제에 대한 제기나 문제해결은 단순히 '그것은 명백히 성폭력이야', '너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야',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으니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전달하고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 수동적 피해자 정체성을 계속 재생산하는 사회나 공동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계맺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담론과 방안들이 필요할까. 피해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어떤 난점들이 존재했던 것일까, 또한 이제까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우리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난해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지만 더 이상 반성폭력운동 담론은 이러한 질문에서 비껴갈 수 없으며, 위의 질문들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이 생산되고 다각적인 실천이 고민되었을 때에야 현재의 운동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의 맺음은 이상의 물음에 대한 고민들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의미 있는 관계망 속에서의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경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적인 불쾌감, 모욕감이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폭력의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관계의 상실'과 자신의 욕망과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자신감 훼손일 것이다. 다양한 만남과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에 대해 타인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삶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자아의 본질을 자유주의 담론에서처럼 소유적이고 개인적인 자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이 구성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것 또한 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 개념은 피해자가 경험을 재구성하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규정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능동성의 첫걸음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기억과 섹슈얼리티, 욕망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곧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문제이자 타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 과정은 말하기를 행하고 있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언어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듣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의도를 이해 할 수 있는 청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10]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공감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의 상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 고립된 채로-자신의 몸을 자신이 온전히 통제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는 성폭력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치유될 수 없다.

(2) 피해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권리'의 요구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치유하면서 종종 피해 사실 이전의 자신과 똑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체는 사회적 의미망과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효과를 남기게 된다. 즉, 경험에 대한 소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사건 이전의 자신으로 원상복귀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삶의 구체성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지우려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구성되었던 맥락에 대해 조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기 성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것을 의미한다. 자신과 주변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전제한 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성찰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 피해자 정체성은 보다 긍정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성찰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언론을 향해서 사생활 보호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 주체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피해자의 일상적 권리들을 제시해 본다.

**피해자의 일상적 권리[11]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2.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3.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
4.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5.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6.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7.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8.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3)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

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에서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크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아예 꺼려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상황과 감정에 대해 완벽히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황스러움이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후원과 의사소통이다. 주변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담은 말을 해 줄 수 있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고자 하는 의지, 또 그 맥락에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후원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 외에, 피해자 지원 방안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12]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들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재단하려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의 다른 사례와 판단들을 소개해준다.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비용을 부담한다.
-피해자가 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
-대책위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망을 구성,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② 이러한 피해자 지원 방안의 기본적인 원칙들 말고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집단상담이나 의식고양모임의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나 집단상담, 여성운동단체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과/반에서의 여학우 모임, 세미나 등 다양한 단위들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과 지원센터가 부실한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3월 17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첫 장기쉼터 소식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성폭력피해자들 첫 장기쉼터 '하담' 문열어

"자매야 딸들아 하늘을 품어라, 꺾였던 기지에 새순이 돋네!"

지난 16일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선 축원의 합창이 울려퍼졌다. 성폭력피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살림터 '하담' 개소식을 맞아 여성계 활동가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늘을 담은 집', '하늘을 닮은 집'이라는 뜻의 '하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장기 쉼터다. 7평 정도가 2년까지 머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 복권기금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45평 아파트에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새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하담 같은 장기 공동체가 절실하다"며 "현재 성폭력특별법 등에는 장기 쉼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담' 공동체를 돕고 싶은 이들은 정기·비정기 후원자로 등록해 생활용품 등을 나눌 수 있다. (02)338-3662~3.

피해자 정체성과 그 재구성은 이제까지 반성폭력운동에 있어 깊이 고민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제까지의 반성폭력운동은 여성들의 경험이 드러나는 시기로 성폭력이 쟁점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전략은 경험의 발화와 이를 통한 이슈화 중심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존재 했다. 하지만 운동이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피해자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담론과 실천적인 전략, 방안의 고민은 계속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과 '순결서약'은 성폭력에 반대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담론과 시도가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8년 MBC에서 방영된 구성애씨의 아우성은 순결교육과 생물학강의로 치우친 성교육에 대해 비판하고, 성적 쾌락에 대한 긍정을 주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구성애는 현재의 성교육을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신의 성욕을 알고 긍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우성은 남자들의 성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여자들의 성욕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랑과 생명을 전제로 한 성'은 오히려 낭만적 결혼에 대한 환상과 함께 아이를 가질 몸으로서의 혼전순결을 강조한다. 결국 아우성은 '진보된 순결 교육'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계를 지닌다.

2) 이러한 문제들은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동력인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욕망이 서로 다르고 대립된다고 말한다. 남성의 성욕은 공격적?능동적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성욕은 남성들의 공격성과 지배욕구에 희생되어 방어적?수동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원인의 제시도 이러한 심리적, 생물학적인 것에 근거한다. 남성 성욕의 피해자로서 여성을 설정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초기 전략은 남성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와 집단적 권력화를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여성의 성욕에 대한 긍정적인 탐구와 결합되지 못한 남성의 성욕에 대한 비판은 여성을 희생자로 만들고 여성의 보호를 강조한 새로운 성정치를 발전시킨다. (정인경, 「성폭력과 성적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공감, 2003 p.198)

3) 황정미,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경제와 사회』

4) 배은경, 「성폭력을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8권, 1997.

5) 박정미,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례분석」, 2002, p.16

6) 정인경, 위의 글, p.205

7) 정인경 위의 글, p.204-205에서 재인용.

8) 이것은 이제까지의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평가지점이 될 수 있겠다. 개별사건의 해결을 통한 반성폭력운동의 한계는 성폭력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성별 권력차나 이중의 성규범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공동체 전화에 필요한 요구들과 경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을 폭로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발언이 반성폭력운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9) 반성폭력운동에서 말하는 집단적인 생존권으로서의 시민권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인 개개인의 성적 자율권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차별 없는 곳에서 노동하고 수업 받고 생활할 권리, 즉 여성의 노동권, 여성의 학습권, 여성의 생활권 등을 의미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실린 「반성폭력 운동, 시민권의 정치로」를 참조하시오.

10) 박정미, 위의 글, p.73 브리슨 논의 재인용

11) 정박기선(여성운도집단 높낮이 없는 새댁), 「성폭력의 개념과 해결에 있어서의 원칙」, 『제 8회 인천영화제 기획토론 -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중, 2003

12) 박지영(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여성위원회(준)), 「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 위의 자료집에서 사회진보연대 규약을 재구성 함

반성폭력 운동의 또다른 과제

1. 기존 반성폭력 운동에서 처벌주의의 한계

1) 반성폭력 운동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갖는 의의

반성폭력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응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립의 가면을 쓰고 사실상 남성만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하던 사회에서 늘 타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 스스로가 기존의 법, 도덕, 윤리체계 속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성별간의 위계에 기반한 폭력을 '성폭력'이라 명명하고 처벌을 주장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오히려 비난받기 십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당해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응징은 그동안 피해를 당하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여성들의 분노의 첫 표출이었고, 계속 이어질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했다.

2) 처벌주의에 의존하는 운동방식의 한계

기존 반성폭력 운동이 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개입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니는 의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성폭력 없는 공간을 만들고자 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발견되었으며, 개별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도 처벌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관계적 측면의 간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한 응징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맺고 있던 관계의 한 자락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든-사회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간에 남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그 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처벌'이라는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주의에 의존하는 운동방식은 바로 여기서 한계를 드러낸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처벌주의에 의존한 운동은 ① 피해자의 정황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거나, ②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선택지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성폭력 사건 가해자'라는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 가해자와 별 차이가 없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나서기까지 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2차가해를 또다시 처벌의 근거로 만드는 데에 더 많이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의 눈앞에서 공공연히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2차 가해'로 지적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에 가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나, 아무도 겉으로 '성폭력이 될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단지 입만 닫아 버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2차가해가 될 소지가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반성폭력 운동의 주제를 담론의 장으로 풍부하게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대중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처벌 '기준' 문제로의 매몰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들

'처벌'이라는 대응방식은 그 특성상 주로 법이나 학칙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데 연애관계 등을 비롯한 성별간의 관계맺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경우에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관계맺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게다가 이처럼 애매한 일들을 놓고 무엇이 성폭력인가/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데 집착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의 감정과 섞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계속 상대방과 관계맺고 싶은 마음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애매한' 관계 자체를 성폭력적이지 않은 관계로 바꾸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맺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또한 많은 언어적 성폭력이나 환경형 성폭력의 경우에 이를 '처벌'은 극히 불완전한 대응방식이다. 남성중심적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 없이는 언어적 성폭력이나 환경형 성폭력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처벌'은 앞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기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다수?집단인 경우에는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처벌'외에 이러한 성폭력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또다른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처벌'이라는 방식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운동은 다수 대중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지만 처벌을 통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반성폭력 운동 또한 대중운동을 풍부하게 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에 의존함에 따라 처벌주의의 한계를 고스란히 맞닥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에서 부족했던 측면을 어떻게 또다른 운동으로 펼쳐갈 것인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존 운동의 성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처벌'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은 절실하다.

2 새로운 운동방식을 고민하며

- '관계의 전화'와 새로운 성별윤리의 모색

1) 관계[1]의 전화

기존 반성폭력 운동은 사건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를 주요한 운동방식의 하나로 사고한 측면이 많았다. 초기에 활발했던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등의 대중운동도 사건 공개 등 충격요법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의존하는 면이 컸다. 즉 대중운동으로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독자적 전략이나 운동방식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채 처벌주의 중심의 운동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운동으로서의 반성폭력운동은 처벌과 충격요법이 갖는 한계를 많은 부분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에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처벌주의의 한계' 부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은, '처벌'이외에 대중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피해자 치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작업 또한 복잡한 관계맺음의 문제와 따로 떼어내어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맺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이 개입하고, 근본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들이 서로 관계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성/남성이 서로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반성폭력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성들간의 새로운 관계방식을 확립하는 것, 즉 '관계의 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전화를 어떤 방식의 운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법이나 학칙 등의 제도적 차원보다는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개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대중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맺음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맺음, 공존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윤리'이기 때문이다.

2) '관계의 전화'를 위하여 - 성별 차이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의 모색

'관계의 전화'가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라면 이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선 '관계맺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맺음 속에서는 종종 타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폭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곤 한다. 특히 주체들 사이의 위계권력이 뚜렷할 경우 폭력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폭력처럼 구조화된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구조적 폭력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성폭력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전반)은 성별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로부터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여기서 주로 사용된 전략은 '구조적 약자'인 여성에게 일정한 권리를 더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항상 '구조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여성은 끊임없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무언가 베풀어 주어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합리성에 기초한 법 체계는 여성들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주어지는 권리들을 '특권'이나 '시혜'로 인식한다. 현재의 모든 가치체계는 남성중심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맺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타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엮어 주는 것이 바로 '윤리'인데, 지금의 윤리 또한 법, 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이다. 기존의 윤리 체계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폭력'으로 사고되지 못하므로, 관계맺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성폭력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또한 여타의 규율이나 제도에 앞서 '관계'의 발생에서부터 그 양식을 결정짓는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의 남성중심성은 다른 모든 남성중심적 구조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들 사이의 관계맺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윤리를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윤리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또한 그만큼 폭넓은 부분에 작용하는 '윤리'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맺음에 다양하게 개입해야 하므로 대중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일단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페미니스트인 이리가레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 힌트를 얻어 자기 자신 안으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 기초하여 윤리가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여성이 윤리의 영역에서 '주체'의 위치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상징질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리가레의 논의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주변의 관계맺음 양식을 새로이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대안적인 관계맺음의 양식을 개발해 가는 것이 성별 차이에 기반한 윤리를 만들어가는 길일 것이다. 윤리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며 관계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관계맺음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공존의 토대가 될 윤리는 새로운 공존의 관계맺음의 시도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들간의 관계맺음의 양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관계맺음의 주체인 각 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과 남성이 관계맺음에 있어 동등한 주체들의 위치가 아닌 피해자-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매우 일상적임을 알려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이러한 주체들의 현실적 위치를 망각하고 '동등한 주체들의 위치에 기반한 동등한 관계'라는 이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주로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여성에게 주체들의 동등한 위치를 전제로 하는 관계맺음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잠재적 피해자-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어서는 역시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등한 주체라는 위치를 먼저 설정하거나 현재의 위치에 가두지 않는 새로운 위치, 즉 '동등한 주체의 위치로 옮겨갈 수 있는 주체들의 위치'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4]

3. 맺으며

반성폭력 운동은 '관계의 전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의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맺음의 양식을 결정짓는 윤리를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 윤리는 여성과 남성이 놓여 있는 서로 다른 위치와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별 차이에 기반한 윤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를 바꾸어내고 관계맺음을 바꾸어 내는 작업은 대중운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은 '관계의 전환','성별 차이에 기반한 윤리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대중운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고민들을 풀어보았다. 이 고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길 기대하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많은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1) 여기서 '관계'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나 사회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성별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2) 여기서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활동을 말한다. 피해자, 가해자의 주변인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피해자 치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자 치유 활동의 한 영역이다.

3) 이리가레가 생각하는 성적 차이의 윤리에 관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보론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4) 그런 점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남성서포터즈' 모임, 언니네의 남성페미니스트 모임 '귀땀' 등은 새로운 주체들간의 위치설정을 고민하는 데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론]이리가레의 성적 차이와 윤리 소개

본문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새로운 관계맺음 양식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관계맺음 양식의 정립은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윤리에 기반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성적 차이의 윤리를 주장해온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Luce Irigaray의 사상과 많은 부분 상통하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리가레의 성적 차이의 윤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성 차이의 윤리

하이데거가 서구 철학의 전통을 존재의 문제를 망각한 역사로서 분석하듯이, 이리가레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성차이의 문제에 눈먼 역사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녀에게 성차이의 문제는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평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적 이상이 표준으로서 작용하여 여성이 그 이상에 유사하다거나 다르다는 것으로서 측정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경우 어느 편이나 여성은 똑같은 체계로 환원되어 버리는데, 이리가레는 바로 그러한 체계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여성의 성은 이 전체의 재현의 체계에서 이중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밖'에 머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체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임, 같음, 재생산, 재현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음의 타자성으로만 간주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반복 이외의 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헤겔이 말했듯이, 그 공동체 - 남성- 의 영원한 아이러니를 나타낸다. 그녀가 그들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동일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러한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담론 안으로 그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1985b, 162)

주체로부터의 여성의 추방, 즉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만 존재되어 왔다는 사실은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로서 부각되어 왔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가라 할 수 있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에 의하면, 가부장제는 여성을 절대적인 타자의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여성에게 남성의 초월성이 거부된 내재성(immanence)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보부아르에게 있어서 주체의 회복이란 공공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여성도 남성처럼 초월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여성 해방이란 곧 내재성의 어두운 동굴로부터 초월성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보부아르에게 여성의 타자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가능한 한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성도 초월적인 남성 주체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 즉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그 반대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성이란 다른 성으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비남성' 즉 '추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리얼리티'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1993a, 20) 따라서 그녀는 차이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야 하며, 그 차이가 단순히 지배적인 남성성을 규정해 놓고 그 반대편의 여성성을 포용하는 식의 차이리면 그것은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차이란 어떻게 여성이 남성과 유사하게 되느냐 혹은 다르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즉 남성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그녀 자신의 언어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필요로 하며,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여성으로 자리매김되어 가치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1992,3)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전통으로부터 긍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복원해서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주체의 배제를 통해서만 자신을 재현할 수 있는 남성적 담론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와 모델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보부아르와는 달리 이리가레에 있어서는 오히려 같음의 질서에 기반한 타자성으로부터 진정한 타자(여성)를 떼어놓는 일이 더 긴급한 일이다.

철학적 담론이 '담론의 질서'의 법칙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심리분석적 해석이 철학적 담론성의 규범 안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담론의 체계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여성성에게 부여된 위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곳에서 '타자',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여성성에 부여된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유사성의 타자성으로부터 타자, 여성을 어떻게 떼어놓느냐 이다.(1985b, 169)

그녀가 "여성의 성은 단일화될 수 없으며 … 주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1977,64)고 말했을 때, 이는 Silverman의 해석대로 그녀가 기꺼이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1988, 161) 이리가레는 주체라는 의미를 가능케 한 근본적인 가정들, 곧 언어의 기능에 새겨져 있으며 또한 사회 정치적인 규범 안에 제도화되어 있는 전제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주체 - 단일하고, 완전히 현시적이며, 지배적인 주체 - 의 형이상학적 구속 안으로 수렴되어버리지 않는 주체로서의 여성, 유사성의 반복으로서가 아닌 주체의 개념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비판하는 것은 주체성(subjectivity) 그 자체가 아니라, 다원성, 복수성, 차이를 배제하고 유사성, 단일성, 전체성의 면에서만 주체를 해석하는 지배적인 양태이다. 따라서 이리가레에게는 우리들의 사고가 지니는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정의, 특히 성적 정의는 사회질서를 구조화하고 있는 가치와 진실의 개념 그리고 언어의 법칙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획득될 수 없다.(Irigaray 1993a, 22)

따라서 타자성의 문제를 제기할 때 그녀는 성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 전반의 문제 - 인종과 계급의 차이 등에 의한 타자성-를 절대적인 타자성, 근본적인 타자성의 면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규정해 온 타자로서가 아닌 타자가 될 수 있는가? 즉 타자성을 체계화시키지 않고서, 타자로서의 여성을 전체화시키지 않고서 여성을 타자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리가레의 전 저작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변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차이로서-같음의 체계 안에서의 차이, 즉 非남성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차이- 수립하고

자 하는 그녀의 시도, 다시 말해 같음의 틀과 같은 바탕에서 다름의 틀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녀의 시도는 서구 형이상학을 타자성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이라고 비판하고서 타자와의 윤리적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한 Levinas의 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리가레가 남성 주체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듯이, 레비나스는 보편적 윤리의 조건에 관심을 쏟는다. 그에게 있어서 윤리란 도덕적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윤리체계가 당연시하는 정체성 개념의 파열을 의미한다. 윤리적이란 존재의 평형 상태를 끊임없이 부수며, 의미를 반복해서 어긋나게 하며, 우리의 자족 상태를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보편적 윤리의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의 차이의 관계이다. 그의 윤리 개념은 나 자신과 타자와의 유사성에서가 아니라 차이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주체란 한없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항상 책임이 주어진 주체로서 윤리적 관계에 있는 '얼굴 대 얼굴의 관계 face to face relation'의 주체이다. 얼굴 대 얼굴의 관계란 타자의 타자성을, 자기 안으로 환원해 버릴 수 없는 타자성으로서 인정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타자는 나를 초월해 있는 존재이며, 내 안으로 포함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타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타자와의 관계 속엣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즉 자기라는 주체는 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공포, 어떤 전율도 이 관계(윤리적인 얼굴 대 얼굴의 관계), 즉 관계의 불연속성을 유지하고, 융합에 저항하며, 반응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이 관계의 직접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타자 - 절대적으로 타자-가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얼굴은 같음을 부정하지 않으며, 의견이나 권위나 혹은 미술적인 초자연성이 그렇게 하듯이 같음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기를 환영하는 그와 나란히 남아 있다. 이 제시는 현저하게 비폭력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자유를 범하는 대신에 내 자유의 책임을 환기시키며 나의 자유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폭력으로서 그것은 또한 같음과 다름의 복수성을 유지한다. … 모든 참여로부터 자유로운, 이 독립적인 흠 없는 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타자가 같은 단계에서 솟아 올리와 반격하기보다는 그에게 말을 건다면, 즉 표현으로 자신을 보여준다면, 얼굴로 보여준다면, 그리고 높은 곳으로부터 온다면, 자신의 평온을 상실할 수 있다. 그때 자유는 저항에 부딪혀서가 아니라 임의적이고 유죄이며 소심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그러나 그 죄책감 속에서 주체는 책임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 자신을 초월하는 것과의 관계로서의 타자와의 관계-자신의 내재적인 운명의 그 동물적인 자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나에게로 내 안에 없던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Levinas 1995, 203)

■ 몸의 정치학

이리가레가 여성을 차이로서 수립하고자 할 때 그 바탕이 된 생각이 바로 레비나스가 수립하고자 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이다. 즉 그녀에게 있어서 성 차이의 윤리란 두 성의 주체성을 다 인정하는 윤리이며 따라서 이러한 윤리의 수립을 위해서는 물질적, 육체적, 감각적, 자연적인 것은 여성에게 그리고 정신적, 이상적, 지성적, 초월적인 것은 남성에게 할당하는 현재의 상징 질서의 분열을 극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서구 형이상학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은 이 체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다만 남성 주체의 조건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사경>에서 <성 차이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이리가레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서구 철학 전반이 어떻게 이분법적인 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여성(어머니의 육체)이 이러한 분리에서 항시 부정적이고 저급한 영역에 머물게 되었는가, 즉 남성이 주체로서 구성되는 이상적이며 정신적이며 지성적인 초월의 영역으로부터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감각적이고 물적인 토대가 되어왔는가를 폭로하는 것이다. 서구철학이 주체를 어떻게 개념화하였든지 간에, 여성은 항시 타자로서 남성 주체의 물적 토대로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 즉 남성만을 주체로서 초월시키는 근거를 이리가레는 서구 형이상학에서 남성의 육체와 그 성의 리듬에 두고 있음을 본 것이다. 즉 육체의 형태학이 상징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리 누름/ 억압할, 부릴, 재현할 '대지', 그러나 또한 항시 욕망하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대지가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그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불투명의 물질이 없다면, 그렇다면 주체의 존재를 위해서 어떤 근거가 남아있을 것인가? 만약 대지가 반항한다면 특히 그녀 자신에게 덤벼든다면, 주체의 발기 erection은 당황할 것이며, 그것의 고양elevation과 침투 penetration를 상실해버릴 위험이 따를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일어서서 무엇에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1985a, 133)

남성의 상상계에서 초월적인 것은 육체의 형태학(발기, 삽입)과 관련되며, 남성의 나르시시즘도 초월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Irigaray 1985b, 151) 우리는 여기에서 이리가레가 본질주의자라는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여성의 육체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그녀에게는 여성의 성 주체가 여성 주체의 조건인 것이다.

단일성, 가시성, 경직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형적이며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남성의 성과 달리 여성의 성은 지속적인 교환의 흐름 속에 있는 복수성, 지속성, 개방성, 순환성, 산파성의 성이며, 이리가레는 이를 "두 입술"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 성애는 남성과는 매우 다르다. 자기 자신을 접촉하기 위해 남성은 도구 - 손, 여성의 육체, 언어-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애무는 적어도 최소한의 활동을 요구한다. 여성의 경우, 그녀는 어떤 매개 없이도 그리고 활동과 非활동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접촉하고 있다. 여성은 항상 '자신을 접촉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식기는 지속적인 접촉 상태에 있는 두 입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 안에서, 그녀는 이미 둘이다. 그러나 각각 하나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를 애무하는. (1985b, 24)

이리가레의 차이에 대한 주장이 여성의 육체적 형태학에 근거한 자기 성애에 그친다면, 본질주의자라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그녀의 목적인 리깡의 남근중심적 상징질서를 여성의 '입술 중심적' 상징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본질론에 빠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다른 경험, 남성과 다른 여성 육체의 형태학은 개념화되고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것, 즉 현재의 남성적 상징 질서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성 차이가 상징 질서에 의해서 매개되

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그녀의 시도가 단순히 현재의 이분법적인 상징 체계에서 양쪽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주체가 차이로서 동등하게 존재하는 - 서로가 레비나스식의 타자로서- 그러한 체계, 즉 "이중의 구문"(Irigaray 1986b, 132)을, 차이의 질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동굴의 비유에서 언급했듯이 상징 질서는 이미 남성적이며 그것을 단순히 벗어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여성의 공간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이며 이에 대한 이리가레의 대답은 흉내내기이다.

여성은 여성적인 역할을 의도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종속의 형식을 하나의 주장으로 전환시키며, 그리하여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따라서 흉내내기란 여성에게 있어서 그녀 자신을 단순히 담론 속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서 담론에 의한 그녀의 착취된 자리를 회복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 그녀가 '감각의', '물질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개념에, 특히 남성적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논리 안에서 그녀 자신에 대한 개념에 다시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즉 언어에서의 가려진 여성성의 가능한 작용을 유희적 반복의 효과에 의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1986b, 76)

흉내내기란 이중의 과정이다. 어떤 것을 흉내내기란 그것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의 형식을 재생산해 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한계와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즉 흉내내기란 체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재생산일 뿐만 아니라 흉내내는 대상을 재배치시킨다. 이는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환상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유사하다. 개인의 심리에서 무의식적 환상은 그것이 무의식으로 남아있는 한 결정적이다. 심리 분석과정에서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의식으로 떠오르면(이리가레가 상징화라고 말한 것), 그 환상은 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환자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리가레의 전략도 바로 그것이다.

유희적인 반복이라는 흉내내기를 통해서 억압되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무의식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녀는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적 환상을 언어화함으로써 억압을 드러내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리가레에게 있어서 여성의 상상계란 본질적인 여성성이 아니라 상징체계 안에서의 자리다. 그리하여 상징 질서 안에서의 이 두 성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성으로 환원해 버릴 수 없는, 또한 지배하거나 배제가 아닌, 끝없는 교환과 흐름 속에 있으며 유사성이 아니라 근접성에, 은유가 아니라 환유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적인 윤리적 관계여야 한다. 마치 '두 입술'처럼. Imagine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여성주의에 관련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여성주의는 여성들 개개인의 경험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 체계나 역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성주의가 여성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 경험의 집합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나름의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오해는 쉬이 풀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여성주의 일반이 여성의 성, 육체, 문화에 관한 논의 이상의 문제의식이나 여성주의 나름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꽤 많은 읽을거리와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역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어온 세계여성운동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여성운동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단계에 봉착하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모색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지금까지 수없이 접해왔던 여성주의 관련 추상적인 논의나 이론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이 노정한 한계를 지적하는 성과 계급의 논쟁을 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의 실상이나 여성 운동의 현황에 대해 꽤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외국 여성주의의 현실적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주의의 어떠한 이론적 타당성과 근거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흥하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었던 외국 여성 운동의 실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던 논의들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놓칠 수 없는 묘미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성 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신 사회운동과 관련한 현 단계 여성운동의 쟁점을 살핀 저자의 논문이고 2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일컫는 미국과 유럽 7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의 여성운동이 발전해온 방식을 제2기 여성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제1기 여성운동과 제2기 여성운동을 살핀 후 2기 여성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성운동-신사회운동'이라는 도식이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탈각시키고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의 정치를 일상 영역에 한정지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전망에 대해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 중심의 주류 여성운동과는 다른 우리나라 나름의 과제를 제시한다. 여성주의 이론 일반이 성, 문화에만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사고해야 함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주체들의 절실한 자각과 노력이 필요함을 체계적으로 논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성별 분업 노동이나 가사노동 및 출산 양육 등의 재생산노동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의 해소는 사실 여성운동계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반자본주의적, 반가부장제적 대응들이 (국가나 자본에 대한 대응과 남성의 의식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된다."

2부는 저자가 편역한 외국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들은 미국과 유럽 7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피면서 여성운동이 안고 있는 성과 계급의 이슈들을 다루고 6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논쟁 및 고민의 과정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분량도 꽤 많고 내용도 방대하지만 외국의 역사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갖고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쉽게 읽을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전세계 페미니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다고 파악되는 미국에서부터 강력한 좌파세력의 존재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형태를 띠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독특한 여성운동이 나타나는 프랑스, 독재 체제로 여성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스페인까지 각국의 여성 운동의 현주소를 조망한다. 제 3세계 국가들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페미니즘이 실제 현실에 적용되면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겨왔는지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상황에 맞춰 특색있게 전개되는 각 나라의 여성운동들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역사만이 전부인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라별로 각양각색의 여성 운동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 왔다는 것은 당연함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읽다보면 왠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특히나 좌파 페미니즘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나 독재 체제 내에서 여성 운동을 볼 수 있는 스페인의 사례는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이라 꽤 흥미롭다.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에 관한 논의도 단순히 '평등이냐 차이냐'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 따른, 또는 그 상황과 시대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다. 평등과 차이, 둘다 긍정점과 한계가 있기에 어느 쪽을 부각시키느냐는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 취하는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그 모든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진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모두 살펴봄으로서 여성 운동이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꽤 의미있는 일이다.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남녀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을 지적하면서도 남녀공동체적 시각을 견지해야하고, 남성의 억압적 측면을 고발하면서도 남성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여성 일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 보편성 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는지 늘 귀기울이고 여야하고, 현실의 문제점에 분노하면서도 그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 드러난 여성해방을 위한 노력들과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관한 구체적 실례들은 이러한 양면적 현실에 부딪칠 때 겪는 딜레마와 고민의 과정의 예이기에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변 상황들에 쉬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추상적 원칙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선을 치되 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Imagine

아주 작은 차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

- 알리스 슈바르처

1.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슈바르처는 독일 여성운동의 대모라 불리는 페미니스트이다. 전 세계적인 페미니스트 저널 <엠마>의 편집장이며, 68혁명 이후 새롭게 재조명된 독일 페미니즘의 리더로서 낙태권 운동, 평화운동, 反포르노 운동을 이끌었다. 그녀의 1974년 저작이 바로 『아주 작은 차이』이다. 『작은 차이와 그것의 큰 결과들』이 독일어판 원제인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치면서, 슈바르처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아직까지도 그녀는 독일에서 여성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여성' 중의 한명이다. 수많은 저서와 대중강연을 통해 그녀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페미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2.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13명의 독일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책의 2/3 이상이 그 내용인데, 이 13명의 여성들은 경제형편, 교육정도, 나이, 가족상황, 결혼유무 등에서 그 조건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슈바르처는 한 명씩, 한 명씩 긴 시간을 가지고 여성들을 만나기면서, 그녀들 속에서 이 시대 여성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낸다. 그것은 남편, 아버지, 어머니, 딸, 일, 연애 등 다양한 삶의 관계맺음 양식 속에서 겪게 되는 여성의 어려움들이다. 특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오르기즘을 둘러싼 강박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그것도 성과 관련된 경험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섬세하고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그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이끌어 낸 슈바르처의 작업은 매우 고무적이다.

13명의 독일 여성 이야기는 약 3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제 그녀들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그것도 우리와는 먼 유럽 땅에 살았던 여성들의 낡고 낡은 경험담이 현재까지도 많은 여성들에 의해 읽히고, 공감되는 현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경험이 보편적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 경험들이 그리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르면, 현재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심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 없는 여성의 삶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 그러나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노예제 시대에 노예제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던 것과 같다. 그리고 노예제는 없어졌다."는 캐슬린 베리의 말을 상기해 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은 페미니즘의 좌절을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짧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옆집 언니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13명의 여성 이야기 뒤에는 그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슈바르처가 이끌어낸 2개의 테마 즉, 여성의 '성'과 '노동'이 서술되어 있다. '클리토리스의 비밀'이라는 부분에서 그녀는, 왜 '인간'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질 오르기즘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고 여성의 온전한 오르기즘을 되찾으려면 성감대를 클리토리스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보다 두 배 더 일하는 여자'라는 부분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에 가사노동을 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럴 때만이 여성이 가정 밖의 노동에서 자아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매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신념으로 변질되면서 그 속에서 특히 여성이 억압받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 짓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보다는 문화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성적 차이가 성에 기반한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은, 빠리 꼬뮌이나 프랑스 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에서 여성의 활약을 삭제하였고, 감성과 온유함, 민첩하고 섬세한 정서 등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강요해 온 성품들이 여성의 본질이라 여겨지는 상황까지 낳았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은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성의 신화'를 끊임없이 정당화했으며, 결국 여성의 쾌락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결과까지 낳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슈바르처는 이성애를 강요하며 여성의 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현실을 비판하고, 여성의 성욕에 대한 통제권을 여성이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또한, 70년대 독일 여성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큰 문제인 가정주부 증후군을 예로 들면서, 과중한 가사노동이 여성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고, 여성이 가정 밖의 노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결코 해방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당시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된 가사노동 임금제는 여성을 더욱 가사노동에 가두기 때문에 대안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이 이중노동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남성과의 가사노동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3. 『아주 작은 차이』, 비판적으로 읽기

이 책은 주로 페미니즘 입문서 정도의 위치로 저학년들에게 소개되는데, 몇 가지 지점에서 '충격'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저학년으로 이루어진 독자들은 우선 음담패설로만 존재했던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버젓이 활자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어 여성에게 삽입섹스를 통한 오르기즘은 허구라는 말에 또 다시 충격 받는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담론인 만큼이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① 여성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근대 시민의 개념은 '중성적 개인'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는 굳이 시민의 개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법담론에서 '합리적 개인'이라 지칭되는 주체는 남성이며, 과학연구에서 '중립적 연구자'도 실질적으로는 남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성적이고 자유로운 시민 주체의 범주에 여성을 끼워 넣는

것이 정당한가. 과연 여성/ 남성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두 인간이라는 범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슈바르처의 주장은 타당한가.

대답은 No다. 여성은 여성이기에 앞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이기에 앞서 여성이다. 기존의 근대적 주체 개념이 여성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범주에 여성을 끼워 넣는 것으로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될 수 없다. 여성의 종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주체 개념은 또 다시 여성을 배제하고, 그녀들의 경험을 상대화시킬 뿐이다. 여성의 종별성은 '인간'이라는 중성적 범주로 묶일 수 없는, 환원불가능한 특수한 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남성의 기준에 의거해 규정된 근대적 주체 개념에 여성을 끼워 넣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남성의 기준에 맞게 여성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을 또 다시 남성의 기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인간이기에 앞서 '여성'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종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권'이 요구되어야 한다. "남녀의 평등은 성별화 된 성이론 없이는, 그리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 안에서 다른 존재로서 각각의 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시 쓰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슈바르처는 시몬느 드 보봐르의 저 유명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양육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예로 들면서, 여성이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 문화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여성은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이리가레의 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슈바르처가 성적 차이가 차별이 되는 현실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성적 차이가 실제로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할 때, 슈바르처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② 질/ 클리토리스 - 선택의 문제인가.

슈바르처는 '질 오르가즘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여성이 이성애적 관계에서는 결코 온전한 쾌락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성애는 여성의 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과연 슈바르처의 이러한 주장은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남성과의 섹스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 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서 혹은 여성들끼리 쾌락을 추구할 때에만, 여성은 해방될 수 있는가. 슈바르처의 주장은 감정적 이유이든, 경제적 이유이든, 사회적 이유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남성과의 관계를 대안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어떠한 답도 내려줄 수 없다.

물론 여성의 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여성이 남성의 '도움'없이 스스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은 여성해방의 전략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남성중심적 성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욕이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서 여성의 온전한 쾌락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맺음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속에서 대안적 관계맺음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리가레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질/클리토리스의 이분법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페니스 중심적이라고 본다. 클리토리스를 페니스와 유사한 기관으로 본다면 클리토리스는 언제나 왜소하고 덜 발달된 작은 페니스의 변형일 따름이다. 질을 페니스의 보완물이거나 그것과 함께일 때에만 '완성되는' 기관으로 설정한다면, 질은 언제나 남성의 기관에 종속되는 것일 뿐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여성의 성기는 남성의 성기에 비해 열등하거나, 그것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볼 때 사회가 여성을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분법적인 패러다임 안으로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그러해왔던 것이다 .

그러나 이리가레는 여성의 쾌락이 결코 단일하거나 단일한 기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두 입술'로 은유한다. 두 입술은 하나이자 둘인데,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질이냐 클리토리스냐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분열적이고 다중적이고 전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몸의 특정한 지대 혹은 유일한 지대를 성애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페니스의 탈중심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이리가레의 관점에서 보면, 슈바르처가 '질'을 부정하고 '클리토리스'만을 여성의 성감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에 있어서 페니스 중심주의의 다른 변형일 뿐이다. 페니스 중심으로 구성된 성욕으로는 여성의 성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은 성기중심의 성감을 탈피해서 그리고 질/ 클리토리스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다중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차이』는 1974년에 쓰여진 만큼, 이후 많은 논의가 덧붙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슈바르처의 이후 저작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이 슈바르처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200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널리 읽히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슈바르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아주 작은 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덧붙이자면, 그것은 작은 차이이되 결코 지워질 수는 없는,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이다. 따라서 그 차이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며, 그 속에서 현실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여성들의 작은 움직임과 고민까지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magine

벨 훅스의 『행복한 페미니즘』

벨 훅스의 "행복한 페미니즘"은 최근에 나온 여성주의 입문서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고 있는 저작이다. 혹자는 '번역의 집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에는 이만한 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1-2년간 학내에서 새내기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여성주의 입문서로 이 책이 꾸준히 손꼽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성주의가 반남성주의가 아니라 반성차별 주의라는 벨훅스의 정의는 페미니즘이 남성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며 강한 반감을 내보이는 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입문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희망적인 변화의 기제로서의 여성주의를 이만큼 기독성있는 달필로 풀어낸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벨 훅스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차별과 억압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없이 여성의 권리만을 외치는 것을 더 이상 여성주의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자매애'라는 여성들간의 공고한 연대를 회복하려면, 여성들 내부에서의 차별과 억압, 즉 인종과 계급에 근거한 분리들을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별과 억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여성운동은 그 급진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게 되면서 제한적인 성과만을 얻는데 만족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여연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주류 여성운동이 90년대 이후 제도화를 겪으며 '계급'이라는 문제 의식을 놓쳐가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자에 대한 모든 지배에 반대하는 것이 여성주의 내부의 지배애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벨 훅스의 지적은 미국의 60년대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해보고, 다원화라는 변명 속에 파편화되어가는 여성주의의 틀을 다시 세우는데 매우 유효하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 파워 페미니즘에 관한 비판은 여성 운동의 가운데에서 스스로 빠져들기 쉬운 유혹들을 일깨운다. 페미니즘이 결코 삶에서 여성의 권리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때때로 손쉽게 살기위해 택한 삶의 방식들을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말하며 그것을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성공한 여성의 교양으로 페미니즘이 인식되는 듯한 경향 속에서 이 글은 반성하게 함과 동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통쾌한 글이기도 하다. 여성인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페미니즘이 아닌가하는 철없던 시절의 설익은 질문들은 벨 훅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 어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수많은 서로 다른 여성주의들이 있음을 알고 나서 여성주의가 구체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성주의에 대해 애정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깊이 이 책을 읽어본다면 다시금 양가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페미니즘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여성 내부의 차별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옳은 말이지만, 페미니즘이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3월만 되면 교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양성평등이란 말로 여성주의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성차별주의가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성과 남성모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성이다. 여/남의 권력차이를 인식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을 포함하는 인간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차별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이고 반성차별주의가 아니라 여성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가지는 반감은 단지 무지와 오해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여성주의는 남성에게 그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면서 누려온 어떤 자유, 또는 특권을 빼앗는다. 남성이 여성주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해와 편견을 걷으면 여성주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가?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지배를 반대한다는 여성주의의 전선은 누구를 향해 그어지는가? 타자에 대한 지배로 이득을 얻는 그 누군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벨훅스는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여성에 대한 착취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더 많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꺼리는 듯 하다. (사실 이는 달콤한 말로 남성들을 여성주의로 유혹하고 여성 내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려는 벨훅스의 전략적 글쓰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벨훅스가 특권계급 여성들의 자유를 위해 노동계급과 빈민여성의 종속이 필요했음을 비판하며 여성운동의 성찰을 촉구하지만,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자유를 위해 여성의 종속이 당연시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은 이것이 여성주의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권계급 여성이라 해도 이 때문에 결국엔 남성 지배에 굴복하게 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페미니즘이 성차별주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간에도 전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선이 벨훅스가 비판하는 반남성주의와 다른 점은 전선 긋기의 근본 원인을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 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sex가 아니라) 집단적 젠더의 정체성과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공고한 지배애를 위해 여성들은 여성들 내부의 차별과 억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 내부의 차별은 계급이기도 하고, 인종이기도 하고, 이성애주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이를 가진 여성들의 각각의 요구는 단지 여성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측면으로, 노동운동의 측면으로, 인종차별이나 혹인 해방의 측면으로 풀어져야 할 요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여성들 내부의 차별철폐가 단지 노동자, 혹인, 레즈비언 여성인 그녀들이 모두 여성운동에도 헌신하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운동은 차이를 지닌 여성들의 서로다른 요구를 풀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고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의 요구 사항들이 여성주의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성운동의 범주 넓히기가 아니라 여성운동과 다른 운동들 간의 관계맺기를 고민해야 한다. 관계맺음의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것도, 저것도 여성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여성주의는 모든 억압을 반대한다'는 대전제만을 끊임없이 반복,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다. 여성주의는 운동의 다원화로부터 태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 다른 운동의 영역들을 인정하면서, 연대의 지점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여성주의적 시도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러한 자유가 그간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이루어진 자유는 아닌지, 특권인 것은 아니었는지를 상기하고 과연 그러한 특권을 계속 누리고 싶은지 반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성주의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지배와 억압에 반대하는 '진보적 마인드'일 것다. 벨 훅스가 여성주의를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대전제를 이야기 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진보란 기존의 폐쇄적이던 진보개념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운동, 계급운동만이 진보이다는 편견을 버리면서, 동시에 여성주의가 특권과 지배를 버리는 실천적 행동임을 상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Imagine

성폭력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관악여성모임연대를 만났습니다.

imagine(이람, 혜영, 가진) + 관악여모(이방, 이스트)
학관에서 만나다!

>> 학칙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

①혜영: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안원리를 고민하는 서울대 페미니스트모임 Imagine이구요, 이번에 관악여모에서 학칙개정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반성폭력 학칙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과 학칙개정에 있어 중점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방: 반갑습니다. 학칙개정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면, 작년 여름 여성연대 한판에서 각 학교 학칙들을 분석했던 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때 여러 학교의 사람들이 모여 어느 한학교의 학칙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칙을 모아서 비교해서 봤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똑같아요, 다. 에문도 문구도 그대로 베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트: 그 단어 있잖아. 자유스러운. 자유롭다가 표준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모든 학교들이 "자유스러운"이라고 썼어요. 베꼈다는 티가 확 나죠.

?이방: 학칙이라는 게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문안으로 해서 베끼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 명백한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처음 만들었던 것이 성폭력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강제한다는 부분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학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면서 부딪쳤던 많은 문제지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여러 학교에서 여성연대 한판의 한 텀으로 학칙에 대한 걸 준비했던 거죠. 그 문제의식으로, 우리학교 학칙도 개정이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예요.

학칙개정을 하면서 중심에 두고 싶었던 건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는 상담소도 그렇고, 학칙도 그렇고 훨씬 사정이 좋은 편이예요. 98년의 학칙제정이 당시 활발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초안을 잡은 것도, 물론 많이 잘려나갔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부칙이나 상담소 시행 세칙 등으로 이후 보완이 되어왔던 데다, 전문 위원도 다른 학교는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많이 미약한 형태예요. 법적 비용 지원이나 피해자 신변보호 조항이 있으나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사건해결 같은 경우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게 공개되도록 실명공개시과자보가 학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피해자 비밀유지라는 항목으로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신변보호 사이의 다른 맥락이 무시된 채 한데 묶여있기도 하구요. 여러 부분을 고치면서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왜 학칙개정인가 : 공동체는 없다?

ⓘ이람: 지금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학칙개정이라는 방법이 갖는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그간 공동체에 의거한 해결이라고 불려왔던 자치규약이나 비대위를 통한 해결방식이 현재에 있어서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공동체는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현재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기존의 방식들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서 학칙개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방: '공동체적 해결과 자치규약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학칙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일 거 같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학칙이랑 자치규약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자치규약이 존재해야 할 때도 있고, 존재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학칙이 갖는 위상이나 학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교수성폭력 같은 경우에 자치규약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죠. 학칙을 처음 만들었던 이유도 자치규약으로 담보할 수 없는 성폭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모든 성폭력에 관련된 것들이 학생들이나 여운단위에 책임이 전부 돌아가는 상황을 문제삼은 거였잖아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적절한 징계를 내린다는 것 등, 물질적으로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학교당국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학교의 책임은 지워져 버린 채 학생들에게만 모든 책임들이 돌아갔던 상황이었던 거죠.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학칙제정을 활발하게 이야기 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학칙도 자치규약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규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학칙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기보다는 학칙은 학칙으로서 존재의미가 있고 자치규약은 자치규약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보완하는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치규약이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학칙개정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특히 이년도 ○○ 사건 등은 자치규약이 얼마나 미약할 수 있는가가 드러난 사건인 것 같아요. 비대위 활동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너무 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운단위나 학생들이 성폭력에 있어 전문가일 수가 없는 데 너무 달려들었던 건 아닌가라고. 환경형 성폭력처럼 징계로 넘기기보다 안에서 풀어내고 담론화했을 때 효과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간의 성폭력처럼 많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져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치규약 하나의 틀을 가지고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을 하기에는 한계적인 부분들이 존재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치규약만으로 각각의 케이스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학칙으로, 상담소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가 없다'라는 말을 설명하자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학칙제정운동을 할 때 글들을 보면, 그때 사고했던 공동체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를 상정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강제'가 가해지지 않아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진 않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는 모두 생략한 채 그냥 이상적인 형태의 공동체와 '자치적인 해결'만을 강조해온 맥락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공동체는 없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학생 자치 단위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기자: 그 공동체에서 자정작용이든 뭐든, 그 뼈를 깎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쉽게 말했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칙이 급하다는 말인가요?

?이방: 둘 다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몇 안 되는 여운 단위 사람들이 비대위에 소진하면서 계획했던 활동들이 계속 밀리는 상황 속에서 분명 사건해결은 중요하지만 사실 여운단위가 얼마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결이 절실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기에는 담론화 작업이라는 사전기반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사건공개가 담론화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피해자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잖아요. 피해자뿐 아니라 비대위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상황들이 안타까워요.

ⓘ기자: 성폭력이란 문제가 사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같이 책임지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 누구도 처음부터 그런 공동체가 쉽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공동체는 없다'는 선언을 하면서, '공동체적 해결'이나 공동체를 바꾸기는 문제로 사고하기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이제 학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오독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방: 사실 그동안 공동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사건의 해결과 공개만으로 사고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동체를 바꿔가는 것은 사건공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할 텐데, 기존에는 이 둘을 등치시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공개를 공동체의 문제로 책임지우는 형태로 상정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피해자와 해결주체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오히려 공개를 통한 역고소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모든 사건을 학칙으로 가져가고 여운단위들이 공동체적 해결에 손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담론화 시키는데 있어서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치규약으로 해결하고 담론화 하는 것과 학칙으로 사건을 지원하고 해결하는 것이 같이 가야할 부분이지 자치규약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자치적인 사건 해결과 공개라는 것이 공동체를 바꿔가는 유일한 틀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을 좀더 벌여나가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좀더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칙-처벌'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 애초에는 학교에서의 자치규약이나 공개 사과가 일방적인 '처벌'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지녔었잖아요. 그런데 학칙 같은 경우는 법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칙으로 사건을 다룰 때 해결이 처벌로 넘어가는 난감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 학칙은 아무래도 법에 기반한 것이고 처벌 위주잖아요. 그래서 자치 규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생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학칙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치규약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같이 필요한 것이구요. 사실 자치규약도 규약만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규약이 '공문구'인 부분도 많아서 자치규약이라는 말보다 자치적 해결, 담론화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치적 해결, 담론화가 학칙을 보완하는 형태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학칙도 분명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 등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요.

>>반성폭력 담론화와 관련하여

ⓘ기자: 그렇다면,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못살게 하는 짐은 좀 넘기고, 다른 활동을 활동가들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은데, 그 다른 활동이랄 수 있는 반성폭력 담론화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악여모에서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씀해 주세요.

?이방: 학내 지형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 성폭력 이야기를 풀어낼 방법으로 "반성 폭력 연대테이블"을 생각했었는데, 최근엔 잘 안 돼서 난감한 면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관악 반성폭력 집중주간' 활동을 합니다. 각 단위 별로 고민하는 내용과 관심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 내기 보다는, 정말 초보적인 고민이더라도 단위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갈 수 있게 단위별로 주간을 구성하려고 해요. 중앙에서 주제를 만들고 나누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각 단위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은 새내기와 '약속' 같은 것 만들어서 얘기하고, 생협에서는 생리대 자판기 증설, 설문 작업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유효다다고 생각해요. 단위별로 의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큰 것이 현재 연대테이블의 한계이자 아쉬움이구요. 준비가 안 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여모에서 준비한 토론회나 강연회에 참여하면서 같이 해가려고 해요.

ⓘ기자: 사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관해 해결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없는 단위들을 어떻게 바꾸어내고 성폭력 피해자가 살만한 곳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연대테이블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다면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해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연대테이블이라는 형식을 통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 그건 여운단위뿐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든 고민하는 문제겠죠. 최소한 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단위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외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운단위)사람들이 그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 전혀 끈이 없는 단위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 설명을 대략 듣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단위의 방식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조사해주고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우리가 그 구성원을 실제로 모르고, 또 말로만 들어서는 그 지형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단위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일차적 소스나 지원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끈을 넓혀가기 위한 활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내기 대상 오픈 세미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운단위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 세미나 하고 싶어도 어디 해주는 데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자 해요.

ⓘ기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끈을 이용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한 일상적 담론화 작업들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활동 잘되는 데 말고, 안되는 데와 함께하려는 담론화 계획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팁 제공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이방: 새터 때 각 단위에게 반성폭력 교양이나 신고함을 제안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연석회의에서 단대 새터책 회의를 꾸린다길래 반성폭력 교양, 신고함, 신고용지 등에 대해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서로 피드백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분이 '강제'라고 이해하셨더라구요(웃음) 사실은 강제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강제한다고 해서 누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강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하라고 찌른다고 해서 단위에서 성과를 남기거나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제나 개입이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성폭력 주간 꾸리면서도 중앙집중적인 판보다는 단위에서 알아서 이야기해오고 내용 생산해 보자, 공유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무리 작고 초보적인 논의라도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테이블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생각중이예요.

>>학칙개정 경로

ⓘ추: 학칙 개정에 역량을 많이 투여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98년도 학칙 제정 때만큼 대중적 동원력으로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정 경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세요?

?이방: 지금 개정 경로는 정해져 있어요. 제정 시에는 아무래도 제정이니까, 학칙의 필요성을 알려내야 했고, 그 구성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가 들어가야 했던 건데, 지금은 학칙 개정 절차가 있어요. 일단 초안을 작성한 후 상담소에 개정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학칙 제정이 될 때 법사위에서 계속 짤렸던 것처럼 짤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추: 상담소에는 언제 제출해요?

?이방: 3월 안에 제출해요. 이번 교투를 같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예요. 3월 안에 제출하고 교투의 동력을 같이 모아내자는 뜻으로.

ⓘ이람: 학칙개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문구하나 바꾸어 내는 것이라도 알려내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역량 투여하실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방: 학칙개정작업에서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업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칙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접근도를 높이는 작업을 말하는 건지?

ⓘ기자: 둘 다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사실 학칙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담론화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학칙 개정통로도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알리는 작업을 통해 얻는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칙의 실효성을 위해 바꾸어 놓은 학칙을 알려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방: 이번에 교투에 결합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늦게 제안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늦게나마 결합하

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여운단위에서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층단위랑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학생회 라인을 타는 것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3,4월에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항상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투특위에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교수성폭력에 있어서의 예방교육 측면이랑 학칙개정 관련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동력을 모아낼 수 있는 기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교육투쟁-교수성폭력'과 관련하여

ⓘ기잔: 사실 교투 자료집에 교수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서로서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투를 생각했을 때도 담론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학칙개정을 생각했을 때도 얘기하고 토론할 장을 만든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이방: 사실 마지막까지 결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이유는, 교투의 일환으로 교수성폭력을 이야기 했을 때, 과연 교수성폭력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교투가 대학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선이 비민주적 대학당국으로 설정되면서 거기에 교수가 들어가고, 교수와 비민주적 대학당국 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이라는 식으로 구도가 설정되는 기운데에서 교수 성폭력을 이야기한다면, 놓치는 게 너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성폭력의 맥락에서 교수 성폭력이 위치되는 것과 비민주적 교수 사회의 맥락에서 교수 성폭력이 위치되는 것이 분명히 다르고 후자의 경우, 여성의 문제라기보다 비민주의 문제로 비춰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묻혀질 위험도 큰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맥락을 알려내도 사실 교투 안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그 부분을 놓치치 않으면서 교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을 교투 특위분들과도 제일 많이 이야기 했구요.

ⓘ기잔: 제가 교투에서 교수성폭력이 이야기 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자신의 성을 침해한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 나아가 여성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잡아낼 수 있었던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수성폭력 경우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성적 위해를 가했다는 것 뿐 아니라, 기본적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래서 교수성폭력은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 듯 해요. 교투에서 그 부분이 결합되면서, 옛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처럼 공권력에 대한 반대로 굳어지면 안 되겠지만, 교육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별화된 교육권'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들었던 거였어요.

?이방: 성폭력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였을 때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데, 어느 성폭력이든 성적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성과 일상생활이 딱 분리돼서 어떤 성폭력은 성만 침해하는 것, 어떤 것은 일상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가해자여도 학습하고 노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교수가 가해자라는 것은 좀더 물리적이고 기본적 토대가 부각되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데 자칫 그것만 보이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거죠. 교수 성폭력이 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추: 피해자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학칙에서 드러나는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방: 학칙에서 중점 잡는 부분으로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강화의 부분과 교수 성폭력을 녹여내는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자지원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한 예로는, 소속문제가 있어요. 상담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나 외부인일 경우 그 사건의 해결을 포기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려해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외부사람이니까 상담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성폭력으로 신고된 걸 아니까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는데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포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테두리에서는 포괄될 수 없는 법적인 소송 등이 필요한건데 그럴 때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교수성폭력에 관련해서도 사실 학칙에 가해자 피해자 일방만이 우리학교 구성원일 경우도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실제적 방법은 안나와 있거든요. 어느 쪽이 우리학교 구성원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말이죠. 특히 신분 변동의 경우도 교수성폭력에서 꼭 필요한데 현재까지의 조항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료집에 나와 있어요.

ⓘ기잔: 피해자가 학칙으로 법적비용 같은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간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이 피해자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힘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학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해와, 생활권이 소소하게 침해받는 상황들이 어쩌면 성폭력 피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방: 사실 인식지형이 있고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단위라 해서 그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성폭력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폭력,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담론이 기반이 되어있는 공간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발현되는 양상이랑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발현되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담론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같이 싸울 사람도 안보이고 이야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 담론이 있는 공간에서는 그나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자치규약을 계속 가지고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부분인건데, 학칙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물리적 지원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주위사람들, 피해자 소속의 공간에서의 인식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 했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담론의 기반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담론이 기반 되어있지 않은 경우일수록 더 최소한의 담론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해요. 성폭력은 단일이슈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억압에 대한 인식과 활동들 속에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담론기 반을 위해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 이야기가 활발하게 되어야 가능하겠다는, 결국 열심히 운동하자는 원론적인 결론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스트: 사실 운동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이야기 할 때, 성폭력이 일어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치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게 치유인 것인가 생각했을 때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학칙을 잘 만들고 운동을 잘 한다고 해서 치유가 완전히 될 것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치유라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보장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치유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선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치유가 아니고 사람들이 호응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운동은 바로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잔: 치유와 운동이라는 측면이 밀접하긴 한데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자치적으로 해결되었던 것을 보면 활동인자와 해결인자가 거의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단위와 상담소의 관계맺음과 관련하여

ⓘ이람: 마지막 질문이네요. 학칙개정에 하면서 상담소외의 연계를 많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치규약과 학칙이 함께 가야한다면 상담소가 학칙의 보완만이 아니라 자치규약의 보완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상담소랑은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비대위에 대한 지원이나 보완 같은 것을 상담소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사실 피해자 지원의 측면에 있어서 상담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소의 전문성을 여러모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방: 실제로 학생들의 자치적 해결과 연계한 활동을 상담소에서 계속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학교에서의 활동은 비대위원이 하더라도 상담은 상담소에서 해줍니다. 피해자 경우 상담비용 전액지원, 가해자 50%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분이 바뀌셔서 이후 상담소의 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직 감이 안 오는 상황이에요. 전의 전문위원 분이랑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비대위를 꾸리든 꾸리지 않든 자유롭게 상담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 얻어갔으면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여성주의 심리상담도 그런 맥락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구요. 요즘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별 가해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의 사람들에게 집단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지금 상담소 상황으로 녹록치는 않은 계획인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모임에서 집단상담을 부탁했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람: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매체 나오면 많이 읽어주세요^^

Imagine

서울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상담소 하혜숙 선생님과의 인터뷰

Imagine+하혜숙 선생님

(4월 2일부터 상담소의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일하실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을 인수인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2004년 3월 19일, 상담소에서

>>상담소 소개

Imagine : 상담소 소개 좀 해 주세요.

선생님 : 우리 상담소 이름은 정확하게 '서울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인데요, 대상이 서울대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요. 사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교수나, 저는 심지어 일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이라고 보다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알리고 싶어요.

어쨌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거구요, 일단,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가장 주업무로 하고 있어요. 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 조사에서 해결, 중재까지. 그러니까 상담, 사건 접수, 그리고.. 또 하나 큰 맥락은 교육이예요, 예방교육.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교육을 해서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하고 있는게 교직원이나 조교들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강제성을 띠고 있거든요. 신임 교수들도 다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조사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방지침서라든지 자료도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Imagine : 학생들이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나요?

선생님 : 상담소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상담소를 모르는 거 같아요. 사실 문제가 없어서 모르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많은데 이용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맡으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상담소 문턱을 낮춘다 그래야 되나, 상담소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상담소를 알리는 데 참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해결이 되는 퍼센트는 30퍼센트 미만이예요. 사실 우리 학교에 이런 기구가 정말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어서.. 사실 큰 사건이 생기거나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겨서 꼭 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에 관련해서 이 있을 수도 있고, 이성교제에 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고민 있을 때, 그냥 찾아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Imagine : 상담소에서 아직 일 하신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혹시나 힘든 점 같은 거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은 적은데 일은 많아서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선생님 : 사실은 이 기관이 생긴 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인 거 같거든요. 그렇게 생긴 기관인데.. 우리 학교의 이 기관이 다른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대학들에도 이런 기관이 생기게 되었고, 규정도 마련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어깨도 많이 무겁고 책임감도 되게 많이 강하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상담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름 때문일 수도 있고, 위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고, 기관의 어려움도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자하연이나 문화관 왔다가 목마르면 올라와서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담소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구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상담소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어려운 점은 딱히, 뭐, 사실 사람이야 더 많으면 좋은데, 있는 인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Imagine : 현재 기획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 그 동안 상담소가 개소된 이래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캠페스 성문화 캠페인, 성기획 강연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실태조사, 예방 지침서 발간 등이요. 올해도 주요 사업으로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사업, 성인지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작, 성기획 강연회 및 학술 세미나, 캠페스 성문화 캠

페인, 외국대학 상담소 국제교류 등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학내 반성폭력 관악연대와 함께 반성폭력 주간을 제정하고 그 기간에 성문화 캠페인을 할 예정이예요. 연대 테이블에서 얘기를 지난 주 금요일에 했어요. 그래서 좀 급해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우리 포스터가 어제(3월 18일) 막 나와서, 이제 막 학교에 붙을 거예요. 29, 30일 이틀 하는데, 특히 30일 화요일은 연건에 가서 할 계획이예요. 사실 연건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관악으로부터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사건해결 과정과 관련하여

Imagine : 이년까지만 해도 성폭력 사건의 자체적인 해결이 활발했는데,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상담소가 사건을 접수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글 잘 몰라서 상담소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못 오는 이유가, 상담소에 가게 되면 공식화될까봐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담소에서 접수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요, 전화라든지, 이메일, 직접 찾아와서 시작이 돼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아. 내가 접수를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해서 접수를 하면, 신고로 넘어가게 돼요. 신고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해결이 있어요. 공식적인 처리란 밖으로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서 중재나 해결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해 사실이 분명하다고 밝혀졌을 때는 가해자 징계요청까지, 또 만약에 피해자가 법적인,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까지 가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처리라는 것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을 규명하는 절차가 되구요, 비공식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개인적인 사과만 받고 싶다 할 때, 그것도 도와드려요. 가해자와 접촉을 해서 피해자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다 같은 것을 중재하는 것.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Imagine : 학생들의 자치적 해결 경우, 사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사건 공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요?

선생님 : 공식적인 해결에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징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재인가 등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때는, 그것을 해결의 방안으로 채택을 할 수 있지만, 자보 등을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화되어 있진 않아요.

Imagine : 아무래도 상담소를 통한 해결이라고 하면, 학칙에 의한 징계가 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피해자도 또한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 상담소에 쉽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소에 가게 되면 왠지 사건이 공식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모든 사안은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돼요. 내담자가 가해자에 관한 것이나, 모든 것이. 인권이 철저히 보장이 되죠. 또한, 고민을 상담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해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담소에 접수를 하시면 일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게 되는 거죠.

Imagine : 많은 학생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상담은 아무래도 자치단위 안에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선생님 : 상담은 상당히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소로 찾아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문제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 잘 안보이거든요. 물론 선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예요. 일단은 터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런 자원을 주변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고민 터놓기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 속은 후련하지만 대책도 없고, 문제의 근본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가 더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는 게 좋죠. 상담소에 찾아오면 전문가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활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상담자들이거든요. 저는 지난 7~8년 동안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왔는데,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도와주고 자기 속에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보다는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게 해 주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삶의 에너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해요.

>>성폭력 사건의 자치적 해결과 관련하여

Imagine : 이전까지는 학생들 간의 성폭력을 학생회나 여모 등 자치적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공동체적 자치적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전문가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끼리의 자치적 해결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나요?

선생님 : 개인적인 차원이나 자치단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자치단위 내에서 해결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점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그런 점에 좀 더 유념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Imagine : 그렇다면, 자치적 해결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치단위와 연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선생님 : 저는 충분히 여모라든지 단과대학의 활동가들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과대학의 성폭력해결 규정을 보니까 통일성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캠페인 하는 것도 연대해서 하는 건데, 물론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점은 아쉬워서 다음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반성폭력 주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학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자주 보고 싶어요^^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것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너희들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리로 와서 교육 받아라'라는 식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들어라'가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러한 점을 얘기하고 논의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 성폭력과 관련하여

Imagine : 특히 교수 성폭력의 경우, 상담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잖아요.

선생님 : 중요한 건, 가해자가 교수든 학생이든 그 신분에 상관없이 사건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관계가 판명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합의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피해자도 해결 과정에서 힘들고, 또한 일단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가해자도 감당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2차, 3차의 가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이예요.

Imagine : 상담소는 그래도 본부기관이기 때문에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뢰가 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조사위원회에 교수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전문기도 들어가요. 그렇게 조사위원회가 굉장히 공정하게 꾸려져요. 사실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기관의 존립여부가 흔들리는 문제잖아요. 그 동안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당히 공정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Imagine : 교수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생님 : 제가 조교일 때도 실제로 교육을 받았었어요. 남자들한테 사실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대개 남성들이 강제의무사항이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긴 오는데, 마인드가 교육을 받을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델 와야 돼, 난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또는 '기분 나빠. 저런 데 가면 괜히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 아니면 '오랜만에 문화관 가는데 자하연에서 밥이나 먹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와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인식이 생기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경각심이 꽤 생긴 것 같아요. 남자들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남성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으려고요.

현대 온라인 예방교육도 구상하고 있어요. 학생 매뉴얼도 만들고, 교수 매뉴얼도 만들어서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지만 예방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원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예요.

>>학칙개정운동과 관련하여

Imagine : 지금 학내에서 학칙개정운동이 시작단계에 있고, 논의 테이블도 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 현재 논의 중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의견이 수렴이 되면 논의를 거친 후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예요. 앞으로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Imagine